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수립방안 연구



김성희·황주희·오욱찬·박경수·김용득·이선우·김권일
·
김삼섭·김완호·민홍기·이동석·전병태·강동욱·김기룡
·
김동기·백종남·서동명·전지혜·최복천·오다은·이민경

【책임연구자】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공저)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1
제2장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및 발전방안	51
제1절 평가방법	7
제2절 복지서비스 분야	02
제3절 건강·체육 분야	46
제4절 보육·교육 분야	59
제5절 사회참여 분야	11
제6절 경제활동 분야	9
제7절 권익증진 분야	4
제3장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962
제1절 추진방향	21
제2절 비전 및 정책목표	2
제3절 분야별 추진과제 요약	2
제4장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192
제1절 복지서비스 분야	9
제2절 건강·체육 분야	9
제3절 보육·교육 분야	4
제4절 사회참여 분야	8

제5절 경제활동 분야	9
제6절 권익증진 분야	2
제5장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종합 성과지표	344
제1절 종합 성과지표의 의미	4
제2절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9
제6장 결론 및 제언	6
제1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의 개요	564
제2절 제언	468
참고문헌	473
부 록	479

표 목차

<표 1-1> 제4차 및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실무추진단 분과위원회 비교	2	1
<표 2-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분야 구성	9	1
<표 2-2> 세부과제 1-1-1 목표대비 달성도	3	2
<표 2-3> 세부과제 1-1-3 목표대비 달성도	6	2
<표 2-4> 세부과제 1-2-1 목표대비 달성도	0	3
<표 2-5> 세부과제 1-2-2 목표대비 달성도	2	3
<표 2-6> 세부과제 1-2-3 목표대비 달성도	5	3
<표 2-7> 세부과제 1-3-1 목표대비 달성도	2	4
<표 2-8> 세부과제 1-3-2 목표대비 달성도	5	4
<표 2-9> 세부과제 1-3-3 목표대비 달성도	7	4
<표 2-10> 세부과제 1-3-4 목표대비 달성도	9	4
<표 2-11> 세부과제 1-4-1 목표대비 달성도	4	5
<표 2-12>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현황	6	5
<표 2-13> 대규모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현황	6	5
<표 2-14> 세부과제 1-4-2 목표대비 달성도	7	5
<표 2-15> 세부과제 1-4-3 목표대비 달성도	0	6
<표 2-16> 세부과제 1-4-4 목표대비 달성도	2	6
<표 2-17> 세부과제 1-5-1 목표대비 달성도	6	6
<표 2-18> 세부과제 1-5-2 목표대비 달성도	9	6
<표 2-19> 세부과제 1-5-3 목표대비 달성도	2	7
<표 2-20> 세부과제 1-5-4 목표대비 달성도	6	7
<표 2-21> 세부과제 1-5-5 목표대비 달성도	1	8
<표 2-22> 세부과제 2-5-1 목표대비 달성도	5	8
<표 2-23> 세부과제 2-5-3 목표대비 달성도	9	8
<표 2-24> 세부과제 2-5-2 목표대비 달성도	1	9
<표 2-25> 최근 5년간 장애아 어린이집 수	6	9
<표 2-26>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장애아동 수	7	9
<표 2-27> 장애유아 교육 현황	7	9
<표 2-28> 유치원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어린이집의 지원 수준 비교	9	9

<표 2-29> 최근 5년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현황	1·0·1
<표 2-30> 최근 5년간 장애아 어린이집 수	1·0·1
<표 2-31> 세부과제 2-1-1 목표대비 달성도	3·0·1
<표 2-32>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5·0·1
<표 2-33> 지난 9년간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5·0·1
<표 2-34> 의무교육 실시(간주)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6·0·1
<표 2-35> 최근 5년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현황 비교	6·0·1
<표 2-36> 시·도 및 설립형태에 따른 유치원 특수학급 수	7·0·1
<표 2-37> 세부과제 2-1-2 목표대비 달성도	8·0·1
<표 2-38> 최근 5년간 전공과 설치 현황	0·1·1
<표 2-39> 최근 5년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1·1·1
<표 2-40> 시도별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설치 현황	2·1·1
<표 2-41> 세부과제 2-1-3 목표대비 달성도	4·1·1
<표 2-42> 최근 10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대학 진학자 수	6·1·1
<표 2-43>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현황	7·1·1
<표 2-44> 세부과제 2-1-4 목표대비 달성도	0·2·1
<표 2-45>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2·1
<표 2-46>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수 및 평생학습 참여 현황	3·2·1
<표 2-47>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수	4·2·1
<표 2-48>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및 전체 교육예산 비교	5·2·1
<표 2-49> 세부과제 2-1-5 목표대비 달성도	6·2·1
<표 2-50> 세부과제 2-2-1 목표대비 달성도	0·3·1
<표 2-51> 세부과제 2-2-3 목표대비 달성도	2·3·1
<표 2-52> 세부과제 2-2-3 목표대비 달성도	4·3·1
<표 2-53> 세부과제 2-3-2 목표대비 달성도	7·3·1
<표 2-54> 세부과제 2-3-2 목표대비 달성도	9·3·1
<표 2-55> 세부과제 2-3-3 목표대비 달성도	1·4·1
<표 2-56> 세부과제 2-4-1 목표대비 달성도	5·4·1
<표 2-57> 2013-2017 함께누리 지원사업 예산 내역	6·4·1
<표 2-58> 세부과제 2-4-2 목표대비 달성도	8·4·1
<표 2-59> 세부과제 2-4-3 목표대비 달성도	1·5·1
<표 2-60> 세부과제 4-1-1 목표대비 달성도	6·5·1
<표 2-61> 세부과제 4-1-3 목표대비 달성도	1·6·1
<표 2-62> 세부과제 4-1-3 목표대비 달성도	6·6·1

<표 2-63> 세부과제 4-1-4 목표대비 달성도	0·7·1
<표 2-64> 세부과제 4-1-5 목표대비 달성도	3·7·1
<표 2-65> 세부과제 4-2-1 목표대비 달성도	9·7·1
<표 2-66> 세부과제 4-2-2 목표대비 달성도	0·8·1
<표 2-67> 세부과제 4-2-3 목표대비 달성도	2·8·1
<표 2-68> 세부과제 4-2-4 목표대비 달성도	5·8·1
<표 2-69> 세부과제 3-1-1 목표대비 달성도	2·9·1
<표 2-70> 세부과제 3-1-2 목표대비 달성도	5·9·1
<표 2-71> 세부과제 3-2-1 목표대비 달성도	2·0·2
<표 2-72> 세부과제 3-2-2 목표대비 달성도	5·0·2
<표 2-73> 세부과제 3-2-3 목표대비 달성도	0·1·2
<표 2-74> 세부과제 3-2-4 목표대비 달성도	4·1·2
<표 2-75> 세부과제 3-3-1 목표대비 달성도	8·1·2
<표 2-76> 세부과제 3-3-2 목표대비 달성도	1·2·2
<표 2-77> 2016년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 성과	2·2·2
<표 2-78>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장애인 채용지원 결과	2·2·2
<표 2-79> 세부과제 3-3-3 목표대비 달성도	3·2·2
<표 2-80> 세부과제 3-3-4 목표대비 달성도	6·2·2
<표 2-81> 세부과제 3-3-5 목표대비 달성도	8·2·2
<표 2-82> 세부과제 3-4-1 목표대비 달성도	2·3·2
<표 2-83> 세부과제 3-4-2 목표대비 달성도	4·3·2
<표 2-84> 세부과제 3-4-3 목표대비 달성도	6·3·2
<표 2-85> 세부과제 3-4-4 목표대비 달성도	9·3·2
<표 2-86> 세부과제 4-3-1 목표대비 달성도	3·4·2
<표 2-87> 세부과제 4-3-2 목표대비 달성도	5·4·2
<표 2-88> 세부과제 4-3-3 목표대비 달성도	7·4·2
<표 2-89> 세부과제 4-4-1 목표대비 달성도	1·5·2
<표 2-90> 세부과제 4-4-2 목표대비 달성도	3·5·2
<표 2-91> 세부과제 4-4-3 목표대비 달성도	5·5·2
<표 2-92> 세부과제 4-5-1 목표대비 달성도	1·6·2
<표 2-93> 세부과제 4-5-2 목표대비 달성도	3·6·2
<표 2-94> 세부과제 4-5-3 목표대비 달성도	6·6·2
<표 3-1>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4·7·2
<표 3-2>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목표	5·7·2

<표 3-3> 국정과제 및 장애인단체 제안과제 반영 정도	8·7·2
<표 3-4> 복지서비스 분야 추진과제	0·8·2
<표 3-5> 건강·체육 분야 추진과제	2·8·2
<표 3-6> 보육·교육 분야 추진과제	3·8·2
<표 3-7> 사회참여 분야 추진과제	5·8·2
<표 3-8> 경제활동 분야 추진과제	7·8·2
<표 3-9> 권익증진 분야 추진과제	9·8·2
<표 4-1> 장애인거주시설 및 이용자 현황(2010~2016)	5·9·2
<표 4-2> 세부과제 1-1-1 연차별 추진일정	9·9·2
<표 4-3> 세부과제 1-1-2 연차별 추진일정	1·0·3
<표 4-4> 세부과제 1-1-3 연차별 추진일정	2·0·3
<표 4-5> 세부과제 1-1-4 연차별 추진일정	3·0·3
<표 4-6> 세부과제 1-1-5 연차별 추진일정	4·0·3
<표 4-7> 세부과제 1-1-6 연차별 추진일정	5·0·3
<표 4-8> 과정으로서의 탈시설 구성요소: 현황 및 지향점	7·0·3
<표 4-9> 4가지 차원에 따른 탈시설 형태	7·0·3
<표 4-10> 세부과제 1-2-1 연차별 추진일정	9·0·3
<표 4-11> 세부과제 1-2-2 연차별 추진일정	0·1·3
<표 4-12> 세부과제 1-2-3 연차별 추진일정	1·1·3
<표 4-13> 세부과제 1-2-4 연차별 추진일정	3·1·3
<표 4-14> 세부과제 1-3-1 연차별 추진일정	5·1·3
<표 4-15> 세부과제 1-3-2 연차별 추진일정	6·1·3
<표 4-16> 세부과제 1-3-3 연차별 추진일정	7·1·3
<표 4-17> 세부과제 1-3-4 연차별 추진일정	8·1·3
<표 4-18> 세부과제 1-3-5 연차별 추진일정	9·1·3
<표 4-19> 연도별 장애인 및 비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1·2·3
<표 4-20>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정책 사례	2·2·3
<표 4-21> 세부과제 2-1-1 연차별 추진일정	5·2·3
<표 4-22> 세부과제 2-1-2 연차별 추진일정	5·2·3
<표 4-23> 세부과제 2-1-3 연차별 추진일정	6·2·3
<표 4-24> 세부과제 2-2-1 연차별 추진일정	7·2·3
<표 4-25> 세부과제 2-2-2 연차별 추진일정	8·2·3
<표 4-26> 세부과제 2-2-3 연차별 추진일정	8·2·3
<표 4-27> 세부과제 2-3-1 연차별 추진일정	0·3·3

<표 4-28> 세부과제 2-3-2 연차별 추진일정	1·3·3
<표 4-29> 세부과제 2-3-3 연차별 추진일정	2·3·3
<표 4-30> 세부과제 2-4-1 연차별 추진일정	4·3·3
<표 4-31> 세부과제 2-4-2 연차별 추진일정	5·3·3
<표 4-32> 세부과제 2-4-3 연차별 추진일정	6·3·3
<표 4-33> 세부과제 2-5-1 연차별 추진일정	8·3·3
<표 4-34> 세부과제 2-5-2 연차별 추진일정	9·3·3
<표 4-35> 세부과제 2-5-3 연차별 추진일정	0·4·3
<표 4-36>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장애아 수	1·4·3
<표 4-37> 유치원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어린이집의 지원 수준 비교	2·4·3
<표 4-38> 최근 5년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현황 비교	3·4·3
<표 4-39> 설립형태에 따른 유치원 특수학급 수	3·4·3
<표 4-40> 최근 5년간 특수교육기관 수	4·4·3
<표 4-41> 최근 5년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7·4·3
<표 4-42> 최근 10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대학 진학자 수	9·4·3
<표 4-43>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현황	9·4·3
<표 4-44>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5·3
<표 4-45>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수 및 평생학습 참여 현황	2·5·3
<표 4-46>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수	3·5·3
<표 4-47>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및 전체 교육예산 비교	4·5·3
<표 4-48> 세부과제 3-1-1 연차별 추진일정	7·5·3
<표 4-49> 세부과제 3-1-2 연차별 추진일정	9·5·3
<표 4-50> 세부과제 3-2-1 연차별 추진일정	0·6·3
<표 4-51> 세부과제 3-2-2 연차별 추진일정	2·6·3
<표 4-52> 세부과제 3-2-3 연차별 추진일정	3·6·3
<표 4-53> 세부과제 3-3-1 연차별 추진일정	5·6·3
<표 4-54> 세부과제 3-3-2 연차별 추진일정	6·6·3
<표 4-55> 2013-2017 함께누리 지원사업 예산 내역	7·6·3
<표 4-56> 연도별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8·6·3
<표 4-57> 2016년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평가결과	0·7·3
<표 4-58> 세부과제 4-1-1 연차별 추진일정	3·7·3
<표 4-59> 세부과제 4-2-1 연차별 추진일정	4·7·3
<표 4-60> 세부과제 4-2-2 연차별 추진일정	4·7·3
<표 4-61> 세부과제 4-2-3 연차별 추진일정	5·7·3

<표 4-62> 세부과제 4-2-4 연차별 추진일정	5·7·3
<표 4-63> 세부과제 4-2-5 연차별 추진일정	6·7·3
<표 4-64> 세부과제 4-2-6 연차별 추진일정	6·7·3
<표 4-65> 세부과제 4-2-7 연차별 추진일정	7·7·3
<표 4-66> 세부과제 4-3-1 연차별 추진일정	9·7·3
<표 4-67> 세부과제 4-3-2 연차별 추진일정	0·8·3
<표 4-68> 세부과제 4-3-3 연차별 추진일정	1·8·3
<표 4-69> 세부과제 4-4-1 연차별 추진일정	3·8·3
<표 4-70> 세부과제 4-4-2 연차별 추진일정	4·8·3
<표 4-71> 세부과제 4-4-3 연차별 추진일정	5·8·3
<표 4-72> 세부과제 4-4-4 연차별 추진일정	5·8·3
<표 4-73> 세부과제 4-5-1 연차별 추진일정	7·8·3
<표 4-74> 세부과제 4-5-2 연차별 추진일정	8·8·3
<표 4-75> 세부과제 4-6-1 연차별 추진일정	9·8·3
<표 4-76> 추진과제 4-6-2 연차별 추진일정	0·9·3
<표 4-77>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치분소득	1·9·3
<표 4-78>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빈곤율	2·9·3
<표 4-79> 장애로 인한 1인당 월평균 추가비용	3·9·3
<표 4-80> 특수학교·특수학급 졸업생 취업현황(2012~2016년)	6·9·3
<표 4-81> 추진과제 5-1-1 연차별 추진일정	9·9·3
<표 4-82> 추진과제 5-1-2 연차별 추진일정	0·0·4
<표 4-83> 추진과제 5-1-3 연차별 추진일정	1·0·4
<표 4-84> 추진과제 5-1-4 연차별 추진일정	2·0·4
<표 4-85> 추진과제 5-2-1 연차별 추진일정	4·0·4
<표 4-86> 추진과제 5-2-2 연차별 추진일정	5·0·4
<표 4-87> 추진과제 5-2-3 연차별 추진일정	6·0·4
<표 4-88> 추진과제 5-2-4 연차별 추진일정	8·0·4
<표 4-89> 추진과제 5-3-1 연차별 추진일정	1·1·4
<표 4-90> 추진과제 5-3-2 연차별 추진일정	1·1·4
<표 4-91> 추진과제 5-3-3 연차별 추진일정	2·1·4
<표 4-92> 추진과제 5-3-4 연차별 추진일정	3·1·4
<표 4-93> 추진과제 5-3-5 연차별 추진일정	4·1·4
<표 4-94> 추진과제 5-3-6 연차별 추진일정	5·1·4
<표 4-95> 추진과제 5-4-1 연차별 추진일정	7·1·4

<표 4-96> 추진과제 5-4-2 연차별 추진일정	8·1·4
<표 4-97> 추진과제 5-4-3 연차별 추진일정	9·1·4
<표 4-98> 추진과제 5-5-1 연차별 추진일정	1·2·4
<표 4-99> 추진과제 5-5-2 연차별 추진일정	1·2·4
<표 4-100> 세부과제 6-1-1 연차별 추진일정	6·2·4
<표 4-101> 세부과제 6-1-2 연차별 추진일정	7·2·4
<표 4-102> 세부과제 6-1-3 연차별 추진일정	7·2·4
<표 4-103> 세부과제 6-1-4 연차별 추진일정	8·2·4
<표 4-104> 세부과제 6-1-5 연차별 추진일정	9·2·4
<표 4-105> 세부과제 6-2-1 연차별 추진일정	0·3·4
<표 4-106> 세부과제 6-2-2 연차별 추진일정	1·3·4
<표 4-107> 세부과제 6-3-1 연차별 추진일정	2·3·4
<표 4-108> 세부과제 6-3-2 연차별 추진일정	3·3·4
<표 4-109> 세부과제 6-4-1 연차별 추진일정	4·3·4
<표 4-110> 세부과제 6-4-2 연차별 추진일정	6·3·4
<표 4-111> 세부과제 6-4-3 연차별 추진일정	8·3·4
<표 4-112> 세부과제 6-5-1 연차별 추진일정	0·4·4
<표 4-113> 세부과제 6-5-2 연차별 추진일정	1·4·4
<표 4-114> 세부과제 6-5-3 연차별 추진일정	1·4·4
<표 5-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종합 성과지표	6·4·4
<표 5-2> 복지서비스 분야 종합 성과지표	1·5·4
<표 5-3> 건강·체육 분야 종합 성과지표	3·5·4
<표 5-4> 보육·교육 분야 종합 성과지표	5·5·4
<표 5-4> 사회참여 분야 종합 성과지표	8·5·4
<표 5-6> 경제활동 분야 종합 성과지표	0·6·4
<표 5-7> 권익증진 분야 종합 성과지표	1·6·4

그림 목차

[그림 1-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도	1	1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3	1
[그림 2-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내용의 구성	8	1
[그림 2-2]	등급제개편 3차 시범사업 장애등록 및 서비스 제공절차	1	2
[그림 2-3]	특수교육지원 전달체계	4	1
[그림 2-4]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전달체계	9	1
[그림 2-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2	1
[그림 3-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체계도(안)	7	2
[그림 4-1]	최근 10년 간 특수교육 규모	4	3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향 설정 필요

-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 현재 2018~2022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있음.
- 1998년부터 수립하여 시행해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및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 장애인의 삶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계획임.
- 하지만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종합하는 방식은 체계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어렵고, 세부계획 간의 유기성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특정 정책 영역의 누락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체계적인 방향 설정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추진과제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정책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작업을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한계 보완 필요

-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의 경우, 정책분야를 4개(장애인복지서비스·건강분야, 장애인의 교육·문화·체육분야, 소득·경제활

동분야, 사회참여 및 인권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대한 19대 중점과제와 71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되어 옴.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제4차 종합계획의 연계선 상에서 성과와 한계, 변화하는 사회·환경변화를 반영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종합계획으로서의 장애인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구의 특성 변화 및 욕구 다양화의 반영 필요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구의 고령화(65세 이상 장애인 2011년 38.8% → 2014년 43.3%), 장애인 1인 가구의 증가(2005년 11.0% → 2014년 24.3%) 등 장애인구의 특성변화가 나타남. 발달장애인 또한 전체 등록장애인 약 250만 명 중 약 20만 명(8.2%)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 욕구는 다양화되고 새로운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장애아동, 여성장애인 등 취약집단 대상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소득보장 외에 의료보장, 문화여가활동 등 복지욕구가 다변화되고 새로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 변화 및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증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복지, 고용, 교육 등 분야별로 정책의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정책의 설정 및 이행에 있어 장애인의 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정책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또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정책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 과제 마련이 필요함.

□ 미래사회의 변화와 장애인정책

- (사회문화) 획일화 사회의 극복, 불평등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같은 사회

문화적 배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차별금지제도와 함께 ‘다양성 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장애 포용적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장애유형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결과적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여가는 정책방향이 요구됨.

- (산업경제) 인공지능의 발전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장애인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기술발전은 이동 접근성(인공다리, 자율주행자동차 등), 돌봄 서비스(돌봄 로봇 등) 등 보조적 수단의 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 로봇 대체로 인한 일자리 축소 가능성도 대비해야 함. 또한 장애인을 고려한 정보통신의 발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의 확대도 고려 대상임.
- (생활환경) 기후변화,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의 생활환경 변화도 장애인정책의 도전과제임. 환경오염, 약물,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과는 다른 이유로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 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변화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소수자에 대한 비하나 비방으로 차별적 세계관을 강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국제적 조류에 발맞춘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기존 장애인정책의 지속적 확대 시행만으로 수립하는 것은 정책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으나,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도록 선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주도로 수립한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 및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실현 보장’을 강조하고 개인의 존엄성,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사회참여와 통합,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수용, 기회의 균등, 접근성 등을 목표로 제시함 (UN ESCAP, 2012).
-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통해 후견제와 같은 대체의사결정제도(substitute decision-making regimes)를 지원의사결정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

regimes)로 전환할 것을 권고(UN CRPD, 2014a)하고, 접근성(right of access)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음(UN CRPD, 2014b). 또한 최근에는 장애여성의 권리(UN CRPD, 2016a), 장애인의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에 대한 권리(UN CRPD, 2016b)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

-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개인예산제와 같은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를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별적 유연화’(personalization) 정책이 확산되는 추세임(Power et al., 2013).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기존 계획의 단순한 연장보다는 이러한 국제적 조류를 조망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추진전략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경과

□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

- (의의) 장애인 및 고용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내 각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 복지정책 계획임.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3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
- (주요내용)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비전으로,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함. 3개 부처가 참여하여 복지·교육·고용 3대 분야에서 22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를 선정함.
- (주요성과) 1단계 장애범주 확대(5개 유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지원, 특수학교 확대,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거둠.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2007)

- (의의) 정부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제도 개선 계획, 생애단계별 계획 마련 등으로 구체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을 비전으로, ① 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② 통합교육 확대, ③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실현, ④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⑤ 장애인 이동편의체계 구축의 정책목표를 설정함. 5개 부처가 참여하여 복지, 특수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체계 등의 7대 분야에서 43개 영역, 103개 과제를 선정함.
- (주요성과) 2단계 장애범주 확대(5개 유형), 장애수당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범위 확대 및 표준사업장 도입,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문화바우처 도입, UN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둠.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2008~2012)

- (의의) 계획의 범위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정책’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과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함.
- (주요내용)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②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③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④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을 정책목표로 설정함. 9개 부처가 참여하여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의 4대 분야에서 58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함.
- (주요성과) 장애인연금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발효 등의 성과를 거둠.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 (의의) 우리나라 주도의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인천전략)’을 성공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반영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성과목표에 연차별 추진계획을 설정함.
- (주요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①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②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③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정책목표로 설정함.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의 4대 분야에서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를 선정함.
- (주요성과)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연금 확대 및 인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둠.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정책 분야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중앙행정부처의 자체 평가자료, 종합계획 중간평가 자료(김정희 외, 2016)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

□ 장애인정책 분야별 발전방향 제시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함.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시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 분야별 정책목표를 제시함.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 각 정책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를 제시함.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김성희 외, 2012)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세부과제 별 연차별 추진일정을 제시함.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종합 성과지표 제시

- 종합 성과지표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김성희 외, 2012)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세부과제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함.
- 각 종합 성과지표의 의미와 측정방법, 연차별 성과목표를 제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를 위한 기존 평가자료를 검토함.
- 장애인정책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보고서, 논문, 국제기구 등의 문헌을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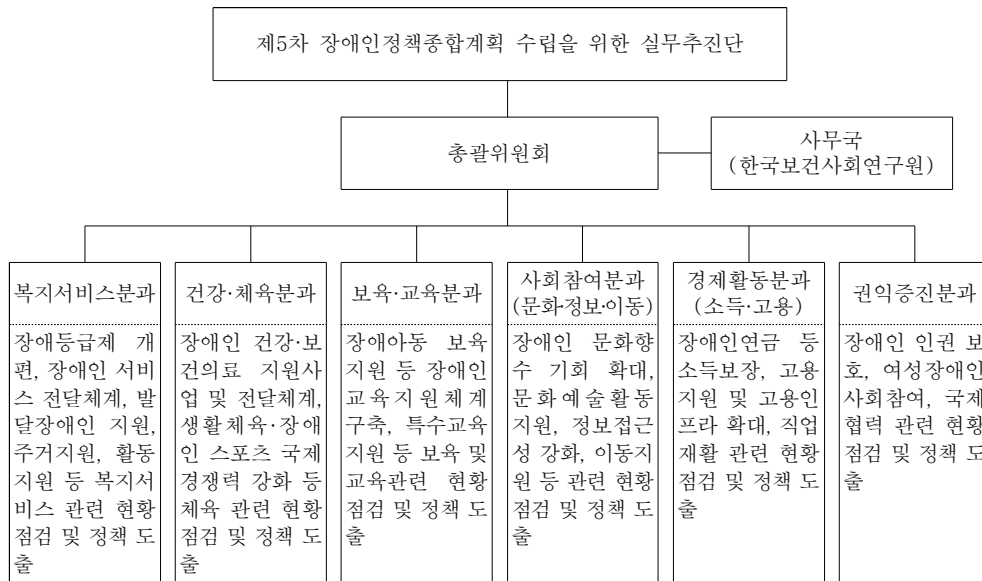
□ 2차 자료 분석

-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진단·평가하고 적절한 성과목표 설정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검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 발전방향 등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진, 분야별 전문가, 장애인단체를 망라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 운영기간: 2017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 실무추진단은 총괄위원회, 6개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함.
- 총괄위원회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을 총괄하고 분과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김성희 외, 2012)에서는 총괄위원회 구성원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계 위원장과 함께 6개 분야별 분과장,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 관련부처 담당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로 확대 구성함.

[그림 1-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도



○ 분과위원회는 각 정책 영역별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제5차 종합계획의 수립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함.

- ① 복지서비스분과, ② 건강·체육분과, ③ 보육·교육분과, ④ 사회참여분과, ⑤ 경제활동분과, ⑥ 권익증진분과의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함.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김성희 외, 2012)에서의 5개 분과 구성을 재검토하여 담당 정책영역을 재조정 및 추가함.
- 각 분과의 구성원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꾸린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김성희 외, 2012)와 달리 해당 분야 학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 장애인단체가 직접 참여하도록 함.

○ 사무국은 실무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 지원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운영함.

<표 1-1> 제4차 및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실무추진단 분과위원회 비교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분과	담당 정책영역	분과	담당 정책영역
복지서비스·건강분과	-장애등급제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소득보장 -의료보장·보조기구 -주택 및 주거서비스 -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복지서비스분과	-장애등급제 -서비스 전달체계 -활동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보육·교육분과	-특수교육 및 장애인 고등교육 -장애성인 평생교육	보육·교육분과	-장애아동 보육·교육 지원 -장애학생 교육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문화·체육분과	-문화활동 지원 -방송접근성 지원 -장애인 체육	건강·체육분과	-건강·보건의료 -장애인 체육
소득·고용분과	-장애인 고용지원 -직업재활 지원	경제활동분과	-장애소득보장 -장애인 고용지원 -직업재활 지원
사회참여·인권분과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여성장애인 지원 -편의증진 및 이동지원 -정보접근성 지원 -국제협력	사회참여분과	-문화예술 지원 -정보접근성 지원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의사소통 지원
		권익증진분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옹호 -정신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난·안전 보장 -여성장애인 지원 -국제협력

□ 장애계 의견수렴 실시

- 제4차 장애인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안)의 비전, 정책목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함.
- 장애계 의견수렴은 실무추진단에서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장애인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관련 회의 진행 시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 전문가 자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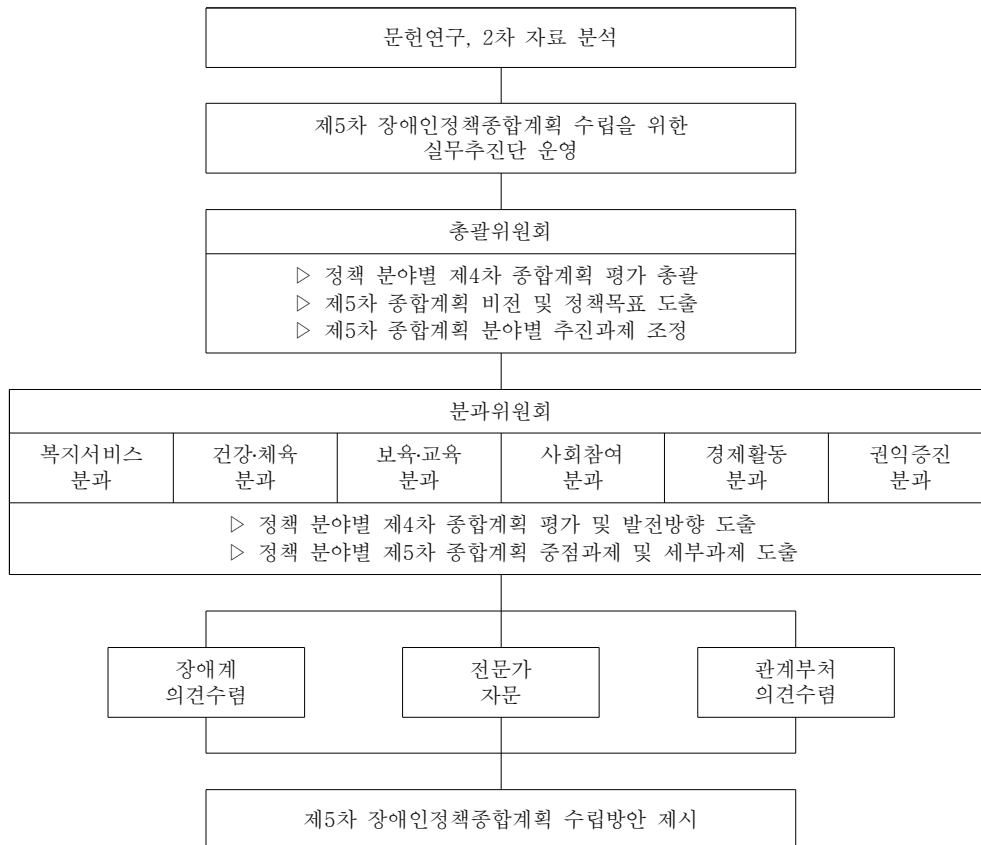
- 각 정책 분야별로 제4차 장애인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안)의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 또한 분과위원회 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관련 회의 진행 시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 관계부처 의견수렴 실시

- 각 정책 분야별로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안)의 정책과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함.
- 관계부처 의견수렴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회의(2017. 9. 19.)를 통해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수립 경과에 대한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후,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별도의 회의를 진행함.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보고서의 구성체계를 제시함.
- 제2장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와 정책 분야별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제1절에서 평가방법을 소개한 후 6개 정책 영역(분과)별 평가결과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
- 제3장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제5차 종합계획의 추진방향과 비전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목록을 제시함.
- 제4장은 정책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각 과제별로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내용, 연차별 추진일정을 제시함.
- 제5장은 종합 성과지표를 제시하며, 정책 분야별 종합 성과지표의 의미와 함께 지표의 측정방법과 연차별 성과목표를 제시함.
- 제6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향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

제 2 장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및 발전방안

- 제1절 평가방법
- 제2절 복지서비스 분야
- 제3절 건강·체육 분야
- 제4절 보육·교육 분야
- 제5절 사회참여 분야
- 제6절 경제활동 분야
- 제7절 권익증진 분야

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평가 및 발전방안 <

제1절 평가방법

□ 분과위원회 중심의 평가 실시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실무추진단의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함.
 - －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집필진과 함께 해당 분야 학계 전문가, 관련 장애인단체가 분과위원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제4차 종합계획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장애계 의견수렴이 이루어짐.
- 이미 제4차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의 적절성과 같은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성과 달성도에 대한 질적 평가와 발전방안 도출을 중심 내용으로 진행함.
- 평가 대상 기간은 제4차 종합계획의 대상 기간인 2013~2017년에서 아직 집행 중인 2017년을 제외하고 2013~2016년을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의 평가 이전에 각 세부과제별 소관부처(과)의 자체평가가 이루어졌고, 2013~201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중간평가(김정희 외, 2016)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평가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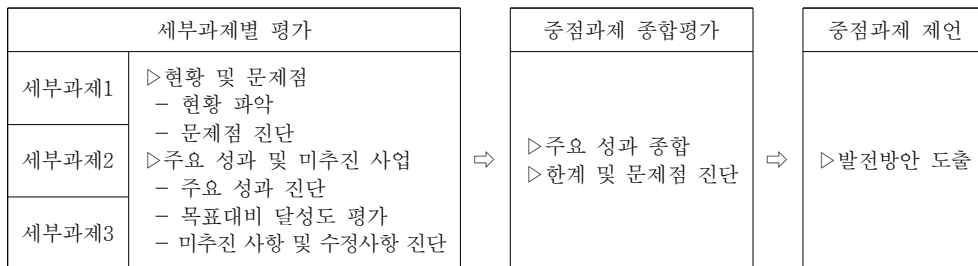
□ 평가내용의 구성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평가는 19개 중점과제 단위로 구성되며, 평가내용은 크게 세부과제별 평가, 중점과제 종합평가, 중점과제 제언의 단계로 구성됨.
- 우선 세부과제별 평가는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과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을 점검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각 세

부과제의 성과목표에 대한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도 이루어짐.

- 중점과제 종합평가는 세부과제별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중점과제 전체적인 주요 성과를 종합하고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마지막으로 중점과제 제언은 세부과제 및 중점과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단계임.

[그림 2-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내용의 구성



□ 평가 분야 구성

- 제4차 종합계획의 정책 분야(4개)와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한 실무 추진단의 분과 구성(6개)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되는 19개 중점과제를 6개 분과에 맞게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 중점과제를 재분류한 결과, 경제활동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중점과제의 재분류가 이루어졌음.
 - 제4차 종합계획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건강과 체육 영역이 하나의 분야로 묶이면서 중점과제 또한 재분류 되었음.
 - 또한 이번 실무추진단에서 새롭게 구성한 사회참여 분야는 제4차 종합계획에서 기존 보육·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의 문화 영역, 사회참여·인권 분야의 정보 영역과 이동·편의 영역을 묶어 구성하였음.

<표 2-1> 제4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평가 분야 구성

평가 분야	제4차 종합계획 중점과제	제4차 종합계획 분야
복지서비스	(1-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복지서비스·건강
	(1-2)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복지서비스·건강
	(1-3)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복지서비스·건강
	(1-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복지서비스·건강
건강·체육	(1-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복지서비스·건강
	(2-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보육·교육 및 문화·체육
보육·교육	(2-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보육·교육 및 문화·체육
	(2-2) 특수교육지원 강화	보육·교육 및 문화·체육
	(2-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보육·교육 및 문화·체육
사회참여	(2-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보육·교육 및 문화·체육
	(4-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사회참여·인권
	(4-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회참여·인권
경제활동	(3-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소득·경제활동
	(3-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소득·경제활동
	(3-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소득·경제활동
	(3-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4-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사회참여·인권
	(4-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회참여·인권
	(4-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회참여·인권

제2절 복지서비스 분야

1. (1-1)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1-1-1)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¹⁾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등급 개편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마련.
- 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제공목적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준마련.
- 장애등록 후 각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구축.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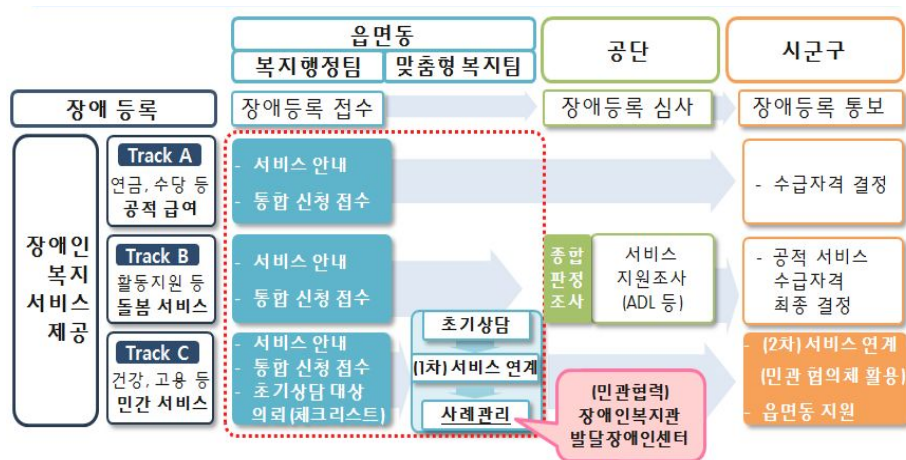
-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현행 70여개의 서비스제공기준으로 활용되는 장애등급을 서비스 종합판정, 중·경증 단순화, 또는 별도기준 마련으로 대체 - (서비스 종합판정 도입) 장애인 개인별 욕구, 기능제한,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중·경증 단순화) 감면·할인 등 다수의 서비스가 1~3급, 4~6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어 1~3급을 중증, 4~6급을 경증으로 개편하여 적용.

1) 4차 계획수립 시 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과 장애판정제도개선 사업으로 구분되어 수립되었지만 4차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 시에는 두 개 사업을 '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묶어서 평가하였음.

- (별도기준 마련)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중·경증 외에 별도의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

○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안내, 통합신청,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연계하고 종합판정을 위한 서비스지원조사 수행.

[그림 2-2] 등급제개편 3차 시범사업 장애등록 및 서비스 제공절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1차, 2차 및 3차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 15년.6~12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실시
- 16년.6~11월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
- 17년.4~10월. 공단-시군구 모형(5개), 읍면동-시군구 모형(13개), 총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법령 개정 추진

-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뇌병변 장애판정기준 완화, 정신장애 상병확대 등 의학적 장애판정기준 개선 검토.
- 종합판정 도구 도입 및 단계적 확대추진

나) 문제점

□ 제한적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인한 전달체계 개편 사업의 제한적 성과

- 지난 3차례에 걸쳐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본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군구는 전체 시군구의 약 10%에 불과함. 따라서 향후 19년도에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시군구에서 혼선이 우려됨.
- 지난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참여했던 시군구 복지플래너, 연금공단 복지코디 등의 새로 투입된 인력의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음. 향후 본 사업 실시 시 새롭게 투입되는 인력의 신분보장이 등급제 개편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임.

□ 종합판정표의 제한적 적용으로 인한 맞춤형지원체계 구축 목표 약화

- 종합판정표를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최대한 one-stop으로 확인 및 지원하는 것이 맞춤형지원체계 구축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종합판정표의 경우 아직까지도 활동지원제도 및 몇 가지 시범적용에만 국한된 활용으로 인해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목적이 약화됨.
- 향후 19년도 본 사업 실시 이전까지 본 종합판정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맞춤형지원체계 구축의 목표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3차례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및 서비스연계

- 1차 시범사업 2,565명 참여, 이중 2534명에게 서비스제공 및 연계
-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지원조사 4,037건 중 2,023건 서비스 연계
- 3차 시범사업의 경우, 2차 시범사업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공단-시군구 모
형과 읍면동-시군구 모형으로 구분하여 실시

○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된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중·경증 개편, 서비스종합판정 근거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16.10월)

□ 목표대비 달성도

○ 본 세부과제의 성과지표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서비스연계율(%)²⁾’과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참여율(%)³⁾’임. 본 사업의 경우 4차 계획 수립 시의 사업내용이 아닌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위한 맞춤형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내용이 큰 틀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13, 14년도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표 2-2> 세부과제 1-1-1 목표대비 달성도

성 과 지 표	성 과 목 표					
	구 분	13	14	15	16	17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서비스연계율(%)	목표	-	-	42	49.4	48.75
	실적	-	-	47.4	50.1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참여율(%)	목표	-	-	-	93	93
	실적	-	-	89.6	93.1	-

2) (서비스연계자수/시범사업에 참여한 등록 장애인 수)×100

3) (서비스참여자수/사업 안내자)×100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본 사업의 경우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원래 4차 계획 수립시의 사업내용과는 큰 틀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4차 계획을 평가함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군구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본 맞춤형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의 열악한 신분 등이 향후 본 사업 수행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성과지표 설정 시 산출목표에 해당되는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목표에 해당되는 성과지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1-1-2)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지원체계 구축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화통역센터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을 통하여 의사소통분야 확대.

□ 사업내용

- 중앙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수화통역사 양성 지원.
 - 지자체 수화통역센터 간 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원
 - 의료, 법률 분야 등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 및 지원
- 수화통역 교육 실시, 수화 홍보 등의 업무수행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한국언어수화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 16년 기준 전국 195개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운영.

나) 문제점

- 중앙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지자체에 운영 중인 통역센터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어려움(수화통역 영역별 통계 분석, 수화통역의 오역 문제 등).
- 법원 통역, 교육통역, 의료통역 등 전문 배경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수화통역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분야에서의 수화통역이 어려움.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계기로 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 마련
-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의식을 갖춘 공인 수화통역사를 배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16년 기준으로 전국 195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 16년 128명의 수화통역사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목표대비 달성도

- 본 세부과제의 성과지표는 의료, 법률 분야 등에서 수화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수화통역사 양성지원’임. 하지만 지난 4차 종합계획 진행 과정에서 1명의 전문수화통역사도 양성되지 않았음.

<표 2-3> 세부과제 1-1-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전문수화통역사양성지원	목표	—	20명	40명	60명	80명
	실적	—	—	—	—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사업 수행과정에서 4차 계획 수립 시 제시한 세부계획 중 중앙수화통역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전문수화통역사 양성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매해마다 수화통역사 교육지원 정도만 진행되었음(17년도 1천만원 지원계획).
- 따라서 5차 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4차 계획에서 전혀 진행조차 못한 2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좀 더 실현가능한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첫째, 3차례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정부분 구축하였음. 또한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19년 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중·경증 개편, 서비스종합판정과 관련된 관련 근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둘째, 한국 수화언어법을 제정하여 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또한 전국에 195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매해 수화통역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16년 128명 교육).

□ 한계 및 문제점

- 첫째, 제한적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인해 맞춤형서비스 종합체계 구축 성과가 제한적이며 향후 19년도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정부분 혼선이 우려됨. 또한 새롭게 투입되는 인력의 신분 불안정으로 인해 사업성과가 제한적으로 드러남. 그리고 19년도부터 적용될 종합판정조사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맞춤형종합지원이라는 취지가 다소 약함.
- 둘째, 중앙 수화통역센터 미설치로 인해 전국에 운영 중인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렵고 또한 법원, 의료통역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통역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수화통역사가 양성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통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나) 발전방안(제언)

- 첫째, 19년도 전달체계 개편 본 사업 실시 전까지 최대한 맞춤형지원체계 모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실시될 때 최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둘째, 본 사업 실시 전까지 관련 법령 정비 및 소요예산 추계와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본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성과확산을 위해 반드시 새롭게 투입되는 인력은 최소한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예산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셋째, 본 사업 실시 전까지 종합판정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급여의 범위를 확정하여 최대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함.
- 넷째, 중앙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전문수화통역사 단계적 양성을 통해 향후 수화통역서비스의 질 제고를 이루어야 함.
- 다섯째,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성과목표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함. 전달체계 구축, 교육실시, 만족도 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와 함께 대상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구축도 필요함.

2. (1-2)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1-2-1)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발달장애를 조기 판별하고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재활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사업내용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정밀검사비를 지원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평가된 대상자에게 지원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연중 1회에 한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함.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의 경우(차상위계층 제외)는 연중 1회에 한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홍보 강화

- 2013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영유아 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시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음.

□ 정밀검사비 지원 실적 점진적 증가

- 지원인원 719명('14년) → 920명('15년) → 1,052('16년)

나) 문제점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은 총인원으로만 실적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장애로 확진된 장애영유아가 재활치료 및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영유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1,052명의 영유아가 검사비를 지원받음.

□ 목표대비 달성도

- 연도별 목표달성률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음.
 - 119.4%('14년) → 103.7% ('15년) → 107.3% ('16년)

<표 2-4> 세부과제 1-2-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실적(명)	목표	—	814	891	980	1,000
	실적	740	972	920	1,052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실적위주의 성과산출이 아닌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수 대비 지원인원의 수를 평가하여 사업의 홍보 및 운영상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달장애로 확진되어 발달재활치료 및 조기개입을 받은 장애영유아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1-2-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 사업내용

- 2013년 8월 국립서울병원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함.
-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치료서비스, 치료사 양성 교육, 공공정신건강서비스 확대, 문제행동 치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을 제공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치료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계획하고 있음.
- 문제행동 치료를 위한 부모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치료실과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행동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을 제공하여 전문지식 및 역량을 강화시키고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함.

□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사업 활성화 도모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 제공하고 있음.
- 발달장애에 대한 공개강좌를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확대하고 있음.

나) 문제점

- 현재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전국에 1개소로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의 양적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특히 서울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재활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서비스, 치료사 양성 교육, 부모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을 중심으로 센터의 역할을 정립해가고 있으나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 발달장애 심포지엄 등 타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본 사업의 취지와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
- 성과지표가 치료실 이용 실인원 및 연인원 등 정량적 실적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료실 이용 만족도나 치료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부재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치료실 이용 실인원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함.
- 발달장애 관련 교육 제공을 통해 부모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킴.
 - 2016년 현재 관련기관 종사자 심화교육 4회 제공, 총 170명 참석
 - 2016년 현재 발달장애 공개강좌 2회 제공, 부모 28명 참석, 관련기관 종사자 44명 참석

□ 목표대비 달성도

- 치료실 이용 실인원의 경우 센터가 개소한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음.
 - 160.0%('14년) → 169.0% ('15년) → 126.0% ('16년)

<표 2-5> 세부과제 1-2-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자·타해 문제 행동 치료실 이용 실인원(명)	목표	40	40	40	50	-
	실적	30	47	79	63	-

- 치료실 이용 연인원의 경우 2016년 현재 목표 달성률 99.3%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행동치료의 어려움 및 부담감으로 치료사의 이직률이 높아짐. 2013년 센터 개소 이후로 2016년 현재까지 9명이 이직함.
- 치료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3)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부모 및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내용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가족캠프 등을 지원함.
- 부모상담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12개월 동안 제공함.
- 부모교육의 경우 발달장애자녀의 생애주기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8-10회기 제공함.
- 가족휴식지원의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시 장애자녀에게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2) 현황 및 문제

가)현황

□ 부모심리상담지원제도 강화

- 개별상담이외의 부부상담, 집단상담도 추가하여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음. 또한 구두상담이외에 미술·음악 등의 활동도 병행 가능함.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를 폐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서비스 이용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제공하고 있음.

□ 부모교육 활성화 도모

○ 발달장애자녀의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부모교육의 내용도 기본형, 심화형, 양육기술 훈련형으로 다양화하여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부모교육 제공 기관을 확대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 6개(‘16년) → 16개(‘17년)

나) 문제점

○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이 감소하고 있어 서비스이용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의 부재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 167개(‘15년) → 135개(‘16년)

○ 성과지표가 부모심리상담 이용 만족도로만 한정되어 있어 부모교육 및 가족휴식지원의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심리상담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부모심리상담서비스의 지원기간을 연장함.

○ 부모교육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감소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부모의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됨.

○ 모듈형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함.

□ 목표대비 달성도

○ 2016년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목표달성률 95.1%로 목표치에 못미치고 있음. 또한 2015년에 조사한 만족도와 비교하여 4%정도 감소됨.

－ 84.4% (‘15년) → 80.4% (‘16년)

<표 2-6> 세부과제 1-2-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서비스 만족도(%)	목표	－	－	－	84.5	84.5
	실적	－	－	－	80.4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부모상담지원, 부모교육, 가족휴식지원이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서비스 질관리 및 평가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서비스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1-2-4)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민간 연금과 신탁상품을 활용하여 부모의 사후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 도입

- 부모가 가입,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을 출시함.

○ 장애인신탁제도 개선 및 보완

- 의사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사용이 곤란한 자익신탁 방식 등 제도 수정 및 보완을 추진함.
- 자익신탁: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되어 신탁의 원금과 이익을 가지고 가는 신탁

2) 현황 및 문제

가)현황

- 신탁제도의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 확대의 어려움, 민간 보험사의 수익창출 가능성 저조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중간평가 내 성과지표에서 제외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2014년 NH생명과 KDB생명을 통해 연금 상품이 출시됨.
- 본 추진과제는 본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소관이었으나, 2014년부터 연금 상품 운영을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소관부처에서 해당 과제를 완료함에 따라 실적 파악이 되지 않음.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각 세부과제의 목적과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음.

-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비를 지원받는 영유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목표달성률도 매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어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실인원의 수는 매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행동전문가 교육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임.
-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기간 확장 및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장애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내용 차별화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한계 및 문제점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은 영유아의 수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평가만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발달장애 조기 선별의 목적이 적극적인 조기개입으로의 연계를 통한 장애영유아의 발달 촉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재활치료서비스의 경우 2013년 국립서울병원에 개소된 행동발달증진센터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는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실인원만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는 부모상담 서비스, 부모교육, 가족휴식지원으로 다양하지만 서비스의 성과는 상담서비스 만족도로만 측정되고 있어 한계가 있음. 또한 기관별로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서비스 질관리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나) 발전방안(제언)

□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조기개입 연계 구축

- 발달장애 조기 선별의 목적이 적극적인 조기개입으로의 연계를 통한 장애영유아의 발달 촉진임을 고려하여 발달장애로 판별된 영유아가 조기개입 및 발달 재활치료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절차 마련이 필요함.
-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재활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도모

-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국에 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재활치료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여 재활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의 평가 강화

-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부여되 서비스의 질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가족의 심리적 부담감 감소, 정서적 안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족휴식지원)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함.

3. (1-3)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1-3-1)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

□ 사업내용

- (신청 자격)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 (수급자 선정)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월 급여량)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 기본급여 : 1등급 1,091천원, 2등급 869천원, 3등급 657천원, 4등급 435천원
- 추가급여 : 1인 가구, 출산·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93~2,523천원
- (급여의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활동보조기관(활동보조인*), 방문목욕기관(요양보호사), 방문간호기관(간호사)
-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일정 교육(총 50시간) 이수 후 활동보조기관에 등록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3급 장애인까지 확대적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가산급여 도입

□ 다양한서비스를 통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지침 마련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시범사업 지속 실시(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으로 통합완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품질관리 강화

- 활동지원기관 평가주기 단축(3년에서 2년으로)
-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통폐합(51개에서 28개로)
- 처우개선을 위한 단가인상

나) 문제점

□ 활동지원제도의 기본적인 급여량 부족

-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인상, 중증장애인 가산수가 도입 등으로 인해 활동지원제도의 여건은 일정부분 좋아졌지만 장애인의 기본급여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

□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구축 미흡

- 현재 중증장애인의 상시 돌봄체계 구축으로 야간순회, 중증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본질적으로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 체계로서 한계가 있음.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간의 연계성 단절

- 현재 만65세가 도래하면 기존에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던 장애인의 경우 일차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야 함.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만 한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하지만 양 제도 간의 본인부담금과 급여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독거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급여량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되는 경우 지역 사회 생활을 불가능함. 이처럼 현재로서는 두 제도간의 연계성이 단절된 상태임.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제도시행 초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1급을 3급까지 확대함으로써 17년 현재 약 6만5천명 정도의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가산급여를 도입하여 최중증 외상장애인과 도전적 행동이 강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배제 현상을 완화시켰음.
-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켰음.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정기평가실시, 평가결과 공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부진기관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을 실시하여 활동지원제도의 품질관리를 강화시켰음.

□ 목표대비 달성도

- 본 세부과제의 성과지표는 4차 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확대’였지만 이는 4차 계획 진행과정에서 3급까지 이미 확대 완료가 되어서 ‘장애인활동지원 내실운영기여도⁴⁾’로 수정·변경되었음.

<표 2-7> 세부과제 1-3-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활동지원 내실운영 기여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00%	100%
	실적	-	-	-	100%	100%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향후 활동지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기본급여량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18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하여 18년도 활동보조인 서비스 단가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장애인의 급여량은 거의 변동이 없음. 따라서 장애인의 활동지원 기본 급여량 인상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돌봄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함. 24시간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예산추계,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두 제도 간에 선택권을 장애인에게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2)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 사업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 4)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율(30%)+활동보조 가산급여 이용률(30%)+활동지원 하위법령 개정(20%)+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증가율(30%)

- (발달재활서비스)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함.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를 지원함.

□ 사업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에게 1인당 월 22만원(자부담 포함)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동에게 1인당 연간 480시간의 돌봄 서비스 지원 및 그 가족에게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16년도)

□ 발달재활서비스

- 당초 계획 인원(45,000명) 대비 연평균 52,331명 지원
- * 예산상 대상 확대('12)31,450→('13)39,900명→('14)42,000명→('15)45,000명.
- 일자리: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연평균 5,576명
- 발달재활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민간자격 인정에서 관련 교과이수 위주로 개선하고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당초 계획 인원(3,300명) 대비 3,318명 지원(대상 확대: ('12)2,500→('13)3,000명→('15)3,300명

○ 일자리 : 장애아동 돌보미: 2,022명

나) 문제점

□ 발달재활서비스의 낮은 대상자 수

○ 현재 6개 장애유형만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하지만 4차 기본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대상자 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현재 월 최대 22만원까지 바우처 지원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급여량으로 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재활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엔 매우 부족함.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의 비효율적 운영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서비스 내용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함으로 인 해 제도 운영상에 비효율적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두 제도의 통합운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모두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 하였음.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경우 급여시간을 연간320시간에서 연간 480시간 으로 확대하여 제공하였음.

□ 목표대비 달성도

○ 본 세부과제의 성과지표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이용자 만족도’임.

<표 2-8> 세부과제 1-3-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목표	70	84	84	88	90
	실적	85	86	92	9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용자 만족도	목표	70	84	84	88	90
	실적	85	86	92	94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6세 미만의 발달장애에 대한 특화된 재활서비스가 필요하지만 4차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하였음.
- 발달재활서비스의 대상 장애유형을 6개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코자 하였지만 고려되지 못하였음.

(1-3-3)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중증 여성장애인에 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를 통한 여성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1~6급의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16년도 기준으로 1,678명 지원.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산비용지원사업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신청절차 간소화 유도.
- 홍보물(리플렛)을 지자체, 의료기관, 장애인단체 등 3,880곳에 약 9만부 배포하여 홍보강화(16.10월).

나) 문제점

- 출산여성장애인의 사업인식 부족 등으로 출산비용 신청률이 저조함.
-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지원금액(12년부터 17년도까지 1인당 100만원).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출산비용지원사업 대상을 장애 1~3급에서 장애 1~6급으로 확대하여 12년 1,307명 지원 대비 16년 1,678명 지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 인터넷 등 정보매체와 관련단체, 지자체를 통해 사업홍보를 강화하였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상자 누락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였음.

□ 목표대비 달성도

- 본 세부과제의 4차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비용지원대상’이었지만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율’로 수정·변경되었음. 이처럼 성과지표가 변경된 것은 4차 계획 집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1~3급에서 1~6급으로 확

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 2-9> 세부과제 1-3-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목표	<신규>	80	80	80	80
	실적	-	76.9	77.2	75.7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여성장애인 출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산비용을 현실화시키고자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음.

(1-3-4)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방지 등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4품목의 보장구⁵⁾* 지원.

□ 사업내용

- (목적) 기술 발전, 새로운 보장구 개발 등에 따라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현재 지원중인 보장구의 기준금액 현실화를 통한 보장 강화.

5) 장애인보장구 :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 (주요내용)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기술발전, 장애인의 권리 확대 등에 따라 장애인에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15.2.)에 장애인보장구 지원 강화 계획(’15~’16년)을 수립 및 시행.
 - 기술발전, 장애인의 권리 확대 등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 강화.

나) 문제점

□ 여전히 낮은 지원품목 개수

- 현재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품목이 85개에 불과함.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기준금액

-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기준금액이 현실의 시장가격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쓸모 있는 보장구가 별로 없어서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음.

□ 지역 간 보조기기 서비스 불균형

- 현재 17개 시·도 중 보조기기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개 지역임. 이 지역의 경우 보조기기 선택, 이용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15.7월):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 본인부담 면제.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품목 확대('15.11월):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욕창 예방매트리스 등 5개 품목 급여 확대(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방·후방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 장애인보장구의 기준금액 인상 및 급여기준 확대('15.11월): 시장가격과 현 기준금액의 편차가 커 조정이 필요한 보청기 등 5개 품목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보청기, 맞춤형교정용 신발, 의간,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발목관절 보조기).
- 장애인보장구 품목추가 및 적정가격 조정('16.4월, 9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품 추가(10개 제품) 및 적정가격 조정(4개 제품),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품목 추가(2개 제품) 및 적정가격 조정(1개 제품).

□ 목표대비 달성도

- 본 세부과제의 성과지표는 4차 계획 수립 당시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급여 신규적용이었지만, '장애인 보장구 보장성 확대추진률'로 수정·변경되었음. 이는 15년도에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이 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표 2-10> 세부과제 1-3-4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보장구 보장성 확대추진률(%)	목표	<신규>	<신규>	100	100	100
	실적	-	-	100	100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건강보험 보장구지원이 적용되는 지원품목 단계적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욕구, 일상생활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지원품목 단계적 확대.
- 건강보험 보장구지원사업의 기준금액 현실화 및 지역 간 보조기기 서비스 불균형 해소: 보장구의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금액 설정과 보조기기 센터가 설치되지 못한 7개 지역에 대한 단계적 센터 설치.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자격을 1급에서 3급으로 확대하여 대상자의 수를 대폭 확대시켰고, 가산급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종증 와상 및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배제현상을 완화시켰음. 또한, 주간활동서비스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서비스 품질관리 노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
- 둘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와 양육지원사업 모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양육지원사업은 급여시간을 연간 3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하였음.
- 셋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자격을 장애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였고, 신청대상자 누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신청절차 간소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넷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확대 사업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10%로 경감시켰고,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5개 품목에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시장가격과 기준금액의 편차가 큰 5개 품목에

대한 기준금액을 인상하였음.

□ 한계 및 문제점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급여량이 부족하며,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 체계가 미흡함.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여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만65세가 도래하면 급여량의 대폭 하락에 직면하게 됨.
- 둘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는 대상 장애유형을 6개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필요로 하는 나머지 9개 장애유형의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적으로 급여량이 매우 낮음. 또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사업수행인력 등이 매우 유사하여 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가 매우 많음.
- 셋째,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의 경우, 지급되는 출산 지원 금액이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넷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사업의 경우 꾸준히 적용대상 및 기준금액이 확대 및 인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음. 또한 보조기기 센터가 설치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나) 발전방안(제언)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일차적으로 인정등급별 기본급여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단가만 인상하는 것은 장애인의 급여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서비스 단가 인상과 함께 동시에 기본급여량 인상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또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인정,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활동지원제도 간에 선택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인 검토 및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일차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6개 장애유형에서 단계적으로 장애유형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6세 미만의 발달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 개발 및 기본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급여량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아동 활동지원제도와 매우 유사한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사업의 경우, 일차적으로 출산지원 금액을 100만원에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실적인 단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사업의 경우, 일차적으로 현행 85개 지원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자립생활 욕구를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해당 지원품목의 기준금액을 시장가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보장구선택, 이용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 일련의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보조기기 센터가 설치되지 못한 7개 지역도 단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임. 특히 19년 장애등급제개편 본 사업 실시와 맞물려 단계적 설치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성과목표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함. 대상자 수, 만족도 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와 함께 대상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구축도 필요함.

4. (1-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1-4-1)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주체가 되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등의 지역사회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센터의 기능 확립⁶⁾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단계적 퇴소·지원 관리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국고지원 개소 수 확대

- 2012년 35개소 -> 2017년 62개

나) 문제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종합적인 지원체계 미흡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이 다양한 형태(주거지원, 의료지원, 일자리 지원 등)로 지원되고 있으나 분절적임.
-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과 직결되지 않음.
-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확대는 의미있는 사업이나 사업의 목적인 ‘거주시설 장

6) 시설퇴소 장애인의 동료상담 및 권익옹호사업의 기반 마련

애인의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강화'를 달성하기에는 사업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임.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복지법」 개정(제54조 제3항 신설)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국고 지원 기관 확대
- 2012년 35개소 → 2017년 62개소

□ 목표대비 달성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국고지원개소수

<표 2-11> 세부과제 1-4-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국고지원 개소수	목표	40	45	50	55	60
	실적	56	56	61	62	62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탈시설 지원과 직결되기 어려움.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달성하기에는 사업 내용이 매우 제한적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종합적인 지원체계 미흡.
- 현재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이 다양한 형태(주거지원, 의료지원, 일

자리 지원 등)로 지원되고 있으나 분절적임.

(1-4-2)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모를 30인 이하 소규모화 하고 체험홈 등 시설 유형 다양화로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및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

□ 사업내용

- 대규모 시설 개편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 －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과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가정형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 시설 소규모화 개편

- 가정형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거주시설 확충
 - － 단기거주시설 : 2012년 128개(1,438명) -> 2016년 146개(1,616명)
 - － 공동생활가정 : 2012년 685개(2,760명) -> 2016년 736개(2,903명)

<표 2-12>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현황

(단위: 명, 개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단기	인원	1,438	1,432	1,495	1,548	1,616
	시설수	128	131	137	141	146
공동	인원	2,760	2,766	2,855	2,899	2,903
	시설수	667	685	713	717	736

○ 대규모시설 소규모화 지속 추진

- 30인 초과 시설 비율 : 74.5%(2012년) -> 78.6%(2015년)

<표 2-13> 대규모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348	1,397	1,457	1,484	1,505
30인 이하	1,004	1,059	1,121	1,154	1,183
30인 초과	344	338	336	330	322
소규모화 비율	74.5	75.8	76.9	77.8	78.6

나) 문제점

□ 법적·제도적 한계

○ 대규모 장애인시설은 대부분 법인이나 개인의 소유로 소규모로 전환하기에 법적·제도적 한계 존재함.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을 그룹홈·단기 등을 포함한 소규모 비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 사업목적의 추진 동기와 거리가 있음.

- ‘시설의 소규모화’를 기존의 목표⁷⁾와 달리 그룹홈, 단기거주시설을 포함하

7) 초기 4차 계획에서는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 비율을 축소(12년 17.8%→17년 12.2%)하는 것으로 세웠으

여 소규모 시설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소규모 가정형 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소규모화 권장

- 시설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지속 확충
-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 30인 이하시설로 분리 및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권장하여 소규모화 추진
 - 전체 시설에서 소규모시설의 비율이 80%가 되도록 연차별로 확대
 - 30인 이하 소규모시설 설치 실적: 252개소(2011~16년).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인거주시설 중 소규모시설 비율

<표 2-14> 세부과제 1-4-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거주시설 중 소규모 시설 비율	목표	74.5	74.9	77.3	79.2	80.9
	실적	75.8	76.9	77.8	78.6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시설의 소규모화에 따라 장애인의 거주시설 입소가 어려워짐.

- 입소대기자, 자연감소 인원(사망, 재가전환 등)이 발생하여도 기존 시설에서 충원하는 것이 어려움.

나 중간에 30인 이하 시설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함

-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시설 지원 한계.
- (이후 추진방향) 기존 대규모 시설의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전환 개편 시 기능보강사업(신축) 지원 및 시설관리비 차등 지원.
- 관리운영비 지원단가: 30인 이하(입소자수×2,209천원/년), 30인이상<(30인×2,209천원+(입소자수-30인)×629천원)/년>
- 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우선지원.
- 장애인거주시설의 다양화 지속추진 및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1-4-3)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구입자금을 저금리 용자로 지원하고 노후공공임대 주택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

□ 사업내용

-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장애인가구 우대금리(0.2%p) 적용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 증명서가 있을 시 우대금리 적용.
-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50년)에 거주하는 주거약자가구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안전손잡이, 상하이동샤워기 등).
 - 장애인경사로 및 공공주택단지의 공동시설(복지관)에 안전바 등 설치.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 우대금리 적용(0.2%p)

○ 2016년 실적

- 구입자금 : 586건, 498억원 지원.
- 전세자금 : 1,922건, 732억원 지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

- 2016년 실적: 주거약자용 장애인편의시설 설치(11개 단지), 장애인경사로 (1개 단지) 등 9억원 지원.

나) 문제점

□ 지원확대를 위한 지원규모와 근거자료 확충 필요

-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의 노력 필요.
-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의 차이가 크고, 신청대상자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평가되어야 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지속적으로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 우대금리 적용(0.2%p)하고 있으며, 연도별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 목표 달성율: 214.6%(2013년), 207.1%(2014년), 165.1%(2015년), 123.0%(2016년).
-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등 주거약자 가구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경사로, 사회복지관 개선 등.
 - 목표달성율: 102.4%(2015년), 100.0%(2016년).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지원, 노후 공공임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표 2-15> 세부과제 1-4-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지원(억원)	목표	-	900	950	1,000	1,050
	실적	-	1,830	1,570	1,230	-
노후 공공임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억원)	목표		-	8.5	9	7.7
	실적		-	8.7	9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전세·구입지원 지원.

- 모니터링, 의견수렴, 문제해결 노력 등 추진과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의 활용 및 개선 필요.

○ 성과목표의 변경과 목표 설정의 근거 부족

- 중간에 성과 목표가 변경되었으나, 새로운 목표 설정의 근거 부족함.
- 목표설정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전세·구입자금과 주택개조비 지원으로 나누어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 있음⁸⁾.

(1-4-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8) 4차 계획에서는 주택개조비 지원가구 확대(2013년 1,000가구 -> 2017년 2,000가구)가 성과목표로 되어 있으나, 중간에 '노후 공공임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변경됨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양·임대주택의 일부 물량을 우선(특별) 공급함.

□ 사업내용

- 장애인에 대한 분양·임대주택 우선(특별) 공급 추진.
 - － 전용면적 85m²이하 분양·임대주택의 100% 범위에서 특별공급.
 - － 국민임대주택 연간 건설물량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 － 공급순위에 따라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100%)
- 2013년 국가 등 공공에서 장기공공(영구, 행복, 구민) 임대주택 건설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확대(수도권 5→8%, 지방 3→5%).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국민주택 임대물량의 장애인 우선 공급

- 목표달성율(수도권): 2013년 94.0%, 2014년 170.0%, 2015년 110.0%
- 목표달성율 (지방): 2013년 160.0%, 2014년 200.0%, 2015년 108.0%

나) 문제점

□ 추진과제(세부계획)와 세부지표의 불일치

- 추진과제(세부계획):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주택 특별(우선)공급 지속 추진,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확보.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달성을 확인하기에 부적합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 기회 확대함.

□ 목표대비 달성도

○ 국민주택 임대물량의 장애인 우선 공급 달성량

<표 2-16> 세부과제 1-4-4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국민주택 임대물량의 장애인 우선 공급 달성량	목표	수도권 5% 지방 3%	수도권 5% 지방 3%	수도권 8% 지방 3%	수도권 8% 지방 3%	수도권 8% 지방 3%
	실적	수도권 4.7% 지방 4.8%	수도권 8.5% 지방 6%	수도권 8.8% 지방 5.4%	미확인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방안이며, 행복주택, 공공지원주택을 장애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달성을 확인하기에 부적합하며 이를 위한 지표발굴이 필요함.

－ 추진과제(세부계획)와 성과지표가 불일치함.

나. 총평(발전방안)

-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및 주택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우대금리 적용,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
 -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특별(우선) 공급.
- 전반적으로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에서 수립하였던 성과지표는 모두 달성하였음.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국고지원 수가 확대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비율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것 등은 의미있는 성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성과지표 달성이 곧 사업목적 달성을 의미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임. 즉,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지만,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성과목표를 설정한 근거 역시 미약함.
- 따라서 주거지원강화 세부 사업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의 수정 및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지표발굴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제2절 건강·체육 분야

1. (1-5)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1-5-1)장애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국민건강증진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제17조(장애발생예방),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주요내용)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전국확대 추진

- 장애발생 예방교육 전국확대를 위한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장애발생 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 장애발생 예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장애발생예방사업 실적

- 장애발생예방교육 실시(467회, 65,255명)
- 장애발생예방강사 양성 및 관리
 - 강사양성교육(2회, 22명), 강사연수교육(3회, 26명), 강사회의(4회, 분기별, 연인원 59명)
- 장애발생예방사업 간담회 등
 - 장애발생예방 간담회(1회), 자문회의(1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워크숍(1회) 등을 통한 정보 나눔의 장 마련
- 유공자 표창 등 사업의 활성화 도모
 - 장애발생예방교육 유공자 표창(복지부장관표창 3명, 국립재활원장 표창 4명)
 - 장애발생예방교육 우수소감문 선정·표창(금상 등 30명 국립재활원장 표창)
- 장애발생예방 홍보 및 기타
 - 장애발생예방 홈페이지 운영(www.noinjury.go.kr): 정보제공 등
 - 교육안내 리플렛 배부(약 6만배)
 - 교육자료(선물 등) 배부(약 6,000개)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결과(장애발생예방사업) 우수 등급

나) 문제점

-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큰 호응 및 교육 확대를 얻고 있으나,
-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예방체계 및 장애예방센터 등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전국적 추진체계가 미약하고 담당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발생예방 확대에는 한계에 도달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서울, 경기지역 교육 확대 및 장애예방강사 지속 발굴 및 양성
-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애발생예방교육 전국 확대를 위한 MOU체결 및 기관 간 협업

- 성북·순천 교육지원청('13), 성동·강남 교육지원청('14)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발생예방

<표 2-17> 세부과제 1-5-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발생예방 교육인원	목표	51,000	52,500	54,000	55,500	57,000
	실적	87,825	95,526	131,198	117,511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전체 사업내용과 범위 제시 필요.
- 교육 대상자를 다양화 하고 대상자별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교육을 통해 실제 변화된 장애 인식 등 지역사회 공감제고 등 교육효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

(1-5-2)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강화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권역재활병원·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 보건소 중심의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지역사회중심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통한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 건강증진, 가족지지 등으로 일상생활 촉진 및 자립능력 증진.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 복지법 제18조, 제35조, 제81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 제45조
- 장애인 건강권법
- 국정과제 50-5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주요내용)

- 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 보건소 확대를 통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권역재활병원 추가 건립 지원.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보건소 확대.
- 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보건소를 통한 장애인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을 통한 사회복귀, 건강증진, 방문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16년부터 대상자 범위를 소아까지 확대).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건소를 통한 지역사회장애인 재활치료 및 건강증진, 장애발생 예방 프로그램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권역재활병원 1개소 추가건립 진행 및 공공재활프로그램 대상자 범위 확대
 - 권역재활병원 1개소 추가 건립을 위한 지원.
 - 전국 6개 권역재활병원에서 장애인 대상 공공재활프로그램(사회복귀지원·방문재활·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 '16년부터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대상자 범위를 소아까지 확대하여 소아재활·사회복귀 지원.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의 필수사업 지정 및 전국적 확대
 - '1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 보건소 171개소로 확대 시행.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내의 세부사업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필수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7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 보건소의 전국 확대 예정.
 - ('14년) 113개소 → ('15년) 142개소 → ('16년) 171개소 → ('17년) 254개소

나) 문제점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 보건소의 예산 및 인력 확보 필요.
- 추가 건립중인 권역재활병원의 건립예정지 변경 불가피로 인한 건립 추진 다소 지연.
- 재활의료서비스의 도시지역 집중으로 장애인 거주지역과 실제 서비스 공급 간의 괴리 발생 및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민간의 공급기피로 인한 과소 공급현상 지속.

- 현재 전국 6개 권역재활병원이 건립 완료 및 운영중이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사각지대 존재.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권역재활병원 추가 건립 및 6개 권역재활병원을 통한 공공재활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 보건소의 단계적 확대.

□ 목표대비 달성도

- 공공재활프로그램

<표 2-18> 세부과제 1-5-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참여자수(명)	목표	500	600	720	840	900
	실적	606	1,046	850	1,166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업 대상이 다양화와 사업확대 방안 마련.
- 의료재활진달체계 확대 구축 등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1-5-3)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발·보급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병원기반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 실현 및 삶의 질 증진.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 (주요내용)
 - 입원환자 대상 맞춤형 사회복귀프로그램 확대 운영
 - 병원 기반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보급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입원환자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특화운영

- 입원환자의 심리사회적 적응, 재활동기 고취를 위한 사회복귀 기초 프로그램 운영.
- 가정복귀, 직업 및 학업복귀 등 사회복귀를 위한 개별 맞춤 지원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 홈 체험, 지역자원 연계 등 퇴원 준비 프로그램 운영.
- 공공·민간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확대.
 - (사)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와 협업을 통해 무료 주거개선사업 확대실시('15년 6건 →'16년 12건).
 - 성북, 강북, 도봉 보건소 등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재가장애인 가족 심리지원사업 확대 실시('15년 2차 → '16년 3차).
- 사회복귀지원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복귀지원 자료 발간 및 관련 기관 보급(2건).

- 장애인 주택개조 사례집, 장애인 여가문화 프로그램(여행).
- 지역기관 사회복귀지원 실무자 네트워크 강화(간담회 2회).
- 사회복귀 세미나 개최(1회)
- 지역사회연계 시스템 구축.
 - 사회복귀 대상 환자 지역기관 의뢰 및 회송 체계 구축.
 - 강북지역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 등 10개 기관, 14명.
 - 퇴원환자의 지역기관 연계 및 이용현황 등 추적 관리.

나) 문제점

- 입원환자의 편중된 재활치료에 대한 욕구로 인해 별도의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적용 어려움 발생.
- 연계한 지역기관의 프로그램 대기기간이 길고, 가족 간병, 사회적응 어려움 등으로 사회복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입원하는 경우 많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사회복귀프로그램을 통해 중도 장애인의 사회복귀율 향상 도모.
 - 퇴원환자('16년)의 29.7%가 사회복귀(가정, 직업 및 학업복귀)
 - '15년 27.5% 대비 2.2% 증가
-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총 18가구('15~'16)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도모.
- 병원기반 사회복귀모델 및 프로그램 보급.
 - 「병원기반 사회복귀지원사업 매뉴얼」('13년), 「장애인 주택개조 매뉴얼」('15) 등 관련 자료 발간 및 일선기관 보급(8종)

- 기존 권역재활병원(6개)외 민간재활병원(서울재활병원 등 11개)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실무자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등 지속 실시.
- 사회복지 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자료조사 및 구성안 도출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사회복지대상 환자 지역기관 의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사회통합 촉진.
 - 퇴원 중도장애인의 사회복지 실태 추적 관리('13~'14년)
 -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및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한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16)

□ 목표대비 달성도

○ 사회복지프로그램

<표 2-19> 세부과제 1-5-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건)	목표	1	2	2	2	2
	실적	1	2	2	2	-
사회복지 네트워크구축(건)	목표	-	2	2	2	2
	실적	-	2	2	2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위해 다양한 모델 개발 및 보급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장애별, 중증도별 지역사회복지 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함.

(1-5-4)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 및 건강증진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유형 및 특성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를 달성,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고령 장애인의 각 장애별 특성을 파악하여 재활의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고령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력 향상에 기여함.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7조(장애발생예방),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2010년~2014년 국감지적사항(장애인 만성질환 관리문제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률 제10조~12조

○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상태 평가와 모니터링: 장애인 건강모니터링을 위한 코호트 구축, 지체장애인 건강코호트 수행.
-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13-'14년 장애인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DB 구축, '13-'14년 장애인 건강통계 및 장애인 상병 및 사망심층 분석.
-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장애인 건강증진요구도 및 미충족 욕구조사,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적용, 장애인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사후 모니터링.
- 고령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개발 추진단 구성 및 연구모임 운영: '14년 연구모임 10회 운영 및 지역사회 허약노인 및 고령장애인 재활서비스 실태조사,

‘15년 고령 뇌졸중 장애인 집단 재활프로그램 임상시험 적용, ‘16년 간호·물리·인지재활영역별 고령 뇌졸중 장애인 프로그램 적용.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장애인 건강상태 평가와 모니터링

- 지체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1건)
- 지체장애인 건강코호트 기반조사(2차년도) 실시(133명)

□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 국가단위 데이터 구축(3건)
- 장애인 건강데이터 구축(3건)
- 장애인 건강 및 사망통계 산출(3건)

□ 장애인 단체,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건강증진 요구도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청각장애인 건강증진 요구도 조사(200명)
- 청각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1건).
- 청각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평가(1건, 25명)
- 지적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사후모니터링(1건, 27명)

□ 고령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재활욕구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

- 소책자를 이용한 뇌졸중 이차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1건)
- 고령 뇌졸중 장애인의 등급별 반복 상지보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1건)

- 고령 뇌졸중 장애인의 구조화된 주의기술 처리훈련 프로그램 임상적용(1건)

나) 문제점

- 지치장애 특성에 따른 임상검사 진행기관 시설 및 장비상용 문제.
- 코호트 대상자 수 확대에 의한 예산부족.
- 장애인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사회적·국가적 지원 및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움.
-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장애인 자료 구득 어려움.
- 고령장애인의 인지·신체·심리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적용 전/후 구조화를 위한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됨.
- 고령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개별 보조인력이 요구됨.
- 재활프로그램 적용 시, 적용 후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물리적 지원과 예산이 필요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국가단위 장애인 건강 데이터 구축.
- 청각, 지적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고령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 및 재활욕구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적용.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표 2-20> 세부과제 1-5-4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통계생산 등 기반연구수행(건)	목표	1	2	3	3	3
	실적	4	4	5	2	-
모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건수)	목표	1	2	2	2	2
	실적	1	1	1	1	-
고령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제공(건수)	목표	-	1	1	1	1
	실적	-	0	1	1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실시되었으면 함.
 -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그치지 말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장애인에게 보급하고 확대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함.
- 장애 등록시부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1-5-5)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 수행.

-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과 의료수준 향상을 통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건강한 삶 보장.
- 보훈의학연구소 건립 등으로 임상연구 및 적정진료 환경 구축.
- 지방보훈병원은 특성화 전문진료센터로 육성하여 진료역량 제고.
- 인천 보훈병원 건립으로 인천 권역의 보훈의료시설 인프라 확충.
- 국가유공 상이자의 손상된 신체부위 기능 보완 및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보철구 공급.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1조(의료지원) 및 42조(진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 전액 또는 감면 지원 및 의료수준 향상, 진료역량 제고 등 국가유공 상이자 의료서비스 강화.
- 보훈 대상자의 고령화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질환 전문병원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 의료시설로 건립하여 인천 권역 보훈대상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유공자에게 상실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지, 보조기, 중상이자 편의시설 등의 보철구 지급.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보훈병원 진료

○ 보훈병원별 특성화 전문진료센터 활성화로 진료역량을 제고하고 질환별 특성에 맞는 전문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대.

- 수(水)치료(11,672건) 등 첨단재활치료제공.
- 부산병원(심혈관, 말초혈관 중재술 2,582건), 광주병원(척추·관절, 뇌신경센터 147,901명), 대구병원(인공와우 등 24건), 대전병원(심혈관조영술 774건).
- 부산병원(근골격 클리닉 개설, 3월), 대구병원(인지·작업·수치료실로 확장, 5월), 대전(체외충격파 장비 신규도입, 최첨단 비수술적 통증치료 개시, 6월).

○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훈병원 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 도입.

- 음압병실(13실) 및 응급실 내 선별진료소(5실) 설치, 중앙보훈병원 별관동리노베이션 및 옥상녹화공사(12월), 광주병원 전문진료센터 개소(9월), 5개 병원 노후진료장비 교체 및 도입(MRI 등 113종 168억).

○ '16년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고객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 마련 조치.

○ 보훈의료수요 및 제도변경 등에 대응한 법령정비와 지원체계 마련.

- 의료지원규칙 개정,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연령 확대(70→65세, '16.7월).
- 상이등급미달 경찰·소방공무원 등 상이처 국비진료('16.11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범도입, 운영('16.12월).

□ 보철구 지급

○ 지급실적: 보철구 47종 10,500개, 중상이자 편의시설 4종 412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전면 개정('16.10.31)으로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지급기준 체계화.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보철구 취형, 맞춤 및 수리 실시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16년 322회).

○ 제작 보철구의 지속적 품질 개선 추진

-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경량화 공급 확대(수량: '15년 44건 → '16년 298건, 디자인: '15년 1종 → '16년 4종).
- '14년 실리콘 의수 제작 특허 취득 후 실리콘 의수 및 다리 의지 미관용 커버 제작 및 공급('16.10월).

○ 휠체어 공급 대상자들을 위한 전국 순회(5개 보훈병원) 설명회 개최 및 카탈로그 리플릿 배부 등 안내서비스의 지속적 강화.

○ 보훈관서 담당자 워크숍 개최(2016.12.7.)와 상이군경회 등 지급대상자와 수시 면담을 통해 실무적, 정책적 의견 청취 및 불만족 사항 적극 반영 검토.

□ 인천보훈병원 건립 추진

-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조기에 건축허가 완료('16.2)
- 설계과정에서 암반발견 등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사유 발생하여 기획재정부와 예산증액 협의 결과 38억원 증액('16.5).
-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재건축 허가 완료('16.7)
- 공사관리 및 개원을 위해 개원준비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16.12)

나) 문제점

□ 인천보훈병원 건립

- 당초 '16.5월 착공예정이었으나 설계과정에서 암반발견 등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 증액된 예산 38억원을 설계에 반영한 이후 공사입찰, 시공사 선정을 거쳐 '16.10.31 착공함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5개 보훈병원과 300여개 위탁병원 근접진료를 통해 건강한 삶 보장.
 - 중앙보훈병원은 ‘치료-재활-요양-연구’기능이 융합된 의료전달체계구축(1,400병상).
 - 지방보훈병원은 특성화 전문진료센터 지속 육성, 진료역량 제고.
 -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및 관리강화로 의료수준 향상.
- 인천·경기 서부지역 취약한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보훈병원 건립추진(‘15~’18).
 - 공사발주(‘16.8), 공고(‘16.9), 시공사 선정(‘16.10), 착공(‘16.10.31)
- 개인 맞춤형 보장구 공급 및 재활훈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보철구 품질개선 공급 품목 확대 등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아래팔 슬리브 개발을 통해 의수 미관 및 착용감 향상(‘15년)
 -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경량제화」 개발 공급(‘15~’16)
 - 책마루, 자세유지 보조기, 방수용 실리콘슬리브, 방수용 실리콘 커버, 맞춤형 실리콘 라이너, 샤워형 휠체어 등 신규품목 공급(7종)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보철구 취형, 맞춤(수리 포함)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 보철구 품목에 관한 카달로그 제공 등 안내서비스 강화.
 - 보장구-재활센터 협업을 통한 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 의지 사용환자의 보행 및 운동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16년 130명)
- 대전보훈병원 심혈관센터 건립
 - 추진기간: 2013.10~2014.12
 - 총사업비: 8,380백만원(세출 37억, 복권기금 43억, 보훈공단 3억)
 - 주요내용

- 심혈관센터 건립: 본관동 1개 증축, 2,288㎡(674평)
- 주차장 건립: 지상2층(주차대수: 222면), 4,196㎡(1,269평)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21> 세부과제 1-5-5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목표	86.6	92.4	96.8	95.0	99.6
	실적	96.6	99.3	99.4	99.5	—
인천보훈병원건립 공정율	목표	—	—	26.3	48.3	72.3
	실적	—	—	26.3	28.6	—
보철구 지급 만족도	목표	4.09	4.12	4.29	4.35	4.39
	실적	4.12	4.27	4.30	4.36	—
중상이자 편의시설 수요자 만족도	목표	—	3.90	4.35	4.40	4.43
	실적	—	4.23	4.37	4.41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연도별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
- 국가유공자 대상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었는지 효과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장애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식개선,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음.
- 장애인에게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부족한 공공재활사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함.
- 병원 입원 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임.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 기반마련을 위한 코호트 구축, 건강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병원시설 확충, 보철구 사용, 침단 휠체어 등 제공됨.

□ 한계 및 문제점

-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등 효과를 이끌어 내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부족.
- 의료재활체계 확충을 위한 체계적 사업 운영 필요.
- 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개개인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되어야 함.
- 현재 구축된 장애인의 건강특성, 질병양상, 의료이용 등 장애인 건강통계의 세분화가 미흡함.
- 청각, 지적장애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여 실제 건강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함.
- 국가 유공자에 대한 평가지표가 대전 보훈병원 시설확충, 보철구 사용 만족도 등 제한적이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확충방안 마련 필요함.

2. (2-5)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2-5-1) 장애인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및 지도자 배치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인구 확대.
- 동호인지원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통한 생활체육 활동 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

□ 사업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
 - 장애인 건강, 레저 스포츠 활동지원
 -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지원
 - 생활체육대회지원(장애유형별 통합 및 축제대회 개최지원, 전국 어울림축제 대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 등 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 및 배치
-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보급
- 장애인 생활체육 용기구 지원(휠체어사이클, 동계스포츠 용기구 등 보급)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지속적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증대(2016년 17.7%)

□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 각종 생활체육교실 지원(541개소), 동호회 지원(246개소)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어울림·동호인 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활성화(134개소, 44,254명 참가).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체육활동 신규참여자 발굴(5,308명).

□ 지역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

- 일반학교 체육교사에 대한 통합체육 연수 및 매뉴얼 제공을 통해 학교 현장의 통합체육 보급 확대(교사연수 211명, 교실지원 6개소).
- 전일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 146명)에 따른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대응(총 355명).
 - 지도자 수혜인원: 약 122만 명

나) 문제점

□ 장애인체육 수요 증가 대비 지도인력 매우 부족

- 17개 시도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의 부족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참여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함.
 - '16년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600명 배치에 비하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12.9%인 335명 배치에 그침.

- 또한,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시도단위(일부 시군구) 배치로 인한 밀착형 지원에 한계가 있음.

□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다양성 제한

- 장애인체육 참여 인구의 양적 증가에 반해 장애인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다양성이 여전히 제한됨.
- 즉, 기존 참여자들의 전문적 종목 특화 요구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부족과 이에 반하여 초보 및 체험을 요구하는 신규 참여자들에 대한 계절 레저스포츠 참여 프로그램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체육 참여 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저변 확대
 -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체육 참여인구 지속적 증가(장애인종합정책 5차년도 기간 중 연평균 1.5%)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3~2016년 동안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함.

<표 2-22> 세부과제 2-5-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목표	11.6	12.8	15.5	16.9	18.8
	실적	12.3	14.1	15.8	17.7	-

주: 16년 기준 달성율 104.7%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체육영역에서의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정책은 전 장애인계

층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있음.

- 체육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활성화 정책 추진 외에 복지-교육-보건의료 영역과의 연계 및 확대 지원 서비스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즉, 수요자 대비 참여 환경을 체육 이외 영역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목적, 복지의 공유, 의료건강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 경우 복지 영역 일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체육의 자산(지도자) 공유를 확대하고, 교육-복지 영역의 물리적 자산(소규모 체육관, 강당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복지분야 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2-5-2) 장애인 체육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생활체육정보센터, 블로그 운영을 통한 각종 장애인체육 정보 및 참여기능 제공.
- 장애인국가대표 훈련시설의 지속적인 보수와 기능개선으로 시설 안전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훈련여건 개선.

□ 사업내용

- 대한장애인체육회 블로그 운영(http://blog.naver.com/kosad_blog)
 -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행사정보, 참여이벤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http://sports.koreanpc.kr>)
 - 각종 생활체육 정보,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현황,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대회/행사정보, 스포츠용품 임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및 참여기능 제공.

○ 통합정보센터 운영(<http://total.koreanpc.kr>)

- 전문체육 분야 선수등록신청, 지도자 등록신청, 심판등록신청, 등급분류사 등록신청란 운영.
- 생활체육 분야 클럽생성/가입신청, 교실참가신청란 운영, 당해연도 등록 일정 안내
- 경기단체 회장선거 등 안내

○ 훈련원 녹지공간 환경개선

- 건물주위 및 옥상 선수 휴게정원 조성(1,815평), 종합체육동 선수 휴게 공간 조성 및 의무실 환경개선.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대한장애인체육회 블로그 운영(http://blog.naver.com/kosad_blog)

- 운영기간: 2016.1.~12월 / 블로그 포스팅 수: 258건

□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http://sports.koreanpc.kr>)

- 각종 생활체육정보,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현황,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대회/행사정보
- 스포츠용품 임대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및 참여기능 제공
- 연간 정보센터 이용자수(12월말 기준): 556,654명

□ 컬링훈련장 건립 완료(소요예산 : 17,700백만원)

- 사업기간: 2014.1월 ~ 2016.12월
- 시설면적: 4,360㎡(1,319평) / 층수: 지하 1층, 지상2층

□ 사격훈련장 건립 완료(소요예산: 6,020백만원)

- 사업기간: '14. 1. ~ '16. 6
- 시설면적: 6,044㎡(1,829평) / 층수: 지상 1층, 지하 1층
- 기존: 4,724㎡(1,429평), 증축: 1,320㎡(400평)

나) 문제점

□ 정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미흡

- 정보 접근성의 다양화 대비 제공되는 정보의 한계성 개선,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방안 추진이 필요함.
 - 재활과정 운동 초보자의 입문 과정, 타영역과의 공조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문체육선수, 기존 생활체육인구를 대상으로 한 현재의 정보 공유 방식이 특히 개선되어야 함.

□ 체육시설의 활용성 제한

- 장애인국가대표선수의 전용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비해 공공 체육시설의 장애인 활용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비장애 전문체육 시설에 대한 장애인 선수 병행 이용 기회가 제한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다양화 시도
- 장애인체육 시설 인프라 구축 목표 달성
 - 장애인 동계체육 시설(컬링장) 및 사격장 건립 완료

□ 목표대비 달성도

- 성과목표는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건립이며, 계획연도 내에 완료하여

목표를 달성함.

<표 2-23> 세부과제 2-5-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체육정보시설 인프라구축	동계체육 시설	시설건립 완료				
	사격장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성과목표 100% 달성에 따른 신규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시설 이용률 또는 운영 효율화 관련 지표 신설

(2-5-3)장애인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장애유형별 종합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장애유형별 경기력 향상 도모 및 국내 장애인스포츠 저변 확대.

○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지원을 통한 '18평창동계패럴림픽 및 '20도쿄패럴림픽 상위성적 기반 조성.

○ 장애인스포츠 선진 국가로서 국가위상 강화 및 이미지 제고

○ 국제대회 국내개최를 통한 국내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기회 제공

□ 사업내용

○ 국가대표 상시훈련 및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지원

○ 종합국제대회 특별훈련 및 참가지원

○ 장애인스포츠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국가대표 훈련 및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 국가대표 훈련 평균 114일 총 477명 참가

○ 45개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총 165개 메달 획득 : 금71, 은53, 동41)

○ 장애인국제대회 경기력향상도 목표치 107% 달성

□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 국제기구 한국인 임원 진출 수(13명, 목표대비 100% 달성)

○ 개발도상국 대상 장애청소년 캠프 개최

– 11개국 65명 참가(참가자 만족도 92%) 및 용품 지원

○ IPC 및 APC 등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주최 회의 참가(14회)

○ KOICA 연계 개도국 장애인스포츠 개발 지원

– 캄보디아 NPC 국제활동 자문 지원 등

나) 문제점

□ 경기력 향상지원의 종목별 한정성

○ 국제 경기력 우수 분야가 일부 종목으로 한정적인 상황이며, 종목별 신인 선수 발굴을 위한 지원과 여건이 열악함.

○ 평균 120일의 부족한 훈련일수 지원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지도자에 대한 일당제 지급으로 우수 지도자 영입 한계 발생.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스포츠 국제 경기력 성과 확대를 통한 국가 위상 강화.

- 2013~2016년 기간(장애인 종합정책 4차년도 기간) 중 연별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목표 평균 116% 달성.

□ 목표대비 달성도

○ 성과목표는 별도의 산식에 근거한 경기력 향상도를 설정하였으며,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함.

<표 2-24> 세부과제 2-5-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종목별 경기력 향상도	목표	22	18.7	19.9	21.8	23.6
	실적	24	19.5	24.6	23.5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종목별 훈련 평균일수의 부족 대비 집중 육성 종목의 특화지원 병행이 필요함.
- 국제기구 진출 임원의 양적 확대 대비 실제 활동 내용의 실질적 이익 증대 방안 추진이 필요함.

나. 총평 및 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

□ 주요성과

○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대

- 현재까지의 장애인의 체육분야 정책지원은 영역 확대 차원에서의 시도가

주를 이루었고, 그 성과를 일정부분 충족시켰음.

- 전생애적 관점 장애인 체육활동 다양화 및 특성화 지원 추진
- 다매체 활용 및 연계를 통한 정보·홍보 강화 및 전문체육시설 확충
- 국제대회 경기력 유지 및 국제교류 다원화 유도

□ 한계 및 문제점

○ 수요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한계 및 전문화 제한

- 국가 전체 장애인의 체육권리 보장과 기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임(특정 장애유형 및 계층 집중).
- 특정 유형/종목 지원 편중(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부족 등)
- 누적 정보 활용 제한 및 영역(부처) 공유를 통한 인프라 활용 한계
- 지속성 담보 자원(선수, 전문인력) 발굴 제한

나) 발전방안

□ 부처-영역간 통합, 소통, 협력에 기반한 장애인체육 복지서비스체제 구축

○ 우리나라 체육정책이 국가주도의 지원(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비 편성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공공재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가치재로서의 강력한 정부 개입을 통한 소외계층(사회-문화-경제)의 스포츠복지 혜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한 스포츠복지서비스는 전부처, 영역 간의 통합, 소통, 협력 등을 통해 성취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특히, 현재 장애인계에서 요구하는 작은 체육관 설립이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등이 법제도적으로 적극 추진되는 것이 향후 장애인의 접근성 및 수요맞춤형 체육활동 환경 제공과 중장기적 체육활동 인구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작은 체육관 설립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종류에 포함시키고, 시도 및 시군구 자치법규에 포함시킴

로써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뿐 아니라 복지관 소관 시설, 교육시설 포함)을 물리적 공간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은 정과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이외에도 바우처 제공 대상이 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에 특수체육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학부모 요구에 부응된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 제개정 등 강력한 정책 수단 강구

-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적극 추진했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인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에 근거하여 추진사항을 연차적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민체력100사업-장애인부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생활체육원스탑서비스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성과지표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정보 공유 및 활용성 강화 방안 추진

- 미래 환경 대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축적된 장애인체육분야의 각종 데이터가 다양한 매체로 전파·확산되는 것 대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향후 활용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등록선수 현황, 클럽동호인 현황, 장애인체육 지도자 현황, 선수 경기력 데이터, 시설 이용 지도 등의 기초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체육계에 한정된 공유가 아닌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영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건강과의 공조 노력 중요

- 건강 영역인 「1-5-4.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중 ‘건강증진 프

로그램 모델 개발 및 고령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개발’은 절대적 목표달성 수준에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다른 평가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장애인 건강에 대한 영역이 <체육>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체육 전문부서와의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복지부 중심의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된 결과로 판단됨.

- 예산 확보의 적극성이나 프로그램 개발의 전문성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 및 부처 간 사업협력에 대한 추진 방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제4절 보육·교육 분야

1. (2-1)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2-1-1)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장애아보육 지원 강화로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및 장애양육 부담 경감
 - 다양한 장애아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확대.
 -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장애아 보육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사업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주요내용)
 - 장애아보육료 지원
 - 장애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장애아보육료 지원
 - 장애전문어린이집 확충 및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어린이집 확충 및 인건비 지원으로 장애 아동의 이용권 보장 및 시설 접근성 제고.
 - 장애아통합 활성화
 -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로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

의 통합 보육 활성화.

- 장애전문어린이집 및 통합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보육의 질 향상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최근 5년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변화

- 최근 5년간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일반어린이집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25> 최근 5년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계
2012	171	836	2,741	3,748
2013	172	867	1,928	2,967
2014	174	872	1,634	2,680
2015	175	899	1,406	2,480
2016	177	911	1,342	2,430

자료: 보건복지부 (2013~2017). 연도별 보육통계. 자료 재구성.

□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장애아 수 변화

<표 2-26>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장애아동 수

단위: 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계
2012	5,994(46)	3,565(27.4)	3,463(26.6)	13,022(100)
2013	5,883(49.2)	3,689(30.8)	2,395(20)	11,967(100)
2014	5,860(50)	3,835(32.8)	2,014(17.2)	11,709(100)
2015	5,859(50.9)	3,929(34.2)	1,716(14.9)	11,504(100)
2016	6,158(51.9)	4,079(34.4)	1,635(13.8)	11,872(100)

자료: 보건복지부 (2013~2017). 연도별 보육통계. 자료 재구성.

- 어린이집 유형 중 일반어린이집의 장애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애 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의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표 2-27> 장애유아 교육 현황

(단위: 개교, 원, 명)

연도	기관 수					장애 유아 수				
	특수 학교	유치원			계	특수 학교	유치원			계
		특수 학급	일반 학급	소계			특수 학급	일반 학급	소계	
2012	116	305	1,196	1,501	1,617	832	1,138	1,705	2,843	3,675
2013	119	346	1,377	1,723	1,842	869	1,394	1,927	3,321	4,190
2014	120	406	1,199	1,605	1,725	837	1,675	1,707	3,382	4,219
2015	118	480	1,221	1,701	1,819	883	2,039	1,822	3,861	4,744
2016	124	557	1,222	1,779	1,903	938	2,504	1,744	4,248	5,186

자료: 교육부 (2012~2016). 연도별 특수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 위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어린이집 이용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문제점

- 최근 5년간 장애아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유치원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 수의 감소는 저출산으로 인한 전체 인구 수 감소의 영향도 있겠으나,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의 장애아의 수용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임.
 - 지난 5년간 장애전문어린이집 및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수는 각각 6개소('12년 171개소 → '16년 177개소), 75개소('12년 836개소 → '16년 911개소)로 총 91개소가 증가하였으나,
 - 유치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수는 각각 8개 학교('12년 116개교 → '16년 124개교), 252개원('12년 305개원 → '16년 557개원)으로 총 260개 기관 증가함.
- 대다수의 장애아는 특수교사가 제공하는 특수교육 서비스와 보조인력 및 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관련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아 부모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장애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은 특수교사 등이 배치되어 있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지원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어린이집 보다는 장애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중심으로 장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난 5년간 장애아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유치원 특수교육기관이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장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장애아가 이용 가능한 장애전문 어린이집 또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으며, 각 어린이집의 교육 지원 여건이 유치원 교육기관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이정림 외, 2012).

- － 유치원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 특수교사 연봉액, 장애유아 1인당 교육비, 교재교구비 지원금, 급식비, 통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까지 파악된 유아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어린이집간의 교육 지원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면 <표 2-29>와 같음.

<표 2-28> 유치원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어린이집의 지원 수준 비교

구분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장애아 어린이집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비율	100%	80%
특수교사 연봉액 (5호봉 기준)	3,000~3,200만원	1,700~1,900만원
장애 유아 1인당 교육비 (월, 정부지원 예산 기준)	300~400만원	110~12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금 금액	학급당 300~500만원(연간)	학급당 100만원 이하
급식비 지원 금액 (장애 유아 1인당)	2,250원	1,750원
통학지원	통학지원 전면 무료 통학차량 지원 및 통학비 지원(1인당 최대 월 12만원 상당 지원)	지원없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족지원(부모 교육, 상담), 치료지원(물리, 작업, 언어), 보조인력지원 등	치료 바우처 지원

자료: 이정림 외(2012)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장애아 통합 교육·보육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및 전국장애아동 보육시설협의회(2013)의 현황 자료(미간행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임

- －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애아 어린이집은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를 채용하기 어렵고, 이는 장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교육기관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김삼섭 외, 2015).

- 장애유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은 후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전체 장애유아 중 30.4% 정도가 특수교육을 이용하고 있고, 69.6%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대부분의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 수준의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교육 요건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집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으로 규정하여, 이와 같은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은 장애 영유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지금까지 보고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보고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움.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자료에 제시된 장애전문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및 장애아 보육비 지원 제공 일반어린이집 수와 교육부 연차보고서에 제시된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수를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임(김삼섭 외, 2015).
-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단순 보육통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임.
-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어야 하고,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이어야 함. 이와 같은 법률의 조항을 고려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서는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의 요건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겠으나, 실제 이들 어린이집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또한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간

주하기 어려움.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아 1인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지난 5년간 394천원에서 438천원으로 44천원이 인상되었음(11.2% 인상).

<표 2-29> 최근 5년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 천원)

	2013(A)	2014	2015	2016	2017(B)	B-A
누리과정 (3~5세)	394	414	414	420	438	44
0~2세		394	394	406	438	44

자료: 보건복지부(2013 ~ 2016)의 보육통계 자료 및 보건복지부(2017)의 보육사업계획 자료 재구성.

- 최근 5년간(2012~2016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6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75개소 등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꾸준히 확충되었음.

<표 2-30> 최근 5년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012	171	836
2013	172	867
2014	174	872
2015	175	899
2016	177	911

자료: 보건복지부 (2013~2017). 연도별 보육통계. 자료 재구성.

- 장애아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보육 환경 개선(자료 보충 필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예산

- 지원 인원 수: 3,070명('13년) → 3,282명('16년) → 3,302명('17년)
- 지원 예산: 339.2억원('13년) → 352.4억원('14년) → 385.4억원('15년) → 399.4억원('16년) → 430.6억원('17년)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지원 인원 수: 1,200명('13년) → 1,240명('15년) → 1,264명('16년) → 1,286명('17년)
- 지원 예산: 105.2억원('13년) → 107.6억원('14년) → 126.9억원('15년) → 133억원('16년) → 145.8억원('17년)

－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

- 개보수 지원: 16개소('13년) → 14개소('14년) → 11개소('15년) → 8개소('16년) → 8개소('17년)
- 장비비 지원: 76개소('13년) → 69개소('14년) → 67개소('15년) → 67개소('16년) → 67개소('17년)
-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 예산: 3.5억원('13년) → 3.1억원('14년) → 2.7억원('15년) → 2.2억원('16년) → 2.2억원('16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계속 지원

- － 매년 1개소 당 월 20만원 지원
- － 어린이집 수 증가로 전체 지원 예산 확대: 4.0억원('13) → 4.2억원('17)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매년 2개소 확충: 100% 달성

<표 2-31> 세부과제 2-1-1 목표대비 달성도

(단위: 개소, 명)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아 전문시설	목표	171	173	175	177	179
	실적	171	173	175	177	(179)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	목표	1,200	1,300	1,400	1,500	1,600
	실적	1,200	-	1,240	1,264	1,286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인원 매년 100명 증원

- 당초 계획 대비 80% 달성
- 인건비 지원 대상 인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인건비 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
- '13년 105억원 → '17년 145억원(40억원 증가)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의 경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는 체계이며, 신청 인원이 목표 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초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임. 따라서 향후 성과목표 수치를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음.

(2-1-2)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영·유아의 발달단계 및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으로 장애영·유아 무상 및 의무교육 내실화.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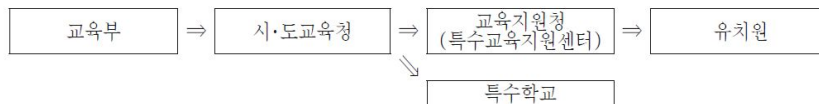
○ (사업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영·유아의 발달단계·특성을 고려한 무상·의무교육 실시 및 통합교육 지원.
- 제3조(의무교육 등),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1조(통합교육)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13~’17)」에 따라 장애영·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합교육 지원 등 사업 추진.
- 1-1 장애영유아교육의 내실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유아.
- (서비스내용) 장애영·유아의 발달단계 및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전달체계)

[그림 2-3] 특수교육지원 전달체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장애영아는 656명,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유아는 5,186명으로 총 5,842명의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음.

<표 2-32>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장애영아학급	162	—	—	494	656
유치원	938	2,504	1,744	—	5,186

자료: 교육부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의무교육 시행 이후 연도별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현황

- 2008년 의무교육이 시행된 이후 지난 8년 간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약 2천여 명이 증가하는데 그침(<표 2-32> 참조).

<표 2-33> 지난 9년간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명)	3,236	3,303	3,225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자료: 교육부 (2008 - 2016).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자료 재구성.

□ 의무교육 실시(간주)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 특수교육대상의 장애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또는 「교육여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배치하여 의무교육 실시.
-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의무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은 총 1,903개, 「교육여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총 4,333개임.

<표 2-34> 의무교육 실시(간주)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단위: 교, 개소)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소 계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소 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124	557	1,222	1,903	175	899	1,406	2,480	4,383

자료: 교육부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나) 문제점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의 비율 저조

○ 최근 5년간 특수학급을 설치한 유치원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일반 유치원 수와 비교해 보면 특수학급을 설치한 유치원의 비율은 약 6% 정도에 머물러 있음.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거의 70%에 근접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 신설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2-35> 최근 5년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현황 비교

(단위: 개교)

연도	유 치 원			초등학교
	전체 유치원 수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수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 초등학교 비율(%)
2012	8,493	305	3.6	64.8
2013	8,637	346	4.0	65.2
2014	8,800	406	4.6	65.6
2015	8,921	482	5.4	67.0
2016	8,987	557	6.1	68.8

자료: 교육부 (2012 - 2016).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자료 재구성.

○ 사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극히 저조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의 설립형태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1.8%(4,696개원 중 553개원)임에 반해, 사립 유치원의 경우 0.1%(4,291개원 중 4개원)에 불과함.
- 따라서 사립 유치원에서의 특수학급 설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2-36> 시·도 및 설립형태에 따른 유치원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유치원 수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수	특수학급 설치율
국공립	4,696	553	11.8%
사립	4,291	4	0.1%
계	8,987	557	6.2%

출처: 교육부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영·유아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 장애유아 및 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 북」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유치원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및 질적 성과 제고.
 - 전국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유치원 등에 5,000세트(가이드북 1종, DVD 1종) 보급

○ 지난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387학급 증설을 통한 통합교육 기회 확대.

- 유치원 특수학급 수 : ('12) 344학급 → ('17) 731학급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유아 특수학급 지난 5년간 387학급 증설(2017년도 미포함), 목표량(114학급) 대비 339.5% 달성.

<표 2-37> 세부과제 2-1-2 목표대비 달성도

(단위: 학급)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유아 특수학급 증설 수	목표	17	17	20	20	40
	실적	36	84	87	89	91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제4차 계획에는 장애유아 교수학습 자료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음.
-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본격 시행되었으므로, 특수학급 신·증설 이외에도 의무교육 이행에 필요한 교육 환경 구축 여부에 관한 평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2-1-3)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기반 맞춤형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자립생활 능력 증진.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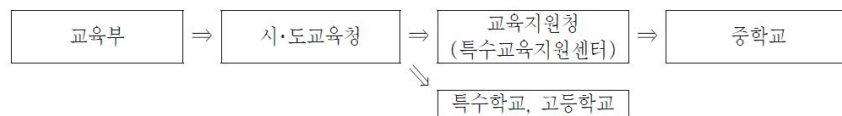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하되, 고등학교 과정 이상에서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 (서비스내용)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확대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
- (전달체계)

[그림 2-4]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전달체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전공과 설치 현황

-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전공과 설치 학교 및 학급 수 매년 증가.
2012년 대비 특수학교는 25개 학교,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는 15개 학교에서 전공과 신설.

<표 2-38> 최근 5년간 전공과 설치 현황

(단위: 개교, 학급,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특수학교	학교 수	108	115	121	127	133
	학급 수	359	402	456	493	528
	학생 수	3,262	3,594	3,948	4,274	4,387
고등학교 특수학급 계	학교 수	3	4	12	19	18
	학급 수	5	7	18	29	32
	학생 수	30	46	115	186	215
	학교 수	111	119	133	146	151
	학급 수	364	409	474	522	560
	학생 수	3,292	3,640	4,063	4,460	4,602

자료: 교육부 (2012 ~ 2016),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자료 재구성.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 현황

-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2년 45.9%, 2013년 45.8%, 2014년 46.7%, 2015년 47.0%, 2016년 46.3%로, 최근 5년간 46%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2년 26.9%, 2013년 20.1%, 2014년 22.5%로 20%이상의 수준을 보이다가, 2015년 14.8%, 2016년 13%로 떨어졌음. 이러한 결과는 2014년부터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2013년 이전에는 취업으로 보기 어려운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단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도 취업률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 전공과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2년 0.8%, 2013년 1.1%, 2014년 1.0%, 2015년 0.7%, '16년 1.4%로 1%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전공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2년 51.2%, 2013년 31.0%, 2014년 37.0%, 2015년 35.5%, 2016년 34.4%임.

<표 2-39> 최근 5년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 개, 명, 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고등 학교	졸업생 수		6,139		6,497		6,991		7,111		7,443	
	전공과	진학률* (%)	1,803	45.9%	1,967	45.8%	2,139	46.7%	2,212	47.0%	2,246	46.3%
	전문대학		517		1,007		521		531		546	
	대학교		497		589		602		652			
	취업(취업률**)		1,651(26.9%)		1,306(20.1%)		1,570(22.5%)		1,051(14.8%)		975(13%)	
	비진학, 미취업자		1,671		2,217		2,172		2,715		3,024	
전공 과	졸업생수		1,354		1,621		1,681		1,868		1,960	
	진학		11(0.8)		18(1.1)		17(1.0)		13(0.7)		27(1.4)	
	취업(취업률**)		687(51.2)		497(31.0)		617(37.0)		659(35.5)		664(34.4)	
	비진학, 미취업자		656(40.8)		1,106(67.9)		1,047(62.0)		1,196(63.8)		1,269	

* 진학률=(진학자 수/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출처 : 교육부 (2016a). 2016 특수교육통계. 세종 : 교육부

□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현황

○ 전국 25개 특수학교에 학교기업이 설치되어 있고, 33개 고등학교에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가 설치되어 있음

<표 2-40> 시도별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설치 현황

(단위 : 개교)

시·도	학교기업	전체	거점학교	전체
서울	한빛맹학교, 서울맹학교	2	상암고, 경복고, (문현고), (서울문화고), (경기고)	2(3)
부산	부산혜성학교	1	동래원예고*, 부산전자공업고	1
대구	대구5교통합	1	대구서부공업고, 대구자연과학고	2
인천	미추홀학교	1	강남영상미디어고, 박문여고	2
광주	광주선광학교	1	광주전자공업고	1
대전	대전혜광학교, 대전원명학교	2	동대전고	1
울산	울산혜인학교	1	-	-
경기	성은학교, (부천상록학교), (부천혜림), 한국선진학교, 한국경진학교	3(2)	성남과학테크노고, 이천제일고, 안양공업고, 은행고, (포천일고) (안성고), 수원정보과고, (오산정보고)	5(3)
강원	속초청해학교, 태백미래학교	2	영서고	1
충북	꽃동네학교, 청주맹학교	2	제천제일고, 청주농업고, 옥천상업고	3
충남	천안인애학교, 공주정명학교, 서산성봉학교	3	공주생명과학고, 금산산업고, 논산공업고, 서천고, 당진정보고, (온양용화고), (태안고), (천안공업고), 주산산업고, (부여정보고)	6(4)
전북	전주선화학교	1	(이리공업고), (장계공업고), (고창여고), (진안제일고), (해리고), (무주고), (함열고), 이리고	1
전남	순천선혜학교, 소림학교	2	목포공업고, 전남기술과학고, 순천공업고	3
경북	포항명도학교, 안동영명·진명학교	2	김천생명과학고	1
경남	창원천광학교	1	아람고, 김해생명과학고	2
제주	-	-	제주고, 함덕고, (표선고), (제주중앙여고)	2(1)
계		25(2)		33(11)

나) 문제점

□ 비진학, 미취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16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전공과 이수, 고등학교 특수학급,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는 9,482명이며 이중 진학자는 36.6%인 3,471명, 취업자는 28.2%인 1694명, 비진학·미취업자는 45.5%인

4,317명으로 비진학·미취업자를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또는 평생교육 지원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특히 비진학 또는 미취업자의 수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 취업자의 직업 유지 현황, 임금 수준, 고용형태, 근로형태 등 직업적 성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지표 마련 및 조사 실시 필요.
- 일반학교는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진로교육법」을 개정하거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전담교사 양성 및 배치 계획 수립 필요.
 -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 일반학교는 2015년 12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있으나,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전담교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고등학교 특수학급 450학급 신·증설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 위주의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 고등학교 특수학급 수(학급) : ('13) 1,603 → ('14) 1,709 → ('15) 1,789 → ('16) 1,885
- 전공과 196학급 증설을 통해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생활훈련 및 자립 생활훈련 기회 확대.
 - 전공과 학급 수(학급) : ('13) 409 → ('14) 474 → ('15) 522 → ('16) 560

□ 목표대비 달성도

- 고등학교 특수학급 지난 5년간 450학급 신, 증설(2017년도 미포함), 목표량(210학급) 대비 214.3% 달성.
- 전공과 지난 5년간 196학급 신, 증설(2017년도 미포함), 목표량(130개) 대비 150.8% 달성.

<표 2-41> 세부과제 2-1-3 목표대비 달성도

(단위: 학급)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고등학교 특수학급 확대	목표	30	80	50	50	50
	실적	168	106	80	96	—
전공과 확충	목표	10	30	30	30	30
	실적	45	65	48	38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목표에 따른 실적을 달성함. 특별히 고려할만 한 사항이 없음.

(2-1-4)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 등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도우미(보조인력) 지원 확대.
 - － 장애대학생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추진.

- 장애대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 총괄·전담하는 대학 내 자체부서로서 특수교육법(제30조) 장애학생 10명 이상 재학 시 설치 의무.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30조 및 제31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4-2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정보공시를 실시하는 대학 기준)에 재학 중인 장애등급이 1~3급인 학생
- (지원예산 및 내용) 7,908백만원(출연금 5,325백만원, 국비 2,276백만원)
 - 대학 자체부담 20% 이상 별도(다만, 원격교육지원은 100% 국고 지원)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대학 진학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증가

-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는 일반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 진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
- 지난 10년간 대학에 진학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554명에서 1,007명으로 약 2배 증가.

<표 2-42> 최근 10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대학 진학자 수

(단위: 명)

연도	대학 진학자 수		
	고등학교	전공과	전체
2008(A)	553	1	554
2009	711	5	716
2010	962	6	968
2011	927	5	932
2012	1,014	11	1,025
2013	1,007	18	1,025
2014	1,100	17	1,117
2015	1,133	13	1,146
2016	1,198	27	1,225
2017(B)	989	18	1,007
증가율(B/A, %)	178.8	1,800	181.8

출처: 교육부 (2008 - 2017). 연도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 재구성.

□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 2017년 현재 대학(원) 장애학생 지원 도우미는 228개 대학에서 3,411명이 배치되어 있음.

<표 2-43>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학교 수	도우미 수			
			1~3급 장애학생 지원	4급 이하 장애학생 지원	구분 없음	계
일반 도우미	대학(원)	120	1,781	62	—	1,843
	전문대학	63	452	19	—	471
	원격대학	2	201	—	45	246
	소계	185	2,434	81	45	2,560
전문 도우미	대학(원)	24	59	—	—	59
	전문대학	6	11			11
	원격대학	2	14			14
	소계	32	84			84
원격교육 전문 도우미	대학(원)	25	—	—	25	25
	전문대학	1				
	원격대학	7				
	소계	33				
계		203 (중복 제외)	2,518	81	62	2,661

자료: 교육부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나) 문제점

□ 대학 재학 장애학생의 높은 중도탈락률

- 8천여 명의 장애학생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나, 이중 15% 정도가 휴학, 자퇴 등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박은혜 외, 2012).
- 수강 신청, 수업 참여, 그룹 과제 수행, 동아리 활동, 기숙사 생활, 취업 준비, 도서관 이용, 식당 이용 등 대학 수학 과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한 인적, 물적 지원 부재로 접근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학업 수행 및 취업 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도탈락자를 양산하는 결과 초래.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등 대학 내 장애 학생 지원 기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다수의 대학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재, 코디네이터 배치 근거 미비,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계 미비

- 특수교육 전공 교수를 제외하면 대학의 교원은 장애학생 지도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정, 교수적합화, 교재 개발, 과제 지도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음.
- 100명 이상의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별 각 교수에 대한 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특정 대학 또는 특정 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장애대학생의 장애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애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 준비 지원 체계 미비

- 장애대학생이 진로 및 취업 준비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일부 대학에서 취업특강, 취업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박은혜 외, 2012).

□ 장애대학생의 대학원 진학 및 수학을 위한 지원 체계 부재

- 장애대학생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력 개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과 수학에 필요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부재한 실정임.
- 특히 대학원 진학 시험 준비, 대학원 진학시 학부생과 동일한 수준의 편의제공(도우미 등) 지원, 교수학습 자료 변환 등 대학원 수학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김주영 외, 2009), 이에 대한 대학 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한 실정임.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규정된 각 대학의 장애대학생에 정당한 편의제공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학생지원센터(개): ('13) 272 → ('14) 287 → ('15) 300 → ('16) 311
- 장애대학생의 이동편의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수(명): ('13) 2,500 → ('14) 2,600 → ('15) 2,750 → ('16) 2,850 → ('17) 2,661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난 5년간 161명 증원, 목표량(3,000명) 대비 88.7% 달성
- 장애학생지원센터 수 지난 5년간 39개소 증설(2016년도 기준), 목표량(54개소) 대비 72.2% 달성

<표 2-44> 세부과제 2-1-4 목표대비 달성도

(단위: 명, 개소)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목표	2,500	2,600	2,750	2,850	3,000
	실적	2,500	2,600	2,750	2,850	2,661
장애학생지원센터 수	목표	257	275	290	303	311
	실적	272	287	300	311	311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장애학생의 학습도우미의 경우 학업 생활을 단순 보조하는 도우미보다 속기, 수화통역 등 전문 능력을 갖춘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제는 양적 확대보다 기존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 보조인력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학습도우미 지원 인원 수 증가량만으로는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 수정 필요.
- 장애대학생의 교육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자료가 부족함. 특히 2017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부터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현황,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외되는 등, 그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대한 보완 필요.

(2-1-5)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계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지속 확대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및 제34조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4-3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 (주요내용)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교육자료 및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시도교육청별 장애성인 평생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성인 교육비 지속 지원 확대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등 1인당 약 20만원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예산 현황

○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운영 기관 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프로그램 수 및 예산 액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표 2-45>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개,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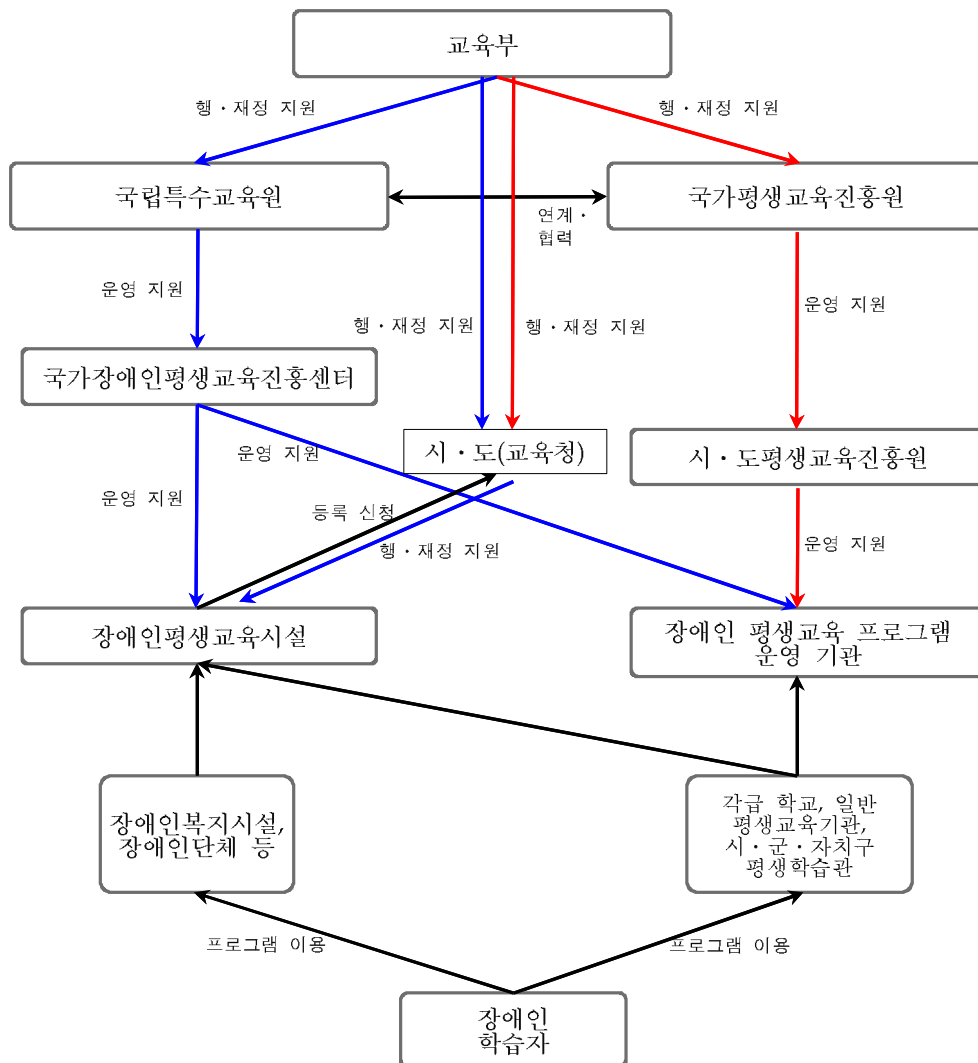
시·도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예산	학교 수	프로그램 수	예산	센터 수	프로그램 수	예산	기관 수	프로그램 수	예산
2013	183	423	1,207.4	9	34	60.9	21	102	367.3	213	559	1,635.6
2014	152	402	44	8	21	26	5	26	129	165	49	1,099
2015	160	516	1,141.7	13	38	89.5	5	14	91	178	68	1,322.2
2016	185	525	1,805.5	14	30	44.5	4	25	58	202	580	1,908
2017	194	571	1,312	10	40	38	5	18	67	209	629	1,417

자료: 교육부 (2013 - 2017).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변화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일반 평생교육 지원 체계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라는 이중 트랙을 통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갖게 되었음([그림 2-5] 참조).

[그림 2-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지자체 수준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또한 기존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일반 평생교육 체계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충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평생교육 체계에서의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에서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임.

나) 문제점

□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 전체 국민의 3분의 1(약 1천 7백만 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0.02%, 발달장애인은 0.01%만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음.

<표 2-46>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수 및 평생학습 참여 현황

구 분	전 체	장애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	3,768개	232개(6.2%)	-
학습자 수	17,618,495명	3,619명	1,724명
학습자 비율	100%	0.02%	0.01%

자료: 교육부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시설 부족

-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3,768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

는 평생교육시설은 232개로 전체의 6.2%에 불과함.

<표 2-47>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수

시 설 구 분		기관 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수
총 계		3,768	178
학교 부설	유초중등학교 부설	10	18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 포함)
	대학(원) 부설	403	160
원격 형태		887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 부설	320	
	산업체부설	37	
시민사회단체부설		495	
언론기관부설		494	
지식·인력개발형태		727	
평생학습관		395	

자료: 교육부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 투자 미흡

- 지난 5년 동안 전체 특수교육 예산은 2,635억여 원, 전체 교육 예산은 7조 3,598억여 원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9.1억여 원 증가에 그침.
- 2017년 현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89,353명이고 이를 특수교육 예산으로 나누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29,697천원(연간)으로 산출되지만, 장애성인의 경우 등록 장애인 수 2,511,051명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으로 나누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1,785원(연간)에 불과함.
- 이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크게 성장 못하였음.
-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고,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2-48>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및 전체 교육예산 비교

(단위: 백만 원)

	2013 (A)	2014	2015	2016 (B)	2017	B-A	연평균 증가액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C)	3,571	2,926	3,699	4,435	4,482	911	227.8
특수교육 예산	2,245,781	2,153,125	2,227,638	2,376,062	2,653,497	407,716	101,929
전체 교육 예산(D)	49,643,947	49,986,533	50,325,564	51,225,455	57,003,830	7,359,883	1,839,970 .8
전체 교육 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비율 (C/D)×100	0.007%	0.006%	0.007%	0.009%	0.008%	—	—

자료: 교육부 (2013 - 2017).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성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6년 11개 프로그램, 140명 수료(한국복지대학교)
- 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국립특수교육원)

□ 목표대비 달성도

-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지난 5년간 70개가 확대('13년 559개, '17년 629개)되었고, 전체 목표량 575개와 비교해 볼 때 목표량 대비 112.5% 달성.

<표 2-49> 세부과제 2-1-5 목표대비 달성도

(단위: 개)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목표	500	560	565	570	575
	실적	559	449	568	580	629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2016년 5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전면 확대, 개편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교육부는 새로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중임.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되지 못하고,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침.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 증진 및 프로그램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 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함.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지난 5년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6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75개소 등 장애아 어린이집이 확충되었고,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기능보장비, 차량 운영비 등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꾸준히 증액되는 등 장애아의 보육 기회가 확대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음.
- 유치원 특수학급이 지난 5년 동안 387학급이 신·증설되었고(목표량 대비 339.5% 달성),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5,000세트가 보급되는 등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환경이 개선되었음.
- 고등학교 특수학급 450학급 신·증설로 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 실습 위주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되었고, 전공과 196학급 설치로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직업준비역량 및 자립생활역량 향상에 기여하였음.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수(39개소 확충) 및 장애대학생도우미 인원 수(161명 증원) 증가 등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환경이 향상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지난 5년간 70개 증가), 평생교육 지원 예산이 확충(지난 5년간 911백만원)되는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위한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아 어린이집의 증가량이 유치원 특수교육기관의 증가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재함.
- 국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특수학급이 확충되고 있으나, 전체 유치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 확충 계획이 부재함.
- 장애유아 의무교육 및 누리과정 등이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 조정, 연계, 지도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 부재로, 교육기관과 보육시설간의 교육·보육 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45.5%가 비진학, 미취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로, 이들 학생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학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은 도우미 지원 제도가 유일한 실정임. 장애대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부재로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프로그램 수 및 지원 예산 등이 지난 5년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0.02%에 불과.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발전방안(제언)

□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장애영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체계 고도화

- 장애유아 의무교육 및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간 장애아 교육·보육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보육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 진로 및 직업교육 혁신으로 학교교육의 성과 제고 및 장애학생의 사회 참여 확대

- 비진학, 미취업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지원 환경 구축.

□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여건 개선을 통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완성

-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 강화, 도우미 지원 확대 등으로 장애대학생 교육 복지 여건 개선.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장

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2. (2-2)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2-2-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의 균형 발전 및 장애학생 행복교육 실현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3-3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장애학생 수요에 적합한 지원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
-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특성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특수교

육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였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08) 180개소→('12) 199개소

나) 문제점

- 장애학생 수요에 적합한 지원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가 요구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감안한 특성화된 특수교육센터가 미비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제 강화가 요구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지역중심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16년 37개 소)
-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교육·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17개 시·도 교육청)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50> 세부과제 2-2-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특성화 특수교육 지원센터 수	목표	9	15	21	34	41
	실적	9	15	31	37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목표에 따른 실적을 달성함. 특별히 고려할만 한 사항이 없음.

(2-2-2)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을 통한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2-3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3-2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 (주요내용) 특수학급 신·증설 및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강화를 통한 통합교육 여건 개선.

- 일반학교 특수학급(순회학급 포함) 2,500개 이상 증설

- 일반학급 담당교사 연 500명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 일반학교 배치 감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08년 이후 매년 특수학급을 500학급 이상 증설하여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해 왔음

－ 특수학급: ('08) 6,532학급 → ('12) 8,927학급

나) 문제점

-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도시와 인문계고교 과밀 특수학급이 존재하고 있어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가 요구됨.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및 보조기기가 부족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특수학교(급) 과밀현상 및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하여 특수학급 456개 신·증설.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공학기기(FM보청기, 확대독서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대체자료(확대문자, 점자, 디지털), 수화/문자통역 원격서비스, 평가 조정 등 지원.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51> 세부과제 2-2-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법정정원 충족 학급 비율	목표	76.2	77.2	80.0	80.5	81.0
	실적	78.6	81.5	82.1	82.4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를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필요.

(2-2-3)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교육의 질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1-3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및 특수교사의 전문성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 － 일반교육교원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 － 특수교사 직무별 전문연수과정 개발·운영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 교육 역량 강화 미흡.

나) 문제점

- 일반교육 교원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학급에서의 특수아동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장애이해 및 교수·학습 교콘
텐츠를 보급하여 일반교원의 특수교육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 특수교육 직무별 전문 연수 과정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52> 세부과제 2-2-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일반교원 통합교육 자료 개발(중)	목표	2	4	8	8	8
	실적	8	8	8	8	—
특수교육 전문 연수과정 개발(중)	목표	3	3	3	3	7
	실적	3	3	5	7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특수·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및
특수교육 전문 연수과정 개발 지속 추진.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지역중심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교육·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에 기여함.
-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을 통한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환경을 개선함.
-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하였고, 특수교육 직무별 전문 연수 과정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 한계 및 문제점

-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를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필요.
- 특수·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및 특수교육 전문 연수과정 개발 지속 추진 요구됨.

나) 발전방안(제언)

- 특수학급에 특수교사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통합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및 특수교육 전문 연수과정 개발 지속 추진과 아울러, 최신 ICT 발전 추세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 내용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2-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 개선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2-3-1)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반학교 교사와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학교 현장의 긍정적 통합교육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3-2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 학생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일반학교에서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
-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교육 실시
- 장애인식 개선 관련 행사 개최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일반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등 통합교육 환경 구성원의 장애학생에 한 이해가 부족함.

나) 문제점

-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에 한 편견 해소 및 위기 극복 의지를 고취하고, 학교장의 통합교육 분기 확산이 필요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일반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장애영역별 특성, 성교육,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대한민국 1교시) 수업 실시

- '장애인의 날'에 라디오로 방송되는 방송물을 활용한 수업 실시 또는 국립 특수교육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KBS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1교시'를 다운로드 받아 수업에 활용.
- 대한민국 1교시: 교육부·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KBS가 공동 기획하는 장애이해 특집방송으로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KBS1라디오 및 3라디오로 방송

○ '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

-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문화·예술 행사 개최, 청소년 대상 장애이해 드라마 제작 및 보급, 장애이해 사진·UCC·실천 사례 등 공모전 등 실시.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53> 세부과제 2-3-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일반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 횟수	목표	2	2	2	2	2
	실적	2	2	2	2	-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 횟수	목표	1	1	1	1	1
	실적	1	1	1	1	-
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 횟수	목표	1	1	1	1	1
	실적	1	1	1	1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통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일반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행사 지속 추진.

(2-3-2)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권지원단의 현장지원 기능 및 상시 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 명칭변경(‘17):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13~’17)」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보호 및 인성교육 지원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강화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및 홍보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의무 실시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이 학교·직장 생활에서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장애학생과 가족 당사자의 자기보호 역량이 낮고,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 존중 분위기 확산 및 인식 개선.
- 장애학생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관련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 도모.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54> 세부과제 2-3-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상설모니터단별 학교 점검 횟수	목표	4	12	12	12	12
	실적	12	12	12	12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및 자기결정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2-3-3)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제공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신변처리, 교수·학습보조 등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로 장애학생 교육성과 향상.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보조공학기기 제공, 일반교사용 지도서 개발 등을 통한 장애학생 교육 편의 제공 및 학습권 보장.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주요내용)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 정당한 교육 편의 제공을 통한 학습권 보장

-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및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인원 수: (‘12) 6,625명 → (17’) 8,000명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활동 보장을 위한 각종 교구 및 학습 보조기 등 지원 확대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학생 수: (‘12) 3,888명 → (17’) 6,000명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배치기관에 따른 다양하고 적절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함.

나) 문제점

- 편의시설 평균설치율이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79.1%,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는 86.1%에 이르나, 특수학급의 경우 64.4%에 불과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신변처리, 교수·학습보조 등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로 장애학생 교육에 기여함.
-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여 장애학생 교육 편의 제공 및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55> 세부과제 2-3-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학생수	목표	4,000	4,500	4,800	5,250	5,300
	실적	4,177	4,608	5,209	5,293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함.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한 장

애학생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보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발달장애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습 공학기기의 보급이 절실함.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대한민국 1교시) 수업, 장애인식 개선 행사 등을 통해 일반학교 교사와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학교 현장의 긍정적 통합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함.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 장애학생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관련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를 도모함.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신변처리, 교수·학습보조 등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로 장애학생 교육에 기여함.
-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여 장애학생 교육 편의 제공 및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

□ 한계 및 문제점

- 일반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필요함.
- 발달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및 자기결정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일부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는 보급한 지 오래 되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지원기기와의 호환성이 저하되어 교체 또는 새로운 보급이 요구됨.

나) 발전방안(제언)

- 통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일반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행사를 지속 추진함.
-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및 자기결정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장애학생에게 보급된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성을 조사하여 기존 기기의 교체 및 새로운 기기의 보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한 장애학생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보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습 공학기기의 보급이 절실함.

제4절 사회참여 분야

1. (2-4)장애인 문화 활동 활성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2-4-1)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할 목적.

□ 사업내용

○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이 공연, 전시회 입장권 및 책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년 간 5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제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지원 대상 장애인 약 20만명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 지원.

나) 문제점

- 사용가능한 금액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시스템에 의한 많은 불만족 사례 등장.

3) 주요 성과

□ 주요 성과

- 문화바우처 고객만족도 점진적 향상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56> 세부과제 2-4-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문화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목표	80	81	82	83	83.9
	실적	85.7	84.5	86.1	86.4	—

□ 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2-4-2)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및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역량 신장

□ 사업내용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지원)

<표 2-57> 2013-2017 함께누리 지원사업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2013 예산	2014 예산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국 고	함께 누리 지원 사업(합계)	4,200	11,300	22,100	21,300	7,000
	①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1,750	2,950	2,950	2,950	3,150
	②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950	900	900	900	900
	③ 한빛예술단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300	400	400	500	450
	④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 대전	100	150	150	150	150
	⑤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400	400	400	400	500
	⑥ 장애인 예술경진대회	200	200	200	200	200
	⑦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500	500	500	-	-
	⑧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설립	-	5,300	15,800	14,800	-
	⑨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개최	-	300	300	300	300
	⑩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	-	200	500	400	400
	⑪ 장애인 클래식 공연 지원	-	-	-	400	400
	⑫ 장애인 무용전문인력양성	-	-	-	-	250
	⑬ 장애인 국제무용대회	-	-	-	300	300

○ 이음센터 건립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은 국가의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의 상징적인 과제로 인식되어 왔음.
- 건립 의의 및 역할: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 및 발표, 교육 및 인재 발굴과 육성, 교류 거점 공간 확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기구 역할을 수행.
 - 창작 지원: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 연습 및 발표 지원
 - 교육: 장애인 예술인과 매개자 대상 전문교육, 인재 발굴 및 육성
 - 교류 협력: 장애인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와 협력
 - 조사 연구: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 연구 지원 및 실행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

- 이음센터의 건립과 더불어 이음센터를 위탁 운영할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

화예술원도 2015년 3월 10일 설립되었음.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의 핵심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음센터를 실질적인 운영하고 있음.
- 2017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장문원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커질 전망.
- 장문원을 통한 이러한 지원체계 마련은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체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지원 시스템 체계화

- (예산) 기존 ‘문체부 - 9개 단체 분산 교부 절차’를 ‘17년도부터 (재)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일원화하여 공모 등 사업 추진(70억원)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 강화

□ 문화소외 지역 및 지역별 장애인 시설·단체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예술학교’ 확대(‘16년 10개소→‘17년 13개소)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동호회 지원 확대(‘16년 40개→‘17년 50개)로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층 확대

나) 문제점

□ 공정성이 결여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 ‘함께누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일한 장애인 예술 지원 사업임.

- 2017년 ‘함께누리 지원사업비’ 70억 원 중 반 이상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총

연합 등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단법인 등에 지정 지원되면서 공모 사업 비중이 적음.

-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풀뿌리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에 대한 체계 개선이 필요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개관

- 2014년부터 장애인 아트센터 건립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건립 추진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15년 대학로에 위치한 예총회관(구)을 리모델링하여 이음센터가 같은 해 5월 29일 건립됨.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58> 세부과제 2-4-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문화 예술향수 참여자 수(명)	목표	-	87,150	101,706	137,370	144,239
	실적	-	124,598	140,000	137,370 (추정)	-

□ 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2-4-3)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 배리어프리(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콘텐츠를 제작 및 상영하여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한국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에서 자발적, 주체적 소비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영화소비시장 확대

□ 사업내용

- (주요내용)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사업,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실태조사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주요 실적('16년)

○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실적

- 한국영화 배리어프리(한글자막 화면해설) 버전 27편 제작
- 전국 52개 상영관, 855회차 상영 오픈방식 상영
- 지역 내 시청각장애인 시도협회·지부(지회)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기존 39개관에서 52개관으로 13개관 추가 확대함

○ 한국영화 한글자막·화면해설 콘텐츠 제작/상영 및 장애인 영화관람 데이 업무 추진

- CJ CGV와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서 화, 목, 토요일 프라임타임 등 상영시간을 확대 배정하여 시청각장애인이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관 제공

○ 한국영화 한글자막·화면해설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확보된 콘텐츠의 온라인 VOD 서비스 시행

- 케이블 TV VOD(홈초이스)와의 협약을 통해 온라인 관람기회 확대
- KT(올레TV)와 신규 업무협약으로 온라인 서비스 확대 추진
- 총매출의 3%를 장애인단체에 기부하여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

○ 장애인 영화제 개최

－ 총 4일간 24편 상영

- 일시: 2016년 11월 4일(금) ~ 11월 7일(월) 4일간
- 장소: 롯데시네마 합정
- 상영작: 개막작 2편(깨어있으라(Awake), 새로 온 동료(Work Mate)), 경쟁부분 15편, 비경쟁부분 4편,
- 국내초청 1편, 해외초청 1편, 관객초청 1편, 총 24편 상영
- 청각·시각·지체·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500여명 관람

○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사업 수행

- －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 정책수립 로드맵 연구
- － 배리어프리 영화 온라인 VOD서비스 홍보 동영상 제작

나) 문제점

□ 장애인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VOD 서비스 협력 업체 확대 필요

- 현재 케이블 TV VOD(홈초이스), KT 등 2개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VOD 서비스를 시행중이나, SK, LG 등 IPTV 대기업의 추가 협조 필요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관람객(명)

□ 목표대비 달성도

- 매년 성과목표에 따라 달성 중

<표 2-59> 세부과제 2-4-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관람객(명)	목표	15,000	20,000	30,000	40,000	44,000
	실적	22,234	30,849	37,647	41,968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사업의 경우 성과에 대한 달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계 및 문제점

- 지난 10여 년 간 장애인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문화예술 진흥 정책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문화예술 진흥 정책 전반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이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미.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 전반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이 녹아들지 않고 있음.
- 매년 약 9억 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효과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예술축제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점 대두.

- 매년 축제의 취지, 목적, 예산 쓰임 등에 대해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 지역의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비가 부족함.
- 현실에서 많은 장애인들은 영화관을 찾는 것보다 온라인 VOD를 통해 영화를 관람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배리어프리 버전 온라인 VOD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도 사업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배리어프리 버전 온라인 VOD 서비스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필요

나) 발전방안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확립
 -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독립성, 자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문화예술 향수지원 사업비 규모 확대 및 공모사업 비중 확대
 -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풀뿌리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 확립.
 - 공모사업 비중을 늘려나가 지원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 장애 예술인/예술단체 창작 공간 확충 사업
 - 지역의 유휴공간 및 기존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등)에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 예술가를 선발하여 창작 레

지던시 제공.

□ 영화관람 환경 개선

- 성과지표에 ‘장애인 관람객 수’ 뿐만 아니라 시청각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을 위한 전국 디지털케이블 방송으로 온라인 VOD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표 등 추가 필요. 또한 사업내용에서 언급된 ‘배리어프리(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버전 제작 편수’ 등도 포함 필요
-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확대를 위한 폐쇄 상영시스템 조사연구(2015년)’ 결과에 따라 폐쇄 상영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지원 사업 추진 필요
-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정책수립 로드맵 연구(2016년)’ 결과에 따라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검토 필요

2. (4-1)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4-1-1)지식정보접근 이용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이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대체자료 확충을 통해 지식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생활권별 장애인서비스 기반 조성 및 도서관 이용 생활화 도모.
- 각종 도서관 및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로 장애인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근거) 도서관법 제45조 2항 3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 (주요내용)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 강화
- 이용자 맞춤형 대학도서 및 일반도서 구분 제작 추진
-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된 대체자료 납본업무 체계화
-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기능 강화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접근환경 개선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법·제도 현황

○ 개정 도서관법 시행('12.8.18.)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 제고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체자료 제작 현황

○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업, 직무, 자기계발, 문화향유 등 다양한 주제별·형태별 대체자료 제작·보장.

○ 2016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총 제작 3,118종, 수집 4,985종)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020종의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음(문화체육관광부, 2017).

○ 또한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 납본 및 기증 활성화('16, 660종) 하였으며, 점자자료(점자도서, 점자악보) 점역 및 출판지침 표준화 추진('16), 클라우드 기반의 대체자료 교정시스템 개발('16),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 확대('15년 146건 → '16년 3,743건) 등 추진.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보급 현황

-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조성과 장애인의 독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독서보조기기지원(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페이지플레이어, 공공이용보청기, 높낮이조절 책상 등을 국비50% 지방비 50% 매칭으로 추진).
 - － 공공도서관 장애인 자료실 설치 지원 도서관 수: '13년(20곳) → '14년(23곳) → '15년(25곳) → '16년(26곳)

나) 문제점

□ 법·제도적인 측면

- 도서관법에 의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었으나,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장애인의 지식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독립기관으로 설치 운영 하도록 도서관법 개정이 필요함.

□ 대체자료 제작 측면

-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제작·보급, 웹 및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확산 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접근 기회 제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 제작되는 도서에 비해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빠른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 납본의 어려움을 개선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보급 측면

-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조성과 장애인의 독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독서보조기기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지식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온라인 공공도서관 웹 접근성 개선과 전자책 보급 확대 등의 확대 추진이 필요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대체자료 제작 측면) '13년부터 그동안 장애인 대체자료 35,020종을 제작 및 보급하였으며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도 410종을 개발·보급하였음.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보급 측면) 장애인이 공공도서관 이용 시 필요한 보조기기 이용과 장애인열람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94곳에 보조기기 지원과 장애인 열람실 구축 운영.
- (인식제고 측면) 점자자료(점자도서, 점자악보) 점역 및 출판지침에 대한 표준 제정과, 대체자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민간 상용 테이지 저작도구 활용 등 장애인의 지식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노력.

□ 목표대비 달성도

- 2개 성과지표 중 장애인대체자료 수집(134.7%), 장애인자료실·코너지원 도서관 수(104.4%)로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표 2-60> 세부과제 4-1-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대체자료 수집 종수 (제작·기증·납본)	목표	5,000종	6,000종	7,000종	8,000종	9,000종
	실적	6,850종	7,005종	13,790종	7,375종	—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지원 도서관 수	목표	30	20	20	20	20
	실적	20	23	25	26	—

□ 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장애인자료실 및 코너지원 도서관 수는 당초 '16년까지 180곳이었으나 120곳으로 60곳으로 성과목표가 예산확보 문제로 축소 수정되었음.

(4-1-2)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TV 시청을 돕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어·화면해설)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 및 방송서비스 접근환경 개선 등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10호,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제8항, 제9항
- (주요내용)
 - 장애인방송(자막·수어통역·화면해설) 제작 지원.
 - 장애인방송 시청편의를 위한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접근환경 개선.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법·제도 현황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와 방송법 제69조에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현황

- 지상파방송사는 '15년(중앙지상파는 2013년),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16년까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달성 관리 및 지원 있으며,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자막 100%, 수화통역 5%, 화면해설 10%,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50~70% 수준 목표달성(방송통신위원회, 2017).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재정상황 및 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지역지상파, SO 및 PP 등 총 109개 방송사에 장애인 방송 제작비 매칭 지원('16년, 41억).
-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장애인단체·방송사·학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16.3)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 추진.

□ 장애인용 방송기기 보급 현황

-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TV의 크기확대(24형→28형), 전용리모컨, 음성안내 등 기능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위주 보급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16년 12,247대의 장애인용 TV보급(시각 6,123대, 청각 6,124대).
 - 장애인용 TV 저소득층의 당해 연도 보급률 : '14년 37% → '15년 86% → '16년 90%.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접근환경 개선 현황

- IPTV 수신기가 설치된(210가구, 15개 수화통역센터) 곳에서 정규채널(YTN, JTBC, KBS)을 스마트 수화방송 품질 개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험방송 제공 중.
- 기존 수화방송의 방송영상 가려짐을 해소하고 자막에 의해 방송의 오픈 자막이 보이지 않는 문제 해소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시청편의를 제공하게 될 예정.

나) 문제점

□ 법·제도적인 측면

-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법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추진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장애인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장과 재난재해 발생 시 장애인 방송에 대한 추진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측면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화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방송 확대 및 품질 향상 등이 필요함, 특히, 수어방송의 경우 주 시청시간대에 보다는 심야시간 등에 주로 제공하고 있어 뉴스, 드라마, 예능 등에 수어방송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본 방송 보다는 재방송 등에 적용되고 있어 사전 제작되는 드라마, 예능 등의 경우 본 방송에 화면해설 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 방송기기 보급 측면

-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방식과 기기변화에 맞는 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의 성능 개발이 요구되며,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보급 확대를 위해 신청·접수보급 등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앙(방통위-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함.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접근환경 개선 현황

- 실시간 자막방송의 경우 딜레이시간, 오타 등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IPTV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별도의 케이블이나 IPTV 가입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특히 DMB 방송을 통해 가능하도록 제공 필요).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방송 제작 측면) 장애인방송 의무화('12년) 이후 '16년까지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방송사에 장애인방송 제작비(180억원)를 지원하여 제도정착 및 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

– 중앙·지역지상파, 종편·보도 PP의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10%, 수어방송 5%를 달성.

○ (장애인 방송기기 보급 측면)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를 제작하여 매년 약 12,000대씩 보급하여 '16년까지 누적 15만대를 보급하였으며, '15년 이후부터는 지자체와 업무협약('15년 8개→'16년 12개)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위주로 보급.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률 : '13년 20%→'14년 22.9%→'15년 35.8%→'16년 45.7%.

○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접근환경 개선 측면) 수화방송 화면의 크기 및 위치조정이 가능한 스마트 수화방송의 기술 개발('14년) 및 표준을 제정('15년)하고,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험방송('14~'15년) 및 시범방송*=('16년)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시범방송 실시(6개사): YTN, JTBC, KBS, KT스카이라이프,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인방송 만족도 및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 만족도 2개 지표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표 2-61> 세부과제 4-1-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방송 만족도	목표	신규	신규	74.0	75.5	77.6
	실적	-	-	74.8	75.9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 만족도	목표	72	76	78	81	88
	실적	75.8	76.4	78.9	85.9	-

□ 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당초 성과목표인 장애인방송편성 사업자 수가 장애인방송 만족도로 수정 되었으며 방송접근 만족도의 경우 성과목표가 기존계획 대비 상향 조정되었음.

(4-1-3)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평한 정보사회를 영위할 수 있는 정보접근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통합 유도.
- 지식정보사회의 필수 도구인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실생활에서의 정보접근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32조의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21조·제23조, 장애인복지법 제22조
- (주요내용)
 - 정보접근성 관련 표준 개정 및 제작기법 개발
 -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애플리케이션(app)대상 접근성 실태조

사

- 공공·민간기관의 웹·애플리케이션(app)대상 접근성 진단·컨설팅 제공
- 정보접근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웹 사이트 담당자, 개발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 등 행사 개최.
- 공공 및 민간기관 대상으로 정보접근성 기술 지원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사업목적 및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정보화 사회를 영위할 수 있는 정보 접근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지능정보사회의 필수 도구인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접근권 제고.
- 정보 접근성의 기술적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 접근성 관련 기술표준의 제정과 개정 및 자문 실시와 정보 접근성 현황 및 개선점 제시를 위한 정보 접근성 실태 조사 실시.
- 웹 접근성 관련 우수 사례 공유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운영 및 정보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과 기관별 순회교육 실시 및 세미나 개최.

□ 정보 접근성 법·제도 현황

- 현재 웹 접근성 관련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관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적인 기준은 정보통신 국가표준으로 “한국형 웹 콘텐츠접근성 지침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

텐츠 접근성 지침2.0”(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6a)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 그리고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 등이 장애인 등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7a)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웹 사이트 관리자, 개발자들이 웹 사이트 개발 시 접근성 있는 사이트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기법2.0”, “플래시 콘텐츠 접근성 제작 기법”, “WAI-ARIA”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스마트폰 접근성 기능설명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 정보접근성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현황

- 현재 웹 접근성 관련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관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에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국가표준 제정(‘16.10) 및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W3C WAI-ARIA 사례집 개발 등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조사연구 추진.
 - 민간부문 정보접근성 진단·컨설팅 인력양성 및 정보접근성 진단을 실시하고 직능단체별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순회교육 및 정보접근성 세미나 개최.
 - 웹 접근성 온라인 기술자문단 구성 및 웹 접근성 연구소(www.wah.or.kr)을 통한 기술자문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 실태점검 및 품질인증제도 수혜자 만족도 실시.

나) 문제점

□ 정보 접근성 법·제도 적인 측면

- 웹 접근성 관련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및 동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는“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 모바일에 대한 접근성 준수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모바일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어려움이 많이 때문에 모바일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조속히 필요함.
 - 또한, 단계적 범위를 동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별표3에 규정하고 있으나 단계적 범위의 대상과 범위가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상과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범위의 개정이 필요함.
-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측면
- 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꾸준히 높아졌으나 민간부문, 예술단체 등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부문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의 확대가 필요함.
 - 또한,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가 각각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보 접근성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통합적인 추진이 필요함.
 - 현재 국가임의인증제도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웹사이트의 품질이 유지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곳이 발생하고 있어 품질인증 유지를 위한 제도 및 모니터링 등 개선 필요(국회국정감사, 2016).

□ 인력양성 및 이용환경 기반조성 측면

- 정보 접근성 관련 전문교육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매년 꾸준히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문교육 이수에 만족하지 말고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정보 접근성 전문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웹사이트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을 위한 세미나, 웹 개발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방법, 기술자문 등을 통해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용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확대가 필요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제도적인 측면) “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을 통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기술표준(웹 접근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매년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6년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96.7점), 광역자치단체(100점), 기초자치단체(98.3점) 등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7).
 - ‘16년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대표 웹사이트(47개 중에서 34개), 광역자치단체(17개 중에서 17개)가 획득 한 것으로 나타남.

□ 목표대비 달성도

- 성과목표 교육인원 및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모두 목표대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2> 세부과제 4-1-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교육인원(명)	목표	1,000	1,000	1,000	1,000	500
	실적	2,021	1,454	1,472	1,766	-
실태조사 건수(개)	목표	600	300	300	300	600
	실적	325	328	1,500	1,108	-

□ 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당초 성과목표 중에서 실태조사 건수가 매년 600개에서 '14년부터 '16년까지 300개로 하향 되어 '14년의 경우 당초 600개 목표대비 328개를 실태조사 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4-1-4)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
-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IT기술 기반의 보조기기 개발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주요내용)
 -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화면낭독S/W, 특수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특수 S/W 포함) 보급.
 -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모바일기기의 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정보

생활 촉진을 위한 보조기기의 제품개발지원.

- 장애인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고가기기 등 신청수요가 높은 제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 보급.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법·제도적인 측면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32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에서는 정보통신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현황

- 정보통신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70%(1억원 이내)와 기업부담금 30%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정부지원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실제 상용화되어 출시되는 제품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상용화 성공률이 높아 개발지원사업의 효과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임.
- 고가의 외산 손질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악한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중소기업 육성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외수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임대 현황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화면낭독프로그램, 특수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장애인에게 정부지원금 80%와 개인부담금 20%의 매

청 펀드 방식으로 매년 4,000여명의 보급하는 사업임(한국정보화진흥원, 2017b).

-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급품목을 다양화하고 일정기간 일정을 지정하여 신청, 심사,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기간 중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찾아가는 형태의 순회전시회와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7c).
- 또한,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많아 일정기간 동안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임대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7d).

나) 문제점

□ 법·제도적인 측면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지원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법률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함(예 부가세 영세율지원 확대, 세금감면 등).
- 또한, 현재 상용화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임대지원 측면

-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소기업 육성과 국산화를 통하여 저렴하게 장애인에게 보급될 수 있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확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수에 비하여 보급률이 낮으므로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상설화된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 및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특성상 지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기간, 방식 등에 대한 보완과 임대기기 및 임대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보조기기 산업육성 측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해외수출을 통하여 우수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소기업 육성하고 국산보조기기의 보급품목 선정비율 확대와 값비싼 외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음.
- (보조기기 활용 측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하여 장애인의 교육, 직업,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영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음.

□ 목표대비 달성도

- 성과목표인 기술개발지원, 보급과 신규로 추가한 임대기기 등 모두 목표대비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3> 세부과제 4-1-4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정보통신보조 기기개발(건)	목표	3	3	3	3	3
	실적	3	3	3	5	-
정보통신보조 기기보급(대)	목표	4,000	4,000	4,000	4,000	-
	실적	4,472	4,227	4,269	4,256	
정보통신보조 기기임대(대)	목표	600	300	300	300	600
	실적	325	328	1,500	1,108	-

□ 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당초 성과목표 2개를 정보통신 보조기기 임대사업에 부분을 성과목표로 추가 하였음.

(4-1-5)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 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 활용능력 향상.
- 방문정보화교육을 통해 중증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정보화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 사업내용

- (사업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주요내용)
 - 장애인들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해 이들이 정보화 사회에 동참할 수 있

도록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을 통해 정보화교육 실시.

- 중증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하여 정보화 사회에 이종소외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 1:1 맞춤형 방문정보화교육 실시.
- 컴퓨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S/W 설치·복구 등 긴급 장애 발생 시 방문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대상 IT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법·제도적인 측면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 제1조와 제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정보화교육 현황

- 전국 148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복지관, 단체 등)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1~2급 중증장애인의 정보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방문정보화교육 및 IT긴급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7e).
-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 등 직업재활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IT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정보 활용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정보화교육에 따른 성취감 고취 및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고 있음.

나) 문제점

□ 법·제도적인 측면

-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부족함.

□ 장애인 정보화교육 측면

-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집합교육, 1:1 방문교육 등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 또는 창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IT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화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방송과 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정보화교육이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보화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정보화교육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정보화 교육 측면) 전국 148개 장애인복지관, 단체 등을 통해 2016년 77,519명의 장애인에게 집합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2,162명에 게 1:1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IT분야 취업·창업을 원하는 장애인 111명에게 IT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b).
- (인식제고 측면) 장애인 정보화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화한마당을 매년 개최 하였으며, 장애인 방문강사 대상 보수교육 및 특강을 실시하여 질 높은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목표대비 달성도

- 성과목표인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매년 목표대비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4> 세부과제 4-1-5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정보화교육(명)	목표	35,000명	35,950명	39,500명	35,950명	35,950명
	실적	67,821명	51,221명	77,408명	79,792명	-

□ 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도서관법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과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공공 도서관에 독서보조기기 확산 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접근 기회 확대.

－ 대체자료 제작: ('02)4,000종 → ('16)7,375종

○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자막 100%, 수화통역 5%, 화면해설 10%,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50~70% 수준 목표달성 하였음.

○ 2005년부터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결과 웹 접근성 수준은 향상되고, 웹 접근성 품질을 인증하는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웹 접근성 품질인증 현황('14~'16년)(4,932건) : '14년(1,306건), '15년(1,693건), '16년('1,933건).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지원 및 보급을 통한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

－ '13~'16년까지 총 14개 제품 개발 및 '13~'16년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총 17,144대 보급.

- 장애인 대상 집합, 방문 등 정보화 교육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킴.
 - 13~'16년까지 148개 정보화 교육장에서 장애인 총 276,242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웹 이용환경 개선, 공공도서관 장애인 열람실 및 독서 도고기기 확산 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접근 기회 제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대체자료의 절대적 부족 및 빠른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 납본의 어려움 상존.
 - 우리나라 대체자료 제작은 미국의 10%, 스웨덴의 30% 수준
-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장애인 방송의 양적인 증가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장애인 방송의 질적인 문제(자막방송의 오타, 자막딜레이)와 주 시청 시간대의 수어방송 제공과 재난방송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권 확대 위한 노력 필요.
- 공공 및 민간부문의 PC기반의 웹 접근성 수준이 지속 향상되고 있으나, 모바일을 이용한 웹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장애인이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미흡.
 -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12년 이후 3년간 6.5점('12년 76.7점 → '15년 83.2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13.6점이 향상('12년 64.5점 → 78.1점)으로 나타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b).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정보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장애인과 정보화 격차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활용중심 정보화교육으로의 전환과 스마트모바일 접근기회 확대 등 디지털 사회통합정책 추진 필요.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5.4%로 일반국민에 비해 34.6%p 낮은 것으로 나타남('16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지원 및 보급을 통한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애인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정보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연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필요.

- 장애인에 대한 집합, 방문,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위주의 교육이 아닌 지능정보화시대에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및 정보화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
 - － 정보화 교육이 10월 과정으로 정보화교육 강사의 임용기간이 10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능력 있는 정보화교육 강사 선발에 어려움 발생.

나) 발전방안(제언)

□ 지식정보접근 이용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장애인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체계 정립 및 독립방안 마련이 필요함.
 -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강화.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화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방송 확대 및 품질 향상 등이 필요함.
 - － 실시간 자막방송의 경우 딜레이 시간, 오타 등의 개선 및 수어방송 및 화면해설 방송 비율 확대 필요하며, 특히 재난재해에 대비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방송에 대한 DMB방송 등에 대한 장애인 방송 평가센터 운영 추진이 필요함.
-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방식과 기기변화에 맞는 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의 성능 개발이 요구되며,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보급 확대를 위해 신

청·접수·보급 등 업무효율 을 높이기 위한 관계 부처 간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함.

□ 지능정보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보접근성 제고 추진

○ PC에서 인터넷 이용에서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 가전제품, IPTV 등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이 가능한 지능정보사회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현재 정보접근성 관련 의 경우 감각장애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전 장애영역을 고려하는 정보접근성 제고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웹 접근성 국제표준 기구(W3C-WAI)에서도 현재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 유형을 포함할 수 있는 표준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 단순한 기초과정의 정보화 교육에서 장애인이 지능정보화사회에서 필요한 인 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화교육의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매년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에 비해 보급이 적어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중복 장애 및 복수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도 한 개만 보급 받을 수 있어 중복장애 및 복수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판로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상설 판매장 구축 및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지원 등 사업추진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설 체험관 구축과 이동 체험관을 운영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이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에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보조기기 개발·보급 사업은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중복투자 및 개발에 문제점을 갖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재활공학연구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중소기업벤처부 등에서 개발 지원 및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는 실정임.

3. (4-2)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4-2-1)저상버스 도입 확충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사업내용

- (사업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함.

- 일반버스(1억2천만 원)와 저상버스(2억2천만 원)와의 차액(약 1억 원)을 지자체와 매칭(서울시 40%, 기타 시·도 50%)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보조.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주요 실적

- '16년 국비 340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시내버스 700대를 저상버스로 교체.
 - '04년 ~'16년까지 3,492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7,451대(22.8%) 도입.
- '17년 국비 320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시내버스 700대를 저상버스로 교체.

나) 문제점

- 저상버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 다보니 사업 도중에 연도별 성과목 표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성과목표의 대폭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의 사유는 소상 하지 않음. “지자체 도입 수요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변경했다고 했지만, 애초에 목표를 세울 때 지자체 도입 수요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표 설정의 오류라고 판단됨.
- 원래 초기 성과목표에 비하면 상당히 부적절한 수준이며 초기 성과산출근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목표대비 달성도

- 매년 성과목표에 따라 달성 중

<표 2-65> 세부과제 4-2-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	17.1	18.9	20.6	22.8	24.9
	실적	16.4	18.5	20.7	22.8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추후 수정 사항 등)

- 도입된 저상버스를 폐차하는 경우 실제 운행대수에서는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산식을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전국 시내버스 대수)×100로 수정 필요.

(4-2-2)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으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운행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서 1·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

□ 사업내용

- (사업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
- (주요내용)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시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 지자체에 매칭방식(서울시 40%, 기타 시·도 50%)으로 보조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주요 실적

- '16년 국비 52억 원을 지원, 전국 특별교통수단 264대 도입하여 법정보급대수 100% 달성.
- '16년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보급대수(2,785대)의 102.4%(2,852대) 보급.
- '17년 국비 37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특별교통수단 193대를 도입.
- 보조금 배분방침 결정('17.2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태 점검(분기별 1회)

나) 문제점

- 특별교통수단을 늘리는 노력 이외에 일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목표대비 달성도

- 매년 성과목표에 따라 달성 중

<표 2-66> 세부과제 4-2-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목표	70	80	90	100	100
	실적	72.8	82.5	92.9	102.4	

(4-2-3)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철을 이용하는 사회적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의시설 제공.

□ 사업내용

- (사업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교통약자에게 철도역 이용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수도권전철역 및 승강장 연결 통로에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주요 실적

- `16년도 전철역 출입구 및 승강장 연결통로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 (엘리베이터) 서울역 등 5개역에 11개 설치 완료(12개역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4개역은 설계 중)
 - (에스컬레이터) 노후된 마두역 등 3개역에 12개 교체 완료
- `17년 전철역 출입구 및 승강장 연결통로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지속 설치하여 철도 이용객의 이동편의 증진.
 - 분당선 선릉역 등 12개역에 엘리베이터 12개, 에스컬레이터 26개 설치 예정
 - 경부선 대전역 등 4개역의 노후 에스컬레이터 14개 교체 예정

나) 문제점

-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와 지자체의 인·허가 협의가 지연되었고,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시간에만 설치를 함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설치 목표 미달성.
- 산출목표 외에 이용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만족도, 설비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마련 필요함.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과 범위가 다소 제한적으로 보임. 즉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시각안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글 안내 등의 확대 필요.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용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노후 승강시설 개량 및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

□ 목표대비 달성도

- 매년 성과목표에 따라 달성 중이나 16년도 에스컬레이터 실적 미비함.

<표 2-67> 세부과제 4-2-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E/V설치	목표	2	11	8	10	
	실적	8	11	8	11	—
E/S 설치	목표	8	14	12	25	
	실적	46	14	12	12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추후 수정 사항 등)

-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와 지자체의 인·허가 협의 필요시간,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시간에만 설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연 초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점검 등 사업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승강시설 개량 및 설치사업 지속 추진 필요.

(4-2-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건축물, 교통수단 등에 접근, 이용 및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보건복지부 고시)

○ (주요내용)

-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 인증대상개별시설 및 지역 인증

- 지역인증: 지역(10만㎡ 이상의 사업 지역)
- 개별시설인증: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 인증종류본인증과 예비인증으로 구분.

- 예비인증은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본인증 전에 하고,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본인증을 받아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주요 실적

○ '08~'15년까지 누적 인증 실적747건(예비인증 529건, 본인증 218건)

○ '16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188건 (예비인증 123건, 본인증 65건)

○ '17년 주요 사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 건축사 보수교육 기관 지정 추진 및 교육 실시
-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 지속 추진

－ BF 인증 사후관리 추진 : 인증기관별 본인증 취득 건축물

－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 지속 추진

－ BF인증 지표 및 수수료 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건축물, 공원 인증지표 개정 추진
- 시설물 규모별 인증수수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을 통해 수수료 납부에 대한 형평성 확보.

나) 문제점

- 인증건수와 같은 산출목표뿐만이 아니라 실제 편의증진의 정도, 장애인의 만족도 등 성과에 대한 측정도 필요함. 즉 성과지표를 달성 건수가 아닌, 실효성을 고려한 정성적인 측면에서 수립하여 사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인증 이후 모니터링 체계가 없으므로 매년 인증 받은 건물이나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매년 개최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법적근거 마련.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와 공동부령) 제정 및 시행('15.8월)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4.12월 국회 통과)
 -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은 BF 인증 의무 취득

□ 목표대비 달성도

- 매년 성과목표에 따라 달성 중

<표 2-68> 세부과제 4-2-4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BF인증 실적 (건수)	목표	90	100	120	250	700
	실적	126	155	188	629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추후 수정 사항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취득 건축물 인센티브 마련

(4-2-5)장애인편의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본 사업은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15.6월, KISTEP), 중복성 우려 등으로 기존 장애인 편의증진 등 편의증진 기술개발을 제외한, 국민생활 및 공공사회 안전기술개발로 사업 내용 및 사업명 개편(국민편의증진기술개발사업→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됨에 따라 사업종료.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대부분의 사업에서 성과에 대한 달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계 및 문제점

○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되거나 성과목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게 나타났음.

○ 연도별로 편차가 존재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와 수요파악, 간담회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지자체간에 교통복지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복지수준이 낮은 지역을 조사하여 부진한 지자체의 관심 촉구 및 지방의 대중교통 불편 및 이동불편을 개선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나) 발전방안(제언)

- 저상버스 도입 확충과 관련하여,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 및 대형버스가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의 교통약자 등을 위한 중형저상버스 개발·보급으로 저상버스 보급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와 관련하여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장애인의 이동수요, 대기시간, 1대당 장애인 이용률에 대한 정확한 이용실태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장애인단체의 청원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함. 또한 기존의 산출목표 외에 ‘이용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만족도’, ‘콜택시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고장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수도권 전철 역사 외부 출입구에 대한 확대 증가가 필요함. 또한 산출목표 외에 ‘이용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만족도’, ‘설비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인증평가단의 전문성과 합리성,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중요함. 또한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와 제도 자체의 홍보 및 활성화가 요구됨. 또 인증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장애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제품 개발의 경우, 해외시장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고용부의 연계가 필요하며, 제품이 개발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건축 등 환경체계에 관련된 모든 부처와 관련법들이 함께 연동되어야 함. 또한 기존의 성과목표 이외에 ‘이용자의 편의증진 정도’, 만족도 등과 같은 성과목표가 필요하며, 개발 능력을 갖춘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팀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과물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여야 함.
- 종합계획 이행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제6절 경제활동 분야

1. (3-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3-1-1)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함.

□ 사업내용

- 장애인 소득보장의 근간인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 2013년 부가급여 2만 원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총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 검토.
 - 기초급여는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과 연계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지원대상

-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이 때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함.
-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중증장애인에서 제외됨.

□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2014년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함.
- 2017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가구 190만 4천 원.

□ 급여액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월 20만 6050원을 지급함(2017년 기준).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함.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함.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월 2만 ~ 28만 6050원 지급(2017년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재가)는 8만 원, 차상위계층은 7만 원, 일반 차상위초과자는 2~4만 원을 지급하며, 급여특례로 65세 이상 보장시설수급자 7만 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14만 원을 지급함.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재가)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28만 6050원을 지급함.

나) 문제점

□ 엄격한 중증장애인 범위로 인한 수급대상 제한

- 현재 장애인연금 제도에 적용되는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비교적 엄격하여 일반

적으로 중증으로 간주하는 3급 장애인의 대부분을 포괄하지 못함.

○ 현재 18세 이상 3급 중복장애인의 수는 약 2만 명으로 전체 18세 이상 3급 장애인의 4.8%(2016년 기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사회보장정보원, 2017a).

○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의학적 평가에만 의존하여 근로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못함.

□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추가비용 지출 보전 미흡

○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은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2~8만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실제 추가비용 23만 원(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연금제도에서 가장 큰 성과는 급여액의 인상과 수급범위의 확대임.

○ 2013년 부가급여액이 2만 원 인상되었으며, 2014년 7월부터 기초급여가 약 2배로 인상되면서(9만 9100원 → 20만 원)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하여 2017년 현재 20만 6,050원이 지급됨.

○ 2014년 7월부터 목표 지급범위가 중증장애인의 63%에서 70%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 말 수급률은 68.35%(35만 161명)로 목표수급률 70%에 근접함(사회보장정보원, 2017b).

○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2017년 8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실시함.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2013년 목표 대비 93.4%에서 2016년 목표 대비 99.8%까지 상승하였으며, 2017년 5월 수급자 수는 35만 4411명으로 이미 2017년 목표 수급자 수를 상회함.
-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2013~2017년 동안 매년 목표 급여액을 달성함.

<표 2-69> 세부과제 3-1-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급자 수 (천명)	목표	327	364	358	351	352
	실적	305	328	342	350	—
연금급여액 (천원)	목표	177	185	280	283	285
	실적	177	280	283	284	286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지표는 추가생활비용 23만원 대비 연금액의 비율로 2013년 73%에서 2017년 80% 수준까지 인상을 목표로 함.
- 하지만 2014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 개편으로 연금액 인상목표가 초과달성 되었고, 이후 성과지표가 수급자 수와 연금급여액으로 변경됨.

(3-1-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간의 관계 설정,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등 선진화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 사업내용

-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 세부 연구(2013년)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수준 및 지원범위 등 확대 연구
 - 공사 연금 소득계층별 지원 모형 개발 및 고용연계 체계 연구 등
-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2014년)
 - 소득보장 제도개선 추진 및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와 연계 강화 등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연구

- 2013년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기준 및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통해 국외 장애소득보장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장애인연금 확대방안을 마련함.
- 2014년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소득보장정책 비교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충북대학교)를 통해 국외 장애소득보장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급여체계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제시함.
- 2015년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별 적용가능성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를 통해 공적 소득보장제도 개선과제, 근로능력평가 도입방안, 장애소득보장제도와 근로지원기제의 결합 방안을 마련함.
 - 본 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전문가집단,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총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함.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마련 연구

- 2015년 「장애인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및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장애인연금 목표수급률 70%

달성을 위한 선정기준액을 선정하고 빈곤 개선효과 등을 분석함.

나) 문제점

□ 장애소득보장체계의 종합적 제도개선 실현 미흡

- 장애소득보장체계의 개편 및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연구용역의 주제가 포괄적 개선방향만을 담고 있어, 실제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은 미흡함.
- 연구용역이 다룬 범위는 급여체계의 개편, 근로능력평가의 도입과 근로지원 연계와 같이 포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개선 내용은 일부 장애급여의 지급범위 확대와 급여액 인상으로 제한되어 장애소득보장체계의 실질적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함.

□ 장애인연금제도 개선방안에 편중된 연구 수행

- 대부분의 연구가 공적 장애소득보장체계에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인연금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비례급여인 장애연금(국민연금)과 장해급여(산재보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특히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적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2014년 장애인연금액을 확대하고, 2015년 장애수당을 인상(월 3만 원 → 4만 원)하는 등의 가시적 제도개선을 달성함.
-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을 통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산정으

로 수급률이 2014년 64.5%에서 2016년 68.4%까지 상승하여 목표수급률 70%에 근접함.

□ 목표대비 달성도

- 성과목표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며, 이를 위해 매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함.

<표 2-70> 세부과제 3-1-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득보장체계 강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목표	선행연구 조사	장애인연금 대상폭 인상	장애수당 인상	연구조사	연구조사
	실적	연구용역 수행	연구용역 수행	연구용역 수행	연구용역 수행	연구용역 수행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초기 목표는 2013년 선행연구 조사, 2014년 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2016~2017년에 걸쳐 제도개선을 실현하는 것이었음.
- 하지만 장애소득보장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은 장기적 목표로 설정되고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나. 총평 및 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

□ 주요성과

-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영역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장애인연금이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임.
- 장애인연금의 지급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로 확대되었고, 기초급

여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서 10% 수준으로 인상되어 동일한 목적의 노인 대상 소득보장급여인 기초연금과 수급범위 및 급여수준에서 동등한 위치까지 확대되었음.

- 또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2013년 2만원,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은 2015년 1만원 인상됨.

□ 한계 및 문제점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소득보장 영역의 성과목표는 사업의 집행만으로 쉽게 달성이 가능하고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과제의 성과목표로 수급자 수와 급여액 인상을 설정하였으나 제도 정착 과정에서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급여액이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매년 인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성과목표라 볼 수 있음.
 - 또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목표는 추가생활비용 23만원 대비 연금액의 비율로 설정되었는데, 이를 소득보전급여 성격인 기초급여와 추가비용급여 성격인 부가급여의 합산액으로 설정하여 급여의 목적과 성과목표가 부합하지 않음.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과제에 대한 성과목표는 연구용역과 제도개선으로 설정되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연구용역과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는지 모호함.
-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타 장애소득보장급여에 대한 계획은 모호하고 제도개선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장애인연금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애급여 등 다층적 장애소득보장체계에서 중요한 타 급여에 대한 추진계획이 부족하였음.

- 더 나아가 장애소득보장급여 사이의 역할 정립, 근로능력평가의 도입과 고용서비스 연계, 사적 소득보장체계 마련 등 거시적 차원의 소득보장체계 개편은 관련된 연구용역 수행에 그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장애인연금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은 기초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추가비용급여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추가비용에 비해 급여액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나) 발전방안

□ 다층적 장애소득보장제도의 균형있는 발전

- 우리나라의 장애소득보장체계는 무기여 기초보장급여의 영역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사회보험 방식 소득비례급여의 영역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애급여로 구성되어 외형적으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은 다층적 장애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하지만 장애소득보장급여의 지출수준 및 지급범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주된 발전은 중증장애인의 70%를 대상으로 명목 소득대체율 10%를 보장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에 집중되었고 타 소득보장급여는 정체 상태에 있음.
- 따라서 향후 발전과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등 다층적 장애소득보장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타 급여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장애인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최근 정체 상태인 수급자 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수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현실화 및 체계화

- 기존 장애소득보장급여의 발전 과정에서 추가비용급여는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늦었는데, 향후에는 장애인의 실제 추가비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추가비용 지출 실태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비용급여의 적정한 급여액과 지급범위, 차등화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수당으로 분리된 추가비용급여를 통합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평가의 도입 및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 그간 장애판정을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복지급여가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어 왔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만 적용되고 소득보장 영역은 여전히 기존의 의학적 장애판정 및 장애등급제에 의존하고 있음.
- 장애소득보장 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급자격 결정에서의 장애판정 또한 실질적인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소득보장 영역에 근로능력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주된 소득보전급여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근로능력평가를 적용할 경우 근로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잔존하는 근로능력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3-2) 장애인 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3-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경쟁고용시장에서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 촉진.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완화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상향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구매, 구매통계 집계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품 유통 활성화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이고, 그러한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면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50% 이상이어야 함.

- 2014년 5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개정으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대상에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고, 2016년 6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시설설비·생산인력의 3개월 이상 유지 및 생산과 판매실적 확인 기준을 삭제하여 지정 기준을 완화함.
- 2014년 11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3년)을 도입하여 지정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2016년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시설이 1년 이내에 재지정 되는 것을 금지함.
- 2017년 8월 기준으로 총 528개의 생산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장애인단체 143개, 직업재활시설 379개(보호작업장 323개, 근로사업장 56개), 정신직업재활시설 6개가 지정됨(보건복지부, 2017a).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대상 공공기관

-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고하고, 구매계획에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이 되는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현재 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총 962개로 국가기관 54개, 지방자치단체 254개, 교육청 193개, 공기업 등 470개로 구성됨(보건복지부, 2017b).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나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우선구매관리시스템과 유통정보시스템(2016년 2월 ‘꿈드래 쇼핑몰’ 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2월 특별법 개정으로 법정 구매율(1%)에 미달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나) 문제점

□ 법적 구속력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의무이행

- 2015년 이후 우선구매 총액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를 초과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2016년 평균 0.83%)와 교육청(2016년 평균 0.89%)은 여전히 1%에 미달하며, 법정 우선구매율 1%에 미달하는 개별 공공기관의 수는 여전히 많음(보건복지부, 2017b).
- 법정 구매율 미달에 대한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특히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지표가 없는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관심이 부족함.

□ 특정 제품에 편중된 구매 실적

- 다양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있음에도 복사용지, 화장지류 등 일부 제품에 구매가 집중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

- 2017년 8월 감사원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대부분의 공정을 외부에 위탁생산하여 제도효과가 저하된다는 지적을 하였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3년 379개로 장애인 8,844명을 고용하였으나, 2016년에는 생산시설 492개로 30% 증가하고 장애인 고용인원은 1만 95명으로 14% 증가함(보건복지부, 2017c).
- 우선구매액은 2013년 2,958억 원에서 2016년 5,312억 원으로 1.8배로 증가하는 등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또한 2015년에는 특별법 시행(2008년) 이후 처음으로 우선구매액이 적용 대상 기관 총구매액의 1%를 초과하여(2011년 0.55% → 2015년 1.02%), 법정 우선구매율(1%)을 평균적으로 달성하였음(보건복지부, 2017b).

□ 목표대비 달성도

- 생산시설 수는 2013년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2015년에 목표치에 다소 미달하였으나 2016년 급증하여 목표를 상당히 초과하여 달성함.
- 우선구매액은 2013년 목표의 67%에 그쳐 저조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목표를 초과 달성함.

<표 2-71> 세부과제 3-2-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시설 수 (개)	목표	340	400	420	435	450
	실적	379	404	417	492	-
우선구매액 (억원)	목표	4,395	2,900	3,100	4,300	4,500
	실적	2,958	3,530	4,640	5,312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지표는 생산시설 수 2013년 340개 → 2017년 480개(매년 35개 증가), 우선구매액 2013년 4,395억 원 → 2017년 4,947억 원(매년 예상 물가상승률 3% 반영)으로 설정되었음.
- 결과적으로 초기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2017년의 최종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2014년 이후 연도별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이 대부분 이행이 되었으나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상향 추진’은 이행되지 않았음.

(3-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일반 경쟁시장에서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경영컨설팅 지원 등 시설 인프라 확충과 보호고용 기능 강화를 통해 직업재활 및 고용을 촉진함.

□ 사업내용

- 직업재활시설이 일터로서의 기능 확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매년 30개소), 1사 1시설 결연운동 전개.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인센티브 확대 및 패널티 부여.
- 제조업 중심의 업종에서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으로 지원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16년 12월 기준 총 582개(보호작업장 516개, 근로사업장 63개, 직업적응훈련시설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만 7,131명의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7d).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 2016년 기준 226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기능보강 지원을 받았으며, 신축 17개, 증축 7개, 개보수 55개, 장비보강 146개, 임차료지원 1개로 구성됨.
- 국고보조금 예산은 2013년 137억 원, 2014년 115억 원, 2015년 134억 원, 2016년 131억 원이었으며, 지원 시설은 2013년 275개, 2014년 230개, 2015년 230개, 2016년 226개로 감소함(보건복지부, 2017c).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 2016년 41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경영컨설팅 지원을 받았으며, 보호작업장 39개, 직업적응훈련시설 2개로 구성됨.
- 경영컨설팅 지원 예산은 2013~2016년에 매년 3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음(보건복지부, 2017c).

나) 문제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내실화 부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미설치된 시군구가 존재하여 여전히 접근성 차원에서 시설의 확충 필요성은 남아있지만, 향후에는 시설 수의 확대보다는 시설의 규모화 등을 통한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용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 34만 3천 원에서 2014년 35만 1천 원으로 2.3% 증가, 2015년 52만 8천 원(근로작업장)에서 2016년 53만 7천 원(근로작업장)으로 1.7% 증가에 그쳤는데(보건복지부, 2017c), 일반적인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적인 임금수준 향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 현실화 필요

- 2016년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은 m²당 139만 7천 원으

로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176만 2천 원의 79% 수준에 불과하여 낮은 건축비로 인해 부실공사 등이 우려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예산의 부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은 2013년 3억 원으로 편성된 후 현재까지 증가하지 않아 지원대상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컨설팅 지원기관 증가로 기관 당 컨설팅 비용이 낮아져 사업 수행의 부실화가 우려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으로 시설 수(2013년 511개 → 2016년 582개)와 근로장애인의 일자리(2013년 1만 4739명 → 2016년 1만 7131명)가 확대되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인해 2013~2016년 기간에 대상시설의 매출이 평균 15% 증가하고 105명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임금수준도 1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17c).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대상 시설 목표는 2014년 목표에 미달하였지만,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표 2-72> 세부과제 3-2-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영컨설팅 지원대상 시설(개소)	목표	30	40	30	30	30
	실적	40	30	33	41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지표는 경영컨설팅 지원대상 시설 확대(2013~2014년 30개, 2015~2016년 35개, 2016년 40개)와 직업재활 기능보강 확대(매년 10% 증가)로 제시되었으나,
- 직업재활 기능보강 확대 성과지표는 이후 관리되지 않았으며, 경영컨설팅 지원대상 시설 확대 지표는 목표치가 수정되었음.
- 또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사업내용으로 제시되었던 1사 1시설 결연 운동 전개, 임금수준 및 일반노동시장 이행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 확대 및 패널리티 부여,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으로 지원 확대는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음.

(3-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경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

□ 사업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국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 산품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도입.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세제혜택 확대 (예: 현행 4년 → 5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With+) 설립 유도를 위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모별로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차등적용.

- 경영계와 공동으로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 전개.
- 2015년까지 설립지원금 10억 원 한시적 지원.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10억 원 한도로 실투자소요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감면(법인세·소득세) 혜택이 있음.
-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은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차등 적용하며,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일 경우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일 경우 10% + 5명, 300명 이상일 경우 5% + 20명이 적용됨.
- 2016년 기준으로 인증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220개에 장애인근로자 3,780명(중증장애인 2,912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전체 근로자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8.4%임(고용노동부, 2017).
- 2013년 6월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

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고,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10억 원 한도로 실투자소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감면 혜택,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적용의 혜택이 있음.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에 더해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50%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2개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함.
- 2016년 기준으로 인증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50개에 장애인근로자 2,206명(중증장애인 1,442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전체 근로자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6.8%임(고용노동부, 2017).
- 2016년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대상 13개가 선정되어, 무상지원금 53억 원 지원이 결정됨.

나) 문제점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구매 비율(0.3%)이 낮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달리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이행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움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공개될 예정임.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9) 박혜원, 전영환(2016)에 따르면 2015년 561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1,046억 원으로 총구매액의 0.29%였다. 공기업(24개)은 0.09%, 기타공공기관(139개)은 0.18%로 구매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2016년 말까지 설립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총 71개이지만 인증을 받은 곳은 50개에 그치는데, 형식적인 법인 설립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상태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는 설립이 아닌 인증을 기준으로 성과를 파악하고,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의 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2012년 12월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라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조기에 달성함
 - － 2013년 6월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제 및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됨.
 - －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2014년부터 3년간 면제(100% 감면) 후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함.
- 30대 기업집단 중 6개 기업집단에서 15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등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이 목표한 것보다 활발히 이루어짐.

□ 목표대비 달성도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목표는 매년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하였으며,

10) 현재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표준사업장은 의무고용 중증장애인 수가 15명으로 상시근로자의 15% 및 장애인의 50%를 달성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1000명인 표준사업장은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이 70명으로 상시근로자의 7%, 장애인의 23%를 달성하면 된다.

2016년에는 목표치보다 9개가 더 설립됨.

<표 2-73> 세부과제 3-2-3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개소)	목표	30	40	51	62	73
	실적	32	40	54	71	—

(3-2-4)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용자, 근로지원인 등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직장적응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용자 및 무상지원 확대
- 근로지원인 대상인원 확대,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서비스 형태 개선
- 장애인고용저조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등 패키지형 지원시스템 구축
 -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 채용적합 직무발굴, 적합장애인 알선, 맞춤형 훈련을 통한 적합인력 양성, 고용환경개선 시설 지원 등 지원패키지 구성
- 공공조달 시 장애인 고용의무 평가(가점 및 감점제)를 강화하고 기업별 장애인 고용실적을 나라장터에 제공
-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우대조치에 준하여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및 보증한도 우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및 융자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및 융자를 통한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 시설장비 무상지원 사업은 사업주당 3억 원 한도, 장애인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중증장애인 1,500만 원) 이내로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함.
 - 시설자금 융자 사업은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함.
- 2016년 기준 사업장 174개 장애인 905명에 대한 시설장비를 무상지원하고, 사업장 94개 장애인 436명에 대해 시설장비를 융자함(고용노동부, 2017).

□ 근로지원서비스

- 중증장애인의 직장적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근로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받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음.
- 2016년 기준 1,259명의 장애인에게 799명의 근로지원인이 지원되었음(고용노동부, 2017).

□ 통합고용지원서비스¹¹⁾

-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고용의무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¹¹⁾의 기존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함.

- 적합직무 정보제공, 적합인력 지원, 관리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설환경 개선 지원, 인식개선 지원의 연계서비스가 제공됨.
- 2016년 기준 495개 사업체에 대한 통합고용지원서비스가 지원됨(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주를 선정·장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 도모.
- 국방부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0.5점), 조달청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5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 대부 선정 우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융자 선정 우대,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지원대상 선정 우대, 장애인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장애인 고용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의 혜택이 주어짐.

나) 문제점

□ 양적 목표에 치우친 성과목표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융자,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한 양적 실적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유지 등의 질적 성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융자 지원사업의 목표 미달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융자 지원사업은 성과목표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실적치가 감소하여 수요 파악, 집행방식의 문제점, 제도적 걸림돌 등 사업수행 실적 미흡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근로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

- 근로지원인의 기초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고, 서비스 단가도 낮아 일상생활보다 전문적 영역인 직업생활에서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움.
- 근로지원서비스 수혜대상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거나, 예산에서 책정한 지원대상보다 이용자가 더 많아 실제 이용시간의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수요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예산 증액 필요¹²⁾.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근로지원서비스 수혜자가 대폭 확대되어 2013년 769명에서 2016년 1,259명으로 64% 증가하였음. 또한 애초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목표는 2013년 400명 → 2017년 500명이었으나, 초기부터 목표를 상당히 초과 달성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함.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용자는 매년 성과목표에 미달하였으며, 2016년 기준 85%에 그침.
- 근로지원서비스 수혜대상 목표는 초기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함.

12) 박혜원, 김원호(2016)에 따르면 2014년 예산안은 480명에 대한 평균 110시간 지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657명에 대해 평균 80시간이 지원되었다.

<표 2-74> 세부과제 3-2-4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용자(개소)	목표	489	439	361	316	326
	실적	328	257	254	268	—
근로지원서비스 수혜대상(명)	목표	400	480	750	950	950
	실적	769	769	923	1,259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용자에 대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지표는 수혜 이후 장애인고용 증가율로 2013년 5% → 2017년 6.5%로 설정되었음. 하지만 성과지표를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라 산출지표 성격인 지원·용자 수혜 기업체 수로 변경하여 적절하지 않음.

나. 총평 및 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

□ 주요성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고용된 장애인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액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정 우선구매율 1%를 평균적으로 달성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등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조기에 달성함.
- 또한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장애인 이용자가 4년 만에 64% 증가하면서 단기간 내에 서비스가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됨.

□ 한계 및 문제점

-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는 법정

우선구매율을 평균적으로 달성하는 등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 구매율에 미달하는 개별 공공기관의 수는 여전히 많음. 또한 이들 사업장의 생산품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거나 사업장이 특정 업종에 집중된 경우가 많음.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자격 관리가 미흡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고용과 보호의 기능이 혼재되어 정체성에 혼란이 있으며, 고용성과와 보호 및 훈련의 기능 양 측면에서 모두 충실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각종 지원을 위한 조건에서 장애인 고용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나) 발전방안

□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향 필요

- 지난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고용 기업은 양적으로 상당히 확대되었음. 하지만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장애인고용 기업의 시장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에는 양적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소규모 사업체를 네트워크화 하거나 규모화하고, 권역별 조정을 통해 생산품목을 차별화·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장애인고용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유지, 임금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분리된 고용환경에서 통합적 고용환경으로의 전환 필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을 분리된 환경에 놓이게 하여

통합적 고용환경의 요소는 결여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14년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을 폐쇄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 따라서 장기적으로 분리된 환경의 작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중증장애인이 한시적으로 직업적응훈련을 하는 곳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 있는 기업의 성격을 강화함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통합된 환경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분리된 자회사에 다수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양적 확대보다는 대기업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 부처 간 유사·중복적 사업에 대한 통합적 재편 필요

-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임. 이러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양 부처는 시설개선 지원, 우선구매제도 적용 등 공통적인 사업을 다수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기업의 형태로 전환할 경우 더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유지하기 보다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일반 사업장 혹은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양 부처에서 각각 별도의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생산품의 다양화, 판매 및 유통체계 구축, 구매통계 집계 등의 측면에서 통합적·협력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3-3)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3-3-1) 장애인 일자리 창출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사업내용

- 장애유형별, 욕구별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 지원
 -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안마사파견, 요양보호사 보조)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연도별로는 2013년 13,279명, 2014년 14,567명, 2015년 14,879명, 2016년 14,82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고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견도 수렴하고 환류기능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관련연구도 꾸준히 진행.

나) 문제점

-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활동실태를 고려할 때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한시적 일자리로서 지속성도 부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료한 장애인들의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가 미흡하며, 임금수준이나 고용환경 등에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 필요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년) 기간 동안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 제공

□ 목표대비 달성도

- '13~'16년 동안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하였으며, 그간 일자리 확충(11.6%)을 위해 노력하였음.

<표 2-75> 세부과제 3-3-1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명)	목표	11,440	14,500	14,879	15,000	16,352
	실적	13,279	14,567	14,879	14,827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장애인일자리사업 소요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목표대비 일자리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존재

(3-3-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고용 미이행기업에 대한 이행지원을 통한 고용확대 제고

□ 사업내용

- 장애인고용 미이행기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통한 장애인고용 확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17년, '19년 적용 의무고용률 상향
 - 민간기업 ('15) 2.7% → ('17) 2.9% → ('19) 3.1%
 - 공공기관 ('15) 3.0% → ('17) 3.2% → ('19) 3.4%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15) 3.0% → ('17) 3.2% → ('19) 3.4%
 - 국가 및 지자체 근로자 ('15) 2.7% → ('17) 2.9% → ('19) 3.4%
 - 지방관서와 장애인공단 지사간 협업을 통해 명단공표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중점 지도·지원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에 대해 2회 명단공표(2016년 4월, 10월)

- 명단공표 사전예고(2회)를 통해 집중이행지도(1~10월) 실 및 총 30회 사업주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410개 사업체에서 장애인 2,015명 신규 채용(2016년).
- 고용저조 사전예고기업 중 944개소가 장애인 신규채용, 고용진행 등으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

- 공표기준 변경: ('14년) 100인 이상 1.3%미만⇒('15년) 300인 이상 1.35% 미만
- 1,0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인사부서장 간담회, 만성 저조기업 방문면담 등을 추진하여 3,171명 신규 채용(2016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무고용률 상향에 대하여 의무고용사업체 대상 안내 및 설명회 개최 등 추진.
- 지방관서와 공단 지사간 협업을 통해 명단공표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중점 지도 및 지원.

나) 문제점

-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여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 필요.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13년부터 `16년까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사전예고 15,710개소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지도를 통하여 총 6,213개소가 명단 공표 제외되고 총 9,498개소가 공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2,835개 사업체에 서 총 9,528명의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였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의 의무고용 이행을 독려하였음.

□ 목표대비 달성도

- '14년까지는 목표치에 약간 미달했으나 이후로는 초과달성.

<표 2-76> 세부과제 3-3-2 목표대비 달성도

(단위: 천개)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고용 일자리수	목표	190	190	190	190	190
	실적	168	185	192	197	-

□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고용이행지원 시행

- 대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여력은 커지지만 고용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고용여력만큼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기업 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용의무 이행지원 추진.
- 사업주 설명회,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직무분석 및 직무발굴, 업종별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CEO간담회 추진 등.

(3-3-3)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상향조정 및 고용부담금 신설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고용 확대
 - '15년 ~ '19년 적용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추진
 - 공공기관 ('15) 3.0% → ('17) 3.2% → ('19) 3.4%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15) 3.0% → ('17) 3.2% → ('19) 3.4%
 - 국가 및 지자체 근로자 ('15) 2.7% → ('17) 2.9% → ('19) 3.4%

□ 사업내용

○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과 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최근 공공부문 및 공무원 임용 현황

○ 2016년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 성과

<표 2-77> 2016년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 성과

공공기관 전체 취업	공공기관 정신적 이외 장애인 취업	공공기관 정신적 장애인 취업	학교 내 일자리 사업 장애인 취업
1,255명	141명	57명	1,057명

주: 자립취업 및 재정지원일자리 취업자 제외
자료: 고용정보시스템

○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장애인 채용지원 결과

<표 2-78>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장애인 채용지원 결과

구 분	국가직 (인사혁신처 중증경채)	국가직 (국방부 장애인 군무원)	지방직 (서울시 중증경채)
‘16년 채용계획	31명	76명	5명
‘16년 임용인원	23명	22명	5명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서울시 인사담당부서

□ 2017년도 사업추진 내용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

-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의 장애인 공채 및 경력경쟁 채용 지원 강화
 - 공직설명회 개최, 면접관 교육, 면접캠프 지원 등
- 17개 광역시, 도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및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후속

조치로 장애인고용 적극 유도

－ 교육청의 ‘학교 내 일자리 사업’ 계속 추진 및 모델 확산

나) 문제점

□ 공공기관 및 공무원 의무고용률(3.2%)에 미달

○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은 각각 2.96%와 2.78%에 그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정착으로 중증
경제 및 군무원,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등이 안정화 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고
용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목표대비 달성도

○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정착으로 중증
경제 및 군무원,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등이 안정화 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고
용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2-79> 세부과제 3-3-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공공기관	목표	2.5%	3%	3%	3%	3%
	실적	2.81%	2.91%	2.93%	2.96%	—
정부부문 (공무원 아닌 근로자)	목표	2.5%	3%	3%	3%	3%
	실적	2.63% (3.51%)	2.65% (3.75%)	2.80% (4.05%)	2.78% (2.96%)	—

자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계획추진과정의 애로사항

- 정부부문의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2.78%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공무원의 절반(46.8%)을 차지하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임. 특히 전체 교육청 공무원의 80% 이상인 교사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당히 저조하여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2.96%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일부 전문직(연구직 및 의료직 등)이 많은 기타공공기관 등의 고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임. 의료부문에 장애인이 지출할 수 있는 직무개발 및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함.

(3-3-4)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로 장애인 취업 제고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 중증장애인 중 취업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특정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에게 인턴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
 -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 등 11개 장애유형 해당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주요내용

○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확대

- 수료인원(취업률): ('15년) 1,665명(92.4%) → ('16년) 1,619명(93.6%)
 - 맞춤형 훈련 수료인원(취업률): ('15년) 875명(95.7%) → ('16년) 933명(98.5%)
 - 특성화훈련 수료인원(취업률): ('15년) 351명(90.0%) → ('16년) 353명(88.7%)
- 장애인 훈련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지에 서울맞춤훈련센터를 설치('14.9월)하여 기업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실시.
- 발달장애인의 직무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서울·인천교육청과 협력하여 전용훈련센터 2개소 설치.

○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알선 취업자수(장애인고용공단, '16년): 11,305(취업률 46.5%)

○ 중증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 중증장애인 정규직 전환율(장애인고용공단, '16년): 71.25%

□ 2017년도 사업추진 현황

○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실시(계속)

○ 장애인 훈련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의 훈련기회 확대

-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천안·창원 맞춤형훈련센터 2개소 추가 설치.
- 발달(자폐성·지적) 장애인의 직무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광주·대구 시내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 추가 설치(100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등 장애인 특성별 취업지원 사업 실시(계속)

나) 문제점

☐ 해당사항 없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취업률 향상에 크게 기여.

☐ 목표대비 달성도

- '13년 이후 목표대비 초과 달성.

<표 2-80> 세부과제 3-3-4 목표대비 달성도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지원고용 수료인원	목표	2,300	2,300	2,500	2,500	2,500
	실적	2,844	2,874	2,856	2,954	-
중증장애인인턴제 수료인원 (예산집행)	목표	-	신규	200	200 (1,054)	200 (1,054)
	실적	-	-	241	240 (1,054)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3-3-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활성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도모.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수행기관(185개소)을 통해 상담, 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컨설팅, 기관평가, 홍보 등 실시.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19년 7,001명)
- 공공기관 연계 창업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에 카페, 매점 등 설치비를 지원(개소 당 1억원 이내)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도모('16년 19개소).
- 장애청소년 대상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 등을 통해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16년 6개소).
- 사업장 현장에서의 직무훈련을 통해 직업 적응성을 극대화하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First job)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취업지원('16년 시범사업).
 - 중증장애인 48명 참여하여 그중 22명 취업(취업률 45.8%)

□ 2017년도 추진내용

- 사업 사업수행기관(178개소)을 통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1월~12월)
-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19개소) 지원(1월~12월)
 -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설설치, 장비구입비 등 지원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 추진(2월~12월)
 -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장 배치 후 현장훈련 실시
- 장애청소년 직업재활지원사업 추진(6개소, 3월~12월)
- 직업재활 조사연구, 컨설팅, 기관평가, 교육, 홍보 등 실시(1월~12월)

나) 문제점

□ 해당사항 없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13~'16년 동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취업인원이 지속 증가('13년 6,571명 → '16년 7,001명)

□ 목표대비 달성도

- 중증장애인 취업률은 당초 목표치보다 약간 상회하여 달성

<표 2-81> 세부과제 3-3-5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중증장애인 취업률	목표	신규	21	22	22	22
	실적	신규	21	22.8	23.7	-

주: 취업률=취업인원/상당인원*100

□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시범사업*' 등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개발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확대 노력

지속.

- 지역사회 내 현장(요양병원, 병원, 마트, 단순노무직 등)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훈련이후 참여 장애인 중 고용 연계.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사업을 통해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 증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취업자수 증가, 맞춤형훈련 수료생 및 수료자 취업률 상승 등의 성과 달성.

□ 한계 및 문제점

-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한시적 일자리여서 지속성 결여와 민간일자리로의 전이율이 저조함. 의무고용제도는 대기업일수록 고용률이 낮은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비율에는 미달.

나) 발전방안(제언)

□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지원규모와 기한의 확대, 근무우수 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정규직화 등), 민간사업체로의 전이율 제고 필요.
- 장애인 고용 미이행기업에 대한 채용지원, 명단공표 등의 이행지원 강화와 함께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적극 홍보도 요구됨.
- 공공부문 중 장애인교원확대를 위한 특별시험제도 실시, 입직방법 다양화 검토 필요(예: 일정기간 이상 준교사 과정 후 정교사 전환, 4년제 대졸 장애인 중

비사범대 출신이나 교직 미이수자 대상 특별교직과정 수료후 자격증 발급 등).

4. (3-4) 장애인 고용인프라 확대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3-4-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센터 설치·운영

□ 사업내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에서 비즈니스 공간과 맞춤형 정보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주요내용(2016년)

○ (센터운영) 16개 지역센터 138개 보육실 및 2개 창업준비실로 확대 운영.

□ 추진내용(2017년)

○ BH 입주 및 졸업기업 사후관리를 통한 사후관리를 통한 창업성공율 제고

- 입주기업 성과평가를 통한 창업성과 부실기업 조기퇴출
- 수도권 지역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보육실 수급에도 대처

- 입주 및 졸업기업 대상 만족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도출된 문제점 대응 및 향후 개선방향 마련·연계·확충을 통한 장애인의 훈련기회 확대.
 - 현황조사(월간) 및 만족도조사(반기), 실태조사(연간) 등 주기적 조사
 - '16년 말 현재 입주기업 138개, 졸업기업 25개
- 입주 및 졸업기업에 CEO 교육,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연계지원

나) 문제점

□ 추진 시 애로사항

- (인력부족) 지역센터 매니저의 역할에 비해 근무인력 절대 부족, 지역센터 근무 인력 1명.
- (창업수요 대응 한계) 서울 및 수도권은 전체 장애인기업의 40% 이상이 위치하고 있으나 지역센터는 3개 센터(34개 보육실)에 불과.
 - 보육실 입주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신규 창업 수요 대응 한계.
 - `16년 서울 입주경쟁률: 4.6:1, 수도권 입주경쟁률: 2.8:1로 그 외 권역(1.6:1)에 비해 입주 어려움.
- (공장형 창업보육실 부재)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위한 공장시설 및 창고 공간 부족.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전국 16개 지역의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13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매년 평균 5.5%의 매출액이 상승함.
 - 입주2년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매출 및 고용인원 조사

□ 목표대비 달성도

- '14년 이후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여 달성.

<표 2-82> 세부과제 3-4-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입주기업 평균매출액 증가율(%)	목표	29	20	10	5	5
	실적	24	23	10	11	-

□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 장애인 특화 BI 운영을 통한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지원
- 공동구매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 BI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네트워크구축 및 연계강화

(3-4-2)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개별 장애특성 및 역량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내용

-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기초교육,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업종별 특화교육, 창업실패자 재기교육 등을 실시.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주요실적(2016년)

- 창업기초교육: 총 28회, 총 858명 신청 중 719명 수료(수료율 83%)
- 업종특화교육: 총 28회, 총 354명 신청 중 262명 수료(수료율 74%)
- 역량강화교육: 총 14회, 총 170명 신청 중 136명 수료(수료율 80%)
- 희망재기교육: 총 2회, 총 52명 신청 중 40명 수료(수료율 77%)

나) 문제점

□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직접지원제도가 부재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에 한계.
- 교육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자체 지원) 구축 필요.

□ 추진내용(2017년)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유형·시기별 맞춤형교육을 지원하여 창업역량강화 및 성공창업 촉진.
 - 창업기초, 업종특화, 역량강화, 재기교육의 4단계 맞춤형 교육 구성
 - 폐업교육 및 수출교육 과정 신설, 온라인 교육 병행(기초, 역량, 재기)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전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해 연평균 786명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제공 및 성공창업을 위한 지원사업연계 실시.
 - 연평균 100명 이상의 장애인 창업자 배출을 통해 장애인의 적극적 경제활

동 참여 유도.

□ 목표대비 달성도

○ 장애인창업자 영업지속률은 목표대비 달성도가 저조.

<표 2-83> 세부과제 3-4-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창업자 영업지속률(%)	목표	—	88	88	88	88
	실적	87.9	82	85.2	82.3	—

□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 창업생태계를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

- 창업 후 생존율이 저조한 과밀(생계형) 업종교육을 지양하고 기술형 창업 유도.
- 생계업종의 5년(요식업 17.7%, 도소매 26.7%) 생존율을 제조업(4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질서있는 폐업과정 유도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폐업교육 실시.
- 창업체험점포 시범운영 등 교육 후 창업지원의 연계 강화

(3-4-3)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학생에 대해 각 부처(고용부, 복지부, 교육부)간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를 통해 장애

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학교(직업교육), 직업재활 실시기관(보호고용), 자치단체(복지일자리), 기업(의무고용일자리) 등과 연계

□ 사업내용

- 장애학생 지원(워크투게더 센터)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고용·교육·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주요실적(2016년)

- 13개 권역별 워크투게더 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 확대.
 - 전국 장애학생 2,801명에게 진로설계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851명에게 사회성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
 - 장애학생 부모 98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취업동향, 취업사례,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학교 등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

□ 2017년도 추진계획

- 18개 권역별 센터*에서 장애학생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간)
 - (서비스 대상) 고등학교 2, 3학년, 전공과 재학생
 - (사업 규모) 장애학생 3,000명
 - (사업내용) 진로설계컨설팅,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 서울, 서울남부, 충북, 경기, 인천, 경기북부, 강원,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대전 등 13개 외에 5개소(울산,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추가 선

정하여 18개 공단지사에서 운영

- 교육청, 거점학교 등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17년 사업 협력방안 논의(연간).
- 복지관 등 복지분야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나) 문제점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등)

-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운영기관을 13개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다만, 워크투게더 센터의 확대를 통해 교육과 고용 연계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복지 분야와의 연계는 다소 부족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13년도부터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지속적으로 상승함.

□ 목표대비 달성도

- '13년 이후 워크투게더센터는 매년 목표대로 확대 설치.

<표 2-84> 세부과제 3-4-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워크투게더 센터 확대	목표	6	6	8	13	18
	실적	6	6	8	13	-

□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 (고객 접근성 강화) 기존 13개 거점센터에서 18개 거점센터로 사업을 확대하여 원거리 지역 장애학생의 접근성 한계에 따른 제한적 서비스 제공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인원 확대) '17년 장애학생 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이용 인원을 '16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많은 장애학생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4-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통계의 생산, 관리

□ 사업내용

- 장애인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통계조사 3종 실시
 -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매년)
 -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동태적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매년)
 - 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격년)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주요실적

○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 국내 통계조사 중 최대 장애인 표본 수(11,000명)를 조사하여 통계 정확성 제고 및 15개 장애유형별, 광역자치단체별 지표 산출.
- 잠재적 실업지표 산출을 통한 장애인 경제활동 현실 설명력 제고

○ 201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1차조사) 실시

- 장애인의 고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8년간의 1차 웨이브를 종료한 후, 새롭게 2차 웨이브 패널 4,577명을 구축하고 1차년도 본 조사 실시.

○ 2016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 우리나라 1인 이상 전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을 위한 기본조사(3만 개), 5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및 욕구 등의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6천개) 실시 완료.

□ 추진내용(2017년)

○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 2017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2차조사) 실시

나) 문제점

□ 해당사항 없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아우르는 통계조사 3종의 안정적 실시
 -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직 등 장애인 정책대상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 제공.

- 장애인 경제활동의 이동과정 및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시사점 제공.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측면 규모와, 실태,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보 제공.

□ 목표대비 달성도

- 초기 목표치대로 매년 달성

<표 2-85> 세부과제 3-4-4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통계조사 실시	목표	2	3	2	3	2
	실적	2	3	2	3	2

□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 통계조사 3종을 통한 정책 통계정보 생산 지속, 확대
 - 정책현안 관련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
 - 조사별 맞춤형 품질 고도화 전략 개발·운용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장애인 고용인프라 확대를 통해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센터가 138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장애인 창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장애인 고용 유관 기관 연계강화 목적으로 운영되는 워크투게더센터도 전국 공단지사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장애인 고용통계도 초기 계획대로 생산·활용되고 있음.

□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인기업지원센터의 경우 운영인력과 제조업 관련 공간 부족의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창업은 교육수료자에 대한 직접지원제도가 없어 교육 후 창업으로의 연결이 어려움.
- 워크투게더센터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와는 연계가 잘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직업재활시설)와의 협업은 잘 되지 않고 있음.

나) 발전방안(제언)

□ 장애인 고용인프라 보완 및 강화

-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 및 제조업(요식업 등에 비해 생존률이 2~3배) 공간확보를 위한 추가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장애인창업 교육수료자에 대한 직접지원제도 신설을 통해 교육 후 창업으로의 연결되도록 지원.
-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시 보건복지부(직업재활시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장애인고용관련 부처 간 시너지효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제7절 권익증진 분야

1. (4-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4-3-1)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구조의 효과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8·제59조의9
- (주요내용)
 -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 권리구제 및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복귀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주요 실적

- '16년 실적

- 장애인복지법 개정(17.1월 시행)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학대 사고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종합지원) 설치·운영 준비
 - 하위법령 마련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16.12).
-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시범 운영
 - 6개소(서울, 경기, 경북, 전남, 충북, 제주)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문조사원 양성(116여명) 및 실태조사 실시('16.7~12월)

○ 17년 계획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2월)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침 마련(3~5월)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하반기)
-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확대
 - ('16년) 6개소 → ('17년) 8개소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2~6월)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장애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하반기)

나) 문제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설 수는 산출목표에 해당됨. 몇 명의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와 상태 개선도,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 측정이 필요함. 따라서 구체적인 산출목표 및 성과목표 제시 필요(이용자 삶의 질 회복 정도, 센터 운영실적,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 실적, 사후관리 서비스 실적, 모니터링 실적 등).

-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성과목표가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17.2월)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17개시도, 17년 하반기)

□ 목표대비 달성도

- 성과목표 달성

<표 2-86> 세부과제 4-3-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개소수(개소)	목표				신규	1
	실적					1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추후 수정 사항 등)

-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체적이지 못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이후 이용자 삶의 질 회복 정도 등 구체적인 성과 파악 안 됨.

(4-3-2)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 시 법적 요건을 강화하여 입원 환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 사업내용

- (사업근거)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및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 (주요내용)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의 행동 제한 및 격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정신보건법상 요건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주요 실적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16.5.29. 전부개정, '17.5.30. 시행, 제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행동제한 및 격리가 가능하도록 함.
-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용역('16.8~11월), 관계단체 의견수렴('16.하반기), 시행령·시행규칙 부처안 확정('17.2.27), 입법예고('17.3.3~4.12)
- 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17.5.30.~)
 - － 치료를 목적으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변호인 또는 대리인, 업무담당 공무원, 인원옹호 담당기관의 담당자 등과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시행령 제53조)

나) 문제점

- 강제입원 금지, 탈원화 목표설정 등 보건의영역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다양화하는 정책 방향으로의 개정 필요.
-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목표 설정 필요.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16.5월 개정된 정신보건법('16.5.29. 공포, '17.5.30. 시행)에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의 행동 제한, 격리 등에 있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강화.

□ 목표대비 달성도

- 매년 성과목표에 따라 달성 증임.

<표 2-87> 세부과제 4-3-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정신보건법 개정	목표	—	정신보건법 국회 제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실적	—	달성	미달성	달성	달성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추후 수정 사항 등)

- 정신건강복지법령 시행(5.30.), 지침, 매뉴얼 등을 통해 개정사항 안내 및 행동 제한, 격리 시 개정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6월~).

(4-3-3)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 시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재난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피난 관리로 추가적인 피해 예방.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주요내용)

- 장애인 위기관리 방안 마련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한 사례 및 정책 연구
 - 연계기관 간 협조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시각화, 감각화 등)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 교육 및 예방교육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주요 실적

-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 2013년: 해외 사례 및 연구
 - 2014년과 2015년: 각각 1차, 2차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보급 및 교육

나) 문제점

- 1차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 실행한 후 미비점을 반영하여 2차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음.

- 사업대상이 거주시설 장애인으로 국한 됨. 재난 등의 위기상황은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하므로 지역사회 대응 방안을 포함해야 함.
- 향후 교육내용에 시설 안전상 거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30년 이상 노후시설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노력 필요.
-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로 정리된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보급 필요.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보급 및 교육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88> 세부과제 4-3-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확대	목표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1차)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2차)	매뉴얼 보급 및 교육	교육 및 보급 확대
	실적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수행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 개발	장애인 거주시설별 피난 매뉴얼 마련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추후 수정 사항 등)

- 재난 등의 위기상황은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함에도 사업대상이 거주시설 장애인으로 국한 됨.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들을 위하여 유형별 매뉴얼 개발 필요.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성과에 대한 달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계 및 문제점

-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되거나 성과목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은 경우도 있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나타났음.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인권전문가주의이고 반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발전방안(제언)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 학대에 다시 노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써 살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의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즉각적인 지원 이후에 심리적 안정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 거주시설 인권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로 알리기보다는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에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내부 교육 및 점검 수준으로 약화시키고 외부 전문 기관의 인권상

항 평가를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강제입원을 보다 제한하고, 탈원화 및 지역사회정착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등 보건영역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복지지원을 다양화하는 정책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함.
-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축물 안전,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설치에 대해 정부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 이행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4-4)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4-4-1)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과 장애의 이중 제약으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 기관연계(교육 의료 법률 취업 알선 등) 및 사례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One Stop으로 제공
-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지원 수행

- 장애여성 유형별 상담·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기초교육, 사회활동, 여가문화 등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고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어울림센터를 통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함.
- 보건, 법률, 의료, 교육, 고용 등 영역별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유형별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 강화하였음.
- 사회참여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운 영지침 개발 및 배포, 통합예산 확보 노력이 돋보임. 통합 및 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수렴한 과정이 돋보임.

나) 문제점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필요.
- 2016년 이후 여성가족부의 사회참여지원사업을 하던 어울림센터와 교육지원 사업 실시기관을 행정효율성 증대를 사유로 통폐합하였는데, 이 후 역량강화 지원센터로서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사업, 자조모임사업의 유형별 세부 사업목표 재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기관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 상담(정보제공), 역량강화교육, 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자조모임 및 멘토링 등을 수행

- 고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개인병원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사업 강화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기관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례관리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2016년 사업운영 실적으로 보면, 상담 사례관리 28,701명, 역량강화교육 55,188명, 지역사회연계서비스 17,427명, 자조모임 8,026명, 등 총 109,342명을 지원함.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89> 세부과제 4-4-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연차별 이용자 수	목표	52000	54000	56000	58000	60000
	실적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목표	89	93	95	-	
	실적	92.5	94.5	95	-	-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 사업 만족도	목표	-	-	-	90	
	실적	-	-	-	88.9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사업수행 중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고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에 추후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사업에의 이용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통폐합 이후 역량강화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예산확보 문제가 시급하며 사업운영기관 선정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외에 산출지표로 이용인원이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사업별 실인원, 연인원 산출이 필요함.

(4-4-2)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아동 및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회복 지원을 통한 권익보호

□ 사업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아동 및 여성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함.
 -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연차적 확충
 - 장애인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및 지원확대
 - 장애유형별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성폭력 피해자인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비지원을 확대함.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13년 6개소에서 '17년 기준 9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함.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응급키트 지원,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동행서비스 등 지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실행함.

나) 문제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사후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향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설치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또는 인권교육 등의 사전 예방차원의 사업지원이 필요함.
- 현행 성과지표는 시설확충 수에 대해서만 고려함. 실질적으로 피해여성이 어떤 적절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만족도 및 삶의 질 개선도 등이 성과지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성폭력 피해 장애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확대함.
- '17년에는 자립형 보호시설 신설을 통해 장애인 피해자의 자립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90> 세부과제 4-4-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보호시설 확충	목표	6개소	8개소	9개소	10개소	11개소
	실적	6	8	8	8	9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종사자는 여성과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종사자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개소수 확충 이외에 질적인 차원에서의 서비스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성과지표 외에 산출지표로 이용인원이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사업별 실인원, 연인원 산출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를 위한 사후조치적 성격의 정책시행 위주이므로 향후에는 예방차원의 사업추진이 필요함.
- 장애유형별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계획의 주요 내용에 있었으나 성과를 찾기 어려움. 향후 사업이행 필요함.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설을 위해 부지제공이 가능한 운영주체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향후 역량있는 운영주체 발굴과 예산확보가 선행될 수 있어야 함.

(4-4-3)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의사소통 및 자기옹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에게 진술을 조력하는 조력인 제도를 시행하여 조사 및 절차상의 과정에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함.

□ 사업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아동 및 여성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함.
 - ‘13년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14년 진술조력인 양성 및 제도 시행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법률 조력 서비스로 시작되었으나, ‘14년에 의사소통 및 자기옹

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절차상 진술조력으로 변경되었음.

- 진술조력인 양성 및 파견을 실시하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회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

나) 문제점

- 법률 조력인 제도에서 진술조력인 제도로 변경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축소할 듯함.
- 조력인 양성 및 배치지표에서 조력건수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음.
- 수요대비 실제 지원 실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는 지원자수만을 점검하고 있어서,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함.
-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조력건수로 설정하였는데, 결과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람을 조력하는 진술조력인의 지원실적으로 변경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과도한 사업추진실적이 집계됨.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진술 조력인 양성 및 배치 시행함.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91> 세부과제 4-4-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형사사법절차 진술조력 지원건수	목표	—	78	78		
	실적	—	386	727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실효성 있는 조력 활동 필요.
 - 상근진술조력인의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며, 장애 인지적인 조력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필요함.
- 진술조력인 지원건수로 목표측정시 장애분리통계를 구축하여 의사소통 및 자기옹호가 곤란한 피해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지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진술조력인의 지원수요대비 실제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사업추진시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두고 회의를 통해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나. 총평(발전방안)

가) 주요 성과 및 한계(미추진사업 등)

□ 주요성과

-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4-4-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확대와 (4-4-2)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4-4-3)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정했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4-4-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 기관연계(교육 의료 법률 취업 알선 등) 및 사례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그 성과 목표 달성률은 전 기간 동안 목표를 상회하였음.
- (4-4-2)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아동 및 여성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하였음.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인보호시설의 연차별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2013년 6개소 목표대비 6개소였는데 비해

2017년 11개소 목표대비 9개소만을 운영하는 등 목표 달성률은 감소하였음.

- (4-4-3)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아동 및 여성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하였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조력인을 통해 의사소통 지원을 받도록 한 사업이었으며, 진술조력인 양성 파견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결과를 나타냈음.

□ 한계 및 문제점

- (4-4-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확대: 여성가족부의 사회참여지원사업을 하던 어울림센터와 교육지원사업 실시기관 통폐합 이후 역량강화 지원센터로서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사업, 자조모임사업의 유형별 세부 사업 목표 재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통폐합 이후 역량강화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예산확보 문제가 시급하며 사업운영기관 선정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 되었음.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성과지표 외에 산출지표로 이용인원이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사업별 실인원, 연인원 산출이 필요함.
- (4-4-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장애인보호시설의 연차별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시행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폭력방지를 위한 사후조치적 성격의 정책 위주였음. 또한 장애유형별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계획의 주요 내용에 있었으나 성과를 찾기 어려움. 또한 현행 성과지표는 시설확충 수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여성이 어떤 적절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만족도 및 삶의 질 개선도 등이 성과지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4-4-3) 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을 위한 법률 조력인 제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진술조력인 제도로 변경하여 추진한 점이 한계였음. 성과실적을 보면 목표치를 수배이상 상회하는 실적이 보고되었으나, 이는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조력건수로 설정한 반면, 결과 보고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람

을 조력하는 진술조력인의 지원실적으로 변경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과다한 사업추진실적이 집계된 것으로 평가됨. 현 상황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장애인의 조력인이 필요한 수요대비 실제 지원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나) 발전방안(제언)

○ (4-4-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률 증진 및 사회참여의 저변을 늘리는 사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길 바람

-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예산확보를 보장해야 하며, 역량 있는 사업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며, 실질적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미용용 여성장애인 발굴 노력 및 실질적 취업지원 및 연계 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효과적인 현행 사업수행을 위해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사업, 자조모임사업의 유형별 세부 사업목표 재수립이 필요하며, 성과측정시 성과지표 외에 산출지표로 이용인원이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사업별 실인원, 연인원 산출이 필요함.

○ (4-4-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사업내용에 관한 확충이 필요하며 폭력방지 예방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음을 고려하길 바람.

- 향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설치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또는 인권교육 등의 사전 예방차원의 사업이 필요함.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설을 위해 부지제공이 가능한 운영주체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향후 역량있는 운영주체 발굴과 예산확

보가 선행될 수 있어야 함. 특히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는 구별되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지원시설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여러 성장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을 신설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에도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종사자는 여성과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종사자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실효성 있는 조력 활동을 위해 상근진술조력인의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 인지적인 조력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훈련이 필요함.
- 또한 장애유형별로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업무 매뉴얼로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4-4-3) 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을 위한 법률 조력인 제도의 이행을 위해서는 비장애인인과 분리된 장애구분 사업 시행 및 통계 구축이 필요하며, 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조력인 양성 및 사업수행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장애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한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 및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전문 조력인 양성과 배치가 필요함. 동시에 사업추진시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두고 회의를 통해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이행 및 성과 측정을 위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구분 및 장애분리통계를 구축하여 의사소통 및 자기옹호가 곤란한 피해여성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사업시행 이행 및 실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2. (4-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평가

(4-5-1)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3차 아·태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10년: 인천전략’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인천전략 추진체계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및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당사자단체,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국제협력추진단 회의를 연 2회씩 개최하고, 회의를 통해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인천전략을 이행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함.

나) 문제점

- 세부추진과제명은 인천전략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임에도 인천전략 10개 목표 중 하나인 국제협력만을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협력추진단 회의개최를 통해 인천전략 이행과 점검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인천전략의 국제협력 목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국제협력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겠으나 그 외 인천전략의 목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행해야함.
- 현행 성과지표인 연차별 추진계획상에 따른 달성도는 국제협력추진단 회의 횟수상으로는 달성했으나, 인천전략의 실질적 이행과 점검체제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인천전략 국제협력 추진단 회의 연2회 개최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92> 세부과제 4-5-1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인천전략 추진체계 구축	목표	추진단설립 세부목표수 립	이행상황평 가 및 보고	이행상황평 가 및 보고	이행상황평 가 및 보고	이행상황평 가 및 보고
	실적	인천전략 국제협력 추진단 회의 연2회 개최	인천전략 국제협력 추진단 회의 연2회 개최	인천전략 국제협력 추진단 회의 연2회 개최	인천전략 국제협력 추진단 회의 연2회 개최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인천전략이행사업과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4-5-1) 인천전략 이행 및 점검 체계 구축 과제와 (4-5-2)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추진 과제를 통합하여 시행하였음.
- 인천전략국제협력추진단의 활동을 통해서 인천전략 이행 및 점검체계를 구축 하고자 한 부분이 자체로서 한계였음.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이 실 제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기능강 화와 인천전략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관심이 요구됨.
- 정부의 인천전략 이행 노력을 살펴보면, 워킹그룹회의를 주관하고, 인천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했고, 인천전략 이행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 측정 데이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외에도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해 옴. 정부가 실제로 인천전략을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바꾸거나, 포 괄적인 인천전략 이행과 점진체계를 구축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4-5-2)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3차 아·태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10년: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장애관련 국제협력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아태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해 관련 국제개발협력 추진
-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유엔 에스캅과 협력체계 강화
- 민간협력을 통한 국제개발사업 역량 증진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정부는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함. 실질 추진 실적을 보면, 아태지역 개도국의 장애통계 구축사업, 인천전략 워킹그룹 회의 주도 및 참석, 아태 개도국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장애인단체 국제협력 역량강화 및 인천전략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국영문으로 운영함.

나) 문제점

- 4차 장애인정책 계획에서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한 내용과 이행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 아래의 주요성과에 제시된 국제협력사업은 4차계획의 성과목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아태지역 개도국의 장애통계구축 사업 지속 지원(유엔 에스캅)
 - － 아태지역 개도국의 장애통계구축을 위한 국가 컨설팅 지원(연중)
-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 참석
- 아·태 개도국 장애인 지원 사업
 - － 몽골 및 라오스, 인도네시아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민관 협력사업
 - － 인천전략 국제협력 추진단 회의 개최(2회)
 - － 장애인단체 국제협력 역량 강화: 장애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및 장애분야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전략 공모사업(국내 2개, 해외 1개 단체 지원)
- 인천전략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발간

□ 목표대비 달성도

- 4차 장애인정책 계획에서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한 내용과 이행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 위의 추진실적에 제시된 국제협력사업은 4차계획의 성과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나, 국제협력추진위원단을 설립하고 주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워킹그룹회의에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이행한 실적이 있다고 평가됨.

<표 2-93> 세부과제 4-5-2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인천전략 시행계획수립	목표	인천전략 시행계획수립	장애관련 ICT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지적 가이드 개발	에스캅 워크샵	에스캅중간 보고정리
	실적	목표 달성함	모름	일부 목표 달성함	목표 달성함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목표와 부합하지 않으나 다양한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이 추진되었기에 본 추진과제는 비교적 양호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지표설정시에는 성과목표를 기존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반영하는 지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람.
- 사업내용과 성과목표의 불일치는 (4-5-1)번 과제와 (4-5-2)번 과제의 통합적 수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인천전략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함.

(4-5-3) UN장애인권리 협약 비준 후속조치

1) 계획의 주요 내용(사업개요)

□ 사업목적

-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사업내용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별 이행 관련부처 및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관련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이행 추진체계 구축.
- UN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제협력 추진
 - 장애인권리협약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사항 보고 및 국내 이행 독려.

2)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실현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인권조약으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08.5) 및 국내 발효('09.1)됨.
- 최초 정부보고서는 협약 발효 후 2년내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후 4년마다 제출 의무가 있음. 국내 이행사항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2011년에 제출하였고 2014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를 받았음. 2016년에 최종견해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마련하였음.

나) 문제점

-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책임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함.
- 지표가 장애인권리협약의 후속조치를 과제로 삼고 있고 연차별 추진 목표도 회의 개최 및 연차별 절차상 보고서 제출 및 권고사항 검토 정도로 정하고 있어서, 실질적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점검이 아닌 행정 절차 점검에 머무름.

3) 주요 성과 및 미추진 사업

□ 주요성과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 1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함. 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별 이행 관련부처 및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관련 전문가 등이 국가보고서 심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함.
-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 목표대비 달성도

<표 2-94> 세부과제 4-5-3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13	14	15	16	17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목표	회의참석 및 의원면담/ 관계부처 협의체계 구축	장애인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참석/ 장애인권리 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관계부처회 의 반기별 개최, 국가보고서 심사권고사 항 검토	선택의정서 비준추진(부 처협의 2회) / 간담회 1회, 국내 관련법 모니터링	국회 협의, 국내 관련법 정비
	실적	일부 목표 달성	목표 달성함	일부 목표 달성함	일부 목표 달성함	-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이유(추후 수정 사항 등)

-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함.
- 추진과제와 성과목표가 행정적 절차 점검의 수준에 머무름. 향후 실질적인 인천전략 이행에 대한 검토로 지표가 수정되어야 함.

나. 총평(발전방안)

-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장애이슈에 대한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고, 2012년 에스캅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인천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업 실시 및 점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인천전략 국제협력 추진단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과 운영’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기능강화와 인천전략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관심이 요구됨.
- 정부의 인천전략 이행 노력을 살펴보면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목표와 부합하지 않으나, 워킹그룹회의를 주관하고, 인천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했

고, 인천전략 이행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 측정 데이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외에도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됨. 향후 지표설정시에는 성과목표를 기존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반영하는 지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람.

- 인천전략 추진 사무국을 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역할을 국제협력에 한정시키게 됨. 별도의 독립된 부서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함.
- UN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성과지표에 이행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국내 법 및 정책이 얼마나 UN장애인 권리협약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 수준으로 이행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부처간 협력이 필요함. 또한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상시적 이행 모니터링으로서 실질적 역할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제 3 장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1절 추진방향

제2절 비전 및 정책목표

제3절 분야별 추진과제 요약

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 기본방향 <

제1절 추진방향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평가에 근거한 발전방안 제시

- 제4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장애정책의 국제동향과 인구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발전과제를 도출함.
- 제4차 종합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김정희 외, 2016)와 중앙행정부처의 자체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과별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함.
- 이행상황이 부족한 과제를 점검하고, 측정가능하고 실질적인 연차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강화함.

□ 최근 인구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발전과제 도출

-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증가, 복지욕구의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장애인구 및 장애인 생활양태의 변화를 반영함.
- 다양성 존중 문화, 불평등 해소, 인공지능의 발전 등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의 확산 등과 같은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함.

□ 최근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

- 개별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접근권, 지원의사결정제도, 장애여성의 권리, 통합 교육에 대한 권리의 구체화와 같은 최근 국제적 장애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
 -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기반 서비스 등 이미 장애정책의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은 정책방향도 충실히 반영함.

○ 최근 제정된 장애 관련 법률 및 향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

- (최근 제정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제정, 2015. 11. 21. 시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 12. 29. 제정, 2017. 12. 30. 시행),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2. 29. 제정, 2016. 12. 30. 시행), 「한국수화언어법」(2016. 2. 3. 제정, 2016. 8. 4. 시행),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
- (제정 예상 법률)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 새정부 정책방향 및 장애계 제안을 고려한 계획 수립

○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에 의한 국정과제, 새정부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함.

-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의 세부 과제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이 제시됨.
-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 제시됨.
- 이 외에도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 강화, 장애인 공직채용 확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100% 보급,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술개발 추진 확대 등의 내용이 제시됨.

○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의 비전체계,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

-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보통의 삶(ordinary life) 실현”을 비전으로, ①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②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와 권리 보장, ③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④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함.
- 4대 정책목표에 따른 31대 중점과제, 73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제2절 비전 및 정책목표

1. 비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

□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 장애인의 탈시설 실현,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집약되는 장애계의 요구는 최근 사회적 논의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현 시대 장애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요구는 장애인의 생존권에서 출발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향후 5년간 장애정책의 비전은 자립생활의 실현을 핵심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장애인과 포용사회

-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은 사람들이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통합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van der Measen et al., 2005; 정해식, 2013 재인용).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시민권의 다양한 차원이 거부되는 현상이라면, 사회적 포용은 이러한 시민권이 현실화

되는 정도를 의미함(정해식, 2013).

- 이러한 사회적 포용 개념은 근대적 시민권에서 더 나아가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능동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선택과 통제권,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립생활이념과도 부합함(신유리 외, 2013).
- 또한 장애인의 자립이 ‘개인’의 차원이 아닌 포용적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비전을 제시하여, 단순히 의존에서의 탈피와 독립만을 강조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표 3-1>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차수	비전
제1차(1998~200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
제2차(2003~2007)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제3차(2008~2012)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제4차(2013~20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2. 정책목표

□ 종합 정책목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격차가 최소화될 때 그러한 자립생활이 가능할 것임.
- 사회적 포용성은 단지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이 시민권을 실현하고 있는 정도, 사람들이 노동시장과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서 주어진 권리는 향유하고 있는 정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포용되어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어(정해식, 2013), 이러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격차와 완화되는 것이 포용사회라 할 수 있음.

<표 3-2>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목표

차수	정책목표
제1차(1998~2002)	-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 실현
제2차(2003~2007)	-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제3차(2008~2012)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제4차(2013~2017)	-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분야별 정책목표

○ (복지서비스)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지원”

- 복지서비스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3개 중점과제로 ①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통합성 제고, ②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③ 발달장애인서비스의 내실화 및 실질화를 제시함.
- 또한 이러한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함.

○ (건강·체육) “장애인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스포츠권 확보”

- 건강·체육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5개 중점과제로 ①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 ②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③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④ 운동참여 환경 개선, ⑤ 참여형 장애인스포츠 복지 모델 실현을 제시함.
- 또한 이러한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함.

○ (보육·교육)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보육·교육격차 해소”

- 보육·교육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3개 중점과제로 ①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②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 ③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제시함.
- 또한 이러한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7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함.

○ (사회참여)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

- 사회참여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6개 중점과제로 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②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③ 무장애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통합이용환경 구축, ④ 실질적인 만족도 증대를 위한 이동권 보장, 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편의증진 보장, ⑥ 의사소통 지원강화를 제시함.
- 또한 이러한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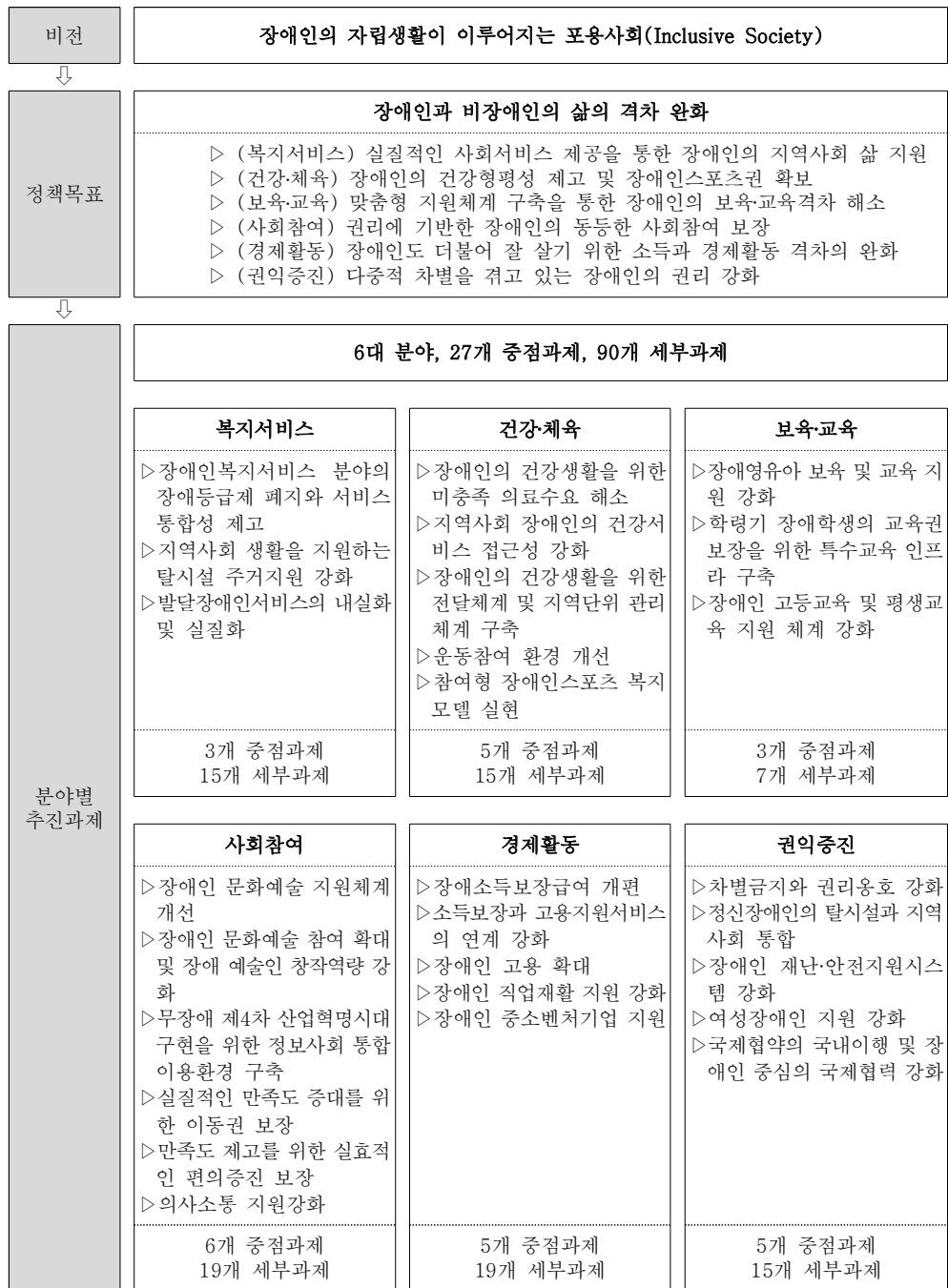
○ (경제활동)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소득과 경제활동 격차의 완화”

- 경제활동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5개 중점과제로 ① 장애소득보장급여 개편, ②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③ 장애인 고용 확대, ④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강화, ⑤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제시함.
- 또한 이러한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함.

○ (권익증진)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 권익증진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5개 중점과제로 ① 차별금지와 권리 옹호 강화, ②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 ③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④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⑤ 국제협약의 국내이행 및 장애인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함.
- 또한 이러한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함.

[그림 3-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체계도(안)



제3절 분야별 추진과제 요약

1. 국정과제 및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반영 정도

□ 국정과제 및 장애인단체 제안과제 반영의 의미

- 이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는 지난 연구와 달리 최종 종합 계획 수립 전에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었고, 장애인단체가 마련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도 제시되었음.
- 국정과제의 반영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정과제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단체의 제안과제 반영은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정도를 높이는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를 충실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려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전체 90개의 세부과제 중에서 국정과제 혹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가 반영된 과제는 73개(81.1%)로 상당히 높은 반영률을 보여줌. 6개 정책 분야별로 살펴볼 때에도 대체로 고르고 높은 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3-3> 국정과제 및 장애인단체 제안과제 반영 정도

분야	총 세부과제 수	국정과제 반영 과제		장애인단체안 반영 과제		합계	
		과제 수	반영률	과제 수	반영률	과제 수	반영률
복지서비스	15	10	66.7	12	80.0	13	86.7
건강·체육	15	9	60.0	7	46.7	11	73.3
보육·교육	7	6	85.7	4	57.1	7	100.0
사회참여	19	6	31.6	13	68.4	14	73.7
경제활동	19	11	57.9	13	68.4	17	89.5
권익증진	15	3	20.0	11	73.3	11	73.3
계	90	45	50.0	60	66.7	73	81.1

주 1) 반영률은 반영 과제 수를 총 세부과제 수로 나눈 비율

2) 국정과제 반영 과제와 장애인단체안 반영 과제는 중복될 수 있음(합계에서는 중복 제거)

□ 국정과제의 반영 정도

- 90개의 세부과제 중에서 국정과제의 내용이 반영된 과제는 절반(50.0%)인 45개임.
- 국정과제에서 장애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복지, 건강, 고용 영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11개), 복지서비스(10개), 건강·체육(9개) 분야에서 관련 과제가 많았음.

□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반영 정도

- 총 90개의 세부과제 중에서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이 반영된 과제는 2/3인 60개 과제에 달함. 장애인단체의 제안과제는 장애인의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있고 73개에 달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반영된 과제의 수가 많았음.
- 국정과제 반영 과제가 많았던 경제활동, 복지서비스, 건강·체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참여(13개), 권익증진(11개) 영역에서의 반영과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2. 복지서비스 분야

□ (1-1)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통합성 제고

- 중점과제 1-1은 장애판정 개편, 서비스 확대, 전달체계 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6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되었음.
- 6개 세부과제 중 국정과제의 내용이 반영된 과제는 4개이고, 장애인단체 제안과제가 반영된 과제는 4개임. 1개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과제임.

□ (1-2)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 중점과제 1-2는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4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4개 세부과제는 모두 국정과제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이 반영된 것임.

□ (1-3) 발달장애인서비스의 내실화 및 실질화

○ 중점과제 1-3은 발달장애인서비스를 다루고 있으며, 총 5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이 중 국정과제가 반영된 과제는 2개, 장애인단체 제안과제가 반영된 과제는 4개로 나타났으며, 1개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과제임.

<표 3-4> 복지서비스 분야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1-1)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통합성 제고	(1-1-1)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
	(1-1-2)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1-1-3) 장애유형 세분화와 장애범주 확대 ●
	(1-1-4) 활동지원서비스 급여확대 및 내실화 ★●
	(1-1-5)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
	(1-1-6) 서비스전체 급여체계와의 단계적 통합
(1-2)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1-2-1)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탈시설·자립생활전환지원체계 마련 ★●
	(1-2-2)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개발 및 거주서비스 기능재편 ★●
	(1-2-3)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및 지역사회로의 이전 ★●
	(1-2-4) 주택서비스 지원 확대 및 자립형 주거모델 제시 ★●
(1-3) 발달장애인서비스의 내실화 및 실질화	(1-3-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
	(1-3-2) 발달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에 조응하는 보호·돌봄 체계 강화
	(1-3-3)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1-3-4)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지원 ●
	(1-3-5)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 ★●

주: ★ 표시는 국정과제 반영 과제, ● 표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 반영 과제

3. 건강·체육 분야

□ (2-1)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

- 중점과제 2-1는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에 관한 내용으로 3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이 중 1개 세부과제가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2개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과제임.
- (2-2)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 중점과제 2-2는 건강권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3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이 중 2개 세부과제가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를 반영한 세부과제도 2개임.
- (2-3)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 중점과제 2-3은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역 관리체계의 내용으로 3개의 세부과제가 도출됨.
 - 이 중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한 과제는 2개이고, 그 중 1개 과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도 반영함. 1개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과제임.
- (2-4) 운동참여 환경 개선
- 중점과제 2-4는 장애인의 운동 관련 환경의 개선을 다루고 있으며, 3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3개 세부과제는 모두 국정과제 및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를 반영한 것임.
- (2-5) 참여형 장애인스포츠 복지 모델 확산
- 중점과제 2-5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이며, 3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이 중 국정과제를 반영한 과제가 1개,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를 반영한 과제가 1개이며, 1개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과제임.

<표 3-5> 건강·체육 분야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2-1)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	(2-1-1) 소아재활서비스 강화 ★
	(2-1-2) 여성장애인 건강서비스 체계와 인프라 확충
	(2-1-3) 중증 및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건강서비스 체계와 인프라 확충
(2-2)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2-2-1)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제공 ●
	(2-2-2) 장애인 건강주치의(건강관리 의사) 제도 도입 ★
	(2-2-3)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실시 ★●
(2-3)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2-3-1)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을 통한 지역단위 건강관리체계구축 ★
	(2-3-2) 보조기기 지원 및 관리 체계 확대 ★●
	(2-3-3)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재활의료수가 현실화
(2-4) 운동참여 환경 개선	(2-4-1) 간이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공간 확보 ★●
	(2-4-2)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시군구 단위 배치 확대 ★●
	(2-4-3) 국민체력 100 사업연계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지역 거점화 ★●
(2-5) 참여형 장애인스포츠 복지 모델 확산	(2-5-1)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
	(2-5-2)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
	(2-5-3) 클럽-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체육 연계모델 정착

주: ★ 표시는 국정과제 반영 과제, ● 표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 반영 과제

4. 보육·교육 분야

□ (3-1)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 중점과제 3-1은 생애주기에서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을 다루고 있으며, 2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2개의 세부과제는 모두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3-2)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

○ 중점과제 3-2는 생애주기에서 학령기의 교육을 다루고 있으며, 3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3개의 세부과제 모두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개 과제

에는 국정과제의 내용이 반영됨.

□ (3-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

- 중점과제 3-3은 생애주기에서 성인기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다루고 있으며, 2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2개 세부과제 모두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1개 과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함.

<표 3-6> 보육·교육 분야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3-1)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3-1-1) 장애영유아 보육 지원 체계 고도화 ★
	(3-1-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체계 강화 ★
(3-2)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	(3-2-1) 특수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
	(3-2-2) 장애학생 특성별 교육지원 강화 ●
	(3-2-3) 장애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계 구축 ★●
(3-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	(3-3-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
	(3-3-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주: ★ 표시는 국정과제 반영 과제, ● 표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 반영 과제

5. 사회참여 분야

□ (4-1)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 중점과제 4-1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며 1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1개 세부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것임.

□ (4-2)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 중점과제 4-2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7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이 중 2개 과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1개 과제는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함. 4개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과제임.
- (4-3) 무장애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통합이용환경 구축
 - 중점과제 4-3은 정보접근성을 다루고 있으며 3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3개의 세부과제 모두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2개 과제는 국정과제의 내용이 반영됨.
- (4-4) 실질적인 만족도 증대를 위한 이동권 보장
 - 중점과제 4-4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내용으로 4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4개 세부과제 모두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1개 과제는 국정과제의 내용이 반영됨.
- (4-5)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편의증진 보장
 - 중점과제 4-5는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2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2개 세부과제 모두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1개 과제는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4-6) 의사소통 지원강화
 - 중점과제 4-6은 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2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2개 세부과제 모두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표 3-7> 사회참여 분야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4-1)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4-1-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확립
(4-2)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4-2-1) 문화예술 향수지원 사업비 규모 확대 및 공모사업 비중 확대
	(4-2-2)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편의시설 조성 사업
	(4-2-3)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4-2-4) 장애인 예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 ●
	(4-2-5) 장애 예술인/예술단체 창작 공간 확충 사업 ●
	(4-2-6)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
	(4-2-7) 대학로 장애인 예술 전용 공연장 조성 사업
(4-3) 무장애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통합이용환경 구축	(4-3-1) ICT제활용합 기반의 신정보격차 해소 추진 ★●
	(4-3-2)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지능정보사회 참여확대 ●
	(4-3-3)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
(4-4) 실질적인 만족도 증대를 위한 이동권 보장	(4-4-1) 교통수단 이동지원 강화 ★●
	(4-4-2) 이동 편의보장 확대 ●
	(4-4-3) 장애인주차편의 확대 ●
	(4-4-4)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
(4-5)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편의증진 보장	(4-5-1) 실효적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4-5-2)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
(4-6) 의사소통 지원강화	(4-6-1)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및 참정권 보장 강화 ●
	(4-6-2) 시청각, 뇌병변 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공과 훈련 ●

주: ★ 표시는 국정과제 반영 과제, ● 표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 반영 과제

6. 경제활동 분야

□ (5-1) 장애소득보장급여 개편

○ 중점과제 5-1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장애소득보장급여를 다루고 있으며, 4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이 중 2개 세부과제는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1개 과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함. 나머지 1개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과제임.

□ (5-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 중점과제 5-2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4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4개 세부과제 모두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1개 과제는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있음.

□ (5-3) 장애인 고용 확대

- 중점과제 5-3은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다루고 있으며, 6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6개 세부과제 모두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4개 세부과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함.

□ (5-4)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강화

- 중점과제 5-4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3개의 세부과제가 도출됨.
- 이 중 2개 세부과제는 국정과제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세부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하였음.

□ (5-5)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 중점과제 5-5는 창업 등 장애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2개의 세부과제가 제안됨.
- 2개 세부과제 모두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표 3-8> 경제활동 분야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5-1) 장애소득보장급여 개편	(5-1-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지급대상 개편 ★
	(5-1-2)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통합 및 현실화 ★
	(5-1-3)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체계 개편
	(5-1-4)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대상 확대 ●
(5-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5-2-1) 근로능력평가 도입 및 전달체계 구축 ★●
	(5-2-2) 장애인임금보조제도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
	(5-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
	(5-2-4) 국민연금의 재활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직장복귀 촉진 ●
(5-3) 장애인 고용 확대	(5-3-1) 정부·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
	(5-3-2)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 ★●
	(5-3-3) 장애인 맞춤형훈련 활성화 ★
	(5-3-4)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5-3-5)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지원 ★●
	(5-3-6)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지원 ★
(5-4)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강화	(5-4-1) 직업재활시설 규모화와 운영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증대 ★●
	(5-4-2) 장애인통합직업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5-4-3) 우선구매제도의 내실화 ★●
(5-5)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5-5-1) 장애인 창업지원 ●
	(5-5-2) 장애인 기술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

주: ★ 표시는 국정과제 반영 과제, ● 표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 반영 과제

7. 권익증진 분야

□ (6-1) 차별금지과 권리옹호 강화

○ 중점과제 6-1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옹호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5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이 중 2개 과제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1개 과제가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3개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과

제임.

□ (6-2)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

- 중점과제 6-2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탈시설을 다루고 있으며, 2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이 중 1개 세부과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세부과제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과제임.

□ (6-3)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시스템 강화

- 중점과제 6-3은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2개 세부과제 모두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1개 세부과제는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함.

□ (6-4)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 중점과제 6-4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며, 3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3개 세부과제 모두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1개 세부과제는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함.

□ (6-5) 국제협약의 국내이행 및 장애인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 중점과제 6-5는 국제협약의 이행과 장애인의 국제협력을 내용으로 하며, 3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됨.
- 3개 세부과제 모두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표 3-9> 권익증진 분야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6-1) 차별금지과 권리옹호 강화	(6-1-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및 법률 내 차별적 용어 개정
	(6-1-2) 장애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6-1-3) 지원의사결정제도 제도화 ●
	(6-1-4) 학대피해장애인 지원강화 ★●
	(6-1-5)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6-2)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	(6-2-1) 차별적인 법령 폐지 및 개정
	(6-2-2)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자립대책 마련 ●
(6-3)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6-3-1) 재난 시 장애인 위기상황 대처 방안 마련 ★●
	(6-3-2)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 구축 ●
(6-4)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6-4-1) 여성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계획 수립 ★●
	(6-4-2)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6-4-3)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6-5)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및 장애인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6-5-1)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
	(6-5-2)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및 SDG 모니터링 강화 ●
	(6-5-3) 장애인 국제협력 분야 민관협력 및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강화 ●

주: ★ 표시는 국정과제 반영 과제, ● 표시는 장애인단체 제안과제 반영 과제

제 4 장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제1절 복지서비스 분야

제2절 건강·체육 분야

제3절 보육·교육 분야

제4절 사회참여 분야

제5절 경제활동 분야

제6절 권익증진 분야

4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 분야별 추진과제 <

제1절 복지서비스 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통합성 제고

○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음. 첫째, 서비스의 분절성, 둘째, 서비스접근의 불공정성임.

– 보건복지부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처럼 2013년 1조 1,134억 원 대비 2016년 1조 9,090억 원으로 무려 71% 증가한 분야가 없을 정도로 증가 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당사자가 느끼는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음. 이처럼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점에 의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첫째,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에게 동종의 서비스를 여러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들 간 유기적 연계성이 높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상이하여 서비스가 중복 또는 단절되는 분절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재정지원과 함께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정부에게 재정지원 및 포괄적인 지침만 제시하여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사업에 대한 진입경로가 분절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인 장애인이 다양한 진입경로를 찾아 헤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장애인당사자는 1개의 윈스톱 진입창구가 아닌 서비스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진입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니

면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정보력이 있을지라도 국고보조사업 중 거주시설사업과 대부분의 지방이양사업은 공급자인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선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접근의 불공정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임.

○ 이와 같은 서비스의 분절성과 서비스 접근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등급 단계적 폐지를 기반으로 장애인에게 원스톱 서비스 진입창구를 제공해주는 방향으로의 공평한 접근성 강화와 이용자의 주도성과 유연성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의 급여체계의 통합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평한 접근성과 통합성을 제고시켜주는 대안적 모델로서 현재 영국, 독일,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개인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삼아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및 주택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였으며, ‘탈시설-자립생활정책’ 성과로 시설의 소규모화 비율의 증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개소 수 확대를 제시하였음.

- 전반적으로 제4차 종합계획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에서 수립하였던 성과지표는 대체로 달성하였음. 예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에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거주시설 553개 중 209개(37.8%)만이 30인 이하 소규모시설이었으나, 2016년 말 현재 623개 중 301개(48.3%)로 10.5%p가 증가하였음. 반면에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은 2012년 말 85개(10,040명)에서 53개(6,468명)로 32개 37.6%p가 줄어든 것 등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전체 시설거주 장애인의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실질적인 탈시설을 이루었다고는 볼 수 없음. 예를 들어 2012년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제외) 이용인 수는 26,442명이었으나, 2016년 말에는 26,461명으로 오히려 18명 증가하였으며,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면 증가된 이용인 수가 340명임.

<표 4-1> 장애인거주시설 및 이용자 현황(2010~2016)

(단위: 명, 개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인원		28,216	29,441	30,640	31,152	31,406	31,222	30,980
	시설 수		1,144	1,247	1,348	1,397	1,457	1,484	1,505
시설규모별 구분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 , 장애인영양아)	30인 이하	인원	2,029	2,780	4,330	5,140	5,786	6,234	6,853
		시설 수	110	145	209	243	271	296	301
	31인~99인	인원	11,664	12,071	12,072	12,146	13,026	12,957	13,140
		시설 수	253	258	259	255	267	267	269
	100인 이상	인원	10,702	10,494	10,040	9,668	8,244	7,584	6,468
		시설 수	89	87	85	83	69	63	53
	인원		24,395	25,345	26,442	26,954	27,056	26,775	26,461
	시설 수		452	490	553	581	607	626	623
단기	인원		1,292	1,393	1,438	1,432	1,495	1,548	1,616
	시설 수		103	119	128	131	137	141	146
공동	인원		2,529	2,703	2,760	2,766	2,855	2,899	2,903
	시설 수		589	638	667	685	713	717	736

주: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2012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되었음. 이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에는 위 2개의 시설 수와 이용인 수는 제외하고 거주시설 및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아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7)

- 한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임. 2015년 현재 거주시설 전체 이용자 31,222명 중 수급자는 28,218명으로 90%에 육박하고 있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즉, 대다수 거주시설 이용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시설을 통한 자립을 꿈꾸거나 실제로 자립을 실현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시설거주 장애인이 탈시설 자립생활로 전환하기 위한 전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거주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지원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여전히 수용보호의 인상을 주고 있는 거주시설의 이미지를 ‘지역사회’ 거주시설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역사회 소규모 중심으로 거주시설을 재편성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수급자·무연고자 중심에서 ‘거주서비스’에 대한 욕구’ 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즉 거주시설 이용 신청자의 장애정도, 가족상황,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이 과정을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들을 새로이 편성하고, 거주시설의 형태를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서비스 급여 종류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함께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와상 상태인 최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유형의 소규모시설, ‘집중지원시설’의 신규 설치가 필요함.

○ 한편 재가장애인의 경우 주거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며, 주거환경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조사실태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장애인가구 비율이 8.6%로 일반가구 5.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인 가구는 단독주택거주비율이 아파트보다 높아 비장애인가가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은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국토교통부, 2016).

– 정부는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하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쾌적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부담이 커서 장애인은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또 정부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소득계층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은

매우 부족하여 여전히 대다수 장애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 이에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장애인 할당률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 발달장애인의 취약성과 적극적인 복지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 발달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 대비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6), 매년 발달장애인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유형에 비하여 사회활동 및 참여가 극도로 제한적이고 성인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전체 장애인 중 노동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5%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약 10%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 특성 상 지속적인 돌봄 및 지원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는 집단임(최복천 외, 2016).
-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왔으며, 2014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이 부여되었음.

□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내실화 필요성

- 지난 2015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동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였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욕구에 조응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그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구현되어 왔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2. 추진계획

가.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통합성 제고

□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를 근거로 동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국정과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 체계 도입,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음.
- 장애인단체에서 제시한 제5차 종합계획(안)에서도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장애범주 확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권리보장,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였음.

(1-1-1)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 추진내용

-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서비스 욕구, 서비스 필요도, 생활환경, 사회참여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급여량을 결정할 수 있는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함.
 - 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진입기준으로 작동했던 급여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진입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함.

-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같은 바우처 서비스와 거주시설 입소 등과 같은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부터 일차적으로 장애등급 적용을 완전히 배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함.

○ 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2단계로서 중증과 경증의 구분도 없애고 장애심사 및 등록 제도를 기반으로 한 종합판정시스템을 정착시켜 시행함.

- 단계적 폐지 2단계로서 중증과 경증의 구분조차 없애고, 오직 장애인등록을 위한 심사제도만 운영하며 서비스는 종합판정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변경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2> 세부과제 1-1-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6등급 체계 유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단계 시행: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좌동	-좌동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단계 시행: 중증과 경증 구분을 없애고 장애심사 및 등록제도만 존재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 -종합판정도구 개발 및 모의적용 -복지서비스 분야 장애등급 적용 완전배제를 위한 준비	-종합판정도구 본 적용 -복지서비스분야 장애등급 적용 완전배제 시행	-중증과 경증 구분을 없애는 데 필요한 법령 및 인프라 정비 -종합판정도구 수정 및 모의적용	-좌동	-종합판정도구 본 적용

(1-1-2)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추진내용

-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장

애인복지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함.

-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상담, 통합신청, 종합판정조사를 수행하는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함.

- 현재 진행 중인 보편적 전달체계로서의 행정복지센터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진입창구의 대안적 모델로 활용하여 본 센터에서 맞춤형 상담, 통합신청 및 종합판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편 및 구축함.

○ 읍면동 단위에서 상담, 신청 및 종합판정조사를 수행한다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의 역할을 지원해 주는 별도의 전문성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시군구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팀 밖에 없음

- 하지만 본 조직의 경우 행정지원팀이기 때문에 읍면동 복지센터의 대민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과 인력이 충분치 않음. 뿐만 아니라 향후 광역단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기관, 보조기기센터 등이 설립되는데, 시군구 단위에서 광역단위에 설치된 다양한 기관들과의 접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조직이 없음.

- 따라서 향후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맞물려 읍면동 복지센터와 광역단위 센터들과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수행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함.

- 시군구 단위에 별도로 가칭 ‘장애인맞춤형서비스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 팀을 시군구 사회복지과 내에 설치하는 것과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설치하는 것, 양자를 놓고 연구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3> 세부과제 1-1-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행정복지센터 기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비(법령, 예산, 인력, 전산 등)	-행정복지센터 기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전국적 시행	-좌동	-좌동	-좌동
	-시군구 가칭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팀' 연구용역	-시군구 가칭 '장애인 맞춤형서비스팀' 모형결정 및 시범사업 실시	-좌동	-시군구 가칭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팀' 본 사업 실시

(1-1-3) 장애유형 세분화와 장애범주 확대

□ 추진내용

- 장애유형 세분화로 기존 지체장애 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척수장애, 근육장애, 저신장 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인정함.
 - 척수장애, 근육장애 및 저신장 장애의 경우 장애발생 원인,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의 유형 및 종류, 필요한 지원의 유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체장애 안에서 동일한 장애유형으로 받아들여졌음.
 - 향후 상기 3개의 장애유형을 지체장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함.
- 장애범주 3단계 확대로 치매, 에이즈 및 암을 새로운 장애유형에 포함함.
 - 장애와 유사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손상을 동반함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현저한 제약에 직면하는 대표적인 질병인 치매, 에이즈 및 암을 새로운 장애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4> 세부과제 1-1-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척수, 근육, 저신장 장애 별도 분리방안 연구 시행 및 법적 근거 마련	-척수, 근육 및 저신장 장애 지체장애에서 분리 시행	-치매, 에이즈, 암을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시행 및 기반마련(예산추계 및 법적근거 마련)	-좌동	-치매, 에이즈, 암을 3단계 장애범주 확대 포함 및 시행

(1-1-4) 활동지원서비스 급여확대 및 내실화**□ 추진내용**

- 주간활동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 급여를 지급함.
 -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간활동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함.
-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
 - 현재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욕구보다는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 상태를 근거로 급여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경우 좀 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욕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판정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함. 이를 위해 현행 4등급의 인정 등급을 최대한 세분화시켜서 맞춤형 급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함.
- 최중증 독거장애인 및 독거에 준하는 최중증 장애인 상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활동지원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 수 및 소요예산을 추계함.
- 최중증 독거장애인 및 독거에 준하는(65세 이상 부모와 살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 또는 최중증 장애인 부부 끼리 사는 경우 등) 최중증 장애인 상시 돌봄을 위해 24시간 활동지원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4시간 활동지원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 수와 소요예산을 추계함.

○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개선함.

-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을 반영하여 서비스 단가를 상향조정시킴으로써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관리를 도모함.

○ 활동지원 이용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검토함.

-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함.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활동지원제도 간 선택권 보장을 강화함.

- 현행 65세가 도래한 장애인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제도 간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시범 적용함.
- 특히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활동지원제도 접근조차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발생 시점에 상관없이 두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대안을 마련함.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추계,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5> 세부과제 1-1-4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및 추가급여 지원 -서비스 단가 개선 -중증장애인 맞춤형 급여 제공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중증장애인 맞춤형 급여제공 시범사업 실시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자, 예산 소요 추계	-중증장애인 맞춤형 급여제공 본사업 실시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지원 시범사업 실시	-활동지원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선택권 보장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서비스 본인부담금 인하 검토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지원 시범사업 실시	-활동지원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간 선택권 보장을 위한 도입 검토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지원 본사업 실시

(1-1-5)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추진내용**

- 서비스 대상자를 현행 6개 장애유형에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함.
 - 현재 발달장애서비스는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및 뇌병변, 총 6개 유형의 장애아동만 서비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15개 전 장애유형으로 대상자를 확대함.
- 서비스 진입기준으로 작동했던 소득기준 폐지 및 월 급여량을 확대함.
 - 현재 서비스 진입기준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가 설정되어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소득기준을 폐지함.
 - 또한 월 최대 22만원인 급여량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 세부과제 1-1-5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득기준 폐지 및 대상자 확대	-전 장애유형 확대	-급여량 확대	-좌동	-좌동

(1-1-6) 서비스전체 급여체계와의 단계적 통합**□ 추진내용**

- 장애인복지서비스 유형 중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 중 장애인의 주도성과 유연성을 제고시키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바우처와 현물급여 중심으로 단계적 통합을 시도함. 또한 지방이양사업 중 이용료를 장애인 또는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과 정신장애인 서비스 영역도 통합대상으로 검토함.
 - 1단계 통합: 장애아동 활동지원서비스 및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장애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 통합.

- 2단계 통합: 1단계 장애아동 양육지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통합, (성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야간순회서비스 통합.
- 3단계 통합: 2단계 통합에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통합(보조기기 교부사업 현물급여에서 바우처지원으로 전환).
- 4단계 통합검토: 3단계 통합에 주간보호, 단기거주 및 공동생활가정 이용료 통합(3개 시설 이용료를 3단계 통합 바우처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주간보호, 단기거주 및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서비스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함) 또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영역 통합과 개인예산제도 도입 검토.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7> 세부과제 1-1-6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1단계 통합 시범 적용	-1단계 통합 전면 적용 -2단계 통합 시범 적용	-2단계 통합 전면 적용 -3단계 통합 시범 적용	-3단계 통합 전면 적용	-4단계 통합 및 개인예산제도 도입 검토

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한국장애포럼(Korea Disability Forum)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우려 분야로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참여가 꼽히고 있음.

- 보고서 37호에서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탈시설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38호에서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 한편 국정과제에서는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거주 장애인 주거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인·어르신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등을 제시하였음.
- 27개 장애인단체에서 공동으로 제시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기초연구’에서도 ‘탈시설 및 자립지원강화’와 ‘주거지원제도 개선’을 중점과제로 삼아, ‘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장애인 주거 안정성 강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 탈시설정책 추진방향

○ 개요

- 과정으로서의 탈시설과 완전한 탈시설 정책 동시 시행
- 궁극적으로 ‘완전한 탈시설’ 지향

○ 탈시설 개념 구분

- 완전한 탈시설
 - 시설에 거주하던 사람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변화를 추구함.
 - 공간에 대한 점유 권한이 장애 당사자에게 있음.
- 과정으로서의 탈시설
 - 대형 시설에 거주하던 사람이 일반 가정집과 같은 형태의 주택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후 직원의 역할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변화를 추구함.
 - 공간에 대한 점유권한이 운영주체(기관)에 있음.
- 과정으로서의 탈시설에는 ‘건물과 공간(A), 재정권한(B), 직원역할(C)’ 등 3

가지 구성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의 현황과 탈시설 지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8> 과정으로서의 탈시설 구성요소: 현황 및 지향점

구성요소	현황	탈시설 지향점	
건물과 공간 (A)	<A-1> - 학교처럼 생긴 건물 - 1실에 5명 거주 - 10실에 정원 50명	<A-2> - 일반 아파트 등 일반 가정집 - 한 아파트에 5명 이하 거주 - 10채의 아파트를 하나의 시설로 등록	
재정권한 (B)	<B-1> - 시설에서 보장수급비 수령 - 입소자로 보장시설 수급비 수령	<B-2> - 본인 명의로 수급비 수령 - 일반적인 개인별 수급비 동일하게 수령	
직원역할 (C)	<C-1> - 24시간 직원이 보호 책임	<C-2> - 밤에만 직원이 보호 책임 - 낮에는 활동보조 이용 가능	<C-3> - 직원 보호책임 없음 - 밤낮구분 없이 활동보조 이용 가능

- 탈시설 지향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이 ‘과정으로서의 탈시설’의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됨.

<표 4-9> 4가지 차원에 따른 탈시설 형태

구분	내용
1차원 탈시설	- 건물과 공간을 바꾸는 탈시설. 소규모화 - <A1 → A2, B1/C1은 변함없음>
2차원 탈시설	- 건물과 공간, 재정권한을 바꾸는 탈시설. 그룹홈으로 재편 - <A1/B1 → A2/B2, C1은 변함없음>
3차원 탈시설	- 건물과 공간, 재정권한, 직원역할 일부 바꾸는 탈시설. 과도적 탈시설 - <A1/B1 → A2/B2, C1→C2>
4차원 탈시설	- 건물과 공간, 재정권한, 직원역할 모두 바꾸는 탈시설. 적극적 탈시설 - <A1/B1 → A2/B2, C1/C2 → C3>

주: 4차원으로 갈수록 탈시설 정도가 높지만, ‘4차원 탈시설’ 역시 공간에 대한 점유권한이 당사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한 탈시설로 볼 수 없음.

○ 실행 방법

- 완전한 탈시설

- 주택서비스 지원 확대: 다양한 주택임대 제도 개발 등.
- 거주를 돕는 지원주거 모델 개발.

－ 과정으로서의 탈시설

- 1차 목표: 건물과 공간을 바꾸고, 수급비의 권한을 당사자에게 주는 2차원 이상 탈시설 추진.
- 2차 목표: 3차원 탈시설과 4차원 탈시설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거주모형 도입(거주공간의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사용 결합, 서비스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모형 등).¹³⁾

(1-2-1)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탈시설·자립생활전환지원체계 마련

□ 추진내용

-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작업을 시행함.

－연차별 주요 계획

- 2019년: 탈시설 지원관련 법령 개정 작업완료¹⁴⁾, 탈시설장애인 부양의 무자 기준 폐지 우선 시행
- 2020년: 탈시설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작업 완료, 자립생활지원전담팀 구성¹⁵⁾ 및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완료,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및 확대 시행
- 2022년: 탈시설 지원을 위한 탈시설 정착금 제도 전면 시행¹⁶⁾

－기타 계획

-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주택 보급 확대 시행

13) 웨어 하우스, 캠프힐 형, 활동지원인만을 활용하는 시설(가칭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등

14) 탈시설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함께 마련.

15) 거주시설 내 배치된 자립지원요원과 함께 자립생활센터 등에 고용된 동료상담가를 포함한 ‘자립생활지원 전담팀’을 개별 거주시설별로 구성하여 운영.

16) 최소 2,000만 원 이상, 그룹홈을 포함한 모든 거주시설 대상.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 세부과제 1-2-1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법령개정 및 조례 제정	-탈시설자립지원 관련 법령 개정 작업 및 탈시설 지원 지자체 조례 제정 권고	-법령 개정 작업 완료	-조례 제정작업 완료	-	-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준비	-기준 폐지 시행	-지속 시행	-좌동	-좌동
자립생활지원전담팀 구성 및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전담팀 구성(자립지원요원 배치 준비, 유관기관 연계 준비)	-구성 시행(배치 및 연계 시행)	-자립생활지원 전담팀 구성 완료: 시설별 1팀	-	-
	-지원센터 설치 준비	-1차 설치	-설치완료: 시도별 1개소	-운영현황 점검 및 보완	-좌동
탈시설정착금 제도화	-제도화 준비	-1차 실시	-평가 및 보완	-좌동	-탈시설정착금 제도 전면 시행
자립생활주택 보급 확대	-주택보급 1차 확대(서울시 10개, 기타 시·도 5개)	-좌동	-2차 확대(서울시 20개, 기타 시·도 10개)	-좌동	-좌동

(1-2-2)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개발 및 거주서비스 기능재편

□ 추진내용

○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기준 및 심사수행체계를 구축함.

- 거주시설의 이용자격을 욕구중심으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이용적격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수행체계’를 구축함.

○ 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을 개정함.

- 인력지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인원기준을 2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원 및 인력기준을 개정함.

○ 장애인거주서비스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 이용자주도형 거주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거주서비스를 개발·운영함.

- 최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집중지원시설을 신설함.
- 앞서 제시한 ‘탈시설정책 추진방향: 과정으로서의 탈시설’에서 2차원 이상의 탈시설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주도형 거주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함.
- 일시 및 긴급보호의 단기거주서비스 강화: 재가장애인의 거주시설 입소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 지역별 거점기관 선정.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1> 세부과제 1-2-2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용적격성 심사기준 및 심사수행체계 구축	-심사기준 마련 및 수행체계 구축	-심사기준 적용 (장애등급에 따른 시설유형 구분 폐지)	-평가 및 보완	-전면 시행	-좌동
설치·운영기준 개정(시설·인력 등)	-기준 개정완료	-평가 및 보완	-필요 시 추가 개정	-	-
장애인거주서비스 종류 다양화 (시설유형의 다양화)	-최중증 개념 정립 및 집중지원 시설 신설/전환 준비	-시범 운영	-평가 및 보완	-확대 운영	-
	-이용자주도형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1차 확대(2차원 탈시설 실시, 3·4차원탈시설 실시 준비)	-평가 및 보완	-2차 확대(3·4차원 탈시설 실시)	-평가 및 보완
	-단기거주서비스 강화 준비	-시범운영	-단기거주서비스 강화 거점기관 선정	- 좌동	- 좌동

(1-2-3)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및 지역사회로의 이전

□ 추진내용

○ 시설별 정원 축소 및 거주시설 시설단위 소그룹(Unit) 별로 분리를 유도함.

- 1인당 시설설치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상향조정하여 정원축소를 유도함.
-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거주시설의 형태를 최소 생활단위(Unit)로 전환 유도함.

○ 그룹홈(체험홈) 확대를 통한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함.

- 아파트 등 일반주택에 그룹홈 다수를 설치하는 등 그룹홈(체험홈)의 확대를 통해 대규모 시설 내 거주인원 감축을 추진함.

○ 대형시설(100인 이상)의 분리를 통한 소규모화를 실시함.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일시적 완화조치를 통해 대규모 부지와 시설을 분리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2> 세부과제 1-2-3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설별 정원축소 및 소그룹(Unit) 별로 분리	-시설별 정원 축소 준비(법령 개정작업 준비)	-정원축소 시행 (법령 개정작업 완료)	-확대 시행	-좌동	-좌동
	-분리 유도 준비	-1차 시행	-확대시행	-좌동	-좌동
그룹홈(체험홈) 확대	-그룹홈(체험홈) 지속 확대(서울 10개소, 기타 시·도 5개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대형시설 분리 작업 시행	-대형시설 분리 작업 준비	-좌동	-1차 시행	-확대 시행	-소규모화 완성

(1-2-4) 주택서비스 지원 확대 및 자립형 주거모델 제시

□ 추진내용

○ 장애인 주택서비스 지원을 확대함.

- 장애인가구에 대해 전세·구입자금 저금리 융자지원(0.2%p)을 지속 시행함.
- 장애인 주택바우처 제도 운영: 임대주택의 주거비 보조 시 소득에 따른 차등 적용방식을 통한 장애인 주택바우처 제도를 현실화함.
- 5년/10년 임대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중증장애인 할당률을 별도로 분리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중 5% 중증장애인에게 별도 우선공급 추진(행복주택 제외)¹⁷⁾.
-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택개조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

○ 자립형 주거모델을 개발함.

- 주거장소에 대한 지원과 주거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합한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 제도를 도입함.
- 장애인 지원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함.

□ 연차별 추진일정

17) 2015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아래와 같이 130,247호이며, 이중 행복주택(37,999호)을 제외하면, 92,248호임. 따라서 약 5%인 500호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제안함.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연간 공급량(2015년 기준, 전체 130,247호): 분양전환공공임대 31,217호, 영구임대 1,353호, 국민임대 7,668호, 기존주택매입임대 11,740호, 전세임대 40,103호, 장기전세 167호, 행복주택 37,999호(국토교통부, 2016)

<표 4-13> 세부과제 1-2-4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 서비스 지원확대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구입·전세 자금 우대금리 지속 적용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장애인 주택바우 처 제도 운영 준 비	-시행	-좌동	-개선 및 확대 시 행	-좌동
	-공공임대주택 중 중장애인 우선공 급 추진 준비(목 표 5%)	-우선공급 1차 시 행	-평가 및 보완	-개선 및 확대 시 행	-좌동
	-주택개조 및 주 거환경 개선 지 원 준비	-주택개조 및 주 거환경 비용 지 원 시행	-좌동	-개선 및 확대 시 행	-좌동
자립형 주거모델 개발	-지원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사 업 시행 -지원주택센터 설 치 확대	-좌동	-제도 근거 법령 마련 -확대 시행	-좌동	-좌동 -지원주택센터 설 치 완료(시도별 1 개소 이상)

다. 발달장애인서비스의 내실화 및 실질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인권리협약의 제19조(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근거로 동 협약의 당사국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의미 있는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성적 권리 보장, 출산 및 양육지원 등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조단체),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 제24조(재활 및 발달지원), 제29조(주간활동), 제32조(휴식지원 등)를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급, 가

족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음.

- 장애인단체에서 제시한 5차 종합계획(안)에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효성 제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정착, 장애인가족지원 강화 등을 요구함(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1-3-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 추진내용

- 발달장애인 대상 전문 공적기관으로서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 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함.
 - 현재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둘러싼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변화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맞물린 맞춤형지원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전달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장애등급제 개편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읍면동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정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어떤 관계 정립을 할 것인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고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부여된 권익옹호 기능에 대해서도 향후 광역단위로 설치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관계정립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전문기관으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개인별지원계획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이루기 위한 기제로서 발달장애인법 상 명시된 개인별지원계획은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별지원계획의 필요성,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별지원계획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담당 전문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미국 Regional center의 경우 평균 발달장애인 70명 당 1명의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음.
- 한편, 발달장애인의 접근성 확보와 지역밀착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수를 고려한 권역별 거점 지역센터(혹은 출장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4> 세부과제 1-3-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발달장애인지역센터의 역할 정립	-권역별 거점 지역센터 광역시도당 2개소 설치	-권역별 거점 지역센터 광역시도 당 2개소 설치	-지역적 특성 고려 거점 지역센터 추가 설치	-좌동
-개인별지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전문 인력 확충	-전문 인력 확충	-개인별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적절한 전문 인력 배치	-개인별지원계획 전면적 실시

(1-3-2) 발달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에 조응하는 보호·돌봄 체계 강화

□ 추진내용

○ 중·장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조기노화로 인한 급격한 신체 및 기능적 약화, 건강문제 및 추가 질환 발생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년기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 부모의 고령화로 인한 돌봄 어려움 가중 등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하지만, 지역사회 내 주간보호시설은 청년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제한을 두고 있어 중·장년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제

외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중·장년층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주간보호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조기노화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함.

- 발달장애인의 자해 및 공격 등의 심각한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서울과 부산 2개소에 불과한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광역별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수요에 기반하여 권역별로 점차 확충해 나감.
- 다학문적 접근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협력체계 구축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예방 및 지원서비스를 강화함.
- 도전적 행동 개입 매뉴얼 개발, 부모 교육, 약물 사용 지침, 행동치료전문가 전문가 양성 및 관리체계 마련 등을 위해 향후 중앙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5> 세부과제 1-3-2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장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조기노화 등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중·장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침 마련	-좌동 -중·장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0개소 설치·운영	-중·장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0개소 설치·운영	-중·장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0개소 설치·운영	-중·장년기 주간보호시설 20개소 설치·운영
행동발달증진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마련 -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설치	-좌동	-광역단위 당 행동발달증진센터 1개소 설치 -가정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수요 기반 권역별 행동발달장애인센터 추가 설치	-좌동

(1-3-3)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추진내용

○ 주간활동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 실시함.

-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교육·여가·체육 프로그램 등 의미 있는 활동 중심의 서비스가 자립생활에 더욱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정책적 추진은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

○ 주간활동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급여를 확대함.

-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조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간활동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식에 따른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함.
- 주간활동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질 강화와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구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6> 세부과제 1-3-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현행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주간활동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주간활동서비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서비스 다양화 및 합리적 급여체계 마련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 확대 -서비스 질 강화	-좌동 -주간활동서비스 제도적 정착

(1-3-4)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지원**□ 추진내용**

○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목적으로 「발달장애인법」은 제11조에서 발달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자조단체의 구성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정책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활동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자조단체 지원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자 및 지원을 점차 확대해 가도록 함.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지원 욕구로는 자조활동 공간 지원, 의사소통 지원, 조력자 지원, 자조단체 교류 지원 등이 표출되어 왔음(최복천 외, 2015).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7> 세부과제 1-3-4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안 마련	-시범사업 실시	-본 사업 실시	-대상자 및 지원 확대	-좌동

(1-3-5)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 추진내용**

○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권리 기반의 성교육을 개발하여 확대함.

－ 성적 권리란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성 관련 기본 정보 습득, 이성간의 애티켓, 건강한 성 표현을 배울 기회, 결혼 및 부모가 될 권리, 출산 및 양육기술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인지적 제약이라는 편견으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전환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발달장애인 전문 교육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함.

-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가족휴식지원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일부 이루어짐.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발달장애인 자녀, 특히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중·장년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비장애형제지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에 대한 비장애자녀에 대한 지원, 다장애가족에 대한 지원 등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조응하는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제한적이고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지원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보다 촘촘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8> 세부과제 1-3-5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강화	-발달장애인 및 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실시 -전문 교육인력 양성 및 지원	-본 사업 실시	-대상자 및 지원 확대	-좌동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사업 통합적 운영모델 개발 -발달장애인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신규서비스 개발	-시범사업 실시	-좌동	-본 사업 실시	-대상자 및 지원 확대

제2절 건강·체육 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 보건의료는 건강한 삶과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일수록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함.
 -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는 2005년 19% → 2014년 32.8%로 증가함(김성희 외, 2014).
- 장애인은 스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75.8%로 장애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이 있음.
 - 고혈압 52.6%,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29.7%, 당뇨병 25.1%, 요통 16.7%, 뇌졸중 12.9%(김성희 외, 2014)
- 장애인 의료비는 1인당 연간 444만원으로 비장애인(평균 110만원)에 비해 4배 정도이며 법정본인부담금은 장애인(72만원)이 비장애인(27만원)보다 2.6배로 많음(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 또한 외래 진료 어려움 등으로 입원일수는 장애인이 75.6일로 비장애인 18.5일보다 4배 정도 길었음(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 예방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장애인이 65.6%(2014년 현재)로 전체인구 74.4%보다 낮았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4.5%임(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6).
- 장애인의 19.1%가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이 58.8%, 교통불편 15.2%였음(김성희 외, 2014).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 세계장애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에 기초해 보건·건강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인 행동강령을 담은 국제장애행동계획(Global Disability Action

Plan, DAP)을 채택하여 장애인이 최적의 건강, 기능, 안녕 그리고 인권을 누리도록 기여하였음.

- 국내에서도 2015년 12월 장애인 건강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등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향후 장애인의 포괄적 건강관리,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요구됨.

□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욕구 해소 제한

- 지난 10년 장애인체육 업무의 문화체육관광부 이관에 따른 체육 영역에서의 장애인체육이 ‘국민체육’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성과는 체육활동 중심의 양적 성장, 즉, 시설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프로그램 확산, 지도자 배치 증가 등을 가져옴.
- 이러한 결과로 장애인체육 권리 확보의 대표 지표인 2016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008년 6.3%(주2-3회 참여율 기준)에서 2016년 17.7%(대한장애인체육회, 201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4-19> 연도별 장애인 및 비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	10.6	12.3	14.1	15.8	17.7
비장애인	35.0	—	43.5	45.3	49.3

주: 장애인의 경우 1주일에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운동의 목적이 건강증진, 여가활용, 기타 목적인 자, 집안 이 아닌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응답자를 생활체육 참여하는 실행자로 제한하여 조사 실시. 비장애인의 경우 주 2회 이상 규칙적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실행자임.

자료: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2014년 이전 2년 주기 조사)

- 그러나 전체 등록 장애인구 250만여 명(보건복지부, 2017) 중 대다수의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체육참여율 56%, 해외 선진국의 생활체육참여율 50% 내외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는 체육활동 참여공간으로의 접근성 한계, 맞춤형 프로그램의 부족, 전문 지도인력의 제한 등 장애인의 체육 참여권리 확보를 위한 환경의 개선이 우선 요구됨을 나타내는 것임.

□ 협력적 정책 추진 제한 및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체육을 공공재 및 가치재로 시설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최근에는 체육복지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사회·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체육정책 대상을 세분화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20>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정책 사례

국가	주요 사례
미국	LA시의 경우 YMCA에서 지체장애인이 수영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재활운동 프로그램과 소외계층에 대한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
영국	'플레이스, 피플, 플레이(Place, People, Play)'의 1억 5천만 파운드 중 약 1천만 파운드를 장애인에 위한 시설 개선 목적으로 투자 복권기금에서 1백만 파운드(한화 약 15억원)를 '겟 이큅트(Get Equipped)'라는 기금으로 장애인스포츠단체에 용품구매를 지원
프랑스	국립스포츠와장애지원센터(PRNSh)에서는 장애인이 어떠한 스포츠단체가 있는지 쉽게 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프랑스 전국 5천여개 이상의 스포츠단체와 조직에 대해 지역별, 스포츠종목별, 장애유형별, 조직 구조 유형별, 단체 가입 조건 등을 정리 해놓은 가이드를 발표
독일	스포츠 배지(Deutsche Sportabzeichen, DSA) 사업은 비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일반장애, 편측 다리 손상, 양측 다리 손상, 편측 팔 장애 및 의족, 양측팔 장애 및 의족, 감각 기관 및 시각장애, 하지마비, 뇌성마비, 학습장애, 정신장애, 왜소증으로 구분)에게도 시행하고 있으며 지구력, 근력, 스피드, 협응성 네 가지의 체력검사를 통해 기준 기록을 통과하면 배지를 수여
일본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장애인전용 또는 우선 이용 가능한 시설로, 체육관 및 수영장, 운동장, 트레닝 실 등이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다양한 고려를 하고 있음

자료: 제3차 장애인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스포츠개발원, 2017)

- 그림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체육활동 참여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참여 환경 개선과 함께 장애인체육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체육 정책 추진은 체육영역과 재활-복지-교육

영역의 협력적 정책 추진의 한계로 인해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내부의 상대적 소외감을 발생시키고 지체장애, 경도장애, 전문스포츠 중심의 체육활동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확장적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함.

2. 추진계획

가.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

□ 추진근거 및 배경

- 건강에 취약한 아동·여성·중증 및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권역 어린이 재활병원, 여성장애인 건강지원을 위한 전문클리닉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임.
- － 2016년 현재 19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는 89,646명이며, 보건의료서비스 요구가 높은 유형은 뇌병변 장애(15.1%), 지적장애(49.5%), 발달장애(15.2%)임. 장애아동의 발견에서 진단까지 평균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진단 후 재활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46.6%)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중증도 이상의 소아장애에 있어서는 성장에 따른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 － 장애아동은 선천적 장애발생 후 적절한 신체, 정신발달을 돕는 재활치료공급이 부족하여 높은 개인비용 부담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합병증 발생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등 서비스 공급확대가 시급함.
- － 여성장애인은 1,053,463명(2016년 현재)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41.9%이며 지체장애인이 50.74%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11.78%), 뇌병변장애인(9.84%)임. 장애와 더불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장애인은 83.7%로 남성장애인(70%)에 비해 13% 정도 높았으나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병원 진료를 포기하였음.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임.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

으며 산후조리 및 양육과정에서도 산후조리원이나 돌봄서비스 등의 관련 서비스에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만으로 한정되어 있음. 종합적인 여성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 우리나라 전체인구 가운데 65%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같이 장애인구의 노령화 현상 또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 장애인구의 경우 노화와 장애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비장애 노인보다 신체기능상의 저하나 상실이 가중됨.
- 또한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장애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이차적 장애발생 예방, 중증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해소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

○ 장애인 건강권법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국정과제 42-5

-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 어린이 재활치료공급 확대

(2-1-1) 소아재활서비스 강화

□ 추진내용

- 권역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함.
- 소아재활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양적증가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소아재활치료수가 제도를 개선함.
 - 소아재활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수가방안을 마련함.
 - 어린이재활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성을 확보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21> 세부과제 2-1-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권역어린이재활병원 선정 및 운영 연구	-좌동	-권역어린이재활병원 선정 및 운영 시범 사업	-좌동	-권역어린이재활병원 선정 1개소
-소아재활치료 수가 개선 연구용역사업 실시	-	-소아재활치료 수가 개선 시범사업 실시	-좌동	-소아재활 치료수가 반영 실시

(2-1-2) 여성장애인 건강서비스 체계와 인프라 확충

□ 추진내용

-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내 여성장애인 전문센터를 설치함.
- 지역단위 여성장애인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내에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
 - 읍면동 단위 방문간호사(보건소)와 사회복지사를 통한 여성장애인 초기 건강사정, 건강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22> 세부과제 2-1-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장애인 전문센 터 설치 및 운영 4 개소	-여성장애인 전문센 터 설치 및 운영 11 개소	-여성장애인 전문센 터 설치 및 운영 17 개소	-여성장애인 전문센 터 설치 및 운영 20 개소	-여성장애인 전문센 터 설치 및 운영 20 개소

(2-1-3) 중증 및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건강서비스 체계와 인프라 확충**□ 추진내용**

- 중증 및 고령장애인에 대한 IC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고령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함.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기준을 20세 이상 중증 및 고령화 장애인을 포함 하도록 확대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중증장애인과 고령장애인 병원간병인 지원을 추가 함.
 -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위한 중증 및 고령장애인을 위한 치료서비스 가이드 라인을 개발·보급·교육하고 질 관리를 실시하는 등 고령장애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교육을 확대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23> 세부과제 2-1-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IC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개소 -고령장애인 서비스 개발 및 교육 1건	-IC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개소 -고령장애인 서비스 개발 및 교육 1건	-IC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개소 -고령장애인 서비스 개발 및 교육 1건	-IC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개소 -고령장애인 서비스 개발 및 교육 1건	-IC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개소 -고령장애인 서비스 개발 및 교육 1건

나. 지역사회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나 건강을 위해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19.1%이며,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58.8%), 교통 불편(15.2%)으로 의료기관 이용편의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필요함.
- 장애인 건강권법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제9

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 국정과제 42-5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2-2-1)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제공

□ 추진내용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병원 내 BF인증대상(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장애인화장실 등) 기관을 확대함.
-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 장애인 환자와 대면하는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확대하고, 예비의료인을 위한 교과과정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통역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AAC,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의사소통도구 등의 의사소통도구를 필수 비치하도록 함.
- 검진 및 진료과정에서 장애인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전문적 인력확보 및 장애유형별 의사소통도구를 필수 비치하도록 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24> 세부과제 2-2-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등 BF인증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등 BF인증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등 BF인증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사업 실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등 BF인증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사업 실시

(2-2-2) 장애인 건강주치의(건강관리 의사) 제도 도입

□ 추진내용

○ 중증장애인 대상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함.

- 주치의 시범사업 후 본 사업 확대 실시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대상 장애인 확대 실시
- 장애인 주치의 참여의사 교육 등 자격관리

○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치의 방문 진료를 실시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25> 세부과제 2-2-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인주치의 교육 실시 100명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주치의 교육 실시 100명	-주치의 사업 실시 -장애인주치의 교육 실시	-주치의 사업 실시 -장애인주치의 교육 실시	-주치의 사업 실시 -장애인주치의 교육 실시

(2-2-3)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실시

□ 추진내용

○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함.

○ 장애특화 검진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26> 세부과제 2-2-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10개소 -장애특화검진을 위한 연구사업 1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20개소 -장애특화검진을 위한 연구사업 1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30개소 -장애특화검진을 위한 연구사업 1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30개소 -장애특화검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10개소 -장애특화검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다.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자원과 협력모형 구축이 필요함.

(2-3-1)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을 통한 지역단위 건강관리체계 구축

□ 추진내용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
- 중앙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기능강화
 - 보건소 등 장애인구강관리 교육 강화
- 시군구별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장애인 건강팀 운영
 - 현행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장애인건강사업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함.
 - 장애 등록 시부터 보건소 대상자 연계 및 평가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사회복귀 지원 확대
 -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모델 개발 및 보급
 - 척수장애인 사회복귀지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반영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27> 세부과제 2-3-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4개소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11개소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4개소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17개소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20개소
-지역사회복귀모델 개발 및 보급 -장애인 구강진료센 터 설치 및 교육	-지역사회복귀모델 개발 및 보급 -장애인 구강진료센 터 설치 및 교육	-지역사회복귀모델 개발 및 보급 -장애인 구강진료센 터 설치 및 교육	-지역사회복귀모델 개발 및 보급 -장애인 구강진료센 터 설치 및 교육	-지역사회복귀모델 개발 및 보급 -장애인 구강진료센 터 설치 및 교육

(2-3-2) 보조기기 지원 및 관리 체계 확대**□ 추진내용****○ 보조기기 공적급여 지원 확대**

- (보험급여 적용확대)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는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개선함.
 - (품목확대 및 세분화)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확대하고, 품목에 대한 기능상 유형 분류를 통한 지급 세분화 마련 →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기능별, 유형별 세분화(틸트, 리클라인, 기립형 및 활동형).
 - (수리급여화 실시)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품목에 대한 수리급여 단계적 실시(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 → 의지보조기)
 - (사용연한 단축) 건강보험 급여 보조기기 품목별 사용연한 재조정
 - (급여기준액현실화) 품목의 특성, 기능성 및 첨단 기술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 급여기준액 마련을 통한 기준액 현실화
 - (대여제 도입)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구입 부담 경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대여제 시범사업 도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확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교부대상자를 확대함.
 - (대상층 확대) 저소득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를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범위 확대 → 2017년 저소득층(차상위,

기초생활수급권자) → 2019년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기준액 현실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교부품목 지원기준액 현실화를 통한 장애인의 구입 자부담 완화
- (품목 확대) 일상생활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중심으로 보조기기 품목확대 → 2017년 28개 품목 → 2022년 50개 품목
- 확대품목: 개인이동용 → 가정 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확대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 종류) 연차적 확대

○ 지역보조기기센터 구축을 통한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구축

-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확대) 전국 지역 단위별 보조기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보조기기 지원 및 관리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인프라 확충) 전국 16개 시도에 광역 단위 보조기기센터를 구축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고(2017년 10개소 → 2020년 16개소)
- 2017년 미설치 6개 지역(서울, 강원, 경북, 울산, 충남, 전남)
- (허브기능 역할 수행) 보조기기센터를 통한 보조기기 지원 및 관리 체계 강화 → 보조기기센터를 통한 공적급여 보조기기 연계성 마련 및 전달체계 강화 → 보조기기 사용 적절성, 유지관리(수리, 점검) 및 사후관리 서비스 실시를 통한 관리 기능 확립
- 별도의 수리지원센터 신규 구축보다 지역보조기기센터로 기능 및 역할 통합 관리 운영 필요(장애인보조기기 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28> 세부과제 2-3-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교부사업 대상자 확대 필요한 법령정비 -교부사업 품목 확대(개인이동용)	-건강보험 품목확대 및 세분화 -고가 보조기기 대여제 시범사업 1차	-건강보험 급여기준액 현실화 -고가 보조기기 대여제 시범사업 2차	-보조기기 수리급여화 도입(전동보장구, 수동휠체어) -교부사업 품목 확대	-품목확대 및 세분화 -보조기기 수리급여제도화(전동보장구, 수동휠체어, 의지보

2018	2019	2020	2021	2022
	-교부사업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확대 -교부사업 품목 확대 (개인이동용)	-교부사업 품목별 지원 기준액 현실화 정비 -교부사업 품목 확대 (가정 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레크리에이션용)	조기) -건강보험 지급품목 사용연한제조정 및 정비 -급여기준액 현실화 -고가보조기기 대여제 실시 -보조기기 종류별 품목 확대(50개)
-기존 지역보조기기센터 수리 점검 기능 역할 수행	-지역보조기기센터 3개소 구축	-지역보조기기센터 3개소 구축 -지역별 시군구 단위 수리센터 사례관리 사업으로 확대 개편	-지역별 시군구 단위 수리센터 사례관리 사업으로 확대 개편	-보조기기 지원 관리 인프라 확충 -지역보조기기센터 허브기능 구축

(2-3-3) 재활의료기관지정 및 재활의료수가 현실화

□ 추진내용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모델을 적용하고 평가함.
 - 인력, 시설, 장비 등 구조부문, 진료량, 환자구성 비율 등 질적 부문 지정기준 검토
 - 회복기 집중재활을 위한 운영과정 적절성 평가
 - 시범사업 적용수가, 급여기준 타당성 평가 등 실시
- 환자의 의료비 부담, 의료기관 만족도 등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영향평가를 실시함.
- 재활의료기관을 연차별로 확대 지정하고 운영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29> 세부과제 2-3-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실시 10개소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실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실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실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실시

라. 운동참여 환경 개선

□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환경 개선은 기존에 시행되어 온 공공체육시설 중심의 지도자 배치나 프로그램 확대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생활 주거지 중심의 체육 활동 참여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간이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공간 확보,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시군구 단위 배치 확대, 국민체육 100 사업 연계 장애인 국민체력센터의 지역 거점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스포츠권 확보의 대표 지표인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이 국외사례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체육참여율 대비 매우 적은 것은(2016년 기준 주 2-3회 17.7%) 참여공간 접근성의 한계, 맞춤형 프로그램의 부족, 전문 지도인력의 제한 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개선이나 체육장비의 구비 등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이나 원거리 장애인들에게 운동참여의 물리적인 공간이 해소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환경 개선은 기존 체육 영역에서의 공공체육시설 중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프로그램 지원 확대에서 추가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중심 공간인 복지관, 학교 등으로의 인력 파견 확대, 다양한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확대 등이 이루어지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장애인들의 실 생활공간인 거주지 인근 또는 복지관 시설 활용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규모 그룹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특히, 작은체육관 건립을 통한 접근성 개선 및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조성하여 물리적 공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음.

(2-4-1) 간이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공간 확보

□ 추진내용

- 체육활동 공간 조성은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정책의 지속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실 생활영역인 거주지 중심 간이체육시설의 조성을 통해 소규모 그룹별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추진함.
- 현재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부족이나 관련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적정 체육 보조기기 구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종 체육프로그램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됨.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Free)가 적용된 공공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물리적 접근과 정보 접근, 경제적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의 90%를 차지하는 후천성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간이 체육시설이 생활 중심-주거지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BF 환경 조성은 지속 추진하되, 복지관의 강당이나 소규모 체육관 등은 현재 체육지도자 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러한 생활시설을 벗어나 체육시설로 유입되기는 쉽지 않음.
- 장애인생활체육시설 또는 간이체육시설 규정(시도 및 시군구 조례 반영)
 - 장애인체육진흥조례 또는 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 제정 및 개정
 - 공공체육시설 등의 규모에 비해 작은 공간에서 장애인의 체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장애인생활체육시설’ 또는 ‘간이체육시설(복지 및 편의시설 대상)’로 규정 및 설치 운영.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30> 세부과제 2-4-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시군구 60개소 설치 운영	-시군구 80개소 설치 운영	-시군구 100개소 설치 운영	-시군구 120개소 설치 운영	-시군구 150개소 설치 운영

(2-4-2)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시군구 단위 배치 확대

□ 추진내용

- 기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소속 지도자들이 시도 배치에서 시군구 단위로 전면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인원수의 제약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 지도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총 지도자 수의 확대를 우선 추진함.
- 2017년 현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450명(기금 50%, 시도 및 시군구 50% 매칭)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음(대한장애인체육회, 2017).
 - 실제로 지도 현장은 시군구 단위가 더 많고, 수요 역시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시군구장애인체육회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도자의 실제 배치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 추진함.
 - 또한, 시군구장애인체육회가 없는 경우 별도의 장애인생활체육거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시군구단위 지도자 배치와 실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함.
 -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반 편성은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시 소규모일 수밖에 없어 비장애 생활체육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비장애 생활체육프로그램지도자 대비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음.
 - 다만, 예산의 한계상 점증적 배치확대를 전제로 하며,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설립과 더불어 시군구별 최소 인력 배치를 전제로 추진고, 거점센터 지정운동을 통해 지속 확대 배치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31> 세부과제 2-4-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시군구 배치 기준 700명	-시군구 배치 기준 800명	-시군구 배치 기준 900명	-시군구 배치 기준 1,000명	-시군구 배치 기준 1,200명

(2-4-3) 국민체력 100 사업연계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지역 거점화

□ 추진내용

- 국민체력 100 사업은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임(국민체육진흥공단, 2017).
 - 전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체력 100사업은 대국민 스포츠복지서비스로서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전국 37개소에서 운영 중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체력 100 사업은 2016년 기초연구를 통해 국민체력100사업의 장애인부 도입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2017년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력 및 건강증진서비스는 새롭게 건립되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체력수준을 보이며, 비만 및 만성질환 등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의 운동 참여 활성화와 비만 및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력평가 및 관리가 필수적임.
 -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측정평가-운동상담 및 처방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꾸준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32> 세부과제 2-4-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건립 3개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건립 4개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건립 4개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건립 4개소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3개소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6개소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9개소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13개소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17개소

마. 참여형 장애인스포츠복지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및 확산

□ 추진근거 및 배경

- 향후 장애인체육 정책의 방향성은 체육영역에서의 계층 다양화로 재편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영역의 제한성 탈피와 장애인 참여 계층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참여형 장애인체육 복지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건강증진법의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활운동 및 체육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클럽동호회 중심의 장애인체육 연계 모델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함.
- 지난 10여년 장애인체육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체육영역에서의 양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계층 내에서의 스포츠권 차별을 발생시킴. 지체장애 중심, 경도 장애 중심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육환경 내에서의 정책추진이었기 때문으로 유형별,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의 장애인 당사자 요구 서비스에 접목이 필요함.
-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종목을 자유롭게 즐기는’ 비장애 생활체육 패러다임에서 재활-교육-복지 영역의 서비스 지원체제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 영역 내에 개설 및 지원이 필요함.
- 2017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운동 및 체육은 이차적인 장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의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2-5-1)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 추진내용

- 장애인스포츠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추진과

제는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및 운영 효율화가 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재활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임.

○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우선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전문화된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임.

–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의료 및 장애인체육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되, 기존 의료영역, 복지영역, 교육영역, 체육영역에서 양성된 분야별 전문인력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가능함.

○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의 핵심은 중증장애인 및 미참여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보급임.

– 기존 장애인체육 영역에서 종목 중심의, 또는 경증의 신체장애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강, 체력 중심의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적용함.

○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운영 기관 인증 및 지속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거점 운영 기관 선정을 통한 지역사회(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33> 세부과제 2-5-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 교실 사업 전체 대비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5%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10%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15%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20%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20%

주: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 지원 프로그램 모두 포함

(2-5-2)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 추진내용

- 특정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체육의 수혜계층을 중증장애인 등 소의 그룹 대상 집중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함.
 - 특히, 재활 및 사회적응 단계에서 생활체육으로의 유입 경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료 및 재활영역(후천성, 지체장애 위주)과 교육 및 복지영역(선천성, 발달장애 위주)에서의 건강 및 운동 관련 다양하고 특성화된 체육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함.
-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전체 교실사업의 대상을 종목별 프로그램에서 장애 유형별 안배, 중증장애인 대상 확대 등으로 개편하여 추진함(기존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좀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장애-비장애학생의 통합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교사 연수 지속 추진과 장애청소년 체육교실의 운영확대를 추진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국립특수교육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통합체육교사연수의 대상을 체육지도자로 확대함.
 - 시도장애인체육회와 지역 대학이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청소년 체육교실사업의 연계기관을 지역 대학 외에 다양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현재 일부 시도에 한정된 운영개소를 17개시도로 확대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34> 세부과제 2-5-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 교실 사업 전체 대비				
-중증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5%	-중증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10%	-중증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15%	-중증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20%	-중증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20%
-장애청소년 교실 운영 8개 시도	-장애청소년 교실 운영 10개 시도	-장애청소년 교실 운영 12개 시도	-장애청소년 교실 운영 15개 시도	-장애청소년 교실 운영 17개 시도

(2-5-3) 클럽-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체육 연계모델 정착

□ 추진내용

- 클럽·동호회 중심의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균형있는 장애인생활체육 정착은 물론 전문체육과의 연계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
 - 독일의 장애인 생활체육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재활체육은 사회보장법 아래 시행되고 있으며 재활체육-생활체육-엘리트스포츠의 전환사이클이 명료하게 나타남(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스포츠개발원, 2017).
 - 미국은 2007년 11월 설립된 패럴림픽스포츠클럽(Paralympic Sport Club, PCS)과 지방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패럴림픽스포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공원, 학교 시스템 등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함(2017년 48개 주의 208개와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6개 단체에서 패럴림픽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임).
- 따라서 운동 및 체육활동 단계에서의 클럽 및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역시 동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생활체육 인구 확산은 물론 전문선수의 유입경로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69개 종목(일부 교실 포함) 2,010개의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팀이 운영(문화체육관광부, 2017)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클럽 및 동호회 활성화는 향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와 전문체육선수 양성의 기반으로서의 역할 부여가 매우 중요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35> 세부과제 2-5-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클럽-동호회 활동인 구 15,000명	-클럽-동호회 활동인 구 16,000명	-클럽-동호회 활동인 구 17,000명	-클럽-동호회 활동인 구 18,000명	-클럽-동호회 활동인 구 20,000명

제3절 보육·교육 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아 보육 및 장애 영유아 교육

- 어린이집 유형 중 일반어린이집의 장애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애 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수는 매년 증가함.

<표 4-36>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장애아 수

(단위: 명, %)

연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계
2012	5,994 (46.0)	3,565 (27.4)	3,463 (26.6)	13,022 (100.0)
2013	5,883 (49.2)	3,689 (30.8)	2,395 (20.0)	11,967 (100.0)
2014	5,860 (50.0)	3,835 (32.8)	2,014 (17.2)	11,709 (100.0)
2015	5,859 (50.9)	3,929 (34.2)	1,716 (14.9)	11,504 (100.0)
2016	6,158 (51.9)	4,079 (34.4)	1,635 (13.8)	11,872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3~2017). 연도별 보육통계. 자료 재구성.

- 장애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은 특수교사 등이 배치되어 있고,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지원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어린이집 보다는 장애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중심으로 장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이정림 외, 2012).
 - － 유치원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 특수교사 연봉액, 장애유아 1인당 교육비, 교재교구비 지원금, 급식비, 통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까지 파악된 유아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어린이집간의 교육 지원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37> 유치원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어린이집의 지원 수준 비교

구분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장애아 어린이집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비율	100%	80%
특수교사 연봉액 (5호봉 기준)	3,000~3,200만원	1,700~1,900만원
장애 유아 1인당 교육비 (월, 정부지원 예산 기준)	300~400만원	110~12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금 금액	학급당 300~500만원(연간)	학급당 100만원 이하
급식비 지원 금액 (장애 유아 1인당)	2,250원	1,750원
통학지원	통학지원 전면 무료 통학차량 지원 및 통학비 지원(1인당 최대 월 12만원 상당 지원)	지원없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족지원(부모 교육, 상담), 치료지원(물리, 작업, 언어), 보조인력지원 등	치료 바우처 지원

자료: 이정림 외(2012)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장애아 통합 교육·보육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및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2013)의 현황 자료(미간행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임

-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애아 어린이집은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를 채용하기 어렵고, 이는 장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교육기관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김삼섭 외, 2015).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의 비율 저조

- 최근 5년간 특수학급을 설치한 유치원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일반유치원 수와 비교해 보면 특수학급을 설치한 유치원의 비율은 약 6% 정도에 머물러 있음.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거의 70%에 근접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 신설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4-38> 최근 5년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현황 비교

(단위: 개, %)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전체수	설치학교 수	비율(%)	비율(%)
2012	8,493	305	3.6	64.8
2013	8,637	346	4.0	65.2
2014	8,800	406	4.6	65.6
2015	8,921	482	5.4	67.0
2016	8,987	557	6.1	68.8

자료: 교육부 (2012 - 2016).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자료 재구성.

○ 사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극히 저조함.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의 설립형태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1.8%(4,696개원 중 553개원)임에 반해, 사립 유치원의 경우 0.1%(4,291개원 중 4개원)에 불과함.

– 따라서 사립 유치원에서의 특수학급 설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4-39> 설립형태에 따른 유치원 특수학급 수

(단위: 개, %)

구분	유치원 수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수	특수학급 설치율
국공립	4,696	553	11.8%
사립	4,291	4	0.1%
계	8,987	557	6.2%

자료: 교육부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학령기 장애학생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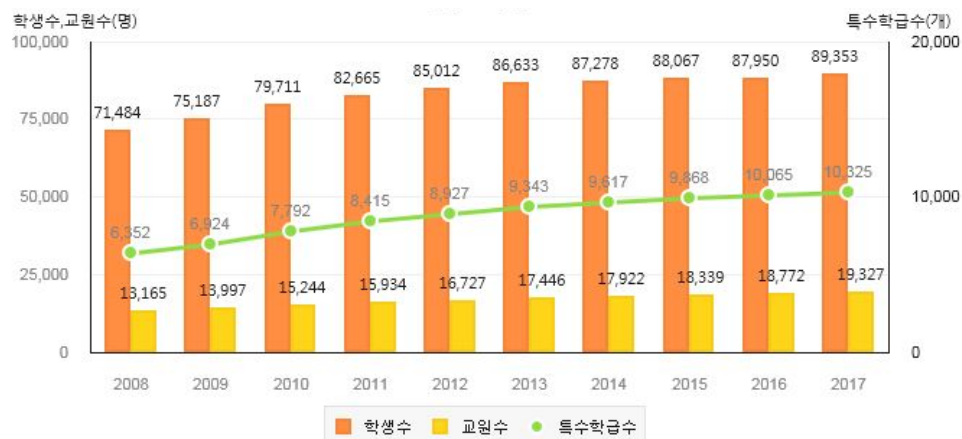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의 증가 및 특수교사 부족

–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 특수교사 확보율 역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기준에 못 미침. 2017년 현재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는 4.6명임.

- (2013) 5.0명 → (2014) 4.9명 → (2015) 4.8명 → (2016) 4.7명 → (2017) 4.6명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과 교육 여건 확충을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제고가 필요함.

[그림 4-1] 최근 10년 간 특수교육 규모



자료: 특수교육통계 (“e-나라지표”에서 재인용)

○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요구

- 최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확산으로 특수학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음.
- 특수학교 수의 낮은 증가율에 비해 특수학급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표 4-40> 최근 5년간 특수교육기관 수

(단위: 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수학교	162	166	167	170	173
특수학급	9,343	9,617	9,868	10,065	10,325
특수교육지원센터	201	197	196	199	199

자료: 교육부 (2013 - 2017).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 특수교육의 주된 패러다임이 완전통합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학생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하여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많음.
- 그러나 그동안 특수학교는 장애유형별 유·초·중·고 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되는 종합 학교의 성격으로서, 많은 학생 수가 재학함으로 인한 개별화교육 실천의 어려움과 넓은 지역을 감당하여야 함으로 인한 통학의 불편 등으로 학부모의 불만 및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야기하여 옴.
-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한 교육기관의 형태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급)을 설립·운영함과 동시에 일반학교에 지속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여야 함.
-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기관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수교육 인프라 및 교육부와의 연계를 고려한 지역별 특성화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형태(규모), 학교과정, 분야 등을 고려한 특수학교(급) 설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학생 특성별 교육지원 필요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보장을 위한 각종 교구 및 학습 보조기 등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
 - (2013) 4,177명 → (2014) 4,608명 → (2015) 5,209명 → (2016) 5,293명 → (2017) 5,300명(예정)명 등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생 수의 증가.
- 일부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는 보급한 지 오래 되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지원기기와의 호환성이 저하되어 교체 또는 새로

은 보급이 요구됨. 아울러 장애학생의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학생이 보조공학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 및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보조공학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일례로 들면, 특수교사는 대학학부 수업 때 주로 보조공학을 경험하여 보조공학기기 사용을 지도하고 있으며, 서적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진희 외, 2015).
- 보조공학기기의 보급과 아울러, 보조공학기기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특수교사의 자기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보조공학기기 활용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음(백종남, 2017).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기반한 보조공학기기 및 교수학습 설계 및 적용에 대한 특수교사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 부응하지 못함.
- 게임기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교과서, 훈련과 게임 기반의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을 장애학생에게 적용하여 학업성취도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학습과제 집중력 향상, 학습에 대한 흥미 향상, 적응행동 및 과제수행 향상, 문제행동 감소, 운동기능 향상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음(손지영, 2013).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개발은 활용의 당사자인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높은 특수교육 전문가와,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학 전문가, 사용자의 흥미와 참여유도를 위한 심리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심리학자 등 학문융합적 접근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학생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미비

-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진학률은 46% 정도임.
-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13% 수준에서 고착상태를 보임.
- 최근 5년간 전공과 졸업 장애학생의 진학률은 1% 내외에서 유지됨.

- 최근 5년간 전공과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2013년 31.0%에서 2017년 39.9%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40%를 밑돌고 있음.

<표 4-41> 최근 5년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고등 학교	졸업생 수		6,497		6,991		7,111		7,443		7,734	
	전공과	진학률 ¹⁾ (%)	1,967	45.8%	2,139	46.7%	2,212	47.0%	2,246	46.3%	2391	46.3%
	전문대학		1,007		521		531		546		542	
	대학교				589		602		652		649	
	취업(취업률2))		1,306(20.1%)		1,570(22.5%)		1,051(14.8%)		975(13%)		1,038(13.4%)	
	비진학, 미취업자		2,217		2,172		2,715		3,024		3,125	
전공과	졸업생수		1,621		1,681		1,868		1,960		2,052	
	진학		18(1.1)		17(1.0)		13(0.7)		27(1.4)		13	
	취업(취업률 ²⁾)		497(31.0%)		617(37.0%)		659(35.5%)		664(34.4%)		820(39.9%)	
	비진학, 미취업자		1,106(67.9)		1,047(62.0)		1,196(63.8)		1,269(64.7%)		1,219(59.4%)	

주: 1) 진학률=(진학자 수/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2)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자료: 교육부 (2013 - 2017).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 여부를 떠나 사회에서 독립된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취업과 지속적인 직장적응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됨.
-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은 현장실습, 지원고용, 직무지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 발생함.
- 「진로교육법」(2015.6.22. 제정)에서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현재까지 특수학교에는 1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 「진로교육법」에서는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개정하여 특수학교 내 진로지원 전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진로 및 직업 전환을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해서는 개인의 직능 수준을 파악하고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직무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종에 따른 훈련 직무기술을 익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함(박은영, 김삼섭, 2006).
- 그러나 장애학생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요구됨. 산업현장 요구에 반응하기에는 장애학생의 직무훈련 체계가 민감하지 못할뿐더러, 장애유형에 따른 특정 일부 직종 편중 현상 등으로 인해 훈련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담당하기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함(백종남, 김정미, 김삼섭, 2015).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 교육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고,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라 적합화하여야 하며, 모든 직종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초직업능력 중심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로 거듭나야 함.

□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 대학 진학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증가

-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는 일반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 진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함.
- 지난 10년간 대학에 진학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554명에서 1,007명으로 약 2배 증가함.

○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 2017년 현재 대학(원) 장애학생 지원 도우미는 203개 대학에서 2,661명(전문도우미 140명)이 배치되어 있음.

<표 4-42> 최근 10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대학 진학자 수

(단위: 명)

연도	고등학교	전공과	전체
2008(A)	553	1	554
2009	711	5	716
2010	962	6	968
2011	927	5	932
2012	1,014	11	1,025
2013	1,007	18	1,025
2014	1,100	17	1,117
2015	1,133	13	1,146
2016	1,198	27	1,225
2017(B)	989	18	1,007
증가율(B/A, %)	178.8	1,800	181.8

자료: 교육부 (2008 - 2017). 연도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 재구성.

<표 4-43>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학교 수	도우미 수			
			1~3급 장애학생 지원	4급 이하 장애학생 지원	구분 없음	계
일반 도우미	대학(원)	120	1,781	62	—	1,843
	전문대학	63	452	19	—	471
	원격대학	2	201	—	45	246
	소계	185	2,434	81	45	2,560
전문 도우미	대학(원)	24	59	—	—	59
	전문대학	6	11			11
	원격대학	2	14			14
	소계	32	84			84
원격교육 전문 도우미	대학(원)	25	—	—	25	25
	전문대학	1				
	원격대학	7				
	소계	33				
계		203 (중복 제외)	2,518	81	62	2,661

자료: 교육부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대학 재학 장애학생의 높은 중도탈락률

- 8천여 명의 장애학생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나, 15% 정도가 휴학, 자퇴 등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박은혜 외, 2011).
- 수강 신청, 수업 참여, 그룹 과제 수행, 동아리 활동, 기숙사 생활, 취업 준비, 도서관 이용, 식당 이용 등 대학 수학 과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한 인적, 물적 지원 부재로 접근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학업 수행 및 취업 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도 탈락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등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기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다수의 대학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재, 코디네이터 배치 근거 미비,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계 미비

- 특수교육 전공 교수를 제외하면 대학의 교원은 장애학생 지도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정, 교수적합화, 교재 개발, 과제 지도 등에 전문성이 부족함.
- 100명 이상의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별 각 교수에 대한 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특정 대학 또는 특정 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장애대학생의 장애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애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 준비 지원 체계 미비

- 장애대학생이 진로 및 취업 준비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일부 대학에서 취업특강, 취업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박은혜 외, 2011).

○ 장애대학생의 대학원 진학 및 수학을 위한 지원 체계 부재

- 장애대학생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력 개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과 수학에 필요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부재한 실정임.
- 특히 대학원 진학 시험 준비, 대학원 진학시 학부생과 동일한 수준의 편의 제공(도우미 등) 지원, 교수학습 자료 변환 등 대학원 수학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김주영 외, 2009), 이에 대한 대학 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한 실정임.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예산 현황

-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프로그램 수 및 예산 액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표 4-44>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계		
	기관수	프로그램수	예산	학교수	프로그램수	예산	센터수	프로그램수	예산	기관수	프로그램수	예산
2013	183	423	1,207.4	9	34	60.9	21	102	367.3	213	559	1,635.6
2014	152	402	44	8	21	26	5	26	129	165	49	1,099
2015	160	516	1,141.7	13	38	89.5	5	14	91	178	68	1,322.2
2016	185	525	1,805.5	14	30	44.5	4	25	58	202	580	1,908
2017	194	571	1,312	10	40	38	5	18	67	209	629	1,417

자료: 교육부 (2013 - 2017).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 전체 국민의 3분의 1(약 1천 7백만 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0.02%, 발달장애인은 0.01%만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음.

<표 4-45>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수 및 평생학습 참여 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전 체	장애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	3,768	232(6.2%)	-
학습자 수	17,618,495	3,619	1,724
학습자 비율	100	0.02	0.01

자료: 교육부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시설 부족

-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3,768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232개로 전체의 6.2%에 불과함.

<표 4-46>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수
계		3,768	178
학교 부설	유초중등학교 부설	10	18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 포함)
	대학(원) 부설	403	
원격 형태		887	160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 부설	320	
	산업체부설	37	
시민사회단체부설		495	
언론기관부설		494	
지식·인력개발형태		727	
평생학습관		395	

자료: 교육부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 투자 미흡

- 지난 5년 동안 전체 특수교육 예산은 2,635억여 원, 전체 교육 예산은 7조 3,598억여 원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9.1억여 원 증가에 그침.
- 2017년 현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89,353명이고 이를 특수교육 예산으로 나누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29,697천원 (연간)으로 산출되지만, 장애성인의 경우 등록 장애인 수 2,511,051명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으로 나누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1,785원 (연간)에 불과함.
- 이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크게 성장 못하였음.

<표 4-47>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및 전체 교육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A)	2014	2015	2016 (B)	2017	B-A	연평균 증가액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C)	3,571	2,926	3,699	4,435	4,482	911	227.8
특수교육 예산	2,245,781	2,153,125	2,227,638	2,376,062	2,653,497	407,716	101,929
전체 교육 예산(D)	49,643,947	49,986,533	50,325,564	51,225,455	57,003,830	7,359,883	1,839,970.8
전체 교육 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비율 (C/D)×100	0.007%	0.006%	0.007%	0.009%	0.008%	-	-

자료: 교육부 (2013 - 2017).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고,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추진계획

가.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아 어린이집의 증가량이 유치원 특수교육기관의 증가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장애아 지원 대책 부재. 장애아보육료가 표준보육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장애아 보육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유아 의무교육 및 누리과정이 장애유아 교육·보육 환경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 조정, 연계, 지도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 부재로, 교육기관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애영아를 위한 효과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영아 학급 증설 및 가족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국·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특수학급이 확충되고 있으나, 전체 유치원 대비 그 설치 비율이 저조하고(6.1%), 전체 유치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 확충 계획 부재. 국·공·사립 유치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필요함.

(3-1-1)장애영유아 보육 지원 체계 고도화

□ 추진내용

- 장애아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 여건 개선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매년 2개소 확충(매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수: 2017년 179개소 → 2022년 189개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확대(2019년 이후)

- 장애아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원 지원을 위하여 차량운영비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 추후 유치원 특수교육기관에 준하는 별도의 통학지원 방안 마련 검토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계속 지원(매년)
- 지원 인원 수 및 지원 예산 매년 확대

○ 장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장애아 보육료 단계적 인상

- 물가상승률 및 장애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애아 보육료 단계적 인상(2018~2020년)
- 현재의 장애아 보육료가 표준 장애아 보육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애아 보육료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2018년)
- 장애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경비를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장애아보육료)의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애아 보육료 단계적 인상(2019년 이후)

○ 장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보육 환경 격차 해소

- 장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협의 기구 설치·운영(2018년)
-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등 관련 연구 기관, 장애아 보육 관련 대표자 등으로 협의 기구 구성
- 협의 기구를 통해 실태조사 실시 계획, 지원 계획 수립 등 격차 해소 방안 마련
- 장애아 어린이집 실태조사 실시(2019년)
- 장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보육 지원 환경 격차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설비, 정당한 편의제공¹⁸⁾ 지원 등 장애영유아

18)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장애아가 장애로 인해 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린이집의 장이 장애아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 지원. 예를

- 교육·보육 지원 여건 파악을 위한 장애아 어린이집 운영 실태조사 실시
- 장애아 어린이집의 최소 운영 기준 및 단계적 지원 방안 수립(2020년)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유아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어린이집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기관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운영 기준 마련
 - 장애아 어린이집이 최소 운영 기준 충족을 위한 단계적 지원 방안 수립
 - 장애아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실시(2021년 이후)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48> 세부과제 3-1-1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아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 여건 개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개소 확충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계속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2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계속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증액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2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계속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증액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2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계속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증액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2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계속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증액 지원
장애아 보육료 단계적 인상	-장애아보육료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	-장애아 보육료 단계적 인상	-장애아 보육료 단계적 인상	-장애아 보육료 단계적 인상	-장애아 보육료 단계적 인상
장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보육 환경 격차 해소	-장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협의 기구 설치·운영	-장애아 어린이집 실태조사 실시	-장애아 어린이집의 최소 운영 기준 및 단계적 지원 방안 수립	-장애아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실시	-장애아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실시

(3-1-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체계 강화

□ 추진내용

○ 장애영아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들어,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수리, 보조인력 배치, 휠체어 접근 공간 확보, 보조기기 및 의사소통 도구 지원, 교통 편의 등을 말함.

- 장애영아를 위한 효과적인 조기중재 지원 체계 구축(2018~2022년)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설치 확대: 매년 5개 학급 이상 확충
(2017년 74학급 → 2022년 99학급)
 -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재활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아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내 조기중재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지원 계획 수립
(2019년)
- 장애영아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2018~2022년)
 - 개별화가족서비스 계획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운영 지원 방안 수립(2018년)
 - 장애영아 담당 특수교사 대상 교육 및 연수 확대(2019~2022년)
 - 장애영아 학부모를 위한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 참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2019~22년)

○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국·공·사립 유치원 내 특수학급 신·증설(2018~2022년)
 - 신·증설 특수학급 수: 매년 80학급 등 총 400학급 신·증설(국·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수 2017년 731개 학급 → 2022년 1,131개 학급)
- 전일제 통합 형태의 통합유치원 운영 확대(2018~2022년)
 - 통합유치원 수: 2017년 1개원 → 2022년 17개원
- 유치원 내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환경 구축(2018~2022년)
 - 유치원 내 정당한 편의제공 구축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18년)
 - 유치원 내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기능 보강 사업 지원(2019년 이후)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49> 세부과제 3-1-2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영아 특수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설치 확대(5학급) -개별화가족서비스 계획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운영 지원 방안 수립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설치 확대(5학급) -유관기관 간 조기 중재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지원 계획 수립 -장애영아 담당 특수교사 대상 교육 및 연수 확대 -장애영아 학부모를 위한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 참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설치 확대(5학급) -장애영아 담당 특수교사 대상 교육 및 연수 확대 -장애영아 학부모를 위한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 참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설치 확대(5학급) -장애영아 담당 특수교사 대상 교육 및 연수 확대 -장애영아 학부모를 위한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 참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설치 확대(5학급) -장애영아 담당 특수교사 대상 교육 및 연수 확대 -장애영아 학부모를 위한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 참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 강화	-국공사립 유치원 내 특수학급 신·증설(매년 80학급) -전일제통합유치원 확대 -유치원 내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환경 관련 실태조사 실시	-국공사립 유치원 내 특수학급 신·증설(매년 80학급) -전일제통합유치원 확대 -유치원 내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 실시	-국공사립 유치원 내 특수학급 신·증설(매년 80학급) -전일제통합유치원 확대 -유치원 내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 실시	-국공사립 유치원 내 특수학급 신·증설(매년 80학급) -전일제통합유치원 확대 -유치원 내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 실시	-국공사립 유치원 내 특수학급 신·증설(매년 80학급) -전일제통합유치원 확대 -유치원 내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 실시

나.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

□ 추진근거 및 배경

-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진로교육법,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연구보고서.
- 특수교육 담당 학교(급) 및 교육인력 부족 상황임. 특수교원의 법정 확보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 장애 특성에 따른 학습·보조기구를 보급하고,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한 학습·보조공학기기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

의 테크놀로지 사용 효능감을 높임.

-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자립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2-1) 특수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 추진내용

-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의 단계적 확보
 - 2017년 현재 특수교육 교원수는 19,327명으로, 법정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학생 4명당 1명)인 22,338명에 3,011명이 부족한 상황임.
 - 적정한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정정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증원함.
-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
 -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기관 운영 방안 연구
 -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의 신설
 -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학교 수, 통학거리·시간, 학부모 의견 등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특수학급의 신설
 - 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연도별 설치 확대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50> 세부과제 3-2-1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 수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 4.5명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 4.3명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 4.2명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 4.1명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 4.0명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기관 운영 방안 연구	-소규모 특수학교 및 단일과정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급의 신설	-좌동	-좌동	-좌동

(3-2-2) 장애학생 특성별 교육지원 강화

□ 추진내용

- 장애학생의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 학습·보조공학 서비스 요구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 구형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의 교체
 - 장애학생의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 극대화
- 보조공학기기 사용에 대한 교사 연수 강화
 - 특수교사 대상 보조공학기기 활용 연수 실시
 - 통합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연수
 -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소개 자료 개발
 - 최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집중 연수
-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한 학습·보조공학기기의 개발 및 보급
 - 게임기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교과서, 훈련과 게임 기반의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을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한 학습·보조공학기기의 개발 및 보급
 -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발달장애,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공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공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51> 세부과제 3-2-2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 요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기기 교환 및 새로운 기기 보급	-기기 교환 및 새로운 기기 보급	-좌동	-좌동	-좌동
보조공학기기 사용 연수 실시	-특수교사 대상 보조공학기기 연수 -통합교육 교사 대상 보조공학기기 연수	-특수교사 대상 보조공학기기 소개 자료 개발	-보조공학 전문 연수과정 개발	-특수교사 대상 보조공학 전문 연수과정 운영	-일반교사 대상 보조공학 전문 연수과정 운영
장애학생 보조공학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공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공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공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공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공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2-3) 장애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계 구축**□ 추진내용**

- 장애청소년의 학교에서 사업체로의 성공적인 직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학교 내 진로지원 전담교사를 배치
 - 「진로교육법」(2015.6.22. 제정)의 진로전담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검토 및 법령 개정
 - 특수학교 내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진로지원 전담 업무 담당
 - 진로전담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1명의 법정배치 기준과는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며,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연 45명씩 점진적으로 배치하여 4년간 180개 특수학교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함.
-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진로·직업교육 효율화 및 안정화 도모
 - 전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직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장애청소년 진로·직업 협의체 구성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을 장애청소년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 운영

－ 진단 및 직업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확대

○ 기초직업능력 함양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핵심역량 강화

- － 장애유형별 장애학생의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
- － 장애유형별 장애학생의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시범 운영 및 성과의 확산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52> 세부과제 3-2-3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공청회	－진로교육법 개정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45명 배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45명 배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45명 배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45명 배치
교육·복지·고용 협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복지·고용 협업 시스템 구축 모델 개발	－교육·복지·고용 협업 시스템 운영	－좌동 －교육·복지·고용 협업 시스템 우수 사례 발굴	－좌동 －교육·복지·고용 협업 시스템 우수 사례 발굴	－좌동 －교육·복지·고용 협업 시스템 우수 사례 발굴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강화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시범 운영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의 확산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의 일반화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의 일반화

다.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45.5%가 비진학, 미취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학생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대학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은 도우미 지원 제도가 유일한 실정임. 장애대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부재로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프로그램 수 및 지원 예산 등이 지난 5년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0.02%에 불과.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필요.

(3-3-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추진내용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환경 개선
 - 장애인 고등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2018~2022년)
 - 장애유형별 각 대학의 편의시설, 대필·통역 등 학습지원, 도우미 지원 등에 관한 현황 정보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반영(2018년~)
 - 장애인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대학 내 교수학습 및 생활 안내, 대학 내 편의제공 현황 및 진로 지원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고등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2019년 ~)
 - 장애 대학생 학습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도우미 확충(2019~2022년)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에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확보 지원
 - 장애대학생을 위한 전문도우미 연차적 확대 지원: 2017년 140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계 시각장애 대학생 대체 교재 제작 및 보급 확대
- 장애대학생 취·창업 및 대학원 진학 지원
 - 장애대학생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019~2022년)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지원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6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하여 장애대학생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운영 지원
 -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창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장애대학생 취업 또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대학생의 대학원 진학 지원 및 우수 인재 지원 방안 마련(2019~2022년)

- 대학원 석, 박사 과정 재학 장애대학생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시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53> 세부과제 3-3-1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환경 개선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장애학생 지원 현황 정보 제공	-장애인 고등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에 전문인력 확보 -장애대학생 전문도우미 확충	-장애인 고등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에 전문인력 확보 -장애대학생 전문도우미 확충	-장애인 고등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에 전문인력 확보 -장애대학생 전문도우미 확충	-장애인 고등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에 전문인력 확보 -장애대학생 전문도우미 확충
장애대학생 취·창업 및 대학원 진학 지원	-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취업 또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원 석, 박사 과정 재학 장애대학생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취업 또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원 석, 박사 과정 재학 장애대학생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취업 또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원 석, 박사 과정 재학 장애대학생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취업 또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원 석, 박사 과정 재학 장애대학생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3-3-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추진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2018~2022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기준 마련(2018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일반 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및 대학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매년 확대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 － 장애인 평생학습이력 정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DB 등 맞춤형 평생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운영 계획 수립(2018년),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2019년), 시스템 운영(2020년 이후)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단계적 확충(2018~2022년)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내 교육·연수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설비 확충(2019년)
- －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거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2019~2022년)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54> 세부과제 3-3-2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기준 마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인력 확충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인력 확충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설·설비 확충 －거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운영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인력 확충 －거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운영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인력 확충 －거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운영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인력 확충 －거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제4절 사회참여 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 정책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지난 10여 년 간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문화예술정책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문화예술 진흥 정책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문화예술 진흥 정책 전반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이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미.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 전반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이 녹아들지 않고 있음.

<표 4-55> 2013-2017 함께누리 지원사업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국 고	함께 누리 지원 사업(합계)	4,200	11,300	22,100	21,300	7,000
	①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1,750	2,950	2,950	2,950	3,150
	②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950	900	900	900	900
	③ 한빛예술단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300	400	400	500	450
	④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 대전	100	150	150	150	150
	⑤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400	400	400	400	500
	⑥ 장애인 예술경진대회	200	200	200	200	200
	⑦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500	500	500	-	-
	⑧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설립	-	5,300	15,800	14,800	-
	⑨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개최	-	300	300	300	300
	⑩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	-	200	500	400	400
	⑪ 장애인 클래식 공연 지원	-	-	-	400	400
	⑫ 장애인 무용전문인력양성	-	-	-	-	250
	⑬ 장애인 국제무용대회	-	-	-	300	300

□ 공정성이 결여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 ‘함께누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일한 장애인 예술 지원 사업.

- 2017년 지원사업 총 규모는 70억 원.
- 2017년 함께누리 지원사업비 70억 원 중 반 이상이 장예총 등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단법인 등에 지정 지원되면서 공모사업 비중이 적음.
-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풀뿌리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에 대한 체계 개선 필요.
- 지역의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향수 지원 사업비가 부족함.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 2016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일반국민에 비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5.4% 수준이며,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88.1%로 대부분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은 49.8%, 활용은 64.5%로 일반국민에 비해 정보화 활용 및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6> 연도별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단위 : %)

연도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	디지털정보화 활용수준	디지털정보화 종합수준
2014	79.9	45.0	59.7	60.2
2015	83.5	47.0	62.4	62.5
2016	88.1	49.8	64.6	65.5

자료: 2016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6년 민간부문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평균 58.8점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 특히,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의료기관의 경우 60점 미만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언론사는 물론 소셜네트워크(SNS) 등 민간부문의 경우 대부분이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이 어려워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대체 자료 제작 현황

- 2012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설립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디지털음성도서, 수어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을 2012년(14,065권)에서 2017년(34,167권)으로 142% 증가하였음(문화체육관광부, 2017).
- 2017년 6월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장애인정보누리터)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433명으로 청각장애인 35%(496명), 시각장애인 23%(329명), 지체장애인 20%(292명) 순으로 나타나 타 장애유형보다 시·청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의 어려움과 대체자료 제작·보급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장애인 방송 제공 현황

- 2016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결과 전체 의무사업자(139개사)의 95.7%가 편성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방송통신위원회, 2017).
- 특히, 자막방송의 경우 4개 지상파(KBS, MBC, SBS, EBS)의 경우 100%를 제공하고 있으나, 화면해설의 경우 10%내외, 수어통역방송 6%내외만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방송시간대에는 화면해설 및 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비장애인과 비교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7> 2016년 장애인방송 편성업무 평가결과

(단위 : %)

방송사업자명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통역방송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한국방송공사	100.0	100.0	10.0	11.1	5.0	6.0
㈈문화방송	100.0	100.0	10.0	11.0	5.0	6.2
㈈SBS	100.0	100.0	10.0	10.6	5.0	5.7
한국교육방송공사	100.0	100.0	10.0	12.2	5.0	6.1

자료 : 2016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결과 발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편의증진 관련법 시행에 따른 성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8년 4월 시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2006년 1월 시행)의 시행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동편의가 증진된 성과는 있었음.
 - 하지만 제도와 제도 사이의 연계 미약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이동권 정책, 편의증진 보장정책, 의사소통지원정책이 필요함.
- 특별교통수단이 운용되고 있지만, 긴 대기시간, 특별장치가 필요 없는 장애인에게도 특별교통수단 배정, 통행료 면제 제외, 타 지역으로의 이동 제한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저상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지원을 위해서는 저상시외버스, 저상고속버스, 저상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도입 의무화 필요.
- 이동 편의보장의 연계성이 부족함에 따라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근거리의 새로운 곳을 가고자 할 때 휠체어사용 장애인은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음. 근거리 이동시 휠체어장애인은 새로운 목적지를 갈 때 단차 등으로 인해 먼 길을 우회하거가 아예 갈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함.
 - 전철 등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시각안내, 발달장애인용

쉬운 글 안내 등이 없거나 부족하다 보니,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화에 따라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 가능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대상 시설의 용도 및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편의시설은 특정 용도 또는 법에서 정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능함.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제한을 받고 있음.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세탁소, 연구소, 독서실 등 다수가 있음.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였으나,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 2014년 기준 112,204건의 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지하고 있지만, 2014년 7월 기준 전동보장구 충전소는 1,115개에 불과함.

-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과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사소통 지원체계는 미약함.

- 의사소통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육에서의 배제, 노동시장의 접근 불가능,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등으로 이는 자립생활 불가능과 재할 실패의 결과로 나타남.

- 2011년 뇌병변장애인 욕구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뇌병변장애인의 70%가 언어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음. 언어중복뇌병변장애인 중 의사소통지원 서비스

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약 54,000명 정도로 추정됨. 그럼에도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알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비율은 14%에 불과함.

- 이외에 27만 명의 청각, 언어장애인과 20만 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도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완대체의사소통 서비스 지원제도도 필요하나, 현재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지원법 등에 제한적으로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적(인지) 장애로 인해 문자해독과 관련 정보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갖는 특성을 고려한 선거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참정권보장도 미흡한 현실임.
- 공직선거법 제51조에 따라 현행 투표용지는 기호번호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고, 기표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2. 추진계획

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선

□ 추진근거 및 배경

-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제로 개선하여 장애인 예술참여 및 장애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4-1-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확립

-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독립성, 자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기관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팔길이 원칙' 확립
- 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 예술 참여 및 장애인 창작 역

량 강화에 전문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58> 세부과제 4-1-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확립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수립	-민간 전문가로 투명한 지원 심의 위원 구성 및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지원 사업 실행 -결과 평가	-좌동	-좌동	-좌동

나.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인 문화예술 주류화 및 보다 공정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장애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4-2-1) 문화예술 향수지원 사업비 규모 확대 및 공모사업 비중 확대

□ 추진내용

-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풀뿌리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 확립.
 - 최근 5년간 문화부 예산 평균 인상률 약 10%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사업에 대한 매년 국고보조금 10% 인상.
- 공모사업 비중을 늘려나가 지원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59> 세부과제 4-2-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공모사업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로드맵에 따라 공모 사업 확대 -결과 평가	-좌동	-좌동	-좌동

(4-2-2)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편의시설 조성 사업

□ 추진내용

○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박물관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마련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의 문화기반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가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0> 세부과제 4-2-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편의시설 설치 로드 맵 수립	-로드맵에 따라 편의 시설 설치 -결과 평가	-좌동	-좌동	-좌동

(4-2-3)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추진내용

○ 2017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사업 등에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에 맞는 장애인 예술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1> 세부과제 4-2-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 -구체적 프로그램 및 실행 로드맵 확립	-로드맵에 따라 프로그램 실행 -결과 평가	-좌동	-좌동	-좌동

(4-2-4) 장애인 예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추진내용

-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와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전문 기획자 등을 양성함.
- 예를 들어 장애인 예술 분야의 독특한 감성 미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장애인 아트 워크(art worker) 양성 등.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2> 세부과제 4-2-4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TF 구성 -전문인력 양성 주체 및 기관 확정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정, 사업 개시	-사업 지속 -결과 평가	-좌동	-좌동	-좌동

(4-2-5) 장애 예술인/예술단체 창작 공간 확충 사업

□ 추진내용

- 지역의 유휴공간 및 기존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등)에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을 조성하여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 예술가를 선발하여 창작 레지던시를 제공함.

-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생활문화센터를 선정할 때 지자체에 장애인 창작공간을 의무시설로 요구.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3> 세부과제 4-2-5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창작 레지던시 구축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확립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창작 레지던시 사업 개시 -결과 평가	-좌동	-좌동	-좌동

(4-2-6)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 추진내용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여 발달장애인 전문 예술인을 양성함.
-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로서의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함.
-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기발표회, 홍보지 발행, 만족도 조사 등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4> 세부과제 4-2-6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5개년 사업 계획 및 로드맵 수립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사업 개시 -결과 평가	-좌동	-좌동	-좌동

(4-2-7) 대학로 장애인 예술 전용 공연장 조성 사업**□ 추진내용**

-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장애인예술 전용 공연장 건립 창작 편의성 제공을 통한 장애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 장애인의 공연예술 접근성 향상 및 장애인 예술의 홍보 효과 제고.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5> 세부과제 4-2-7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문가 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 및 리모델링 연구 용역 실시	-장애인 예술 전용극장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공사 개시	-장애인 예술 전용극장 위탁 및 운영	-좌동	-좌동

다. 무장애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통합이용환경 구축**□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32조의2(웹 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 도서관법 제45조2항3호(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지원 및 제공)

- (추진배경) 기존 정보격차해소(PC, 웹)추진 방향을 모바일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 및 보급 확산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능정보화사회 통합 이용환경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대체자료 제작, 공공도서관 이용환경 개선 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접근 기회 제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대체자료 부족 및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움.
- 방통융합·스마트미디어로의 환경변화에 따라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미디어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미디어복지 이용환경 조성이 필요함.
- PC에서 인터넷 이용에서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 가전제품, IPTV 등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이 가능한 지능정보사회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함.

(4-3-1) ICT재활융합 기반의 신정보격차 해소 추진

□ 추진내용

○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확대

- 웹 접근성에 한정된 정보 접근성 대상을 기술융합제품, 터치스크린 및 SW 등으로 확대하고,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 의무화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지능정보화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장애인의 웹 및 모바일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 인력양성, 기술자문 등 정보접근성 인식 및 수준을 제고함.
- 정보접근성 표준제정, 실태조사 시 일부 장애유형에 국한시키지 않고, 장애유형별 형평성을 갖추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장애유형 장애인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추진함.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추진

-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사

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에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지원을 추진함.
- 장애인이 일상생활, 교육, 직업 등에서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가까운 곳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설 체험관 및 이동 체험관을 구축·운영함.

○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화

- 장애인이 지능정보화사회 참여에 필요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집합교육과 중증장애인을 방문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6> 세부과제 4-3-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정보접근성 의무화 대상 확대를 법제도 정비	-모바일 품질인증 제도 추진	-정보접근성 인증제도 확대	-좌동	-좌동
-모든 장애유형을 포함한 웹 접근성 표준 개정	-실태조사, 인식제고	-실태조사, 인식제고	-실태조사, 인식제고	-실태조사, 인식제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종합계획 추진 제도 마련	-정보통신 보조기기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	-정보통신 보조기기 협의체 운영	-정보통신 보조기기 협의체 운영	-정보통신 보조기기 협의체 운영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화교육 실시

(4-3-2)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지능정보사회 참여확대

□ 추진내용

○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

- 장애인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체계를 정립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함.

○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수집 및 정보자료실 설치·보급

- 개정 도서관법 시행(2012. 8. 18.)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고함.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7> 세부과제 4-3-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9,500종)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20개관)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10,000종)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30개관)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15,000종)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40개관)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20,000종)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50개관) -도서관법 개정 추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25,000종)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60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

(4-3-3)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 추진내용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10만명)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2016년 45% → 2021년 100%) 및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제고
- 광역지자체와 연계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대상 방송수신기 우선보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 제고를 위한 수어방송의 영상을 크기 조정·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추진.

- 장애인방송 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방송 평가센터 개설·운영 추진
 - － 자막·수어방송 정확도 모니터링, 화면해설방송 질적 수준 모니터링 및 장애인방송 편성 방송사업자 만족도평가 등 장애인방송에 대한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제도 마련.
 - － 한글자막 실시간방송 모니터링, 수어통역방송 모니터링, 지상파 등 장애인 방송 만족도 실 시 등 장애인 방송에 대한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센터 추진.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8> 세부과제 4-3-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68%) -스마트 수어방송시범 운영 확대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검증 모니터링 체계마련	-장애인 재난방송 시범실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80%)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검증 모니터링 시범운영	-장애인 재난방송 상용화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90%)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검증 모니터링 상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100%) -장애인 방송 평가센터 개설 관련 제도 마련	-장애인 방송 평가센터 개설

라. 실질적인 만족도 증대를 위한 이동권 보장

□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성과가 있었음에도, 제도와 제도 사이의 연계 미약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이 운용되고 있지만, 긴 대기시간, 특별장치가 필요 없는 장애인에게도 특별교통수단 배정, 통행료 면제 제외, 타 지역으로의 이동 제한 등 운

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지원을 위해서는 저상시외버스, 저상고속버스, 저상마을버스 도입도 의무화 되어야 함.
- 전철 등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시각안내, 발달장애인용 쉬운 글 안내 등이 없거나 부족하다 보니,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음.

(4-4-1) 교통수단 이동지원 강화

□ 추진내용

- 장애인 교통이동 지원강화
 - 특별교통수단 기준 강화(200명 당 1대에서 100명 당 1대로)
 - 리프트 장치가 필요 없는 장애인(시각장애인, 목발 사용 장애인 등)을 위한 리프트 장치가 없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시행
 - 일반택시 이용 바우처 제도 도입(교통수당 도입)
 - 특별교통수단 안전관리 기준강화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연계 강화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별 동일한 운영 규정 마련 및 집행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 저상버스 의무범위 확대
 - 저상시외버스, 저상고속버스, 저상마을버스 의무화
 - 노후 저상버스 대체 지원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69> 세부과제 4-4-1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특별교통수단의 기준 강화	-등급제 개편(2급 →중증)에 따라 실질적인 기준 강화	-200명당 1대에 서 150명 당 1 대로 확대	-좌동	-100명당 1대로 확대	-좌동
리프트 필요 없는 특별교통수단 기준 마련	-1-3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기준 마련	-좌동	-200명당 1대에 서 150명 당 1 대로 확대	-좌동	-100명당 1대로 확대
일반택시 이용 바우처 제도 도입	-바우처 지급 기 준 마련	-보행장애인에게 바우처제공	-좌동	-제공 대상 및 액 수 확대	-제공대상 및 액 수 확대
특별교통수단 안전관리 기준 강화	-특별교통수단 안 전관리 기준 강 화를 위한 연구	-기준 강화	-좌동	-좌동	-좌동
장애인특별교통수 단 지역 간 연계 강화	-통행료 할인 기 준 개선 연구 -주체별 동일 운 영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	-기준 개선 -규정 마련	-광역이동지원센 터 설립	-좌동	-좌동
저상버스 의무범위 확대	-관련 연구 진행	-저상시외버스 도 입 제도 마련	-시행, 지원 강화 -저상마을버스 도 입 제도 마련	-시행, 지원 강화	-시행, 지원 강화

(4-4-2) 이동 편의보장 확대

□ 추진내용

○ 교통약자 이동안내 서비스제공 확대

- 전철 등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시각안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 안내 등 확대
- 지도어플리케이션 운영사업자 지원 강화
- 보행자 네비게이션, 비콘 등 접목한 보행약자용 기술개발 활용
-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정보 업데이트

○ 이동지원관련 안전 기준 강화

- 전철 등의 격차(틈), 단차 줄이기
- 항공, 선박 탑승 시 전동휠체어 탑승 규칙의 일원화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70> 세부과제 4-4-2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교통약자 이동안내 서비스제공 확대	-전철 등에 시각 장애인, 청각장 애인 안내 강화 -발달장애인 쉬운 글 안내를 위한 연구 -지도 어플케이 션 운영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 준 마련 연구	-좌동 -발달장애인 쉬운 글 안내 기준 마 련 -운영사업자 지원	-좌동 -쉬운글 안내 시 작 -좌동 및 사용자 의 피드백을 통 한 정보 업데이 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이동지원관련 안전 기준 강화	-전철 등의 격차 및 단차 줄이기 지속 시행 -탑승 규칙 일원 화를 위한 연구	-좌동 -탑승 규칙 일원 화	-좌동 -좌동	-좌동 -탑승규칙 개정	-좌동 -좌동

(4-4-3) 장애인주차편의 확대

□ 추진내용

○ 장애인주차장 의무구역 확대

- 2005년 이전 건립 공공주택 등에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
-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으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
행 가능

○ 주차제한구역에 장애인차량 임시 주차 허용

-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면도로 등 방문지가 인접한 곳에
일정 시간(예: 1시간 정도)동안 주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시행
- 주차금지 구역이지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지원을 위해 도로교통에 방해
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주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시행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71> 세부과제 4-4-3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주차장 의무구역 확대	-2005년 이전 건립 공공주택 등에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 기준 마련	-기준 마련 및 시행	-좌동	-좌동	-좌동
임시 주차 허용	-임시주차 허용을 위한 기준개선 연구	-기준 개선	-시행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 개선	-시행

(4-4-4)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 추진내용

○ 보행환경 개선

- 휠체어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 및 보도블록 평탄화
- 통행로에 물건 적치 금지
- 가로등 조도 높이기
- 공간지도 활용 매핑을 통해 안전 경로를 찾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72> 세부과제 4-4-4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인도 평탄화 -통행로 물건 적치 금지 기준 강화 -가로등 조도 측정 기준 변경 및 강화 -공간지도 활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지속 지원강화 -시행 -시행 -보급 강화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마.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편의증진 보장

□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시설의 용도 및 면적을 제한함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은 특정용도 또는 특정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따라서 장애인은 세탁소, 연구소, 독서실 등과 같은 일상생활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였으나,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지원과 관련된 법률 미비로 인해 충전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4-5-1) 실효적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추진내용

-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범위 확대
 -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범위 확대에 따른 욕구조사 실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에 속한 시설 중 단독주택 및 특수 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장애인등 편의증진보장법」 대상 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면적 및 용도제한 폐지하여 모든 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함.
 - 편의시설 설치 의무항목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예, 쉬운 글, 그림, 간판 등) 등 기준 개정
- (일반주택,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서의 편의증진보장
 - 편의증진비용 지원
 -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지원 의무화
- 전문가 양성 및 국민 인식개선

- 편의증진 전문가(BF전문가 포함) 양성
- 편의시설 관련자(설계, 시공, 공무원, 관련 과 대학생 등)에 대한 장애인식 교육 강화

○ 장애인편의증진 제품 생산 및 개발 지원

- 장애인편의증진 제품 생산 지원
- 생산을 위한 제품 개발 지원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73> 세부과제 4-5-1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범위 확대	-육구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편의 시설 연구	-면적 및 용도제한 폐지 기준 마련 -발달장애인의 시설 기준 마련	-기준 확대 시행 -발달장애인의 시설 기준 확대 시행	-좌동 -좌동	-좌동 -평가에 의한 기준 개정
주거공간에서의 편의증진보장	-비용지원 주체를 국가로 변경	-지원시행	-지원 확대	-좌동	-좌동
전문가 양성 및 국민인식개선	-전문가 양성 관련 연구 -인식개선을 위한 교안마련 등 연구	-전문가 양성 기준 마련 -인식개선교육 실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진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장애인의증진제품 생산 및 개발지원	-제품 생산 지원 확대	-제품개발지원 확대	-지속적 확대	-좌동	-좌동

(4-5-2)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 추진내용

○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시설(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앞 등)을 위주로 전동 보장구 충전을 위한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설

치.

- 사용하지 않는 공중전화 박스 등을 활용하여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74> 세부과제 4-5-2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의무화	-설치의무대상 1 차 설정	-설치의무대상 확 대	-시행	-설치의무대상 2 차 확대	-시행

바. 의사소통 지원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과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사소통 지원체계가 미약한 상황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완대체의사소통 서비스 지원제도도 필요하나, 현재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지원법 등에 제한적으로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적(인지) 장애로 인해 문자해독과 관련 정보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갖는 특성을 고려한 선거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참정권보장도 미흡한 현실임.

(4-6-1)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및 참정권 보장 강화

□ 추진내용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 공공문서에 대한 쉬운 글 버전 제작 의무화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운 글 버전 제작을 의무화함.

○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강화

-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쉬운 글 버전 등) 제작
- 발달장애인용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 정당 심벌 등이 포함된 별도의 투표용지 제공(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표보조기구 개발 및 제공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75> 세부과제 4-6-1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의무화 공공문서 범위 설정 연구 -쉬운글 버전 제작 연구	-의무화 범위 1차 설정	-시행	-의무화 범위 2차 설정(확대)	-시행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강화	-선거공보제작을 위한 지침 마련 -기표보조기구 개발	-좌동	-국회의원 선거에 서 적용 -기표보조기구 지원	-좌동	-좌동

(4-6-2) 시청각, 뇌병변 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공과 훈련

□ 추진내용

○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공 확대 및 문화 개선

- 청각·언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에게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제공 확대
- 의사소통 보조기기 훈련 확대
- 의사소통 기기 등을 활용하여 토론 및 연설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 의사소통 보조기기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 필요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76> 추진과제 4-6-2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공 확대 및 문화 개선	-보조기기 제공 확대 -훈련 확대 -문화개선	-지속적 확대 및 개선	-좌동	-좌동	-좌동

제5절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낮은 가구소득과 높은 빈곤율

- 2015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50만 3천 원으로 비장애인가구 345만 원의 72.6%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하지만 2000년대 중반 기준 OECD 국가에서 근로연령층 평균소득 대비 장애인의 소득 비중은 85%로(OECD, 2010),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볼 수 있음.

<표 4-77>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단위: 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가구	200.4	219.4	242.5	250.3
비장애인가구	314.1	329.0	337.4	345.0
비율	63.8	66.7	71.9	72.6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원자료 분석

- 장애인의 빈곤율은 2015년 기준 개인빈곤율 41.7%(비장애인의 2.7배), 가구빈곤율 40.9%(비장애인가구의 2.0배)에 달해 비장애인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장애인연금이 확대 시행된 2014년을 제외하면 거의 감소하지 않았음.
- 2000년대 중반 OECD 국가에서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평균 22%로 비장애인가구 빈곤율 14%의 1.5배 수준이며(OECD, 2010),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음.

<표 4-78>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빈곤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개인빈곤율	장애인	46.9	46.7	42.1	41.7
	비장애인	16.6	15.8	15.8	15.2
가구빈곤율	장애인가구	45.9	45.8	41.3	40.9
	비장애인가구	21.3	20.8	21.0	20.5

주: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선은 균등화 소득 중위값의 5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원자료 분석

○ 2010년 도입하고 2014년 확대 적용된 장애인연금의 영향으로 최근 장애소득 보장급여가 확대되었지만 수급자가 등록장애인의 14%에 그치고(2016년 기준), 장애소득보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자 수가 최근 정체되어 있는 등 여전히 장애소득보장제도의 배제 정도가 큼.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현금급여(근로무능력급여) 지출은 GDP 대비 0.5%로 OECD 평균 2.0%의 1/4에 그치며(OECD, 2017), 2012년 기준 근로연령층(20~64세) 인구 대비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도 1.6%로 OECD 평균 6.0%의 약 1/4에 그침(OECD, 2016).

○ 또한 현재 장애판정은 전적으로 의학적 기준에 의존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모든 급여를 장애등급에 연계하는 체계로,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되었음에도 적절한 소득보장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양산함.

– 더불어 장애판정에서 근로능력 평가의 부재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어렵게 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을 통한 빈곤탈출 및 소득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음.

□ 여전히 높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미비하여 발생하는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최근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급여와 서비스가 확대되었지만 실제 지출되는 추가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특히 일부 장애유형은 매우 높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2015년 기준으로 발달

장애는 월평균 67만 원, 중증 지체장애인은 57만 원,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51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김태완 외, 2017).

<표 4-79> 장애로 인한 1인당 월평균 추가비용

(단위: 천원)

지체 중증	지체 경증	뇌병변 중증	뇌병변 경증	시각 중증	시각 경증	청각언어 중증	청각언어 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573.9	145.9	511.8	369.8	287.9	139.2	195.1	174.2	671.7	157.5	176.6

주: 2015년 기준(원자료: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 김태완 외(2017: 415)에서 정리

○ 하지만 현재 지급되는 추가비용 보전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른 수급자격에 제한이 크고 급여액도 실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함.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8만원, 차상위계층에게 7만원, 차상위 초과자에게 2~4만원이 지급되며,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월 4만 원, 18세 미만 중·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은 월 10~20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한됨.

□ 직업재활시설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제도와 현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 판매 및 용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근로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일정 비율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음.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을 수 있음.

- 2016년 직업재활시설 582개소(근로사업장 63, 보호작업장 516, 직업적응 훈련시설 3)에 장애인이 1만 7,131명(중증 1만 6,198명)이 있음.

○ 문제의 배경

-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어서 영리기업으로서 특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장애인 고용과 복지 두 가지 역할 중 어느 하나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임.
- 현재의 직업재활시설제도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이용 장애인’을 ‘근로장애인’으로 잘못 분류하도록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다시 말해, 근로활동이 아닌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이용 장애인, 즉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현재의 직업재활시설제도는 직업재활시설이 근로능력이 우수하여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가 가능한 장애인들을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데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과 낮은 전이율로 인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국회(국정감사) 및 장애계로부터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장애계에서는 일부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보다는 시설 원장과 종사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함. 이는 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받으면서 장애인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통해 낮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임.
- 중증장애인 고용, 특히 발달장애인, 중증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고용은 민간 영리기업에서는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즉 영리와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영리와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 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일정 정도 있는 중증장애인에 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조직형 직업재활시설’과 근로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작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활동형 직업재활시설’로 구분이 가능함.

○ 주요 문제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매출규모(2016년 총 5312억 원)가 적고 그나마 장애인단체 생산시설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시설(복지성)과 기업(영리성)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제도는 직업재활시설의 영리성(생산활동, 고용)을 뒷받침할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른 법률(고용, 건축, 세금, 중소기업 관련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근로장애인의 임금향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그럼에도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사회와 장애계의 요구가 있고 생산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지원 여부와 가능 정도가 상이함. 지자체 재정여건 때문에 근로사업장 성격을 지닌 직업재활시설이 보호작업장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발생함.

○ 국제동향(보호작업장 폐쇄 등)

- 보호작업장의 경우 UN 장애인권리위원회(2014)에서 낮은 수준의 임금을 우려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폐지를 권고함.
- 독일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주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하여 법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 구분하여 노동권(고용보험 제외)과 사회보장권(생존권)을 보호함.
- 또한 보호작업장 내 장애인인 ‘근로자와 유사한 자’들에게 사회보험(고용보

험 제외) 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음. 독일 보호작업장 내 장애인 임금은 ‘기본금(약 10만원) + 생산성 비례임금(약 20~3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이 금액이 생활에 필요한 금액수준 이하이면 그 차액을 정부가 생존권 보호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보충해주고 있음.

- 일본은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향후 경쟁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로A형’(최저임금지급 작업장)과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로B형’(최저임금지급 무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장애인고용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쟁고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의 고용과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 21.7%, 실업률 9.2%, 고용률 19.7%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3%의 1/3, 실업률 3.7%의 3배, 고용률 61.0%의 1/3 수준으로 나타남(구연진 외, 2016).
 - 특수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이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이 필요함.
 - 다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경증 발달장애인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장애인과 분리된 별도의 직장이나 작업공간보다는 일반 사업체로의 지원고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80> 특수학교·특수학급 졸업생 취업현황(2012~2016년)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졸업생 수	7,493	8,103	8,672	8,979	9,482
취업자 수	2,338	1,788	2,187	1,710	1,694
취업률	31.2	22.1	25.2	19.0	17.9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교육부(2016)

- 그동안 장애인 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제공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가 절반에 이르며,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고용이 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 직업적 지위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아 일자리의 질을 대폭 지원할 필요가 대두됨.
 - 장애인 취업지원 및 능력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 고용서비스 제공 및 고용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형 고용환경 기반 구축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함.
- 2017년 출범한 새 정부에서의 일자리 정책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임.
 -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전략임.
 - 전체 인구보다 낮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고용 현상을 고려할 때,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추진계획

가. 장애소득보장급여 개편

□ 추진근거 및 배경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국정과제 42)을 제시함.
- 장애인단체(2017)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에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특례제도 도입을 제안함.
- UN 장애인권리위원회(2014)는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

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최저생계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인특성, 환경, 욕구를 고려할 것을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2013)의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에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장애수당의 현실화를 권고함.

(5-1-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지급대상 개편

□ 추진내용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2017년 현재 20만 6,050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동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대상 개편

- 장애인 소득·고용 분야의 근로능력평가 도입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지급대상을 현재 18~64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서 18~64세 완전근로장애인으로 개편함(세부과제 5-2-1 연계).
- 지급대상을 완전근로장애인으로 개편할 경우 지급대상의 규모와 성격이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능력평가 시범사업 일정에 따라 완전근로장애 인구를 추정하고 소득·재산 실태를 분석하여 현 목표수급률 70%를 재검토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81> 추진과제 5-1-1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25만 원으로 인 상	-소비자물가변동 률에 따라 조정	-좌동	-30만 원으로 인 상	-소비자물가변동 률에 따라 조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대상 개편	-현 중증장애인 기준 적용	-의학적 중증 기 준 적용 -근로능력평가 1 차 시범사업 결 과 분석(완전근 로장애 인구 추 정 및 소득·재산 실태 분석)	-좌동 -근로능력평가 2 차 시범사업 결 과 분석(완전근 로장애 인구 추 정 및 소득·재산 실태 분석)	-근로능력평가 3 차 시범사업 결 과 분석(완전근 로장애 인구 추 정 및 소득·재산 실태 분석) -장애인연금법 개 정 및 선정기준 액 고시	-완전근로장애 기 준 적용

(5-1-2)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통합 및 현실화

□ 추진내용

○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통합

- 장애인연금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하고, 추가비용 보전급여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경증장애인)을 ‘장애추가비용수당’(혹은 ‘장애수당’)으로 통합함.

○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현실화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사회적·제도적 환경 미비 때문에 발생하므로 국가가 100%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물급여로 보전할 영역이 많고 향후 의료보장성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이동지원 확대 등으로 추가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므로 2022년까지 실제 추가비용의 70%를 단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소득과 관계가 높지 않으므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현재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 대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현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등록장애

인에게 지급함.

- 추가비용은 장애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급여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연령대, 장애정도,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화하고, 최근 추가비용의 변화를 급여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비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급여액에 반영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82> 추진과제 5-1-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비용 분석 - 추가비용 보전급여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 장애추가비용수당 시행(연령대·장애정도·장애유형에 따라 차등화, 실제 추가비용의 50% 보전)	- 좌동	- 좌동	- 장애추가비용수당 시행(연령대·장애정도·장애유형에 따라 차등화, 실제 추가비용의 70% 보전)

(5-1-3)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체계 개편

□ 추진내용

○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체계 개편

-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한 1~4급의 장애등급 체계를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완전근로장애 및 부분근로장애 체계로 개편함(세부과제 5-2-1 연계).
- 현재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의한 의학적 평가의 최저기준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완전근로장애', '부분근로장애', '비근로장애'를 판별한 후 완전근로장애와 부분근로장애에 대해 장애연금을 지급함.
- 이 때 의학적 평가에서 장애유형의 확대와 유형별 최저기준의 재조정,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의 의학적 최저기준 일원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평가가 정착된 이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장애연금 감액 및 지급중지를 고려함(장기과제).

○ 기준 가입기간 확대 및 지급률 상향 조정

-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장기적으로 노령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연금의 급여액을 상향하기 위하여 기준 가입기간과 지급률을 상향 조정함.
- 기준 가입기간은 현재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지급률은 완전근로장애 100%, 부분근로장애 75%로 설정함(장애일시금은 연금으로 전환).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83> 추진과제 5-1-3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민연금 장애등급체계 개편	-현 국민연금 장애등급체계 적용	-좌동 -근로능력평가 1차 시범사업 결과 분석(장애연금 수급권자 인구 추정)	-좌동 -근로능력평가 2차 시범사업 결과 분석(장애연금 수급권자 인구 추정)	-좌동 -국민연금 장애등급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 -근로능력평가 3차 시범사업 결과 분석(장애연금 수급권자 인구 추정)	-국민연금 장애등급체계 개편 적용
기준 가입기간 및 지급률 개편			-기준 가입기간 및 지급률 개편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	-기준 가입기간 및 지급률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	-기준 가입기간 및 지급률 개편 적용

(5-1-4)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대상 확대

□ 추진내용

○ 국민연금 가입 전 장애발생에 대한 특례 도입

-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10년에 도달할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함.
- 연금보험료 납부 최소이력을 충족한 직후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적용함(장애등급체계 개편 이후에는 근로능력평가 실시).

○ 국민연금 가입 후 장애 악화에 대한 특례 도입

-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 후 장애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함.
- 장애상태 악화 인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적용함(장애등급체계 개편 이후에는 근로능력평가 실시).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84> 추진과제 5-1-4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민연금 가입 전 장애발생에 대한 특례 도입	-특례 도입에 따른 예상 수급권자 추정 및 재정 추계 분석	-특례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특례 적용	-좌동	-좌동
국민연금 가입 후 장애악화에 대한 특례 도입	-특례 도입에 따른 예상 수급권자 추정 및 재정 추계 분석 -장애악화 인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기준 마련	-특례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특례 적용	-좌동	-좌동

나.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국정과제 42)을 제시함.
- 장애인단체(2017)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증장애인 근로소득 공제를 상향조정,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제안함.
- 고용노동부(2015)의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최저임금 감액제도) 추진을 제시함.

- UN 장애인권리위원회(2014)는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등급판정제도의 개편, 보충임금제도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2013)의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에서 노동활동의 제약정도에 따른 장애평가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결정, 보조금고용제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권고함.

(5-2-1) 근로능력평가 도입 및 전달체계 구축

□ 추진내용

- 근로능력평가의 도입 의의 및 적용 영역
 - 근로능력평가는 장애소득보장 및 장애인고용 정책 영역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으로 도입함.
 - 구체적인 적용 영역은 장애인연금, 국민연금(장애연금), 장애인임금보조제도(신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로 설정함.
- 장애평가
 - 장애등록의 요건으로서 기존 의학적 평가(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록과 국민연금의 장애심사)의 최저기준을 유지하며, 등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소득보장급여(장애인연금 및 장애연금)와 고용서비스(장애인임금보조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수급자격 결정을 위해 추가적인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함.
 - 이 때 의학적 평가에서 장애유형의 확대와 유형별 최저기준의 재조정,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의 의학적 최저기준 일원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완전근로장애’, 근로능력에 제약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근로가 가능한 ‘부분근로장애’, 근로능력의 제약 정도가 미약한 ‘비근로장애’를 판별함.
 - 완전근로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에게는 소득보장급여(장애인연금 및 장애연

금)를 중심으로 지원함.

- 부분근로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에게는 소득보장급여 일부(장애연금)를 제공하고,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고용서비스 연계를 핵심으로 지원함.

○ 제도별 적용방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완전근로장애를 대상으로 지급함.
- 추가비용보전급여(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는 근로 능력과 무관하므로 의학적 평가 기준만 적용함(등록장애인 전체).
- 장애연금(국민연금)은 완전근로장애와 부분근로장애에 대해 지급률을 차등화하여 적용함.
- 장애인임금보조제도는 완전근로장애 및 부분근로장애를 신청대상으로 함.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완전근로장애와 부분근로장애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완전근로장애에 대해 '2배수 고용 인정제도'(더블카운트)를 유지함.

○ 시범사업 및 전달체계 구축

- 근로능력평가 도구 개발을 바탕으로,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전달체계를 체계화하고 도구를 정제하여 2022년 본격 적용함.
- 근로능력평가 및 고용서비스 연계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기존 인프라를 확충하여 활용하고, 근로능력평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85> 추진과제 5-2-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근로능력평가 도구 개발 -장애인 소득-고용 연계방안 마련	-1차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2차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3차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법령 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고용법 등) -인프라 구축(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근로능력평가 및 소득-고용 연계서비스 적용

(5-2-2) 장애인임금보조제도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 추진내용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폐지
 -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함.
 - 대신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장애인임금보조제도 도입).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의 강화 및 모니터링
 -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임금보조제도 적용 전까지 기존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억제함.
- 장애인임금보조제도 개요
 -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임금보조제도는 근로능력평가가 도입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하며, 완전근로장애 및 부분근로장애를 기본적인 신청 대상으로 함(세부과제 5-2-1 연계).
 -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별 직무에 따른 작업능력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성격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에 대한 평가가 아닌 임금보조 적격성 평가로 전환함.
 - 작업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임금보조율(최저임금액 대비 임금보조금 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최대 임금보조율을 제한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86> 추진과제 5-2-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 강화 및 모니터링	-좌동	-좌동	-좌동 -관련 법령 개정(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적용 및 임금보조제도 실시(완전근로장애 및 부분근로장애 대상)

(5-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 추진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조사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참여소득, 근로·사업 소득의 공제방식을 현행 정률공제 방식에서 ‘정액공제 + 초과분 정률공제’ 방식으로 개선함.

– 이는 빈곤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근로유인 강화와 탈수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장애인 소득공제 개선방안

– 현재 50% 정률공제를 적용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참여소득은 ‘정액공제 + 초과분의 50% 공제’로, 현재 30% 정률공제를 적용하는 장애인의 근로·사업 소득은 ‘정액공제 + 초과분의 30% 공제’로 개선함.

– 정액공제 소득액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함.

– 신설되는 정액공제의 일부를 자산형성지원통장(희망키움통장 등)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 기반 마련을 지원함.

–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에 따라 추진될 청년 및 대학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수준을 고려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87> 추진과제 5-2-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소득공제 개선안 마련(직업생활 추가비용 추정, 개선안의 효과성 검토)	-장애인의 직업재활 참여소득 및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정액공제 + 초과분 정률공제 방식 적용	-좌동	-좌동	-좌동

(5-2-4) 국민연금의 재활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직장복귀 촉진

□ 추진내용

○ 1단계: 장애연금 수급자 대상의 부가서비스

- (대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연금 수급자로서 타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로 함.
- (지원내용) 개별고용계획 수립을 통해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재활수당(국민연금기금 재원)을 지급함.
- (전달체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수급자 선정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를 위탁하고, 국민연금기금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업비(직업훈련비용 포함)를 지원함.
- (시행시기) 2018년 사업계획(서비스 모형) 수립, 관련 법령 정비, 인프라 구축 후 2019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를 통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함.

○ 2단계: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의 부가서비스

- (대상) 1단계 사업 대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상병이 발생하여 장애연금 신청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산재보험 수급자 제외)로 확대함.
- (지원내용) 수급자에게는 1단계와 같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에게는 의료재활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후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전달체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수급자 선정 후 직업재활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하며, 의료재활서비스는 본인부담금 증빙확인 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시행시기) 2021년 사업 확대 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2단계 사업을 실시함.

○ 3단계: 장애연금 신청자에 대한 의무서비스(장기과제)

- (대상) 2단계 사업과 동일한 대상을 유지하되, 장애연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재활서비스 실시를 의무화함.
- (지원내용) 2단계와 동일
- (전달체계) 2단계와 동일
- (시행시기) 3단계 사업은 장애심사에서 근로능력평가가 확대·정착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 제한이 적용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88> 추진과제 5-2-4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1단계 재활서비스 사업 실시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법령 정비, 인프라 구축	-1단계 재활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1단계 재활서비스 사업 전국 실시	-좌동 -2단계 재활서비스 사업 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2단계 재활서비스 사업 실시

다. 장애인 고용 확대

□ 추진근거 및 배경

○ 정부·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 상향조정 및 고용 부담금 신설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함.
-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 부문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 정부부처, 헌법기관, 공공기관은 만성적으로 고용률이 낮음.

○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

- 공무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실시 여부, 규모 등이 상이하여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그 격차의 현황 및 정보 파악이 어려움.

- 비공무원: 2016년 12월 기준 정부부문의 비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4.16% 수준이며 일부부처의 경우는 이행수준이 매우 미흡. 특히, 교육부의 경우는 1.85%로 중앙행정부처 전체 고용률의 절반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그러나 교육부의 경우 본부, 소속기관 및 국립대학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관이 다수 존재함.

○ 장애인 맞춤형훈련 활성화

- (맞춤훈련센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고용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상대적 취약계층을 위한 훈련센터 설립 및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발달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63.9%를 차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령기에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가 없어, 노동시장 진입까지 체계적인 준비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음.
- (시각장애인 훈련센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경증은 51.9%, 48.3%인 반면, 중증은 20.4%, 19.1%로 중증의 경제활동상태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운영

-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이 취업 초기단계부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센터를 구축함.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장애인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표준사업장, 사회적 경제)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 도입과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에 따른 생산품의 고객요구가 다양화됨.

- 다변화되는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통적 노동시장 일자리 감소, 새 정부 일자리 정책 지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경제 자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대안적 경제로서의 가치가 부각됨.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통적 노동시장 일자리 감소,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지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노무형에 치중, 고용되어도 장기적 고용유지가 어렵고 AI, 로봇 등에 고용 대체될 위험이 매우 큼.
- 최근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경제 자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대안적 경제로서의 가치 부각.

(5-3-1) 정부·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 추진내용

○ 공무원

- 대법원(2.25%), 국회(1.77%)의 장애인 공무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필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장애인 특별 경력 경쟁채용 제도를 도입함.

○ 공공기관

- 미이행 공공기관은 상시 500명 이상의 경우는 신규채용 인원의 5%를, 500

명 미만 기관은 1%의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89> 추진과제 5-3-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정부·공공기관 의무 고용률 달성 위한 기재부 협조요청	-장애인고용공단은 각 전형 단계별 채용지원	-좌동	-좌동	-좌동

(5-3-2)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

□ 추진내용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필기시험 장벽을 완화함.

○ 비공무원

- 교육부 소속 국·공립대학 내 틈새직무 발굴을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함.
- 공공부문의 직업영역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90> 추진과제 5-3-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부문의 직업영역개발 사업 확대 및 시범사업 실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 확대 -교육부 소속 대학 내 정신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정신적 장애인고용확대 강화	-좌동	-좌동	-좌동

(5-3-3) 장애인 맞춤형훈련 활성화**□ 추진내용**

- (맞춤훈련센터 확대) 사업체가 밀집되고 훈련접근성이 좋은 도심지내 맞춤형훈련센터를 확대 운영함.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 교육부, 복지부와 연계하여 교육·훈련·채용·복지 서비스를 확대함.
-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연차별 확대 추진
 -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영역이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공단에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답습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새로운 직종 발굴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확대)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91> 추진과제 5-3-3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맞춤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2개소 설치	-발달장애인 전문 훈련센터를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추진	-좌동	-좌동	-좌동
시각장애인 훈련센터	-시각장애인 훈련센터 1개소 설립 계획 수립	-센터 운영체계 마련 및 센터 1개소 설립	-좌동	-시각장애인 훈련센터 개소	-좌동

(5-3-4)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내용**

- 장애인 고용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근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평가 후 인적·물적 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함.

- 고용관리지원(동료근로자 지원) 확대,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재직자 훈련비 지원 신설, 근로자 직업생활자금(의료비, 교육비, 이직지원금) 지원을 신설함.
- 직장생활 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해결 지원과 장애인고용 사업주(사업장)에 대한 교육·관리 지원.
 - 교육·관리 지원: 장애인 노동문제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직업생활상담원 선임·관리 등
 -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 대상 장애인식교육 의무화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성과는 지원인원, 서비스 만족도, 상담 횟수, 교육 횟수, 관리현황, 장애인 퇴사율, 이직연계 실적, 일자리 업(up) 등으로 평가가 가능함.
- 사업체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채용종합지원센터(DEXCO)와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92> 추진과제 5-3-4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센터설치 타당성 조사 및 연차별 운영 계획 수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시범운영	-6개 공단 지사 내 설치 및 운영	-6개 공단 지사 내 설치 및 운영	-6개 공단 지사 내 설치 및 운영 -전국지사 설치 완료

(5-3-5)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지원

□ 추진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방법 개선(인증업체의 모든 생산품 → 인증제품 지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력 강화, 판로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쇼룸 구축·운영

- 중증장애인생산품 사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꿈드래 쇼핑몰의 경우 3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2016년 1월부터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실적집계 결과 전년대비 14.5% 증가한 5,312억 원으로 법정목표 초과 달성.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법정비율 확대 및 미달 시 제재조치를 강화함.
- 장애인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설립 지원방안 및 사회적 경제 영역 내에서 장애인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함.
- 지역의 사회적 생태계 특성에 맞는 사업체를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역 전문가그룹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점진적으로 장애인 채용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표준사업장, 사회적 경제)에 고용보험료, 컨설팅, 저리 융자 지원 등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93> 추진과제 5-3-5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표준사업장	-표준사업장 인증 생산품 신청 -구매실적 공표 및 공공기관 경 영평가 반영 확 대(2018년 0.3% → 2022년 1.0%)	-표준사업장 인증 생산품 온라인쇼 핑몰 구축 -구매실적 공표 및 공공기관 경 영평가 반영 확 대	-좌동	-좌동	-좌동
사회적 경제 관련 장애인고용기업	-사회적 경제 관 련 장애인고용모 델 개발 및 지원 방안 연구	-사회적 경제 관 련 장애인고용기 업 행·재정적 지 원	-좌동	-좌동	-좌동

(5-3-6)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지원

□ 추진내용

- 장애인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설립지원방안 및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장애인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함.
- 지역의 사회적 생태계 특성에 맞는 사업체를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역 전문가그룹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점진적으로 장애인 채용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94> 추진과제 5-3-6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지원과 고용 모델 개발 -지원제도 검토 및 종합계획 수립	-좌동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자체 등 공모	-좌동	-좌동	-좌동

라. 장애인직업재활지원 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직업재활시설 규모화 및 우선구매지원 강화
 - 장애인단체(2017)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에서 직업재활 지원 강화를 요구하였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중증장애인생산물 판매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중증장애인 교육, 훈련, 고용을 연계하여 직업재활 관련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함.

(5-4-1) 직업재활시설 규모화와 운영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증대

□ 추진내용

○ 직업재활시설 정체성 확립

-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고용과 보호를 분명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각 부처의 책임성, 제도적 지원, 연계를 강화함.
- 사회적 경제 조직형(주로 사회적 기업형)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사회적 기업’(가칭)으로 전환하여 고용노동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도록 함.
-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서는 노동법적 근로자성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함.
- 낮활동형 직업재활시설은 작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장애인통합 직업지원센터(5-4-2)로 전환하도록 함.

○ ‘장애인 사회적 기업’(가칭) 규모화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 현재 직업재활시설 당 평균 이용장애인 수는 29.4명으로,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어 있어 생산성 증대에 한계가 존재하여 직업재활시설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규모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예: 스웨덴 삼할) 등을 검토하고 한국에 적합한 ‘장애인 사회적 기업’ 규모화 모델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결과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¹⁹⁾.

○ ‘장애인 사회적 기업’(가칭)의 고용 전이 활성화

-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고용 전이 활성화를 위해, 고용 전이로 인한 시설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를 보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
- 고용 전이 확대를 위해 사업주, ‘장애인 사회적 기업’ 대상 지원금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함.

19) 구체적인 규모화 방안은 김진우 외(2016)을 참고할 수 있음.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95> 추진과제 5-4-1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업재활시설 정체성 확립	-직업재활시설 정 체성 연구 및 부 처 간 협의	-정부부처 간 역 할 및 업무체계 재정립	-시범사업 운영	-좌동	-좌동
‘장애인 사회적 기업’(가칭) 규모화	-‘장애인 사회적 기업’ 규모화 모 델 개발 연구	-‘장애인 사회적 기업’ 규모화 시 행방안 마련	-시범사업 운영	-좌동	-좌동
‘장애인 사회적 기업’(가칭) 고용전이 강화	-고용전이 현황과 악 및 강화수단 마련	-강화방안 실행 및 전이 활성화	-좌동	-좌동	-좌동

(5-4-2) 장애인통합직업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 중증장애인 교육, 훈련, 고용을 연계하여 직업재활 관련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통합직업지원센터 설립·운영.
 - 현행 직업재활시설 중 낮활동형 직업재활시설을 통합직업지원센터로 전환.
 - 중증장애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 직업재활시설 유형의 단순화와 지원 부족으로 교육·훈련·고용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 직업재활서비스 종합지원시스템(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통합직업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방안(기능, 역할, 규모, 인력구성, 예산 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 과정에서 낮활동형 직업재활시설을 통합직업지원센터로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96> 추진과제 5-4-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직업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연구 실시	-좌동	-통합직업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통합직업지원센터 시범 운영(직업재활 시설 전환) 10개소	-통합직업지원센터 시범 운영(직업재활 시설 전환) 30개소

(5-4-3) 우선구매제도의 내실화

□ 추진내용

○ 직업재활시설의 우선구매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생산시설 지원정책의 다양화.

-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생산시설 지정심사 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적용하여 다수의 직업재활시설이 우선구매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음.
- 2016년 582개 직업재활시설 중 353개소만 생산시설로 지정 받고 229개소는 미지정됨.
- 직업재활시설 우선구매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생산시설 지정기준 개선 방안 마련 및 적용이 필요함. 이와 함께 생산시설의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엄격한 인증심사 및 인증 후 관리강화가 필요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16호) 개정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업종 다양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현재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유통, 판매 등으로 업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적합 업종 개발 및 모델 제시, 업종 전환에 따른 비용 지원, 시범 사업 운영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우선구매 시장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경영지원 확대가 필요함.
-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2018년 40개소 → 2022년 80개소), 시도별 경영지

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개발비(기술개발 등 R&D 비용, 유통, 홍보·마케팅 비용, 품질인증 등)를 지원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인력 증원 및 물류센터 기능 추가가 필요함.
판매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를 전담하도록 지원을 확대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97> 추진과제 5-4-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우선구매지원 관련 제도 개선(인증, 심사, 관리)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 정착	-좌동	-좌동	-좌동

마.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

□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인 취업자 88만 90명 중 자영업 종사자 32.4%(구연진 외, 2016)
 - 장애인 실업자 6만 961명 중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8.6%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0년부터 창업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유사사업 통·폐합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자금융자 사업으로 이관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창업자를 대상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창업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적 상담이 어려움.
 - 또한, 창업자금보다 창업 이후 경영자금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경제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창업 참여가 제한됨.
- 장애인들의 보다 효과적인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성공을 위해 장애인 대상 맞춤형 창업 지원이 필요함.

- 향후 4차 산업혁명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진행될 것이며, 관련 산업의 창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5-5-1) 장애인 창업지원

□ 추진내용

- 장애인 당사자 창업 또는 장애인의 부모,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가족 창업을 위한 ‘장애인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 (1단계) 창업상담 및 창업계획서 심사 등을 통해 창업 대상자 선정
 - (2단계) 창업 업종 관련 전문기술 습득 훈련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한 창업교육 지원
 - (3단계) 창업 훈련 및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창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 (4단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업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영 노하우 지원, 홍보 등 마케팅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창업 개시 후 운영자금 융자 및 창업성공 수당 지급
- 대상: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 장애인
 - 융자 대상자가 중증 혹은 고령 장애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조건: 장애인 1인당 2억 원(창업 개시 후 운영자금 1억 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내 장애인기업 융자조건: 1억 원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2%(사업개시일 이후 융자 신청 가능)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98> 추진과제 5-5-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법률 개정을 통한 세부지원근거 마련 -사업예산 확보	-창업자금 및 운영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창업지원센터 설 치(2019년 2개소 → 2022년 8개소)	-좌동	-좌동	-좌동 -창업지원사업(5개 년) 평가와 환류

(5-5-2) 장애인 기술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 추진내용

○ 장애인 창업 지원 수요 조사

- 장애인 중에 창업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를 파악함.

○ 장애인 기술창업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준비 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 장애인 창업보육센터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지원(리모델링, 운영비, 보육역량강화)을 통해 (예비) 창업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함.
-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및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지원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99> 추진과제 5-5-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기술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 기술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 시범사업	-장애인 기술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전국 확대 운영	-좌동	-좌동

제6절 권익증진 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 차별금지 및 권리옹호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에 따라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구체적인 차별 구제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사회변화를 반영한 구체적인 접근권 내용이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변화를 반영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금지법 개정, 인권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등이 필요함.

– 장애인학대의 심각성과 달리 그동안 장애인학대는 체계적으로 조사된 경우가 없었음. 그 결과 피해장애인의 대한 지원체계도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서는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음(UN CRPD, 2014). 이에 따라 지원의사결정제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법원 관계자,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사회에서 편견,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자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2013년도 OECD 분석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 정신장애인의 입원기간이 초장기인 국가에 해당됨. 정신과 의원과 정신요양원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있는 환자는 약 10만 명임. 연간 약 3조원의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재정 소요. 전체 정신건강복지비용의 95% 이상이 정신과진료 및

정신요양원의 입소 관리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 이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 후, 정신장애인의 자의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신보건법 및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자의의사에 따른 정신보건서비스 및 의사결정지원 제공을 권고(UN CRPD, 2014).
- WHO는 최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자의입원에 관한 규정을 전부 폐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냄.

○ 현재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시 장애인에 대한 위기상황 대처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 세월호나 경주지진 등 재난, 재해 시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재난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은 화재·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떨어지며, 사망사고 위험률이 높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 현재 국내 재난대응 지침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행동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대상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육 지속화와 함께 전문 체험관 설립 필요.

□ 여성장애인 지원강화

○ 여성장애인은 교육수준, 고용률, 소득수준을 통해 볼때 현저히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처해있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기존의 관련 정책의 수혜범위에서도 소외되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 있음.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장애인 중 21.0%가 무학으로 4.7%인 남성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 49.4%에 비해 매우 낮았고, 여성장애인의 여성장애인의 47.3%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해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 상담소 24곳, 피해자 보호시설은 10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나, 상담종료 후에 피해자가 갈 곳이 없으며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문제는 사후 처리 위주의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예방적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은 출산지원 및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장애이해부족, 여성장애인 전담병원의 부족, 관련 지원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음.

□ 국제협력 강화

- 한국정부는 2012년 에스캅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인천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업 실시 및 점점체계를 구축하였음. 현재까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범부처 차원에서의 협업을 통한 국내에서의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한국정부는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바 있고, 1차 국가보고서 평가결과 2014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로부터 최종권해를 권고 받았음. 그러나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처간 협업 및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정부단체의 민관협력을 통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합의 사항인 SDG에 따르면 성장의 한계, 사회적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구분 통계구축 및 장애

인 당사자를 포함한 주요 시민사회 참여 플랫폼 구축이 제시됨. 유엔은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SDG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추진계획

가. 차별금지과 권리옹호 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10년이 지남에 따라 관공예의 접근 등과 같은 사회 변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변화를 반영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 필요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및 동정의식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은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서는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지원의사결정제도를 구체화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분석한 6년간의 장애인 학대 상담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100건이었던 학대상담은 2013년 3,15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결과를 통해 매년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짐(이동석 외, 2014). 학대는 피해장애인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은 현재 보험가입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요율을 적용한 상품개발이 필요하고, 다양한 금융이용 제약 해소가 필요함.

(6-1-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및 법률 내 차별적 용어 개정**□ 추진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는 기관협의를 통해 법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이행을 독려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법 체계에서 차별적 용어 수정 등 차별적 조항 폐지
- 차별금지 범위 확대
-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제조치 강화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0> 세부과제 6-1-1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범위 확대 기준 마련	-모니터링, 평가, 이행 독려	-좌동	-좌동	-좌동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개정을 위한 기 초연구 실시	-개정안 마련	-입법	-시행	-시행 평가

(6-1-2) 장애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추진내용**

○ 장애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보 강화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1> 세부과제 6-1-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권교육 시행 기준 (1년 4시간/4시간 /8시간 등) 마련 -인권교육 시행	-시행 확대	-시행 확대	-시행 확대	-시행 확대

(6-1-3) 지원의사결정제도 제도화

□ 추진내용

○ 지원의사결정제도 제도화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서는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음.
- 지원의사결정제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률 제정
-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교육 강화(법원 관계자,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2> 세부과제 6-1-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의사결정 제도 연구	-지원의사결정 제도 구체화 -관련 법률안 마련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입법	-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지원의사결정 교육 실시	-법률 시행 -지원의사결정 교육 강화

(6-1-4) 학대피해장애인 지원강화

□ 추진내용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강화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 마련
- 쉼터 마련 등 지원강화
- 장애인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3> 세부과제 6-1-4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법률(안) 마련 -쉼터 등 지원 확대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입법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통합적 지원체계 구체적 시행	-법률 시행 -좌동	-좌동 -좌동

(6-1-5)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 추진내용

○ 장애인 보험요율(위험률) 산정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 유도

-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통계 공유 등 협력체계(보험개발원-보건복지부(장애인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보험자료), 국립재활원(통계자료) 등) 구축

○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사고 발생 시 생활안정 위협 최소화

- 보험료 지원: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보건복지부).
- 보험가입 의무화: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 및 도덕적 해이 방지(예, 장애인 보조기기법 등에 명시)

○ 장애인 사용 자동화기기(ATM)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부환경 개선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편의시설 세부기준에 “장애인 이용 가능한 ATM” 항목 추가)을 통해 ATM 주변의 계단턱 등도 제거될 수 있도록 유도

○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교육 실시

- 후견관정을 받은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상세히 교육(보건복지부 협조)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4> 세부과제 6-1-5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보험요율 산정통한 보험상품 개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상품 개발 및 판매	-평가, 개선	-시행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보험상품 개발	-상품판매 -보험가입의무화 -보험료지원	-좌동	-좌동	-좌동
자동화기기 접근성 확대	-편의증진법 시행 규칙 개정	-접근성 확대	-모든 자동화기기에 접근성 확충	-좌동	-좌동
은행직원 대상 후견제도 교육	-교육계획 마련	-교육실시(50%)	-교육실시(교육완료)	-보수교육 실시	-보수교육 실시

나.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

□ 추진근거 및 배경

- 정신과 의원과 정신요양원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있는 환자는 약 10만 명임. 연간 약 3조원의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재정 소요. 전체 정신건강복지비용의 95% 이상이 정신과진료 및 정신요양원의 입소 관리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음. 그럼에도 비자의입원 등 인권제한의 문제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 현재 우리사회에서 편견,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자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6-2-1) 차별적인 법령 폐지 및 개정

□ 추진내용

○ 차별적인 법령 폐지 및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 정신장애인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의사결정지원제도 마련
-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여) 비자의 입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여)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5> 세부과제 6-2-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복지법 개정 (15조 폐지) -비자의입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 안 마련	-비자의입원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장기입원 방지를 위 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	-정신장애인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마련	-법률 입법 -의사결정지원 시행	-시행령 등 하위법률 마련 -의사결정지원 강화

(6-2-2)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자립대책 마련

□ 추진내용

○ 탈시설자립대책 추진

- 주거지원 확대
- 취업/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 의료지원 확대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6> 세부과제 6-2-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주거지원 정책 마련 -취업/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의료지원 확대	-주거지원 정책 시행, 강화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다.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시스템 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기존에 나온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재난안전 행동매뉴얼은 한국 장애인 개발원(장애 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개발 연구 지체장애인 중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애인 위기관리 매뉴얼 지체장애인용) 등으로 장애인 행동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나 비장애인 시각으로 만들어져 실제 재난 발생할 시 많은 취약자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 상태임.
- 화재 발생 시 실시하는 교육훈련 현황에서 장애인 대상 교육은 전체 비율 대비 1.2%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훈련 매뉴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 재난안전체험관이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8곳에 설립중이지만 그중에 한국도 재난취약자를 위한 곳은 없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 이에 따라 재난 시 장애인 위기상황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6-3-1) 재난 시 장애인 위기상황 대처 방안 마련

□ 추진내용

- 장애인 위기상황 행동매뉴얼 마련 및 안전교육 강화
 -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 행동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장애인활동보조인 재난안전교육 강화
- 강사육성 교육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7> 세부과제 6-3-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행동매뉴얼 개발 및 보급(지역사회) -재난안전교육 강사 육성	-장애유형별 행동매뉴얼 개발 및 보급 -강사 육성 -활동보조인 재난안전교육 실시	-매뉴얼 지속 개발 및 보급 -강사 육성 -활동보조인 재난안전교육 실시	-좌동	-좌동

(6-3-2)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 구축

□ 추진내용

○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내에 장애인재난 전담부서 설치
-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통계 구축
- 재해연보·국가화재정보통계 내 장애 유형 등 반영
- 재난취약계층 대피기구개발 및 보급
- 장애인재난안전 특성화 전문가 양성
- 안전체험관 운영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8> 세부과제 6-3-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재난 전담부서 설치 -안전체험관 운영	-장애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통계 구축 -재난취약계층 대피기구개발 및 보급 -장애인재난안전 특성화 전문가 양성 -안전체험관 운영	-좌동	-좌동

라.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최종견해 권고에 의하면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 모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고 장애여성을 위한 특별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현실임.
-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계획하였고,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계획을 발표하였음.

(6-4-1) 여성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계획 수립

□ 추진내용

- 여성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 2018년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계획을 위한 욕구조사 및 연구 실시
 - 2019년 일반 장애인지원정책과 여성장애인 고유의 욕구가 고려된 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계획수립 및 타부처 지원사업과의 중복시 조정 완료
 - 2019년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계획 발표 및 시범사업 실시
 - 2020년 시범사업 평가 및 계속 실시

- 2021년 시범사업 평가 및 계속 실시 또는 확대 실시
- 2022년 자립지원정책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의 장애인 복지지원 변화를 반영하여 시범사업 총체적 평가 및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계획 최종안 도출

○ 장애인 권리보장 및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 2017년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구성 및 운영
-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보완,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체계와 조항간 이동 및 정비 필요
- 2022년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목표로 함.
- 장애인권리보장법 내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지원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평가하는 조항 넣음.

○ 생애주기별 종합지원계획의 효과적 이행과 성과 파악을 위해 장애 관련 모든 통계의 성별 분리통계 구축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09> 세부과제 6-4-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계획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계획 수립 및 타부처 지원사업과의 중복시 조정 완료 -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평가 및 계속 실시	-시범사업 평가 및 계속 실시 또는 확대 실시	-시범사업 총체적 평가 및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계획 최종안 도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보완, 장애인 복지법 등 기존 법체계와 조항간 이동 및 정비 필요	-좌동	-좌동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종합지원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평가하는 조항 넣음
-장애 관련 모든 통계의 성별 분리통계 구축안 마련	-관련법 정비 -장애관련 통계의 성별분리 실시	-좌동	-좌동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성별분리통계 조항 넣음

(6-4-2)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추진내용

- 시군구 단위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거점병원 지정 및 관리
 - 지역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거점병원 지정
 - 거점병원 내 여성장애인 출산 전후 의료지원 장비 마련 의무화 및 비용지원 (예. 휠체어용 체중계 또는 특수 초음파 등)
 - 거점 병원 내 의료인에 여성장애인 출산에 관한 권리, 복지, 의료서비스 지원방안에 관한 안내 및 교육
 - 여성장애인 출산에 관한 지속적 데이터 구축 및 관리
 - 반기별 1회 이상의 거점병원 전문의들간의 교류 추진하여 장애유형별 의료 서비스 매뉴얼 보완해 나감
 - 산부인과 거점병원 내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사, 의사소통보조기기, 진술조력인 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차원 바코드 삽입된 출산관련 정보 제공 실시
- 출산 관련 예비 의료인에 대한 여성장애인 출산에 관한 교육
 -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과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 시간을 의무적으로 할당
 - 산부인과 수련생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관련 전문 의료서비스 교육 방안 마련 및 실시
- 장애유형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및 전문적 의료서비스 지원에 특화된 유형별 매뉴얼 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올바른 이해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연차별로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보완해 나감(의료인력, 사회복지인력, 장애인 당사자의 협업 필요).

- 알기 쉬운 버전을 별도 제작하여 비의료적 영역이나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인력(산후조리사, 병원 내 종사인력 등) 등에도 배포함.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장애유형별 임신부 체조교실, 장애유형별 양육교실 등).
-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지원안내 페이지 개설 및 온라인 상담 개설을 통한 홍보 및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안내.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에 관한 온라인 상담 페이지 구축
 - 여성장애인 인식개선과 임신출산에 관한 대중매체 방송 및 홍보
- 여성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임신출산 산후조리 토탈 케어 서비스 실시
 - 임신 준비 시기에서 출산과정 및 산후조리와 육아로 이어지는 찾아가는 서비스 마련.
 - 여성장애인 전문 산후조리(원)도우미와 지자체별 실시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사업을 보완하여 국가차원의 임신 출산에서 영아 돌봄제공까지 이어지는 토탈 케어 서비스 계획 수립.
 - 여성장애인 토탈케어 제공인력 양성 및 파견 (서울시에서 홈헬퍼 사업으로 실시중이며 유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 방안이 필요함).
 - 시범사업실시 및 수정보완 후 2022년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포함.
- 여성장애인 산전후 휴가제도 1.5배로 확대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10> 세부과제 6-4-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거점병원 지정 및 관리 -거점병원 내 특수 장비 마련 의무화	-좌동 -여성장애인 출산에 관한 지속적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장애유형별 의료서	-좌동	-좌동	-좌동

2018	2019	2020	2021	2022
및 비용지원 -거점병원 의료인 교육 -여성장애인 출산관련 데이터 구축 및 관리 -거점병원 내 의사소통지원 실시	비스 매뉴얼 보완해 나감			
-예비의료인 대상 여성장애인 출산관련 전문 의료서비스 교육 방안 수립	-산부인과 수련생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관련 전문 의료서비스 교육 실시(시범사업)	-좌동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과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의무화(시범사업)	-예비의료인 대상 지속 교육 -의료인 교육관련 관계법령 정비 완료	-좌동
-장애유형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장애유형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지속적으로 매뉴얼 수정보완	-좌동	-좌동	-좌동
-아이사랑포털에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상담 지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찾아가는 임신출산 산후조리 토탈 케어 계획 수립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관계법령 정비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2022년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포함 -전국에서 토탈케어(홈헬퍼) 사업 실시
-여성장애인 산전후 휴가제도 1.5배 확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6-4-3)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추진내용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확대설치

- 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비해 부족하기에, 숫자를 대등하게 맞추거나, 통합 운영하되 개별 이슈에 대한 전문인력이 상주하도록 함.
- 전국에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곳임. 그러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무함. 각 지역별 1개소 신설운영 또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전문 상담원교육을 실시하여 인력 양성하고 지역별 배치함.

○ 보호시설 퇴소이후 피해여성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 피해여성장애인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 사회적 약자 보호 3대치안정책(국정과제14번) 내실화

－ 여성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가중처벌(안) 마련 및 시행

－ 사회적 약자 보호관련 세부 지원체계 마련 및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에 포함

○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및 캠페인 활성화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주간행사(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여성장애인을 주요 테마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

－ 공영방송에 일정정도 고정시간을 공익광고 비중으로 할당받아 장애인식개선을 비롯한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방송을 진행함.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11> 세부과제 6-4-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확대설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및 배치	-접점을 통한 지속 여부 결정	-좌동	-좌동	-좌동
-피해여성장애인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	-시범사업	-좌동	-좌동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포함
-사회적 약자 보호관련 세부 지원체계 마련	-시범사업	-좌동	-좌동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에 사업을 포함 시킴
-성폭력 가정폭력 공영방송 및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기존 사업검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수행	-활성화 수행	-좌동	-좌동	-좌동

마. 국제협약의 국내이행 및 장애인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 추진근거 및 배경

- 한국 정부는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012년 에스캅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인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주도국의 위치에 있고, 지속가능개발목표인 SDG도 이행해야 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인천전략, SDG 모두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국제협력과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증진을 촉구하고 있기에 장애인 중심의 국제협력강화가 필요함.

(6-5-1)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 추진내용

- 인천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간평가 및 남은 5년의 행동계획 수립
 - 2017년 인천전략 중간평가에 관한 정부 간 고위급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중간평가 이후의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필요.
 - 인천전략 10개 목표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총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중간평가 이후의 행동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
- 인천전략 목표별 이행현황 심화평가
- 인천전략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시 성별 분리 통계 구축
- 인천전략 사무국의 실체화 및 역할 강화
 -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대외협력부원들이 국제협력사업으로 인천전략사무국의 역할을 수행중이나, 국제협력 이외의 지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이행과 점검을 하기 위해 인천전략 사무국의 실체화 및 역할강화 필요.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12> 세부과제 6-5-1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간의 인천전략 목표별 이행현황 심 화평가 및 향후 계 획 수립 -대외협력부에서 독 립된 인천전략 사무 국 마련 -인천전략 평가 모니 터링시에 성별 분리 통계로 보고서 작성	-심화평가에 따른 연 차별 이행계획 수행 및 평가	-좌동	-좌동	-인천전략 10년 총괄 평가

(6-5-2)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및 SDG 모니터링 강화

□ 추진내용

○ 2019년 1월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제출

- 병합국가보고서를 위해서는, 2014년 1차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기에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및 향후 계획 수립 필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상시 모니터링 체계마련 및 예산확보
-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단 운영
-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협력모색 고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13> 세부과제 6-5-2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건해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작성	-상시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예산확보 -상시모니터링 평가 지표 개발 -상시모니터링단 운영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 -좌동	-좌동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건해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 조사 -4차 국가보고서 작성

(6-5-3) 장애인 국제협력 분야 민관협력 및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강화

□ 추진내용

○ KOICA의 국제개발사업 자부담 완화

- ODA법이 개정되어 장애포괄적인 국제개발사업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 참여회가 확대되었으나, 자부담 20%가 부담되기에, 사업예산 규모에 따른 자부담 차등이 필요함. 또는 자부담 펀드 개발 및 운용을 고려함.

○ 장애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 KOICA의 장애친화적 교육시설 확충 또는 장애인 국제개발 역량강화 연수 시설을 확충함. 국제협력전문가로 장애인 당사자 양성 방안을 마련함(예: 장애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당사자 인턴제 시행).

□ 연차별 추진일정

<표 4-114> 세부과제 6-5-3 연차별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KOICA의 국제개발사업 자부담 완화및 자원 개발 방안 마련 및 실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KOICA의 장애친화적 교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	-장애친화적 교육시설 확충	-좌동	-좌동	-좌동
-국제협력전문가로 장애인 당사자 양성 방안 마련	-장애인 당사자 국제협력 인턴제 실시 -기타 방안 실시	-좌동	-좌동	-좌동

제 5 장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종합 성과지표

제1절 종합 성과지표의 의미

제2절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 종합 성과지표 <

제1절 종합 성과지표의 의미

1. 종합 성과지표의 의의 및 선정원칙

□ 종합 성과지표의 의의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종합 성과지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정책 영역별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 지표를 선정하고자 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지표는 제3차 계획부터 제시되기 시작했는데,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추상적 수준으로 제시됐던 성과목표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량까지 제시됨.
- 하지만 기존의 성과지표는 세부과제별로 사업실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그쳐, 실제 정책목표의 포괄적인 달성 수준이나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부족하였음.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세부과제별 성과지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부처의 검토를 거쳐 최종 계획이 수립될 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영역별 종합 성과지표를 추가로 제시하고자 함.

□ 종합 성과지표의 선정원칙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선정함.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급적 장애분리통계에 의한 격차를 측정함.
- 사업의 수행으로 도출되는 단순한 산출(output)이 아닌 해당 분야에서 궁극적

으로 의도하는 변화, 즉 결과(outcome)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함. 따라서 사업의 실적은 물론, 제도개선, 법률개정, 연구수행과 같은 도구적 성과지표는 배제함.

○ 특정한 세부과제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정책 분야에서 장애인의 삶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표를 선정하며, 정책 영역별로 3개 정도의 종합 성과지표를 선정함.

○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지표를 선정함.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의 종합 성과지표

○ 위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18개의 종합 성과지표를 제시함.

<표 5-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종합 성과지표

분야	정책목표	종합 성과지표
복지서비스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률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
건강·체육	장애인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스포츠클럽 확보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률
보육·교육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보육·교육격차 해소	장애아동 보육·교육 통합률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개선요망 대학 비율
사회참여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	문화여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상대수준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경제활동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소득과 경제활동 격차의 완화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빈곤율
		장애인 고용률 격차
		중증장애인 고용률 격차
권익증진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장애차별 진정건수 증감률
		장애인 빈곤율 성별 격차
		장애인 고용률 성별 격차

□ 종합 성과지표의 한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종합 성과지표는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제시하였지만,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는 없었음.
- 측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장애분리통계에 의한 ‘격차’의 관점이 포함되지 못한 지표가 선정되거나, 일부 정책 영역에서 적절한 지표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정한 결과(outcome)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표가 부득이 선정된 경우도 있음.

2. 분야별 종합 성과지표

□ 복지서비스 분야

- 복지서비스 분야의 정책목표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지원”으로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한 종합 성과지표로 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률, ②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률, ③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를 제시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률’은 활동지원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장애등급제 폐지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률’과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는 모두 감소를 목표로 하며 탈시설 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건강·체육 분야

- 건강·체육 분야의 정책목표는 “장애인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스포츠권 확보”로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한 종합 성과지표로 ①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②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③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률을 제시함.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각각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의료이용에서의 욕구 충족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며,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률’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체육 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 보육·교육 분야

- 보육·교육 분야의 정책목표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보육·교육격차 해소”로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한 종합 성과지표로 ① 장애아동 보육·교육 통합률, ②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③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개선요망 대학 비율을 제시함.
- ‘장애아동 보육·교육 통합률’은 보육 및 교육 영역에서의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측정하기 위한 것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개선요망 대학 비율’은 고등교육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 사회참여 분야

- 사회참여 분야의 정책목표는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으로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한 종합 성과지표로는 ① 문화여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②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상대수준, ③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제시함.
- ‘문화여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여가생활에서의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상대수준’은 정보 접근성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이동편의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포괄적인 물리적 접근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 경제활동 분야

- 경제활동 분야의 정책목표는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소득과 경제활동

격차의 완화”로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한 종합 성과지표로 ①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빈곤율, ② 장애인 고용률 격차, ③ 중증장애인 고용률 격차를 제시함.
-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빈곤율’은 장애소득보장 정책은 물론 고용정책을 통한 근로소득의 증대 등 경제활동 분야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또한 ‘장애인 고용률 격차’와 ‘중증장애인 고용률 격차’는 장애인 전체와 중증 장애인의 다양한 경제활동 참가 수준과 고용부문 사회통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권익증진 분야

- 권익증진 분야의 정책목표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로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한 종합 성과지표로 ① 장애차별 진정건수 증감률, ② 장애인 빈곤율 성별 격차, ③ 장애인 고용률 성별 격차를 제시함.
- ‘장애차별 진정건수 증감률’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차별을 받은 것으로 인지한 장애인의 규모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진정건수 감소 경향을 통해 전반적인 장애차별의 감소를 진단할 수 있음. ‘장애인 빈곤율 성별 격차’와 ‘장애인 고용률 성별 격차’는 장애인구 내에서 경제상태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상대적인 경제적 자립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제2절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1. 복지서비스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률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률은 6~64세 등록장애인 10,000명 당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이용자 수(연말 기준)로 측정하며,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현황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산출할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률은 2018년 500명(5.0%)을 목표로 하여, 매년 평균 50명씩 상향하여 2022년에는 등록장애인 10,000명 당 700명(7.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6~64세 등록장애인 10,000명 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2013년 326명, 2014년 371명, 2015년 4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이태진 외, 2016), 2016년, 2017년에는 예산 기준 각각 446명, 488명으로 추정됨.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질문에서 ‘대부분 필요’와 ‘거의 모든 일에 필요’를 합한 비율은 14.5%였으며(김성희 외, 2014), 2014년 한국복지패널조사(9차) 장애인 부가조사에서도 동 비율은 12.2%로 나타남(이태진 외, 2014). 또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조사(9차) 장애인 부가조사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질문에서 중증의 비율은 12.0%로 나타남(이태진 외, 2014).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률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률은 등록장애인 10,000명 당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수(연말 기준)로 측정하며,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률은 2018년 120명을 목표로 하여, 매년 5명씩 감축시켜 2022년에는 등록장애인 10,000명 당 100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 이용자(현원 기준) 수는 30,980명으로(보건복지부, 2017a), 등록장애인 10,000명 당 123.4명이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음.

－ 등록장애인 10,000명 당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수는 2012년 122.0명, 2013년 124.6명, 2014년 125.9명, 2015년 125.4명, 2016년 123.4명으로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크지 않았음.

- 2016년의 등록장애인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수는 2017년까지 유지 가정), 이러한 목표는 탈시설 장애인 수를 연 평균 1,174명, 5년간 총 5,869명으로 설정한 것임.

□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

-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는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원 기준 평균 이용자 수(연말 기준)로 측정하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는 2018년 40명을 목표로 하여, 매년 평균 2명씩 감축시켜 2022년에는 시설 당 평균 32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평균 이용자(현원 기준) 수는 42.5명임(보건복지부, 2017a).
 -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는 2012년 47.8명, 2013년 46.4명, 2014년 44.6명, 2015년 42.8명, 2016년 42.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크지 않았음.

<표 5-2> 복지서비스 분야 종합 성과지표

종합 성과지표	연차별 성과목표					측정산식 및 측정자료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률	500명	550명	600명	650명	700명	[산식] 6~64세 등록장애인 10,000명 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연말 기준) [자료] 등록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률	120명	115명	110명	105명	100명	[산식] 등록장애인 10,000명 당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수(현원, 연말 기준) [자료] 등록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	40명	38명	36명	34명	32명	[산식]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이용 장애인 수(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현원, 연말 기준) [자료]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보건복지부)

2. 건강·체육 분야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장애분리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전체 인구나 장애인의 격차로 추정하며, 건강검진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와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보고서(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의 자료로 추정함.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2018년 8%p를 목표로 하여 매년 2%p씩 감축하여 2022년에는 전체 인구나 등등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비교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상태를 보면 전체 인구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6.1%(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6%(양정희, 2017)로 나타나 12.5%p의 격차를 보임.

□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병원 치료 또는 검사(치과 제외)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추정하며, 매년 실시되는 한국의료패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를 통해 추정함.
 - 장애분리통계가 가능하므로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정책의 추진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자체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2018년 18%를 목표로 하여 매년 2%p씩 감축하여 2022년에 1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2012년 기준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장애인 21.7%, 비장애인 14.3%로 7.4%p의 격차를 나타냈음(송은솔 외, 2014).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19.1%로 나타났으며(김성희 외, 2014), 의료패널조사에서 2014년 기준 전체 인구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17.9%로 나타남(허순임, 이해재, 2016).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률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률은 장애인 중에서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를 이의 목적, 1주일 2~3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며, 매년 발표되는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에 지표가 제공됨.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6년 기준 주1회 이상 63.8%, 주2회 이상 47.2%(문화체육관광부, 2016a)로 전체 인구의 주1회 이상 59.4%, 주2회 이상 49.2%(문화체육관광부, 2016b)와 이미 큰 차이가 없음.
 - 장애인의 특성상 재활치료 목적의 운동이 많으므로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생활체육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완전실행률’을 측정함.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률은 2018년 20%를 목표로 하여 매년 2%p씩 향상시켜 2022년에 28%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장애인의 생활체육 완전실행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서는 17.7%로 나타남.

<표 5-3> 건강·체육 분야 종합 성과지표

종합 성과지표	연차별 성과목표					측정산식 및 측정자료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8%p	6%p	4%p	2%p	0%p	[산식] 전체 인구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자료] 건강검진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보고서(국립 재활원 재활연구소)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18%	16%	14%	12%	10%	[산식] 장애인 중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치과 제외)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한국의료패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률	20%	22%	24%	26%	28%	[산식] 장애인 중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를 이의 목적, 1주일 2~3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비율 [자료]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3. 보육·교육 분야

□ 장애아동 보육·교육 통합률

- 장애아동 보육·교육 통합률은 ‘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과 ‘통합학교’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수를 전체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과 전체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의 합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함.
 - 이 때, ‘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을 의미하며, ‘통합학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을 의미함.
 -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로, 특수교육에 대한 자료는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로 매년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아동 보육·교육 통합률은 2018년 68.0%를 목표로 하여 매년 0.5%p씩 상향시켜 2022년에 70.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기준 장애아동 보육·교육 통합률은 67.8%로 나타나며, 2012년 68.5%, 2013년 68.1%, 2014년 68.0%, 2015년 67.9%로 매년 완만하게 감소해왔음(보건복지부, 2017b; 교육부, 2017). 이러한 감소 추세를 다시 완만한 증가 추세로 반전시키는 목표를 설정함.

□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수를 특수교육 교원 수로 나누어 측정함. 이는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를 통해 매년 확인할 수 있음.
-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8년 4.5명의 목표를 시작으로, 매년 0.1~0.2명을 감축시켜 2022년에는 법정 기준인 4.0명에 평균적으로 도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함.
 - 2017년 기준 장애아동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6명으로 2012년 5.1명, 2013년 5.0명, 2014년 4.9명, 2015년 4.8명, 2016년 4.7명으로 매년 0.1명씩 감소해 옴(교육부, 2017).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개선요망 대학 비율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개선요망 대학 비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에서, 평가 대상 대학에서 ‘개선요망’의 평가를 받은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함.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개선요망 대학 비율은 2018~2019년 45%를 목표로 하며, 2020~2022년 3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에서 368개 대학 중 개선요망 학교는 200개(54.3%)로 나타났으며(국립특수교육원, 2015), 2011년 평가에서는 331개 대학 중 개선요망 학교가 212개(64.0%)로 나타남(교육과학기술부, 2012).
 - 2011년에서 2014년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2017년 평가에서 45%, 2020년 평가에서 3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표 5-4> 보육·교육 분야 종합 성과지표

종합 성과지표	연차별 성과목표					측정산식 및 측정자료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아동 보육·교육 통합률	68.0%	68.5%	69.0%	69.5%	70.0%	[산식] (통합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 수 + 통합학교 이용 장애학생 수) /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 수 +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수) * 100 [자료] 보육통계(보건복지부), 특수교육 통계(교육부)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4.5명	4.3명	4.2명	4.1명	4.0명	[산식]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수 / 특수교육 교원 수 [자료] 특수교육통계(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개선요망 대학 비율	45%	45%	35%	35%	35%	[산식] 개선요망 대학 수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대학 수 * 100 [자료]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 보도자료(국립특수교육원)

4. 사회참여 분야

□ 문화여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 문화여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서 문

화여가와 관련된 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로 측정함.

- 이 때 문화여가 분야 시설은 ① 문화·집회시설, ② 숙박시설, ③ 관광휴게시설, ④ 공원의 4개 건물유형으로 정의하며, 적정설치율은 4개 건물유형의 총 대상 편의시설 수에서 총 적정설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함.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2018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 문화여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의 목표는 2018년 70%를 목표로 시작하여 매년 2%p씩 상향하여 2022년에는 78%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문화여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에 62.8%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52.1%로 나타났음(김인순 외, 2013).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의 경우 5년의 전수조사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같이 전수조사가 없는 해에 표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상대수준

○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상대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종합지수 대비 장애인의 디지털정보종합지수의 비율(디지털정보격차지수)로 측정함.

-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해 산출됨.

○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상대수준은 2018년 72%를 목표로 하며, 매년 3%p씩 상향하여 2022년에는 84%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상대수준은 2014년 60.2%, 2015년 62.5%, 2016년 65.4%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의한 ‘이동편의시설 기

준적합 설치율'과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의 평균으로 측정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없는 해에 격년으로 7대 특별·광역시 및 10대 시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표본조사 하는데, 기준적합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시도의 값을 성과 측정의 대상으로 함. 2016년에 전수조사가 실시되어, 10대 시도의 값은 2018년(표본조사), 2020년(표본조사), 2021년(전수조사)에 새롭게 측정됨.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2018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의 목표는 2018년 68%를 목표로 시작하여 매년 2%p씩 상향하여 2022년에는 76%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구체적으로, 10대 시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8년 70%에서 2020년 78%까지, 전국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2018년 66%에서 2022년 74%까지 상향시키는 목표임.
- 10대 시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6년 68.3%로 7대 특별·광역시의 74.5%보다 상당히 낮으나, 2011년 62.8%, 2013년 64.8%, 2015년 68.0%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옴(국토교통부, 2017).
-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에 60.2%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55.8%로 나타났음(김인순 외, 2013).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의 경우 5년의 전수조사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같이 전수조사가 없는 해에 표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 5-4> 사회참여 분야 종합 성과지표

종합 성과지표	연차별 성과목표					측정산식 및 측정자료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여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70%	72%	74%	76%	78%	[산식] (문화여가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수 / 대상 편의시설 수) * 100 [자료]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상대수준	72%	75%	78%	81%	84%	[산식]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 일반국민 디지털정보화 수준) * 100 [자료]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68% (이동70, 장애66)	70% (이동72, 장애68)	72% (이동74, 장애70)	74% (이동76, 장애72)	76% (이동78, 장애74)	[산식] (10대 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전국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 2 [자료]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5. 경제활동 분야

□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빈곤율

○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빈곤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율 배율로 측정하며,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균등화 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하여 측정함.

- 측정자료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빈곤통계를 산출할 수 있고 대표성을 가진 자료로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함.
- 현재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빈곤율 지표를 공표하지 않으므로 원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산출해야 하며, 향후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표 공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소득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도 전년도 소득을 조사하며 원자료 공개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장애인 빈곤율 산출이 가능하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있음.

○ 2015년 기준 장애인의 빈곤율은 41.7%로 비장애인 빈곤율 15.2%의 2.7배로

나타났으며(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2018년 2.5배의 목표를 시작으로 2022년 2.1배까지 낮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비장애인 빈곤율 15.2%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목표는 장애인의 빈곤율을 2018년 38.0%에서 2022년 31.9%까지 낮추는 일정임.

□ 장애인 고용률 격차

- 장애인 고용률 격차는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통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전체 인구 고용률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 고용률의 격차로 측정함.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매년 5월 조사가 실시되고 연말에 결과가 발표되므로 해당 연도의 목표 달성도는 연말에 파악이 가능함.
- 2017년 5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6.5%(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 61.3%(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격차는 24.8%p로 나타났으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2018년 24%p를 시작으로 매년 1%p씩 격차를 줄여 2022년에는 20%p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중증장애인 고용률 격차

- 중증장애인 고용률 격차 또한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통계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전체 인구 고용률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한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격차를 지표로 사용함.
- 2017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9.5%(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로 전체 인구 고용률과 41.8%p의 격차를 나타냈으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2018년 41%p를 시작으로 매년 1%p씩 격차를 줄여 2022년에는 37%p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표 5-6> 경제활동 분야 종합 성과지표

종합 성과지표	연차별 성과목표					측정산식 및 측정자료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빈곤율	2.5배	2.4배	2.3배	2.2배	2.1배	[산식] 장애인 빈곤율 / 비장애인 빈곤율 (빈곤선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장애인 고용률 격차	24%p	23%p	22%p	21%p	20%p	[산식] 전체인구 고용률 - 장애인 고용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고용률 격차	41%p	40%p	39%p	38%p	37%p	[산식] 전체인구 고용률 - 중증장애인 고용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권익증진 분야

□ 장애차별 진정건수 증감률

- 장애차별 진정건수 증감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건수 연간 증감률로 측정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차별 진정건수 증감률은 매년 -10%를 목표로 함.
 -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2012년 1,340건에서 2016년 1,51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간 증감률을 보면 2013년 -2.1%, 2014년 -13.2%, 2015년 0.7%, 2016년 31.7%로 2013~2014년에는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는 대폭 증가하였음(국가인권위원회, 2017).

□ 장애인 빈곤율 성별 격차

- 장애인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여성장애인 빈곤율과 남성장애인 빈곤율의 차이로 측정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산출함.
- 여성장애인 빈곤율과 남성장애인 빈곤율의 차이는 2018년 4.0%p를 목표로 하며, 매년 0.5%p씩 감축하여 2022년에 2.0%p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5년 기준 여성장애인의 빈곤율은 44.4%로 남성장애인 빈곤율 39.8%보다 4.6%p 높았음. 이러한 성별 격차는 2012년 7.0%p, 2013년 9.1%p, 2014년 3.6%p였으며, 2014년에 다소 격차가 작았지만 2012~2015년 평균 6.1%p의 격차를 보임.

□ 장애인 고용률 성별 격차

- 장애인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남성장애인 고용률 대비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의 비율로 측정하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로 확인함.
- 남성장애인 고용률 대비 여성장애인 고용률의 비율은 2018년 50%를 목표로 하며, 매년 3%p씩 상향하여 2022년에는 62%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7년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2.4%로 남성장애인 고용률 46.8%의 47.9% 수준이었는데, 같은 시기 전체 인구에서 성별 고용률의 비율은 71.5%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률의 성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 이러한 고용률의 성별 상대비율은 2013년 44.6%, 2014년 40.1%, 2015년 47.0%, 2016년 44.2%로 매년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표 5-7> 권익증진 분야 종합 성과지표

종합 성과지표	연차별 성과목표					측정산식 및 측정자료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차별 진정건수 증감률	-10%	-10%	-10%	-10%	-10%	[산식] [(당해연도 장애차별 진정건수 - 전연도 장애차별 진정건수) / 전연도 장애차별 진정건수] * 100 [자료] 인권통계(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빈곤율 성별 격차	4.0%p	3.5%p	3.0%p	2.5%p	2.0%p	[산식] 여성장애인 빈곤율 - 남성장애인 빈곤율 (빈곤선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 위값의 5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장애인 고용률 성별 격차	50%	53%	56%	59%	62%	[산식] (여성장애인 고용률 / 남성장애인 고용률) * 100 [자료]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의 개요

제2절 제언

제1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의 개요

□ 추진방향

- 제4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로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
- 장애인구의 변화, 복지욕구의 다양화, 사회적 다양성 확대, 기술발전 등과 같은 인구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발전과제를 도출함.
- 탈시설, 서비스 개별화, 지원의사결정제도, 통합교육 등 최근 장애정책의 국제적 조류와 국내에서 최근 제정되었거나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장애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함.

□ 비전 및 정책목표

- 향후 5년간 장애정책 추진에 의한 우리 사회의 비전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설정함.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 정책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제시하고, 6대 분야별 정책목표도 함께 제시함.
 - － (복지서비스)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지원
 - － (건강·체육) 장애인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스포츠권 확보
 - － (보육·교육)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보육·교육격차 해소
 - － (사회참여)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
 - － (경제활동)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소득과 경제활동 격차의 완화

- (권익증진)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 분야별 추진과제

○ 복지서비스 분야

- 3개 중점과제로 ①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통합성 제고, ②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③ 발달장애인서비스의 내실화 및 실질화를 제시함.
-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13개 과제가 국정과제 혹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를 반영함.

○ 건강·체육 분야

- 5개 중점과제로 ①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 ②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③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④ 운동참여 환경 개선, ⑤ 참여형 장애인스포츠 복지 모델 실현을 제시함.
-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11개 과제가 국정과제 혹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를 반영함.

○ 보육·교육 분야

- 3개 중점과제로 ①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②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 ③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제시함.
-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7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7개 과제 모두 국정과제 혹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를 반영함.

○ 사회참여 분야

- 6개 중점과제로 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②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③ 무장애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통합이용환경 구축, ④ 실질적인 만족도 증대를 위한 이동권 보장, 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편의증진 보장, ⑥ 의사소통 지

원강화를 제시함.

-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14개 과제가 국정과제 혹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를 반영함.

○ 경제활동 분야

- 5개 중점과제로 ① 장애소득보장급여 개편, ②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③ 장애인 고용 확대, ④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강화, ⑤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제시함.
-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17개 과제가 국정과제 혹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를 반영함.

○ 권익증진 분야

- 5개 중점과제로 ① 차별금지과 권리옹호 강화, ②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 ③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시스템 강화, ④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⑤ 국제협약의 국내이행 및 장애인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함.
-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11개 과제가 국정과제 혹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를 반영함.

□ 분야별 종합 성과지표

○ 복지서비스 분야

- 정책목표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지원”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 성과지표로 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률, ②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률, ③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를 제시함.

○ 건강·체육 분야

- 정책목표 “장애인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스포츠권 확보”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 성과지표로 ①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②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③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률을 제시함.

○ 보육·교육 분야

- 정책목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보육·교육격차 해소”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 성과지표로 ① 장애아동 보육·교육 통합률, ②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③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개선요망 대학 비율을 제시함.

○ 사회참여 분야

- 정책목표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 성과지표로 ① 문화여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②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상대수준, ③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제시함.

○ 경제활동 분야

- 정책목표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소득과 경제활동 격차의 완화”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 성과지표로 ①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빈곤율, ② 장애인 고용률 격차, ③ 중증장애인 고용률 격차를 제시함.

○ 권익증진 분야

- 정책목표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 성과지표로 ① 장애차별 진정건수 증감률, ② 장애인 빈곤율 성별 격차, ③ 장애인 고용률 성별 격차를 제시함.

제2절 제언

1. 계획 수립 측면

□ 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매뉴얼화

- 이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와 과정의 특징은 이전의 방식과는 달리 실무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수립 과정에 비교적 폭넓은 참여와 소통이 있었다는 점임. 총괄위원회와 사무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6개 분과를 조직하고, 분과별 연구수행 과정 중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5차례의 총괄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공유와

조정, 추가적 제안 등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짐.

- 또한 총괄위원회에 장애인단체가 폭 넓게 참여하여 5차 종합계획(안)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정부(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참여로 예측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종합계획(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다만, 분과별로 수립한 최종 계획(안)을 총괄위원회에서 재차 공유하고 분야별 과제의 조정 및 연계지점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계획(안)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매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과업이지만 금번 참여형 종합계획 수립 과정과 구조가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추진체계를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 분야의 타당한 범주설정과 추진과제 간의 연계성 강화

- 이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서는 장애정책 분야를 복지서비스, 건강·체육, 보육·교육, 사회참여(문화, 정보, 이동편의), 경제활동(소득, 고용), 권익·증진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였음. 이는 제4차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에서의 복지서비스·건강, 보육·교육, 문화·체육, 소득·고용, 사회참여·인권의 5개 분야를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또 과제 간의 높은 연관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세분화한 것으로 기존 체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과 관련된 추진과제들은 특정 분야(건강, 체육, 문화여가, 고용 등)의 범주를 넘어서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과제 간의 연계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분류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의 지향성과 욕구, 정책과제 간의 관련성, 다양한 정책결합(policy mix)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노력과 함께, 추진과제 간 연계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계획 집행 측면

□ 장애 당사자의 참여 강화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은 일부 장애정책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근본적 정책개혁 과정에는 장애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참여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부처에서는 세부 장애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도 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계의 참여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나, 향후 종합계획의 집행 및 평가 과정에서도 장애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장애분리통계의 강화

- 합리적인 장애정책의 수립은 물론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장애분리통계를 강화해야 함. 장애분리통계의 부족은 본 연구에서 종합 성과지표의 체계적 마련에도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음.
- 장애 관련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장애 관련 세부 실태조사(예: 발달장애, 장애아동, 장애인 건강)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자료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 통계청 등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대표통계에 장애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장애-비장애 분리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
- 또한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의 수급실태 등과 같은 행정통계의 경우 개인정보와 무관한 형태의 총괄집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별 자료를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장애인 관련 자체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계획 추진 시 성과목표 및 지표 변경 최소화

- 이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평가해 보면 당초 수립했던 성과목표와 지표 등

이 정책 환경의 변화나 해당 부처(서)의 편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 수립 시 의도했던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또는 추진계획 보완 시 무분별한 계획의 변경, 산출지표의 변경, 산출목표량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변경 시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가급적 초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도한 목표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계획 집행 시 장애정책 핵심 쟁점들의 유연한 반영

- 최근 장애정책 영역에서의 핵심 쟁점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정책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현재 사회적 합의 과정에 있음. 따라서 시기적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이들 정책과제의 방향과 목표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립될 수 있음.
- 향후 핵심 쟁점과 관련된 정책 지향과 목표가 설정되는 대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연차별 계획 수립 시 유연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정신장애인 복지분야 연계 검토

- 이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는 본 계획(안)에 정신장애인 복지 영역의 포함 여부와 반영 정도였음. 현행 정신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후자에 의한 정신장애인 복지 영역의 예산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한 현실에 있음.
- 제도의 이원화 체계로 정신장애인은 탈시설·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정신장애인이 현행 제도에서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양 법률 사이에서 정책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종합계획에서 배제되는 장애유형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

임.

3. 계획 평가 측면

□ 정책목표의 실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 종합계획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의 합리적 설정은 물론 세부 추진과제별로 적절한 산출목표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과 성과평가가 필수 수반되어야 하는 바, 종합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다 철저한 연차별 점검 및 중간평가가 요망됨.
- 한편 종합계획의 중간평가, 최종평가 시 추진과제별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함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정도,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정도 등 결과(outcome)와 영향력(impact)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본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계획 수립 시 설정했던 목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가 얼마나 해소되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성과관리

- 이전 종합계획의 경우 성과목표와 지표를 대체로 세부과제별 산출(output) 중심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번 종합계획(안)에서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영역별로 대표 성과목표를 결과(outcome) 중심으로 설정하고자 의도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종합 성과지표는 개별 세부과제의 산출목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 사업이나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

- 구연진, 고제훈, 김호진, 강혜승, 유완식, 김연아 (2016).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위원회 결정문.
- 국가인권위원회. (2017). 2016 인권통계.
- 국립특수교육원. (2015). 2014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토교통부. (2017).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국토부,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국회국정감사. (2016). 2016년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 고용노동부. (2015).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b). 2015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실태조사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a).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b). 2016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c). 2016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 관계부처합동.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 교육부. (2012). 2011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2013a). 2013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 (2013b).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교육부. (2014a). 2014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 (2014b).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교육부. (2014c). 평생교육통계.
- 교육부. (2015a). 2015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 (2015b).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교육부. (2016a). 2016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 (2016b).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교육부. (2017a). 2017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 (2017b).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김삼섭, 김기룡, 이명희, 노진아 (2015).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성희, 이송희, 김완호, 민홍기, 박경수, 박은혜, 등. (201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등. (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희, 이호선, 강정배, 이혜경, 서해정, 김승완, 등. (2016).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승희, 임승지, 문성웅, 최은희, 이지혜. (2016).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모형개발연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김인순, 권영숙, 안성준, 이영환, 홍현근, 윤영삼, 등. (2013).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 김주영, 최복천, 광정란, 김기룡, 김진영. (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진우, 이선우, 강동욱, 김동주. (2016).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방향 제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김진희, 박재국, 김진희, 조현진. (2015). 특수학교 지체장애 학생의 보조공학기기 사용실태 및 특수교사의 인식. 교육혁신연구, 25(2), 173-192.
- 김태완, 김문길, 김미곤, 여유진, 김현경, 임완섭, 등.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장애인체육회(2016).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실태 조사.
- 대한장애인체육회(2017). 2017 사업계획.
-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스포츠개발원(2017). 제3차 장애인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6a). 2016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b).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아낌없이 주는 든든한 나무, 2017.08.17. 보도자료(국립중앙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체육백서.
- 박은영, 김삼섭. (2006). 정신지체인 고용 준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 문헌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1), 215-241.
- 박은혜, 박재국, 신현기, 최성규, 최종근, 손지영, 등. (2011).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부.
- 박혜원, 김원호. (2016). 고용관리지원 사업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박혜원, 전영환. (2016). 공단 고용지원사업 평가: 유무상지원사업 및 표준사업장지원사업.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방송통신위원회. (2017). 2016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결과, 2017. 08.10. 보도자료
- 백종남, 김정미, 김삼섭. (2015). 발달장애학생 기초작업기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직업기초능력의 도출, 우선순위 및 미래유용성-준비도 매트릭스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4), 125-146.
- 백종남 (2017). 통합교육 교사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2017 국제학술 대회 자료집(pp. 151-166). 공주: 공주대학교 BK21 플러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컨설턴트 양성팀.
- 보건복지부. (2015). 2014~2018 건강보험증기보장성 강화계획.
- 보건복지부. (2017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2017.8.22.).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522호.
- 보건복지부. (2017b).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년 연속 법정목표 달성. 2017.4.25.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7c). 2016 전국 장애인 등록 현황.
- 보건복지부. (2017d). 2016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17e). 2017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7a). 장애인거주시설 및 이용자 현황(2010~2016).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7b).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16). 장애인건강관리사업.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 서해정, 장명선, 이경민. (2017).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손지영 (2013). 장애학생을 위한 스마트러닝 활용유형 및 효과성에 대한 국내 연구 고찰. 특수교육, 12(3), 79-105.
- 송은솔, 백종립, 서남규. (2016). 미충족 의료. 서남규 외, 2014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의 가계부담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구성과 변화 (pp. 177-200)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유리, 김정미, 유동철, 김동기. (2013).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배제에서 포함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3), 5-28.
- 양정희. (2017).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행태와 주요결과. 국립재활원, 장애와 건강 컨퍼런스: 통계로 본 장애인 건강 자료집. 서울: 국립재활원. pp. 9-20.

- 이동석, 김용진, 전지영, 조문순, 박수인, 이미현, 등. (2016). 비밀은 없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 센터 장애인 인권상담 분석 보고서. 보건복지부·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이태진, 정해식, 정은희, 오미애, 전지현, 박형준, 등. (2014).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최준영, 이주미, 이병재. (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2017). 장차법 시행 10년, 새로운 다음 10년의 준비. D&I 9월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창수, 최권호, 김명희. (2017).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정해식. (2013).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 40(3), 233-268.
- 최복천, 김미옥, 김주영, 성명진, 전해인, 제철웅, 등. (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복천, 변용찬, 황주희, 김미옥, 박희찬, 심석순, 등. (201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순임, 이혜재. (2016). 미충족 의료 경험의 결정요인: 가구 유형을 중심으로. 서남규 외, 2016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보건제도 (pp. 57-84)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2016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a). 2016년 민간부문 웹 접근성 실태조사결과.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b).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제품) 선정 제안요청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c). 2017년 지역별 순회 체험전시회 일정.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d).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보급 민간단체 위탁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2017년도 사업운영계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2017 장애인 통계.
- 행정안전부. (2017). 2016년 행정·공공기관 웹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
-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A synthesis of findings across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6). *Economic policy reforms 2016: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7).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Retrieved from

- <http://dx.doi.org/10.1787/socx-data-en>
- Power, A., Lord, J. E., & deFranco, A. S. (2013). *Active citizenship and disability: Implementing the personalisation of suppor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14a).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PD/C/KOR/CO/1.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14b). General comment No. 1: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CRPD/C/GC/1.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14c). General comment No. 2: Article 9: Accessibility. CRPD/C/GC/2.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16a). General comment No. 3 o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CRPD/C/GC/3.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16b). General comment No. 4 on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CRPD/C/GC/4.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2012). *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WHO, 한국장애인재단(2012). WHO 세계장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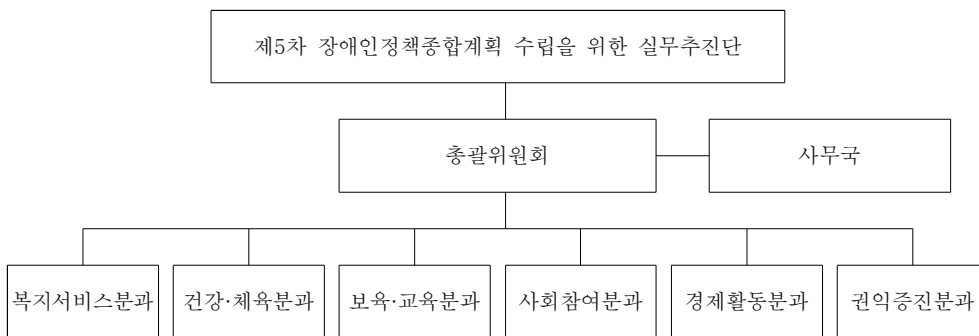
관련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 <http://www.wah.or.kr>
- <http://www.itstudy.or.kr/able>

[부록 1] 실무추진단 운영 현황

1. 실무추진단 조직 및 구성원

□ 실무추진단 조직도



□ 실무추진단 구성원

구분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총괄위원회	박경수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이승기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이용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권재현 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승연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현수 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남권 국장 (보건복지부) 임을기 과장 (보건복지부) 박찬수 사무관 (보건복지부) 김성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옥찬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전문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다은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분과	김용득 교수 (성공회대학교)	김동기 교수 (목원대학교) 서동명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최복천 교수 (전주대학교) 고명균 처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구분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이상진 총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정영만 소장 (한자연/옴 CIL) 정현석 실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건강·체육 분과	건강 소분과	김완호 과장 (국립재활원)	변용찬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수경 교수 (충남대학교) 윤태호 교수 (부산대학교) 이영자 연구원 (보훈교육연구원) 장숙량 교수 (중앙대학교) 이용석 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협회)
	체육 소분과	김권일 팀장 (한국스포츠개발원)	강승애 교수 (남서울대학교) 김석진 박사 (국립재활원) 노형규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김병우 관장 (대구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이문희 사무처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육·교육분과		김삼섭 교수 (충부대학교)	김기룡 교수 (충부대학교) 백중남 교수 (우석대학교) 임경원 교수 (공주대학교) 김종무 과장 (국립특수교육원) 박인용 회장 (서울장애인부모회) 정민호 교장 (세종누리학교)
사회 참여 분과	문화예술 소분과	전병태 부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윤정 박사 (전 서울대 연구원) 방귀희 대표 (한국장애예술인단체) 정원일 팀장 (강남장애인복지관)
	정보 소분과	민홍기 교수 (인천대학교)	송병섭 교수 (대구대학교) 홍경순 박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송원경 과장 (국립재활원) 최호성 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동편의시설 소분과	이동석 교수 (숭실대학교)	박광재 교수 (한국복지대학교) 현근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홍형근 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제활동분과		이선우 교수 (인제대학교)	강동욱 교수 (국립재활복지대학교) 권문일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김동주 교수 (우석대학교) 오육찬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용근 사무국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조호근 센터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권익증진분과		이동석 교수 (숭실대학교)	전지혜 교수 (인천대학교) 김용진 정책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명화 총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희정 사무처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 실무추진단 운영 경과

□ 총괄위원회 회의 진행내용

차수	날짜, 장소, 참석자	주요 내용
사전 회의	-날짜: 2017. 3. 20.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참석자: 총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수립의 방향성 논의 -분과위원회 구성 논의
1차	-날짜: 2017. 5. 15.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참석자: 총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5차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추진개요 설명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제4차 종합계획 평가방법 논의 -제5차 종합계획 수립방향 논의 -새정부 대선 공약 검토
2차	-날짜: 2017. 6. 19.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참석자: 총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4차 종합계획에 대한 분과별 평가결과 논의 -제5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비전체계 논의 -장애인정책 환경분석 결과 검토 -제5차 종합계획 추진과제 초안 검토, 대선 공약 및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와의 비교
3차	-날짜: 2017. 8. 7.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참석자: 총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분야별 정책목표 초안 논의 -제5차 종합계획 분야별 추진과제(안) 1차 검토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의 장애정책 검토
4차	-날짜: 2017. 9. 18.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참석자: 총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분야별 정책목표 논의 -제5차 종합계획 추진과제(안) 2차 검토 -제5차 종합계획의 종합 성과지표 1차 검토
5차	-날짜: 2017. 11. 6. -장소: 서울 사회조사센터 -참석자: 총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분야별 정책목표 논의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결과 논의 -제5차 종합계획의 종합 성과지표 2차 검토 -제5차 종합계획(안) 완료 및 최종보고서 작성 안내

□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회의 진행내용

차수	분과	날짜 및 장소	목적	주요 내용
1차	사무국	2017. 4. 7. 서울 사회조사센터	사전 회의	-분과 구성 및 실무추진단 운영방안 논의
2차	사무국	2017. 4. 28. 서울 사회조사센터	사전 회의	-실무추진단 구성 -4차 계획의 평가틀 논의
3차	사무국	2017. 5. 26. 서울 사회조사센터	사전 회의	-4차 계획의 평가방안, 작성양식 논의 -향후 추진일정에 따른 과업 논의
4차	경제활동분과	2017. 6. 26 이룸센터	분과위원 의견수렴	-경제활동 분야 4차 계획 세부추진과제 평가

차수	분과	날짜 및 장소	목적	주요 내용
5차	복지서비스분과	2017. 7. 3 서울 사회조사센터	집필진 회의	-복지서비스 분야 4차 계획 평가 및 5차 계획 추진과제 논의
6차	보육·교육분과	2017. 7.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과위원 의견수렴	-보육·교육 분야 4차 계획 평가 및 5차 계획 추진과제 논의
7차	정보 소분과	2017. 7. 6 서울 사회조사센터	분과위원 의견수렴	-정보 분야 4차 계획 평가 및 5차 계획 추진과제 논의
8차	경제활동분과	2017. 7. 11. 이룸센터	분과위원 의견수렴	-경제활동 분야 5차 계획 추진과 제 논의
9차	건강 소분과	2017. 7. 31. 스마트워크센터	분과위원 의견수렴	-건강 분야 4차 계획 평가 및 5차 계획 추진과제 논의
10차	권익증진분과	2017. 8. 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분과의원 의견수렴	-권익증진 분야 4차 계획 평가 및 5차 계획 추진과제 논의
11차	복지서비스분과	2017. 8. 10. 서울 사회조사센터	집필진 회의	-복지서비스 분야 5차 계획 추진 과제 논의
12차	경제활동분과	2017. 8. 21. 이룸센터	분과위원 의견수렴	-경제활동 분야 5차 계획 추진과 제 논의
13차	복지서비스분과	2017. 8. 25. 이룸센터	분과위원 의견수렴	-복지서비스 분야 5차 계획 추진 과제 논의
14차	건강 소분과	2017. 8. 25. 서울 사회조사센터	분과위원 , 관계부처 의견수렴	-건강 분야 5차 계획 추진과제 논 의
15차	체육 소분과	2017. 8. 25. 서울 사회조사센터	분과위원 , 관계부처 의견수렴	-체육 분야 5차 계획 추진과제 논 의
16차	이동·편의시설 소분과	2017. 8. 30. 이룸센터	분과의원 의견수렴	-이동·편의시설 분야 4차 계획 평 가 및 5차 계획 추진과제 논의
17차	권익증진분과	2017. 9. 8.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분과의원 의견수렴	-권익증진 분야 5차 계획 추진과 제 논의
18차	복지서비스분과	2017. 9. 11. 서울 사회조사센터	관계부처 의견수렴	-복지서비스 분야 5차 계획 추진 과제 논의
19차	이동·편의시설 소분과	2017. 9. 27. 이룸센터	분과의원 의견수렴	-이동·편의시설 분야 5차 계획 추 진과제 논의
20차	복지서비스분과	2017. 10. 10. 서울 사회조사센터	집필진 회의	-복지서비스 분야 5차 계획 추진 과제 논의
21차	복지서비스분과	2017. 10. 16. 서울 사회조사센터	분과위원 의견수렴	-복지서비스 분야 5차 계획 추진 과제 논의
22차	경제활동분과	2017. 10.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부처 의견수렴	-경제활동 분야 5차 계획 추진과 제 논의
23차	이동·편의시설 소분과	2017. 10.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부처 의견수렴	-이동·편의시설 분야 5차 계획 추 진과제 논의

차수	분과	날짜 및 장소	목적	주요 내용
24차	권익증진 분과	2017. 10.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부처 의견수렴	-권익증진 분야 5차 계획 추진과제 논의
25차	체육 소분과	2017. 10. 27. 서울 사회조사센터	분과위원, 관계부처 의견수렴	-체육 분야 5차 계획 추진과제 논의
26차	보육·교육분과	2017. 11.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부처 의견수렴	-보육·교육 분야 5차 계획 추진과제 논의
27차	사무국	2017. 11. 24. 서울 사회조사센터	후속 회의	-5차 계획 비전체계 및 종합 성과지표 논의

[부록 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추진과제 목록

분야	중점과제	세부과제
복지서비스 (1)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지원	(1-1)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통합성 제고	(1-1-1)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1-2)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1-1-3) 장애유형 세분화와 장애범주 확대
		(1-1-4) 활동지원서비스 급여확대 및 내실화
		(1-1-5)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1-1-6) 서비스전체 급여체계와의 단계적 통합
	(1-2)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1-2-1)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탈시설·자립생활전환지원체계 마련
		(1-2-2)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개발 및 거주서비스 기능재편
		(1-2-3)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및 지역사회로의 이전
		(1-2-4) 주택서비스 지원 확대 및 자립형 주거모델 제시
	(1-3) 발달장애인서비스의 내실화 및 실질화	(1-3-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1-3-2) 발달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에 조응하는 보호·돌봄 체계 강화
		(1-3-3)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1-3-4)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지원
		(1-3-5)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
건강·체육 (2) 장애인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스포츠 권 확보	(2-1)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	(2-1-1) 소아재활서비스 강화
		(2-1-2) 여성장애인 건강서비스 체계와 인프라 확충
		(2-1-3) 중증 및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건강서비스 체계와 인프라 확충
	(2-2)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2-2-1)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제공
		(2-2-2) 장애인 건강주치의(건강관리 의사) 제도 도입
		(2-2-3)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실시

분야	중점과제	세부과제
	(2-3) 장애인의 건강 생활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2-3-1)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을 통한 지역단위 건강관리체계 구축
		(2-3-2) 보조기기 지원 및 관리 체계 확대
		(2-3-3) 재활의료기관지정 및 재활의료수가 현실화
	(2-4) 운동참여 환경 개선	(2-4-1) 간이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공간 확보
		(2-4-2)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시군구 단위 배치 확대
		(2-4-3) 국민체력 100 사업연계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지역 거점화
	(2-5) 참여형 장애인 스포츠 복지 모델 확산	(2-5-1)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2-5-2)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2-5-3) 클럽-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체육 연계모델 정착
보육·교육 (3)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보육교육격차 해소	(3-1)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3-1-1) 장애영유아 보육 지원 체계 고도화
		(3-1-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체계 강화
	(3-2)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	(3-2-1) 특수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3-2-2) 장애학생 특성별 교육지원 강화
		(3-2-3) 장애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계 구축
	(3-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	(3-3-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3-3-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사회참여 (4)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	(4-1)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4-1-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확립
	(4-2)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4-2-1) 문화예술 향수지원 사업비 규모 확대 및 공모사업 비중 확대
		(4-2-2)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편의시설 조성 사업
		(4-2-3)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4-2-4) 장애인 예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
		(4-2-5) 장애 예술인/예술단체 창작 공간 확충 사업
		(4-2-6)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4-2-7) 대학로 장애인 예술 전용 공연장 조성 사업

분야	중점과제	세부과제
	(4-3) 무장애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통합이용환경 구축	(4-3-1) ICT재활융합 기반의 신정보격차 해소 추진
		(4-3-2)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지능정보사회 참여확대
		(4-3-3)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4-4) 실질적인 만족도 증대를 위한 이동권 보장	(4-4-1) 교통수단 이동지원 강화
		(4-4-2) 이동 편의보장 확대
		(4-4-3) 장애인주차편의 확대
		(4-4-4)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4-5)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편의증진 보장	(4-5-1) 실효적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4-5-2)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4-6) 의사소통 지원 강화	(4-6-1)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및 참정권 보장 강화
		(4-6-2) 시청각, 뇌병변 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공과 훈련
경제활동 (5)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소득과 경제활동 격차의 완화	(5-1) 장애소득보장급여 개편	(5-1-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지급대상 개편
		(5-1-2)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통합 및 현실화
		(5-1-3)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체계 개편
		(5-1-4)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대상 확대
	(5-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5-2-1) 근로능력평가 도입 및 전달체계 구축
		(5-2-2) 장애인임금보조제도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5-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5-2-4) 국민연금의 재할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직장복귀 촉진
	(5-3) 장애인 고용 확대	(5-3-1) 정부·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5-3-2)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
		(5-3-3) 장애인 맞춤형훈련 활성화
		(5-3-4)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
		(5-3-5)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지원
		(5-3-6)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중점과제	세부과제
	(5-4)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강화	(5-4-1) 직업재활시설 규모화와 운영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증대
		(5-4-2) 장애인통합직업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5-4-3) 우선구매제도의 내실화
	(5-5)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5-5-1) 장애인 창업지원
		(5-5-2) 장애인 기술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권익증진 (6)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6-1) 차별금지와 권리옹호 강화	(6-1-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및 법률 내 차별적 용어 개정
		(6-1-2) 장애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6-1-3) 지원의사결정제도 제도화
		(6-1-4) 학대피해장애인 지원강화
		(6-1-5)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6-2)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	(6-2-1) 차별적인 법령 폐지 및 개정
		(6-2-2)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자립대책 마련
	(6-3)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시스템 강화	(6-3-1) 재난 시 장애인 위기상황 대처 방안 마련
		(6-3-2)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 구축
	(6-4)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6-4-1) 여성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계획 수립
		(6-4-2)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6-4-3)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6-5)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및 장애인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6-5-1)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6-5-2)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및 SDG 모니터링 강화
		(6-5-3) 장애인 국제협력 분야 민관협력 및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강화